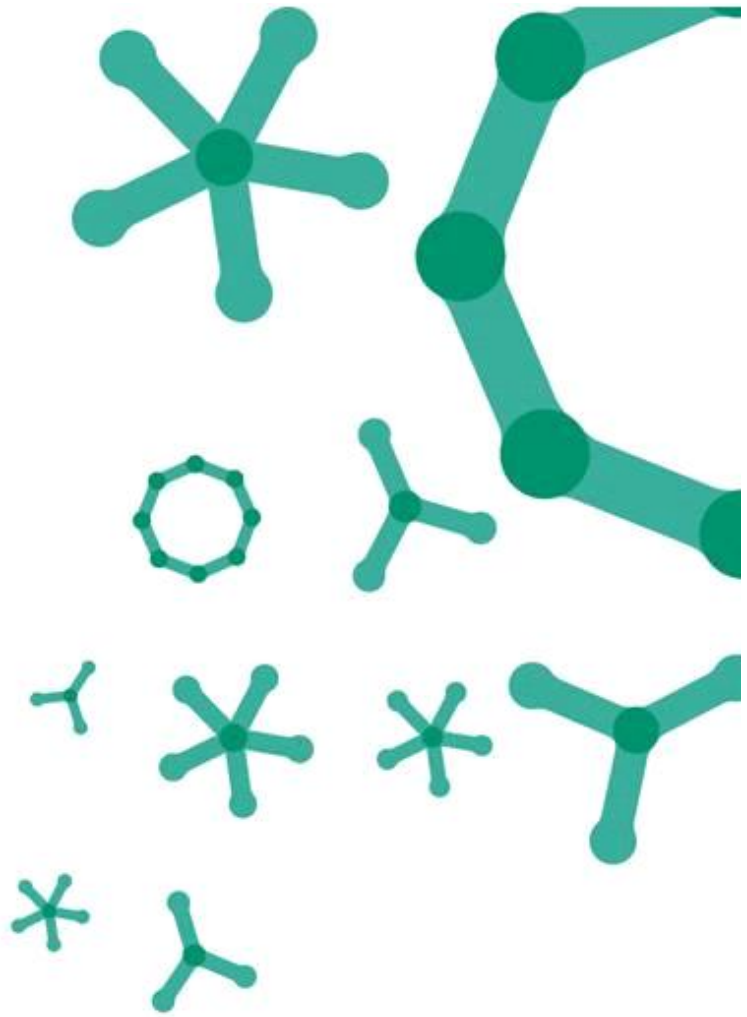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1호



한국사회 변화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동그라미재단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5.06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본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후원 하에 사회혁신공간THERE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는 동그라미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수행기관



연구 참여진

총괄 어드바이저	하승창
총괄 큐레이터	김병권
큐레이터	강현숙
	권미혁
	권지웅
	김병수
	김성환
	이강오
	이일영
	정보연
	정상훈
총괄코디네이터	정현주
코디네이터	손호석

보고서를 내며

총괄 큐레이터 김병권

“모두에게 기회를”

동그라미재단이 추구하는 미션이다. 동그라미재단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재단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실한 시스템이나 취약함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가 닿지 않는 곳을 발굴하여 ‘나눔’으로써, 조금 더 공정한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며, 그럼으로써 결국은 ‘변화’를 일구어 내는 것이 재단의 목표라고 이해된다.

그래서 ‘기회’와 ‘나눔’, 그리고 ‘변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동그라미재단이라는 조직이 설명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지점은 대체 어디인가? 어디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하는가?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변화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설사 우리의 눈앞을 지나고 있어도 기회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받을 자원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곳곳의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다. 변화의 흐름과 맥락을 알아야 기회의 결핍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아마티아 센은, 진정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 주려면 모두에게 합당한 ‘역량(Capability)’역량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거리가 불편한 학생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공정하게 자전거를 지급하는 것은 센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걸음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자전거는 그에게 크게 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것은 똑같이 똑같은 자전거를 지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먼 통학거리를 똑같이 쉽게 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그 장애인에게는 좀 더 특별한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처한 조건을 살펴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변화의 움직임과 추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읽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결핍이 불공정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러할 때 비로소 ‘모두에게 기회를’ 이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작업은 무척이나 무거우면서도 노력이 투여되는 과제이다.

<사회혁신 공간 THERE>가 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확인되는 사회혁신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 9개의 오픈랩(Open lab)을 만들어서 7개월 동안 운영해왔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변화의 지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격변의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어떤 유형의 기회를 주어야 ‘공정한 역량’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THERE>는 그 동안 사회혁신이라는 화두로 이런 작업을 지속해왔고, 현재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혁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혁신가들을 지원할 ‘사회혁신기금’사업에도 뛰어 들고 있다.

생활 속의 필요와 결핍을 파악하는 것은 아카데미아적인 연구와 문헌분석으로는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는 오픈랩(Open Lab)이라는 생활 속의 실험실을 실험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바로 오픈랩 7개월 기간 동안의 랩 운영의 결과다. 이 과정에 어떤 애기가 공유되었는지는 함께 참여했던 한신대학교 이일영 경제학 교수가 경향신문 6월 4일장에 기고한 칼럼에 잘 요약되어서 그 내용으로 대신한다.

“...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스스로를 ‘사회혁신’ 활동가로 생각하는 이들이 함께 토론하는 ‘오픈랩’ 모임에 참가한 바 있다. 이 모임과 연결해 대화한 이들이 대략 350여명에 이른다. 이들 혁신 활동가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전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의제가 전면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청년들은 국가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무상이나 복지보다는 지속이나 치유가 근본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마을·공동체·가족 등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존엄·협력·공유·연결·생태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셋째, 주민 또는 가구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고, 독립적인 자아 개념으로서의 개인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개인화는 기존의 인식 틀을 흔드는 중요한 현상이다. 기존 정치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혁신 논의는 공허할 뿐이다. ‘사회혁신’ 세력이 성장하고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다.”

목 차

요약	6
I.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빅 키워드, ‘사회혁신’	31
II. 혁신적 방법론 ‘오픈랩(Open Lab)’	68
III. 한국사회의 미래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95
1. 방법론: 변화의 윤곽 포착하기	95
2. 어디서, 어떻게 변화의 신호를 읽을 것인가?	102
3. 사회혁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중심 키워드	110
IV. 분야별 사회혁신 키워드 해설	155
1. [오픈랩1: 미래 세대]_권지웅	159
2. [오픈랩2: 일상과 가족]_권미혁	170
3. [오픈랩3: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_김성환	194
4. [오픈랩4: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_정보연	212
5. [오픈랩5: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_김병수	234
6. [오픈랩6: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_정상훈	261
7. [오픈랩7: 기술과 사회]_강현숙	272
8. [오픈랩8: 기후변화 및 삶터, 삶의 방식]_이강오	291
9. [오픈랩9: 한반도 경제론]_이일영	315
V. 빅데이터 속에서 표현된 사회혁신 키워드 분석	354
VI. 참고문헌	382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사회는 숨 가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해 달려왔지만, 그 대가로 인간관계의 해체라고 하는 심각한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보았다"

-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난 후 살아남은 사람은 전체 탑승자 2,200명 가운데 약 700여 명이었는데 대부분은 배의 위쪽 칸에 있었던 일등실 탑승자였음. 이러한 결과가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 정치 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소득세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1913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소득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4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세에서 유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해 질주해온 우리사회의 내면 실상을 극단적으로 확인해준 비극적 사건이었으며 해운 사기업과 공권력의 무능과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음.
- 더욱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전혀 진척이 없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자성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정부와 시민, 기업과 시민, 공공과 시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높아가는 불평등, 초유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점점 골든타임을 잃어가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요구와 같은 긴급한 사회적 도전을 수행할 의지와 세력의 규합을 어렵게 함.

- 우리사회 내부적으로는 신뢰의 붕괴 속에서 외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과 전략을 필요로 함. 이런 배경아래 점점 더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방법이자 뉴 버전의 개혁방식이 바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임.

1) 변화를 향한 드라이버, 사회혁신

- 기존의 해법을 대신하여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임. 사회혁신은 현실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제 만들어 보임으로써 **거시적 변화, Big Change**를 위한 계기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방법론임.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 불연속은 어느 한 순간의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극적인 변화뿐 아니라, **일상속의 끊임없는 불연속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 사회혁신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혁신은 태도와 행동, 인식(attitudes, behaviour and perceptions)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즉, 작더라도 대안적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아이디어와 접근방법을 필요로 함.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포함. 실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혁신적 구상을 혁신적 실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혁신의 매력이자 존재이유.** 이 대목에서 주로 문제제기와 주의환기, 청원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운동(movement)이나 캠페인(campaign)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함. (Therefore, we make a distinction between promising ideas (which may or may not become social innovations) and social innovations.)(TEPSIE 2012)

- 모든 훌륭한 사회혁신 뒤에는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에 대한 발견과 공감기가 있었음. 이것은 마치 시장에서의 모든 탁월한 상품들 뒤에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한 기업의 노력이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정치에서의 모든 훌륭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밀착해서 들었던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과도 동일한 맥락임.
- 사회혁신이라는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곳 역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임. 여기서 특히, 단기적 이익이 없어(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절대 사적 기업은 손댈 가능성이 없고, 공적 기관은 정치적 이유로 회피하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는 절실한 생활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 따라서 혁신해야 할 대상/문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며, 문제의 선정 안에 거의 '문제를 푸는 주체'와 '향후 문제 해결로 수혜를 볼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 인식과, 통찰이 절대 긴요한 것. 즉 사회혁신은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현재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난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절대 다수 시민들의 공통된 필요와 연결되는 거대한 문제를 두개만 꼽으라면 바로 불평등과 생태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이외에도 교육, 주거, 고령화와 인구학적 문제, 복지, 세계화의 충격 등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는 매우 복잡함. 더욱이 이들은 상호 얽혀있음.
- 모든 혁신은 과거의 틀을 깨는 이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과도기적이며, (그래서 혁신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안착하면 그것은 이제 혁신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됨) 따라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으며, 상당한 측면에서 진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바로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혁신을 이해하는 것.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 사적영역, 시민사회영역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음. 이들 각각은 사회혁신의 대상 영역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니셔티브는 속성상 시민사회영역에서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혁신에서 시민 이니셔티브는 매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교차하면서도 그 사이에 ‘매우 넓은 중간 지대 - 시민사회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임. (물론 시민사회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는 아직 숙제임)
- 과거에 공공은 사회변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했음. 개혁에서 공공은 주로 변화를 추진할 주체로 인식되었음.(물론 정권교체로 개혁세력이 집권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사회혁신에서는 공공을 혁신의 지원자/협력자(Partner)로 보는 것이 주류라고 생각. 다만,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개념이 공공이 민간에게 공적 영역을 ‘위탁’하는 포괄적인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
- 사회혁신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대안적 사회 질서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회 운동적 관점’에 기반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사회혁신 추세 (출처 TEPSIE 2012)

- 동시에 사회혁신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실물로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업이자 비즈니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이미 물질적 제품 생산을 넘어서 각종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음. 따라서 사회혁신이 비즈니스 주체와 비즈니스 방법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함.
- 통상 사회혁신의 출발과 근거는 미시적 차원(개별 기업, 개별 공동체 차원, 개별 사안 차원)에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미시적 사회혁신에 그칠 수 없는 Big Change / System Change가 필요한 시점. 따라서 미시적 혁신이 거시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함.
- 2008년 이전의 사회혁신전략이나 사례들은 시스템 변화를 자극하는 수준의 혁신 보다는 기존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의 소극적 사회혁신전략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 교체를 공략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혁신 전략’을 필요로 함. 적극적, 능동적, 거시적, 입체적 전략이 필요함

2) 사회혁신 키워드 발견을 위한 방법론: 오픈랩(Open Lab)

- 오픈랩Open lab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실험과 혁신, 연대가 교직되는 활동 현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패턴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미세한 진동들을 감지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지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목함.
- 정교한 논리와 개념으로 텍스트화된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보다 수많은 층위에 내재된 경험들의 내러티브와 암묵지의 수집과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소들을 키워드로 사회 언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됨.

- 파일럿 개념으로 진행된 오픈랩Open lab은 불특정 대중, 즉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시민 커뮤니티 그룹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내러티브와 현실 그대로의 정보에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여 큐레이션 개념을 도입함.
-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열개로 삼아 개인적(personal), 공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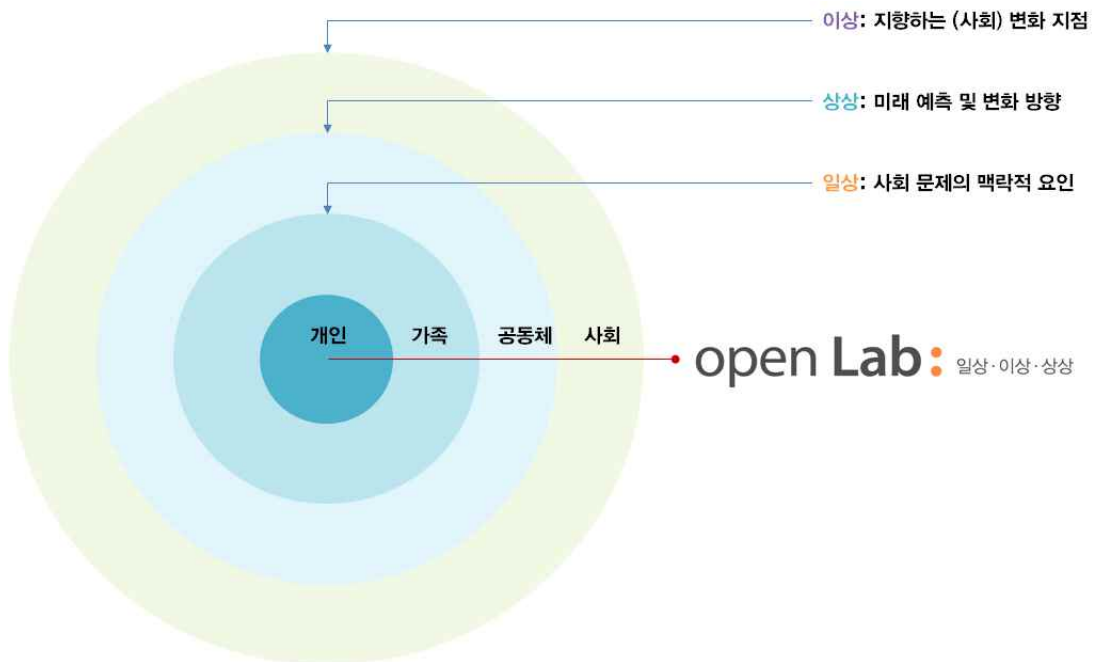


그림 2: 오픈랩 운영 구도

- 큐레이터로 참여할 연구진들의 활동 영역은 크게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와 같이 시민사회, IT와 기술, 경제와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환경과 도시재생, 청년문제, 정치적 자유권 등을 주제로 대안적 가치를 지향함.

- 큐레이터들은 오픈랩의 일상·이상·상상으로 함축된 화두를 매개하는 발신매체이자 관심그룹들을 네트워킹하는 허브가 되어 독자적인 lab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정보를 발굴·수집함.
- 지식정보, 데이터를 큐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담지하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연구자그룹을 총괄큐레이터와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판단의 쓸림 현상을 경계함.



그림 3: 오픈랩 운영 유형

-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등 일상·이상·상상, 이 세 가지 질문을 기본 골격으로 세우고 모임을 진행했으며 찬반 구도의 논쟁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교류에 집중함.

표1. 주제별·대상별 운영방법

성격 구분		현상 고찰/ 의제 지형 파악	문제 발굴/미래 예측	솔루션 모색
주 제 의	전문 그룹	이그나이트 세미나 1:1 인터뷰	LSP, 이그나이트 세미나 전문가FGI 5-Question	전문가FGI 컨퍼런스
이 해 도	관심 그룹	레고시리어스플레이 (이하 LSP) 이그나이트	그룹인터뷰	그룹인터뷰

- “자기 말이 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응답받는다”는 경험”과 “자신이 어떤 장소에서는 긍정되고 있다는 감정”이 교차될 수 있도록 오픈랩에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자기 언어, 경험들을 배려하는 친밀권의 장으로 기획함.
- 친밀감과 내밀한 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지향의 작은 모임으로 구성하고, 커뮤니티 카페, 프로젝트 실험 공간, 문화 공간 등 주제에 맞는 공간의 정체성을 결정함.
- 학생, 인턴, 시민활동가, 귀농부부, 회사원, 협동조합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기획자, 학자, 디자이너 등 다분야 활동가들을 초대하는 방식임. 낯선 이들과의 교류 모임의 성격도 있어서 살롱 문화나 소셜 다이닝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모임 전 친교 시간(아이스 브레이킹, 선물 증정 등)을 별도로 마련함.
- 학술연구회, 정책 의제를 생산하거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실천 활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위와 연결하여 오픈랩 모임과 결합함.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아리포럼, 흥대텃밭 다리, 신중년 숲해설사 커뮤니티, 가칭) 공동체주택포럼 준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모임 운영함.

- 집밥, 은평상상허브, 청년허브, 전주 차라리언더바 등 플랫폼 또는 플랫폼 기능을 지향하는 개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심 그룹들을 발굴·선별함. 오픈랩 참여자들의 추천 또는 연결로 후속 참여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오픈랩 네트워크의 기반이 형성됨.
- 도시기획자그룹, 환경단체 활동가그룹, 미디어연구그룹 등 현장에서 쌓은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한 참여자 발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I,II,III,IV그룹(아래 그림 참고)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함.

표 2. 참여자 유형별 분석

		전문성			
		학자 그룹 (I)	활동가 그룹 (II)		
이 론 중 심				현 장 중 심	
		개인적 활동 그룹 (III)	커뮤니티 활동그룹 (IV)		
		비전문성			

■ 참여자 특성

-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연구-저술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함. 참여자들의 활동/역할을 보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행정관료, 사회적 기업가, 정치인, 정당 당원, 시민활동가, 교수/연구자, 중간지원조직, 개발자, 교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직장인, 협동조합, 기획자, 디자이너, 대학(원)생, 뮤지션, 청년혁신활동가, 귀촌/농인,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으로 분류. 20대부터 50대

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했으며¹⁾, 전주에서 진행된 모임 이외에 서울에서 진행되어 주로 서울에 사는 이들로 집중됨.

표 3. 오픈랩 모임별 토론방식과 참여자 특성

lab 이름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참여자 특성	참여자수
기술과 사회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	1. 질문 선정 2. 온라인 통해 질문 3. 전체 키워드 fgi 등의 방식으로 정리	기술 관련 전문가 및 각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개발자, 교사, 기획자, 마케터 등)	약 20명 (인터뷰 20명 + 기자 4명)
일상과 가족	가족의 모습	키워드 기반 FGI/소셜픽션 기반 LSP	가족 관련 현장 및 전문가/가족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35명
	돌봄	키워드 기반 FGI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공공성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정치의 재구성	키워드 기반 FGI/1:2 대면 인터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청년세대, 공적 커뮤니티 관여자, 1인 가구 관련 현장 경험자, 정치 관련 IT 프로젝트 진행	약 25명/ 인터뷰 3명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사회혁신가 성장/ 사회적 금융	키워드 기반 소셜다이닝	30대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약 20명
청년	일상 문제	이그나이트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 등 다분야 활동그룹 참여	21명
도시	도시재생	이그나이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에 관여한 도시기획자들 네트워크	150여명
	토지 이슈	이슈 생산형 전문가토론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등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진단과 분석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이니셔티브	키워드 기반 FGI/대면형 델파이기법	정책집행자, 정치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참여	6명
치유와 복지	치유와 복지	이슈 생산형 FGI/소셜다이닝	사회복지사, 관련 중간지원조직, 공공의료기관 등 활동가 대상	11명
기후모임	기후변화와 삶터, 삶의방식	키워드 기반 FGI형 소셜 픽션/소셜다이닝	전문가 커뮤니티부터 기후 관련 관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미래 예측, 대안을 모색함.	35명
한반도사회 경제연구회	한반도 경제	문제 발견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분야 학자들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 상호토론을 통해 현실적 대안 강구	40여명

1) 청년들의 자기 발언 시간을 염두한 ‘오픈랩: 미래세대’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의 초기 모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3) 변화를 보는 맥락의 변화

- 2014.10~2014.4 기간을 통하여 9개 오픈랩(OpenLab)에서 약 350여명의 생활인,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문제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사회혁신의 단서들을 종합하였음.

미래세대	일상과 가족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살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술과 사회	기후변화 및 살터, 삶의 방식	한반도경제	
어쩌라고	개인성 기반 다양한 가족	주민권	시민이니셔티브	토지임대부 개발	인간 존엄 중시 경제	시빅 해킹 Civic Hacking	검은 비(미세먼지 관리)	사회변화와 개인화	빛/부동산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한다	가족이란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도시공유공간	석관동 두산아파트	도심부 재생	사회적 금융	오픈 소스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소득주도성장	금리/연금
존엄을 지키는 삶	새로운 가족들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관계국가	경제플랫폼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학교	정보민주화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비정규직/영세자영업
작은 커뮤니티	가족치료사	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관계와 친밀권	리빙랩	중간/차세대 혁신가	누구나 코딩	녹색 삶의 디자이너	공유자원으로 서의 조세	저출산과 이민/고령화
유니버설 디자인	초국가적 가족	뉴거버넌스	마을계획	공유도시	경계를 잇는 전문가	메이커문화	POOR&RICH	네트워크/네트워크경제	도시 네트워크
다면적 정체성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	차세대 정치인 육성	긴장사회/암	노마드적 삶	공유자산	무장애 세상	사라져가는 산, 그리고 한국형 공유화 운동	벤처 생태계/사회혁신 거버넌스	사회복지제
긍정적 경험의 부재	인격을 존중하는 플랫폼	정치협동조합	치유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육아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Robot	모두를 위한 놀이터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중간민주주의/사회적 합의
주민성		플랫폼형 정당	존엄		학교 협동조합: 협동조합 학교	감시사회, 기술을 감시하는 또 다른 기술	도시농업, 먹거리에서 도시재생까지	작은 학교/거꾸로교실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속하고 싶지 않다			Mindfulness/영적 성장		협동DNA의 재발견	3초 사회	탈원전	지속가능한 재정/조세정의	한중FTA
권리화된 요구					커뮤니티 기반 시장	기회 균등 vs 불평등	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	6차 산업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명확한 입장 말하기					혁신플랫폼		환경거버넌스	강력한 중국/AIIB/한중FTA	한반도

그림 4: 오픈랩 운영결과 유도된 사회혁신 키워드

- 즉, 사회혁신이라는 렌즈로 우리사회의 문제, 문제를 푸는 솔루션,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관찰하고 숙고하며 상상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거대한 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객관적인 기술 혁신이나 경제 사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임. 사물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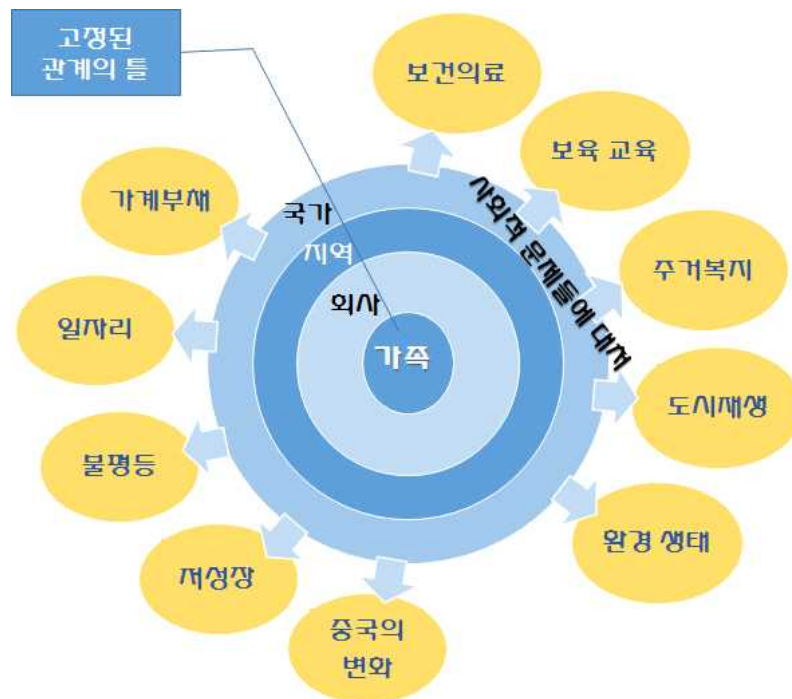


그림 5: 과거의 사회 집단 주체들과 그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들

- 과거에는 변화를 구상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구조(개인 - 가족 - 직장 - 지역 - 국가)라는 틀이 의연히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관계에 의지해서 객관적인 사회문제(일자리와 교육, 주거, 보건, 기후 변화 등)에 대처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나와 내 주위의 관계(집단) 자체가 변화의 한복판에 있고, 여기가 문제와 변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기존 혈연가족의 해체나 1인 가구의 주류화 등은 전통적인 가족 의존형 자구적 복지 체제의 해체와 함께 광범하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각 개인들은, 이전처럼 국가와 같은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또는 국민, 시민, 심지어 '우리'라는 주어진 공동체 속에 '과묵한' 개인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냈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변화도 추구해 나가려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혁신 전략은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과제를 분류하는 식의 도식과 문법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의제와 연결시키면서 변화의 전략을 짜는 식으로 이론적, 정책적 문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공백지대에서 관계의 변화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다양한 활동 방식과 해법을 창안해내면서 동시에, 시장 자체의 혁신, 국가 자체의 혁신으로 변화의 반경을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 속의 나의 삶이 변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우선 오픈랩의 실행을 종합한 결과, 주체 자신과 주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9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6: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사회혁신 중심 키워드

-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사회문제들(가계부채, 일자리, 불평등, 건강과 교육문제 등)을 열거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대신, ‘나(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이 가운데 객관적 사회문제가 어떻게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는지, 개인과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문법을 사용할 것임.

4) 사회혁신을 내포하는 중심 키워드

0

1 솔루션이자 변화의 드라이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설적이지만 사회혁신 그 자체임.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의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대부분의 삶과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런데 기존 방식의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적 사회개혁으로는 지금 직면한 사회적 난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시장과 국가라는 전통적인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다수의 개인들, 주민들, 시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솔루션을 찾아 실험하지 않으면 과거의 마스터플랜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기 어려움.
- 변화가 절실한 여건에서 다수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인지하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미시적 생활현장에서부터), 기성의 마스터플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뛰어들어 ‘실행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어나감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임. 요약하면 사회혁신은 사회개혁의 뉴 버전이고 위로부터가 아

나라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 사회개혁을 의미함.

1

개인화(Individualization): 높아가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

- 사회의 변화는 더 많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수동적으로 안주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임. 이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와 관계가 재설정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임. 개인주의가 추세적으로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통신혁명 등에 힘입어 온라인 등에서 공동체에 접속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현상에 대해 클레이 셔키 등이 ‘네트워크화된 개인화 (networked individualizat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 개인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혁신과 발전에 의해 뒷받침 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임. 개인 단위로 생활이 가능한 물질적 수준이 지원 되어야 개인화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를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하게 해줌. 실제 현재 수준의 개인화 역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임.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개인화 추세와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 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는 ‘Maker’, ‘DIY’, ‘누구나 코딩’ 등의 기술적 트렌드는 개인화와 연동하여 변해가고 있음.
- 개인화 추세가 삶의 방식에 던진 가장 파급력 있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할 것임. 1인 가구현상을 자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희구라고 판단할 수 있음.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1인 가구 현상을 주로 ‘자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자연스런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했다.”)

2

자존감(self-respect)과 존엄(dignity): 차세대 사회정책의 목표

- 우리의 자존감은 현재 사회활동의 도처에서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음.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자존감’이며, 스펙경쟁과 취업경쟁에 몰입한 청년들은 끊임없이 ‘존재감’에 대한 질문을 강요받음. 이른바 ‘잉여사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들이 사회적 잉여로서 취급받는 현실이 이를 입증함. “자신은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존재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은 타인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슬픔보다도 더욱 통절한 것”²⁾
- 30, 40대 우리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들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각종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은퇴 후의 노년은 불안정한 노후 여건 속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임. 한마디로 전 세대에 걸쳐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심 척도인 존재감, 자존감, 존엄은 일상의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존과 존엄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님. 그것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 과정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이것은 **자존과 존엄이 우리사회의 노동과 복지, 교육 등 주요 경제 사회정책을 펼 때 매우 강력한 근거 틀이 될 것임을 말해줌.**
-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단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아님.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은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멸시와 모멸감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2)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40쪽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진정한 좋은 일자리란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과 인격, 사람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게 하는 것임

- 복지정책 등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단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과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함. “우리는 복지를 단순히 물질적 재화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 문제는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존중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문제다.” “물질적 재화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구체적 방식일 것이다.”³⁾
- 즉,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복지’가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음. “복지제도가 복지 대상자들을 어떤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부끄럽고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그것은 모욕적이다.”

3

시간권리: 시민들에게 '시간에 대한 자유' 를 되돌려 주자

- 요즘에는 '주거권'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음.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쉬고 누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 취지로 '시간권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을까? 시민들이 자신의 휴식과 자신만의 생활과 자신만의 계획을 위해서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은 없어도 어쩌면 시간이 더 절실 할 수 있음. 수년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바로 시간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된 얼마나 큰 열망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3)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 시간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 문제’나 ‘노동 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적 의제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 이제는 우리도 ‘과로사회를 넘어서 여가사회로’ 혁신해야 할 시점임. 시간은 유한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임. “시간빈곤, time poor”를 벗어나려는 큰 발걸음을 떼어야 함.

4

관계의 이동: 개인은 지금 기존 관계에서 빠져 나와 새 관계 모색중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 전까지 비교적 고정적이고 탄탄하고 단순한 몇 개의 관계에 속했음. 예를 들어 혈연중심의 가족, 지역적 고향, 학교 동문 - 학생회, 평생직장 - 노동조합/농민회, 단일 민족과 같은 관계가 있었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점 빠르게 약화되거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친척의 끈이 희미해진 것은 오래되었고 가족의 끈조차 느슨해지고 있음. 더욱이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를 강하게 규정짓던 지역과 고향도 세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무어지고 있음. 학생회나 노동조합은 과거의 규정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임. 이미 200만에 육박하는 이주민은 단일민족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균열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사회의 기본단위였던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눈에 띈. 과거에 전형으로 불리던 ‘4인 혈연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1인 가구시대, 솔로 소사어티 시대를 이미 맞고 있음. 그러나 복지와 경제, 공동체와 경제를 위해서 솔로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나 사회혁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형편임. ‘외롭지 않은, 서로 연결된 솔로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혁신이 더욱 풍부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대유행과 정규직의 장기근속

불안은 매우 탄탄했던 직장의 인간관계를 매우 임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변질시켰음. 노동시장의 이중화 등의 달라진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정된 협력 틀이었던 노동조합의 약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서구에 비해 확실히 오랜 중앙 집권적 국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국가 귀속감과 국민으로서의 연결감, 여기에 오랜 단일 민족 전통이 겹쳐지면서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국가 공동체에 대한 연결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빠른 속도의 세계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 정치 사회의 분권화와 시장화 등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국가와 자신의 관계 규정력을 약하게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물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정주성의 불안으로 인해 도시 소속감 역시 큰 것은 아님)
- 이처럼 기존 공동체와 관계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해체되거나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중. 어떤 측면에서는 '자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실 더 강력하게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동 중임.
- 기존 공동체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함. 바로 이 같은 '이동의 중간 과정'에서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삶의 불안정성,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관계의 단절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겪고 있음. 즉, 시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특히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무연사회'의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음, 인간관계의 커다란 해체와 전환, 이동 경험하고 있는 중.

5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 다양하고 중층적인 열린 공동체가 전망된다.

- 얼마 전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나 시민,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과묵한’ 개인**으로 존재했음.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율,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보호되었음. 이는 가족, 지역, 직장, 국가 등 거의 모든 공동체 걸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임.
- 그러나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물론 그것이 공동체나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완전한 개인주의 추구는 아님.
-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율과 독립을 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존”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의 복지 안전망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남. 현실에서 육아나 돌봄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존재해야 개인의 독립과 자율도 보증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좀 더 느슨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즉, 대규모의 일차원적 획일적 공동체들이 아니라, 분권화 된 다면적/다층적인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길 원하고 있음.

6

친밀한 관계: 사적, 공적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요구

-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은 최근까지 관계에 의해 얻어야 할 필요를 시장에서 계약을 통한 거래관계로 해결(구매)하려 했지만, **돈이 없**

으면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냉정한 시장의 관계는 명백히 전체 인간관계를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되고 있음.

- 이런 조건에서 사적인 관계처럼 배려와 이해의 관계가 작동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친밀권이라고 할 수 있음.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방문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나 의논, 잡담을 즐기기 위한 살롱적 관계도 친밀권에 포함된다. 타자의 구체적인 삶, 생명에 일정한 배려나 관심을 갖는 것이 친밀권의 최소조건이다.”⁴⁾
- 이는 대표적으로 이웃 사이의 따뜻한 배려관계, 또는 ‘호혜적 생활’ 관계망 등에서 구현될 수 있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도시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때,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상의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망(친밀권, intimate sphere)이 생기면 가정 폭력 문제를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공의 공간’으로 드러내기 쉽다. 또 지역 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개입하기도 훨씬 용이해진다.”⁵⁾
- 친밀권은 무너지가는 기존 관계를 대신하는 대안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돌봄이나 안전 등 복지정책에서 특히 이 관계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높음. 돌봄이나 안전은 공적 관계에 의해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공공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반해서,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 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에 의해 형성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밀권이 돌봄과 안전에 더욱 적절함.
- 친밀 관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친밀권은 자존과 존엄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됨. “친밀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외부에서 부인 혹은 멸시의 시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자존 혹은 명예의 감정을 회복하고, 저항의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지처일 수 있다.”⁶⁾

4)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108쪽

5)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1쪽

- 앞으로 우리사회는 경제영역은 물론 지역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살아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수많은 사회혁신 활동이 예상된다. 다수의 사회혁신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처럼, 새로운 열린 공동체 역시 ‘거래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계약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의무와 권리로 고정된 공적 관계도 아닐 것임.

7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공공영역을 넓힌다.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임⁷⁾.

6)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7)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 사실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협력하여 해결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혁신 자체가 주민 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이니셔티브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과 주민, 시민들의 관계가 여전히 제공자 - 수혜자 관계라는 과거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 됨.

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힌다.

-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물적 자본의 부족의 고려되던 시대였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적자본 투자가 부쩍 강조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그러나 실제로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있었는지는 회의적임.)
-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인적자본투자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투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앞서 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 활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함.
- 그러면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쌓여 가는가? 대표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소득이다. 수입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남을 믿을 여유도 생긴다. 둘째는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수준이다. 단결이 잘된 사회일수록, 단일 민족에 가깝고 언어도 통일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신뢰구축이 용이하다. 셋째, 소득의 고른 분배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사람이 많을수록, 친밀함이 유지된다. 소득수준의격차가 극심하면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요인은 제도적

구조다.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국가이고 국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편이고,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번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면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⁸⁾

9

세대간 지속가능성: 앞 세대에게 원하는 바램 그대로 뒤 세대에게

- 우리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과 부, 국가의 재정과 복지자원 그리고 환경자원에 대해 세대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으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그런 차원에서 진정하게 ‘세대 사이의 협력’을 모색해야 함.
- 세대에 걸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경제침체 속에서 성장인가 생태 환경보호인가 하는 전통적 대립구도의 딜레마에 갇혀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Anyone who believes exponential growth can go on forever in a finite world is either a madman or an economist)”라고 예언한 선구적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경고가 지금도 의연히 중요하는 것임. 이는 인류역사 전체에 걸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역사적 변화를 보아도 명확한 것임.
- 물론 “경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더해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 또한 절박한 과제다.”⁹⁾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

8) KBS 사회적자본 제작팀(2013),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50쪽

9)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32쪽

시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탄소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방안은 효과가 매우 크다. 저탄소 세상을 향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투자가 향후 50년간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노동집약도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주요 투자 영역으로 “건물 개량, 대량 운송 철도, 지능형 전력망, 풍력과 태양력, 차세대 바이오 연료”등임.

- 특히 “투자의 목표 또한 분명히 변화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점점 더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은 여전히 꼭 필요하겠지만 그 목표를 더욱 신중하게 지속가능성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투자의 초점이 자원 생산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기술, 녹색 산업, 기후 적응성 향상과 생태계 강화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¹⁰⁾

10)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179쪽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빅 키워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 사회혁신에서 솔루션을 찾다
- ▶ 짧지만 가볍지 않은 사회혁신의 역사
- ▶ 사회혁신은 어떻게 다른가?
- ▶ 사회혁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 어디에서 사회혁신을 시작할 것인가?
- ▶ 사회혁신을 향한 전략과 방법
- ▶ 다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1. 사회혁신에서 솔루션을 찾다

변화를 향한 드라이버, 사회혁신

- 2015년 지금은 우리사회가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 (economic crisis)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라는 표현이 적절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임. 이런 측면에서 우리사회는

-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변화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 기간 동안 금융 불안과 부동산 거품, 실업과 불평등,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수 없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해법들이 각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실행되었지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한 마디로 20세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축조된 기성해법의 무력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임.
 - 일반적으로 기성해법(traditional ways)이 아닌 새로운 해법은 기성 사고틀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됨. 20세기의 최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책 『일반이론』 서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서 탈출하기**”(a struggle of escape from habitual modes of thought and expression)가 필요함.
 - 케인스는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있다.** 우리 대부분이 길러진 방식 그대로 길러진 사람들에게는 낡은 생각이 정신의 구석구석에까지 뻗치고 있기 때문(The difficulty lies, not in the new ideas, but in escaping from the old ones, which ramify, for those brought up as most of us have been, into every corner of our minds)”이라고 덧붙임.



그림 2-1 :사회혁신 (출처 TEPSIE 2012)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탈출하면 솔루션이 보인다.

- 기존의 해법을 대신하여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임. 사회혁신은 현실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제 만들어 보임으로써 거시적 변화, Big Change를 위한 계기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방법론임.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 불연속은 어느 한순간의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극적인 변화뿐 아니라, 일상속의 끊임없는 불연속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통상사회혁신을 소개하는 사례들을 보면 ‘환상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것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현실적, 과학적인, 치밀한 변화를 보려고 해야 함.
- 사실 1990년대 이후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관심을 끌기 이전에, 그 개념이 널리 활용되기 이전에 혁신적 활동과 실험이 이미 있었음. 멀리는 1800년대 초에 자본주의 초창기 영국에서 대규모 방적공장이 경영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시도했을 뿐 아니라, 최초로 어린이 유치원의 모형을 실험했던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이 있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혁신적인 실험과 활동을 해왔음. 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활동과 실험을 훨씬 더 포괄적 전망을 가지

고, 좀 더 협력적이고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서 사회혁신의 이론과 전략을 다시 구성해야 할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임.

- 어쨌든, ‘사회혁신’이라는 담론이 2010년대의 역사적 시계열에서 사회변화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장(field)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시민들의 잠재성과 개별적 시도들을 모아 사회변화를 매개하는 하나의 힘으로 변화시켜볼 수 있을까. 기존의 선입견, 관성을 깨려는 모든 시도, 이윤 동기가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헌신하려는 모든 시도, 시민들 속에 잠재되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외면되어왔던 모든 잠재성을 열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¹⁸⁾

2. 짧지만 가볍지 않은 사회혁신의 역사

- 사회혁신에 관한 자료를 보면, 사회혁신에 대해서도, 각 사회는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 사회혁신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대체적으로 199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념과 적용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음¹⁹⁾.

- 1) 우선,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복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으로 사회혁신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임. (그쪽에서 진행된 사

18) 사회혁신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진보적 변화를 열망하고 있고, 지역과 동네 곳곳에 흩어져서 묵묵히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심리적, 의지적 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를 진진적으로 선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김병권(2013),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사회혁신”

19) “사회혁신은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조직화와 발전하는 IT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념과 실제적 측면에서 1990년대에 재등장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젊은 세대에 의한 활용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함께 기업의 공적 서비스와 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극단적인 담론을 촉발시켰다. 또한 협동조합의 확산과 사회혁신 개념의 기원이 되었던 사회경제조직들에서의 네트워크의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줄어드는 예산과 증가하는 사회적 필요로 인한 도전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감당 가능한 해법으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BEPA 31쪽)

회혁신 사례들은 일상 정책과 융합되어서 그런지 잘 소개가 별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임)

- 2) 대륙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성 국가복지 체도를 가진 탓에 사회혁신이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됨. 하지만 유럽 연합이 사회혁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하므로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개연성 있음.
- 3) 흥미 있는 것은 영미권 국가들. 이 국가들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규제완화로 붕괴된 사회 서비스를 재구축하고자 NGO와 지방정부 영역에서 사회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음. 그러다 보니 사회혁신이 사회의 주요과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대처방안으로서 공적 영역이 잘 하지 못하는 곳을 시민사회나 선의의 기업들이 메꿔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이 국가들에서 사회혁신이 자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²⁰⁾.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붕괴 위기, 사회혁신으로 탈출

- 그럼 우리는? 2008년 촛불이후 2010년에 접어들고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논하는 시점에서, 기존 정치세력의 변화는 매우 더디고,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약화는 현저함. 역으로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존 문제에 더해선진국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사회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위기의 심화에 반비례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의 취약성이라는 모순이라는 시점에서 사회혁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음.
- 우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음. 그 과정에서 특히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다수의 민중과 시민들은, 때로는 ‘사회변혁’이라는 전략 틀 안에서 그 변화를 이해하고 실천해왔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사회

20) 대표적인 사례 소개를 한 책이 바로 Stephen Goldsmith 전 시장이 쓴 『The Power of Social Innovation』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서 추진하고 참여해왔음.

- 그 결과, 2010년대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한다면 ①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②국민들의 경험적, 지적 수준의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음.
 - ① **사회의 복잡성**: 한국사회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해왔음. 식민지 후진국에서 OECD국가로 고성장을 지속한 거의 유일한 나라, 한국전쟁 이후 경제 규모가 약 50배 가깝게 커졌다는 압도적인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는데, 국민들의 구성과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질적 변화도 엄청난 것임. 결국 '일회적인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 이제 사회운동도 우리가 시도하는 기획이 세계 최첨단일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사회변화 방법론과 전략 측면에서 '모방'은 없다고 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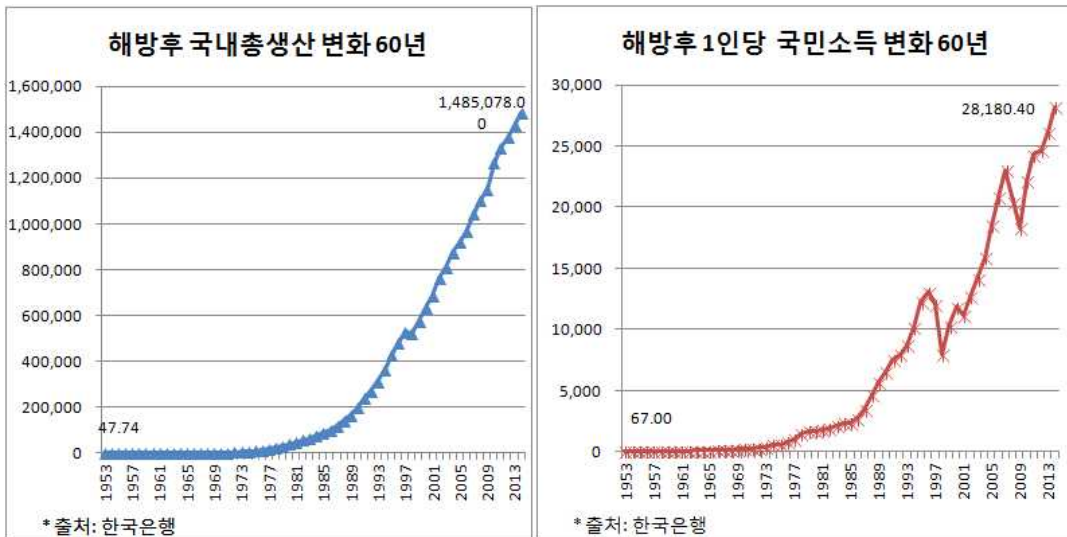


그림2-2: 해방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변화 추이

- ② **엘리트주의 시대 종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맹을 탈출했음은 물론 대학 진학률 70%이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최고의 인터넷 활용을 자랑하는 똑똑한 국민으로 변해가고 있음. 그 결과, 엘리트

주의적 발상과 방법에 의존했던 20세기 형 변혁이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음. 대신 생활 현장에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사회변화 전략의 현실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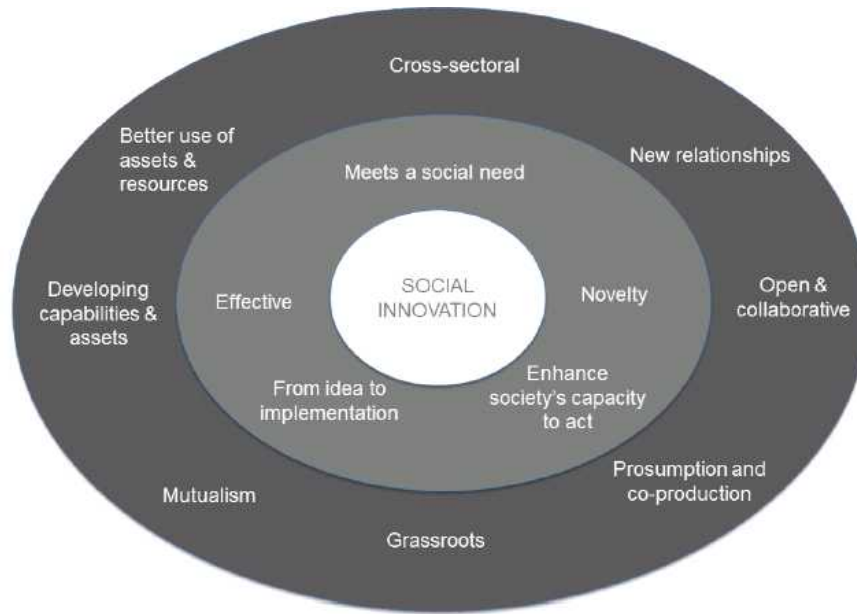
- 한 마디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변화 방법이자 전략이었던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한 문제 해결 방법의 한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임.
- 사회 환경과 사회 주체의 변화로 인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해법들에서 모두 한계점이 노정. 시장에만 의존한 해법의 문제점과 취약성은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침체로 인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임.
- 완전한 국가 계획의 문제점 역시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 붕괴 등으로 이미 확인했으며, 그 밖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진해 온 크고 작은 국가적 개혁 정책들에서 긍정성과 동시에 제약성을 보아왔음. 이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참여하는 공간, 즉 크고 작은 공동체들과 지역사회 등의 역할이 동시에 필요해짐.

3. 사회혁신은 어떻게 다른가?

- 사회혁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활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기존에 익숙한 사회변화 방법론인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과 목표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다만 방법과 경로, 즉 전략이 다를 뿐임. 혁신의 주체도 넓은 의미에서 다르지 않고 다만 주체가 조직되는 방식, 참여하고 활동하

는 방식이 다를 뿐임. 결국 사회혁신의 핵심은 방법론.

- 즉, 사회혁신이 생활의 작은 부분에 대한 실제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스템 체인지, 즉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인식과 행동, 구조를 영원히’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혁, 사회개혁과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사회혁신도 일시적이고 불안한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확고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대체로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역학관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사회혁신이 사회개혁을 포함한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를 ‘대체’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사회혁신은 선거를 통한 정치적 집권에서 집행되는 사회변혁, 사회개혁과 상호 보완하는 기제로서 위치지어질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21세기에 사회에서 사회혁신 동력이 없는 사회개혁이나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주체의 측면에서 보아도 대부분의 사회개혁 지지자들이나 사회변혁세력은 각 풀뿌리 단위에서의 사회혁신 역량이 될 것임.
- 또한 사회혁신은 대개의 경우 인위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복잡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회변화의 실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일원적인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됨. (예컨대 사회혁신 10대 목표 등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회개혁 10대 목표 등과는 다름)



Key
 Core elements of social innovation
 Common features of social innovation

그림 2-3: :사회혁신을 구성하는 요인들 (출처:TEPSIE 2012)

- 하지만 사회혁신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혁신은 태도와 행동, 인식(attitudes, behaviour and perceptions)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즉, 작더라도 대안적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아이디어와 접근방법을 필요로 함.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포함. 실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혁신적 구상을 혁신적 실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혁신의 매력이자 존재이유.
- 이 대목에서 주로 문제제기와 주의환기, 청원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운동(movement)이나 캠페인(campaign)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함. (Therefore, we make a distinction between promising ideas (which may or may not become social innovations) and social innovations.)(TEPSIE 2012)
- 사회혁신은 주어진 거시적 환경 아래에서 실제 혁신적인 실험을 해본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풀뿌리 단위에서의 실행전략과 연계되어 있음. (“Social innovation as being intertwined with local development strategies”)(TEPSIE 2012) 또한 사회혁신이 사회운동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지평에 걸쳐 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됨.

다른 생각, 변화를 위한 기획, 그리고 당장 있는 곳에서 실행하는 것

-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새로운 변화(Change)를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것인가? 물론 아니다. 사회혁신은 명확한 방향, Vector를 가지고 있음. 단지 양적인 현상으로서 ‘변화(change)’나 ‘새로움(novelty)’를 강조하는 것은 실상 사회적으로는 무의미함. 즉,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혁신을 하는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
- 사회혁신을 추구할 때 그것을 단지 방법론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가치전략’을 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즉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혁신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
- 사회혁신은 본성상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not value neutral), 동시에 정치 사회적으로도 중립적일 수 없음. “사회혁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늘 정치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social innovation is never neutral but always polit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TEPSIE 2012)
- 반면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매우 단일하고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이 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생산성 향상’으로 모아지고 기업혁신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이윤’으로 수렴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사회’라는 단위가 매우 중층적(마을 공동체에서 국가와 민족, 글로벌 차원까지)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공공선, 정의와 형평성(the public good, justice, equity)’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어떤 것이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함께 사는‘ 것과 맥락이 닿아야 할 것.
-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무차별한 혁신 찬양론은 위험할 수 있음. 지난 30여년간 신자유주의는 구조개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의 곳곳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은행권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 중 쓸 만한 것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나다.”라고 말했을까?
- 유럽위원회 보고서 역시, 모든 혁신이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의 금융부문의 혁신은 경제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술하고 있음. 핵심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라는 대목은 아주 잘 지적한 것. (“not all innovation is desirable. Many of the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have proved at best to have little social value and at worst to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strous. Policy-makers needs to favour innovations that can be demonstrated to have a high social value...” BEPA(2010)
- 또한 사회혁신의 전도사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회 혁신가 제프 멀건 (Jeff Mulgan) 조차도 2013년 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혁신을 찾는 것은 망상일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혁신은 다른 쪽에 파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²¹⁾

21) Keynote speech Geoff Mulgan(2013), "Setting a future research agenda for social innovation", Social Frontiers: The next edge of Social Innovation research 2013/11 , <https://www.youtube.com/watch?v=dER0EFOVQ5o>

-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이 있다면 좋은 혁신 중에는 더 좋은 혁신도 있을 수 있을 것임. 같은 얘기지만 좀 각도를 돌리면 ‘더 절실한 사회혁신’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더 성공가능성과 확장성이 높은 사회혁신도 있을 수 있음. 이런 걸 굳이 한가하게 따지려고 하는 이유는, 인적, 물적, 시간, 공간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그리고 그에 따라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기 때문.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 사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혁신 사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금융혁신’과 ‘IT혁신’을 꼽지 않았을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문자 그대로 ‘대량 살상무기’로 확인된 파생금융상품은 사실 이제까지 금융공학이 이뤄낸 혁신의 꽃이자 금융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발명품으로 칭송받았다. 1973년 마이런 솔즈(Myron Scholes)와 피셔 블랙(Fischer Black)이 완전금융시장에 대한 이론적 가정 아래 옵션가격 모형(이른바 블랙 솔즈 모형)을 개발한 이래 파생상품은 최고 난이도의 공학적 뒷받침을 받는 최고의 혁신 상품으로 대접 받았던 것이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금융혁신이 주도하고 정보통신 혁신이 밀어주면서 굴러온 20여 년 동안의 혁신의 수레바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침체를 일으킨 원흉이 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이제 이들을 인류를 힘들게 했던 혁신, 나쁜 혁신으로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혁신이 좋은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1970년대 이래 금융부문에서 앞에 예시들 든 그런 혁신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블랙 솔즈 옵션 가격모형이 개발되던 1973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작은 마을의 여성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 구상을 시작하게 된다. 유누스가 착수한 혁신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을 수 밖에 없어서 일반적인 은행시스템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와 신용보증 없이 150달러 미만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 해주는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원리금 상환이 안 되어 망했을까? 정 반대다. 원리금 상환률은 ‘98%’였다고 한다. “현재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받은 870만 명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운영 중인 그라민 은행 지점은 2천개 이상이며 1만 8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라민 은행의 성공적인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은 끝없는 침단을 추구한다면서 불평등과 위험을 확대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혁신이 아닐까? 이처럼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은 구분할 수 있다.

* 이승은, 『되살린 미래』

4. 사회혁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우선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회혁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주·객관적인 차원에서 가능함.
- 1) 사회혁신 담당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혁신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자원의 분포, 지적 자원의 분포가 되었을 때 가능함. **플뿌리라고 하는 제한된 단위에서도 최소한의 지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보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사회변화의 최소한의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 현재 도달했기 때문임.**
- 2) 객관적인 사회상황에 비추어 보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의 민영화와 시장화 폐해와 함께,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 대침체의 여파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와 기존 해법의 무력함이 사회혁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임.
- 유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위기국면에서 기존의 통념들이 깨져나가자 빈곤, 복지, 성장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로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사회혁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음.(Social innovation can offer a way forward in coping with the societal challenges and the crisis that EU is facing by mobilizing people's creativity to develop solutions and make better use of scarce resources) (BEPA 2010)

기회 - 성장과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대략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삼각형은 "성장(growth) - 평등(equa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라고 요약될 것. 그런데 과거에는 세 가지 축이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로 갈등했음. 흔히들 보수는 성장에 집착하고(불평등과 환경을 무시하며), 진보는 평등에 무게를 두고(성장 해법과 환경을 부담스러워 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태, 환경입장에서 성장주의를 비판하는 식임.

- 하지만 다행스럽게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결대목들을 활발하게 찾으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음. 즉, 1) 현재 장기침체 기저에는 극심한 불평등과 그로인한 소비위축이 놓여 있으며,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성장 촉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뭔가 하는 점이 좀 더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 정책, 부자 증세 등 몇 가지만 산발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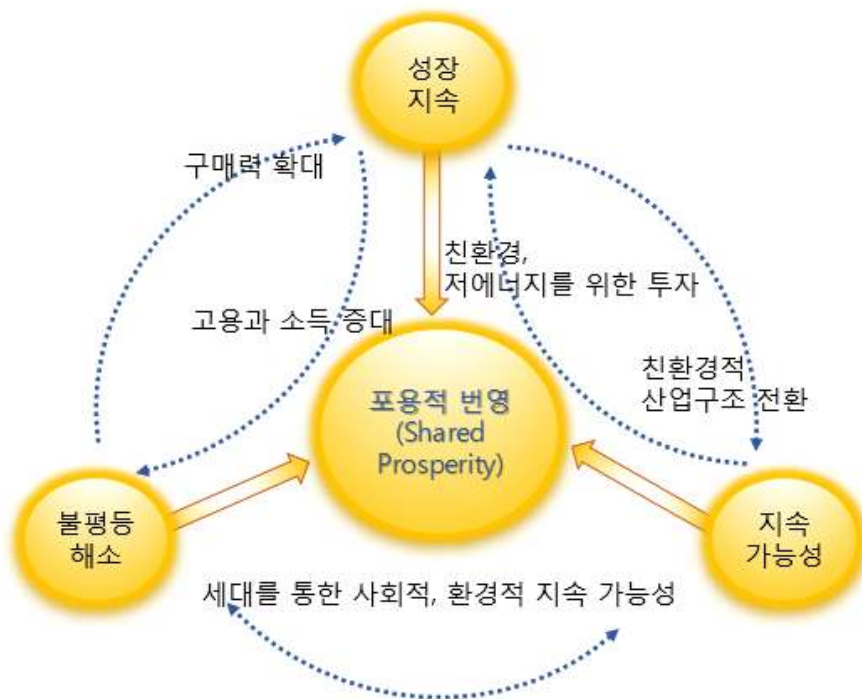


그림 2-4: 우리가 원하는 미래 번영의 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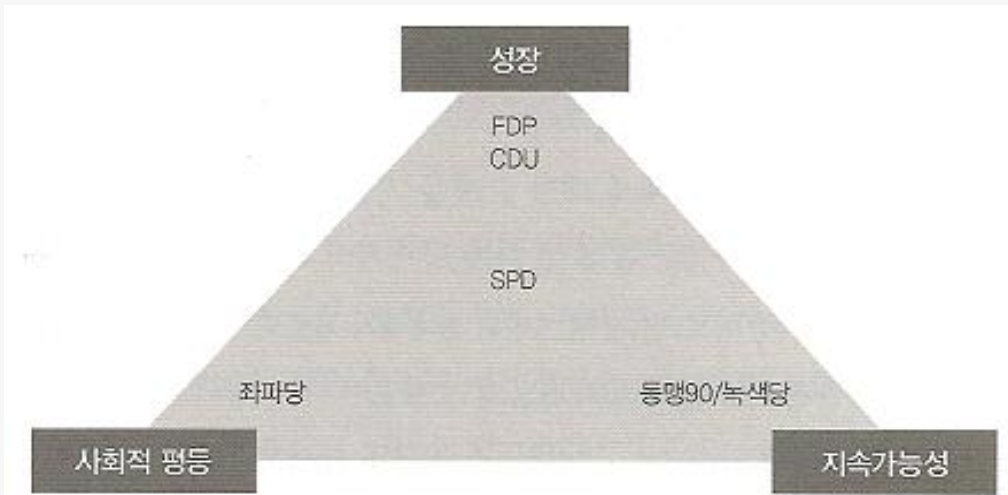
- 2) 현재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소비 위축뿐 아니라, 투자부진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경, 생태를 위한 공공투자가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논지 역시 늘어나고 있음.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고 탄소 발생형, 공해 유발형 기존 산업시스템에 대해, 자원 효율형, 저탄소 에너지 형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을 정도임. (이런 사례로 그는 large-scale deployment of solar and wind power; broader adoption of electric transport, both public (buses and trains) and private (cars); energy-efficient buildings; and power grids to carry renewable energy across large distances)²²⁾
- 2014년 9월의 유엔 기후변화 회의 주제들도 유사한 기초를 보이고 있음. (The fact that two of today's most pervasive challenges - climate change and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the young and the unskilled) - can be addressed simultaneously, with mutually reinforcing policies) 문제는 여기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들이 정작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삼각형 "성장(growth) - 평등(equa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동시적 해결이 필요해진 시대가 왔고, 다행스럽게 선순환적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지점으로 거시적 사회혁신의 과제가 모일 것.

성장과 평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거의 정치학

지금까지는 성장과 평등, 지속 가능성 가운데 어떤 지점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정당들의 성향이 구분되었다. 성장을 강조하면 보수적 정당으로 분류되고 평등은 좌파 정당들을 특징 지웠으며 지속가능성은 녹색정당들의 어젠다였다. 이는 독일 사회민주당 계열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설명을 보면 그림과 같이 매우 명확히 알 수 있다.

22) 아울러 케인지언 성장정책과 생태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팀잭슨(2009), 『성장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과거의 도식과 경계를 넘을 필요가 있다.



* 시몬트 바우외 지음(2009),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한울출판사, 112쪽

- 문제는 인류사회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의존했던 두 가지 해법인 ‘시장에 의한 해법’과 ‘국가에 의한 해법’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임.
- 다시 말해서 관행적 방법이 역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기존 해법은 크게 국가에 의한 해법과 시장에 의한 해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현재 이 두 가지 해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1) 국가와 시장이 이미 해결하는데 모두 실패했거나, 2)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국가가 계속 외면하고 있거나, 3) 수익이 나지 않아 자본투자의 관심이 없어 시장이 외면하거나, 4)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거나, 5) 시장이 장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다수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6) 국가와 시장이 각각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더 큰 문제(환경)를 위협에 빠트리는 등 영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것이 2010년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필요해진 이유.

- 최근 경제위기 이후 유럽등지에서는 이른바 국가재정문제로 인한 ‘재정의 제약성’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을 고려하고 있기도 함.²³⁾(물론 정말 재정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 긴축이라는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서 재정제약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따져볼 사안도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평등과 실업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고령화, 생태 환경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까지 중첩된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과 국가의 단순해법으로 풀기가 어려워진 사정을 반영하여 사회혁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됨.(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실업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거나 사회복지의 한 대안으로 간주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
- 따라서 사회혁신은 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장의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살피면서, 이 양자가 포괄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비국가적/ 비시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쪽에 많은 무게가 두어지게 됨.

시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나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기회를 보자.

- 그런데 국가와 시장, 중간쯤에 서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 객관적일 것일까? 아닐 것.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대체로 우리나라도, 국가의 역할이 천대받고, 시장이 과도하게 찬양된 시절을 막 보냈기 때문.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시장의 과도한 전횡은 확실히 많이 줄여놓을 필요가 있음. 이런 고려 없이 그냥 국가와 시장이 다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고 현실에서도 도움이 안 됨.
- 예를 들어 공기업으로 해야 할 것, 국립으로 해야 할 사회서비스 등은 확

23) BEPA(2010)

실히 그렇게 다시 되돌려야 함. 이들을 대충 두리뭇하게 사회적 영역이 하겠다고 나서면 무리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음. 물론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 국민이 똑똑해짐에 따라 국가의 단순한 중앙계획에 의거한 획일적, 관료적 해법 보다는 '좀 더 분권화된'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한 시장적 해법과 시장적 사고는 많이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음. **사실 진정한 다운사이징은 국가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 그런 점을 고려하여, 시장이 어울리는 우리 생활의 영역을 공유하고, 규제가 필요한 곳에 규제를 통해 시장을 더 잘 작동시키는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본원적으로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현실적 형태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 방대한 시민사회영역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는 아이디어와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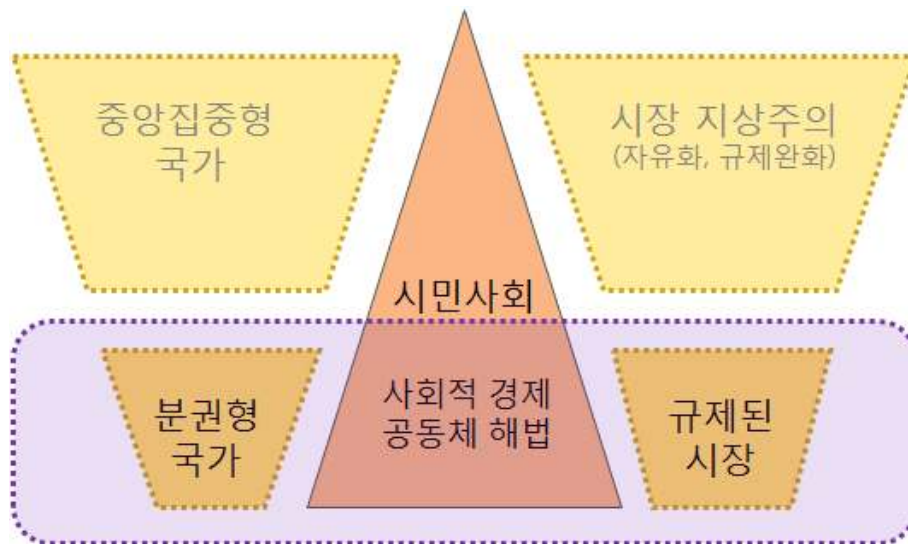


그림 2-5: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재구성

-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이라는 축을, 사회주의 전통은 국가라는 축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좇는 장으로 그려지며 계약은 시장의 주된 조정수단이다. 반면, 국가는 법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정치행위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구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구도 아래에서는 시민사회 조직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음.²⁴⁾

- 최근 기존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관계국가’ 역시, 관료적 이해관계나 시장의 논리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지양되고, 대신 시민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시민주도의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체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의 형성과 기획 보장이 요구됨.

5. 어디에서 사회혁신을 시작할 것인가?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 에서 사회혁신은 시작한다.

- 모든 훌륭한 사회혁신 뒤에는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에 대한 발견과 공감함이 있었음. 이것은 마치 시장에서의 모든 탁월한 상품들 뒤에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한 기업의 노력이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정치에서의 모든 훌륭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밀착해서 들었던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과도 동일한 맥락임.
- 사회혁신이라는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곳 역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임. 여기서 특히, 단기적 이익이 없어(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절대 사적 기업은 손댈 가능성이 없고, 공적 기관은 정치적 이유로 회피하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는 절실한 생활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24) 스테파노 자마니(2014),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 따라서 혁신해야 할 대상/문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며, 문제의 선정 안에 거의 '문제를 푸는 주체'와 '향후 문제 해결로 수혜를 볼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 인식과, 통찰이 절대 긴요한 것. 즉 사회혁신은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현재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난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임.

사회혁신은 '창조' 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발견' 하는 과정이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회혁신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기획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마치 실리콘벨리의 벤처창업자들이 정책적으로 기획하여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경우 초기에는 시민들의 삶의 곳곳에서 초보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시도되는 혁신적인 잠재 가치들을 '발견'하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 사실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가 있는 곳에서 이미 시민들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록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매우 부족한 자원만을 갖고) 행동을 시작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시도 안에서 문제를 풀 솔루션은 배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절대 다수 시민들의 공통된 필요와 연결되는 거대한 문제를 두개만 꼽으라면 바로 불평등과 생태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이외에도 교육, 주거, 고령화와 인구학적 문제, 복지, 세계화의 충격 등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는 매우 복잡함. 더욱이 이들은 상호 얽혀있음.
- 요약하면 사회혁신을 우리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Social needs)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에서는 이를 '결핍기반 접근법(deficit based approach)'이라고도 부름.²⁵⁾

- 그러나 동시에 사회혁신은 단지 ‘구상’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켜 내야 하므로, 필요를 현실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자원을 따져야 함.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따져보고 이 범위에서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접근법을 ‘**자산기반 접근법(asset based approach)**’이라고 부름.
- 물론 현실에서는 양자가 공히 필요할 것. 주민과 시민, 동료들의 필요로부터 혁신의 대상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초하여 당장의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임.(당연히 이 과정에서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이런 자원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도록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할 것임.)

결핍기반 접근(deficit based approach)과 자산기반 접근(asset based approach)

- 아울러 대개 사회혁신은 1)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2) 기성 권위에 대한 현실적 심리적 억압이 최대한 약하며, 3) 건설적인 비판이 활발한 곳에서, 4) 그리고 기성의 관행적 영역들을 뛰어넘는 활동 속에서 보다 잘 일어날 것임. 기존 사회구조의 중심보다는 ‘변방’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혁신의 기운이 사회의 외곽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됨.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
- 또한 혁신적 활동으로 이룬 결과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관대하게 수용해보려는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거꾸로 사방에서 치밀한 건설적 비판을 수용하고 견뎌내야 하기도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존’하는데 성공한 사회혁신이 바로 확산과정을 거쳐서 거시적 혁신으로 도약하게 될 것임.

25) TEPSIE(2012)

6. 사회혁신을 향한 전략과 방법

사회혁신을 위한 ‘공식’은 없다. ‘패턴’을 찾아라.

- 혁신을 경제학 개념에 도입한 조지프 슈페터는 혁신에 대해서, “조직상의 발전은 부단히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면-의 동일한 과정을 예시한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실”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김.²⁶⁾
- 그런데 그에 의하면 창조적 파괴, 돌연변이, 혁신은 기상천외한 발명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즉 생산 요소와 자원들의 기존 결합방식에서부터 나옴. 다만 기존 결합방식을 그냥 수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결합방식을 부정하고 파괴하여 새로운 결합방식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이 슈페터의 혁신 방법론. 비록 보수적인 경제학자이지만 혁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혁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슈페터가 분류한 혁신의 유형

슈페터는 ‘새로운 결합의 수행’을 통한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식화하고 있다.(슈페터 1911) 100년 전에 정식화했다고 보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1. 새로운 재화, 즉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는 재화 또는 새로운 품질의 재화 생산
2. 새로운 생산 방법, 즉 해당 산업부문에서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생산 방법의 도입. 이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새로운 발견에 기초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상업적인 취급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 새로운 판로의 개척, 즉 해당국의 해당 산업부문이 종래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시장의 개척, 이 시장이 그 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6) 슈페터(194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4. 원료 혹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이 경우에도 이 공급원이 기존의 것인가 - 단순히 못 보고 지나친 것인가.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것인가를 불문하고- 혹은 최초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새로운 조직의 실현. 즉 독점적 지위(예를 들면 트러스트)의 형성 혹은 독점의 타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결합방식(혁신)은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이 관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의 기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업가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단순히 보행횟수를 늘리는 것과 다른 것처럼, 새로운 결합의 수행은 단순히 관행적인 과정의 점진적 반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편 마차를 아무리 연속적으로 배차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결코 철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철도를 건설한 것은 일반적으로 역마차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 조지프 슈페터(1934), 『경제 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사회혁신은 또한 대단히 모험적인(risk-taking) 활동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로 됨.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질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작업과 이해관계조정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됨.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회혁신의 공식은 없음. 다만 공통되는 유형과 패턴을 찾는 것이 필요함.

사회혁신을 위한 투쟁의 무기, ‘설득과 공감’

- 통상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에 의지해왔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하게 됨. 그 중에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도 있고, 우리안의 ‘고정 관념’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될 개연성도 일부 있음. 따라서 사회혁신 역시 혁신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반드시 돌파해야 함.
-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기가 막힌 혁신은 현실에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혁신을 말하지만, 그 불평등이라는 기존 관행에 없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임.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쪽에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임. 사회혁신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함.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항이 없다는 것은 기존 관행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혁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다만 혁신은 실제 검증 가능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설득기제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설득과 공감’에 의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회혁신의 장점이 될 것임.
- 일찍이 1929년 『설득의 에세이』라는 책 제목으로 짧은 글들을 출판한 바가 있는 케인스는, 책 서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기 위한 ‘설득의 정신’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는데 특히, 케인스를 20세기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설득가”라고 논평한 스킨델스키는 케인스의 설득 비결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음.
- 1) 언제나 상식에 연결시켜 설득한다. → 고용은 총수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단지 “아무도 차를 사지 않는다면 차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자동차 노동자의 직관을 일반화하는 식으로 이론을 폈음. 때문에 케인스에게는 일상 언어의 능란한 사용을 필요로 했음.
- 2) 절박함을 가지고 설득한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변명하며 구질서의 붕괴를 맞고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을 들고 대중에게 다가갔음.
- 3)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설득한다. → 세상은 정부의 의도적 행위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케인스는 가지고 있었음.
- 4) 권위를 가지고 설득한다. → 진리를 말하기 위해 핵심적인 정부 직위를 포기했던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설득은 호소력이 있었

음.27) 늘 평범한 사람의 상식과 접목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설득에 무게를 더하는 권위가 설득의 요건이라고 가르쳐줌.

‘모방’ 도 사회혁신의 중요한 요소다.

- 비록 기업 혁신의 사례이지만, 슈페터는 혁신의 발생과 확산과정을 이렇게 설명함. “우선은 혁신의 단독 출현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기존 기업 중에서 두 세 개의 기업이,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서로 다른 완전함을 가지고 혁신을 붙잡는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선구자’가 출현한 생산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른 생산부문에 의해 모방”되어 확산됨으로써 호황국면이 온다. 이것이 슈페터가 설명하는 혁신의 출현과 전파, 확산의 경로이고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동력.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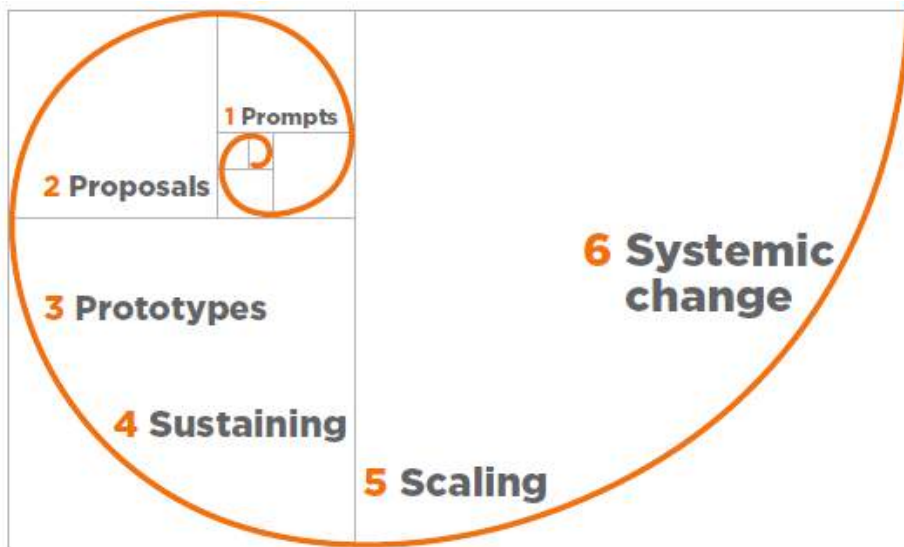


그림 2-7 :사회혁신의 여섯 단계(출처: NESTA 2010)

27) 로버트 스킨델스키(2003), 『존 메이너드 케인스』, 후마니타스

28) 조지프 슈페터(1934), 『경제 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여기서 예시하는 것처럼, 혁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모두들 초기에 아기자기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자못 신기해서 거기만 쳐다볼 수 있는데, 점점 더 혁신의 발생과 성공 확장과 일반화의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창조 못지않게 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일수 있음. 참여 예산제는 사회혁신 중에서 드물게 정치 부분의 혁신이라는 점, 최고의 검증된 혁신사례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모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실험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중요. 유럽에서도 참여 예산제는 매우 비중 있는 사회혁신의 사례로서 여전히 실험과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독일 사례를 길게 설명하는 보고서도 발견.²⁹⁾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모방을 사회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끌어 들여야 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모방과 확산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는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이며 협력자다.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 사적 영역, 시민사회영역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음. 이들 각각은 사회혁신의 대상 영역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니셔티브는 속성상 시민사회영역에서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혁신에서 시민 이니셔티브는 매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교차하면서도 그 사이에 ‘매우 넓은 중간지대 -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임. (물론 시민사회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는 아직 숙제임)

29) <http://www.epractice.eu/en/cases/colognepb>

- 과거에 공공은 사회변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했음. 개혁에서 공공은 주로 변화를 추진할 주체로 인식되었음.(물론 정권교체로 개혁세력이 집권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사회혁신에서는 공공을 혁신의 지원자/협력자(Partner)로 보는 것이 주류라고 생각됨. 다만,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개념이 공공이 민간에게 공적 영역을 ‘위탁’하는 포괄적인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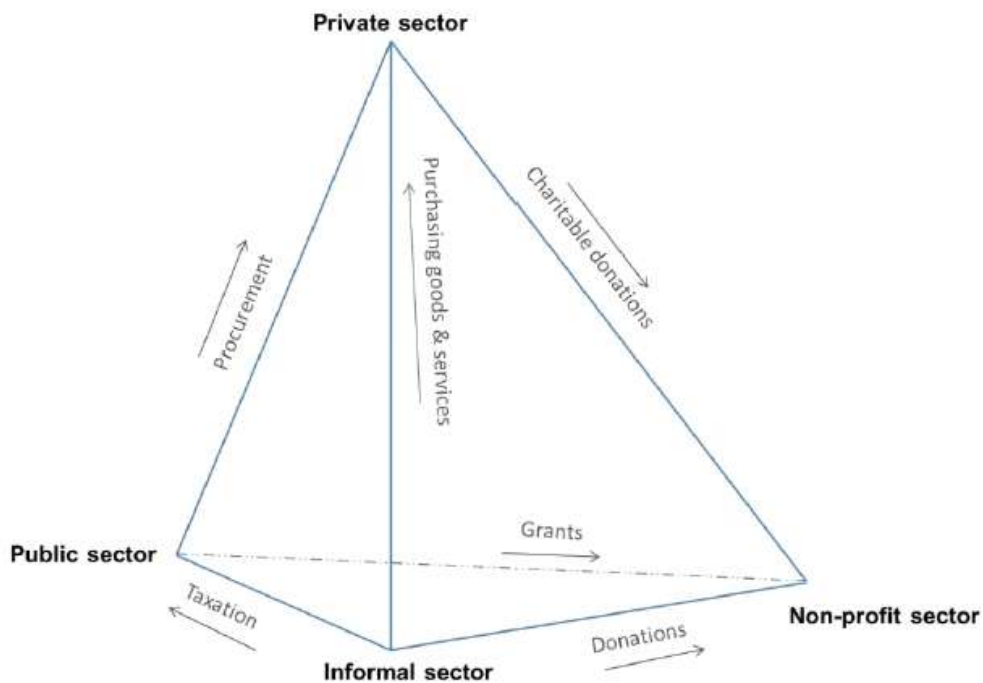


그림 2-8 :사회혁신의 영역과 주체(출처: TEPSIE 2012)

-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스펀터가 기업혁신을 말하면서 가정했던 혁신적 기업가(entrepreneur)에 비견될 사회 혁신가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혁신 리더십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미 이런 개념들을 상당히 기정사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

30)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 사회혁신은 현실의 자원제약과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기본은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여 필요가 절실한 당사자가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공적, 사적 주체와 자원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 따라서 선불리 개인으로서의 혁신가나 리더를 호명하기 이전에 시민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들 사이의 협력 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회혁신이 기존 공식을 깨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기존 협력 틀과는 다른 틀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혁신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전통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으로 주체형성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회혁신은 운동(Movement)과 비즈니스(Business)에 걸쳐있다.

- 사회혁신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대안적 사회 질서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회 운동적 관점’에 기반 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사회혁신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실물로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업이자 비즈니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이미 물질적 제품 생산을 넘어서 각종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음. 따라서 사회혁신이 비즈니스 주체와 비즈니스 방법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함.
- 사회운동은 부단히 시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을 태도를 갖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을 자극할 수 있고, 비즈니스는 시민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대안적 실험에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됨. 이런 방식으로 사회혁신은 사회 운동적 경험과 자원, 그리고 동시에 비즈니스(특히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비즈니스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CSR기업 등)적 경험과 자원을

동시에 포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역사도 다르고 원리나 주체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다 보니 사회혁신이 어떤 때에는 사회 운동적 경향을 지나치게 보이면서 캠페인성 문제제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즈니스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사회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에 몰입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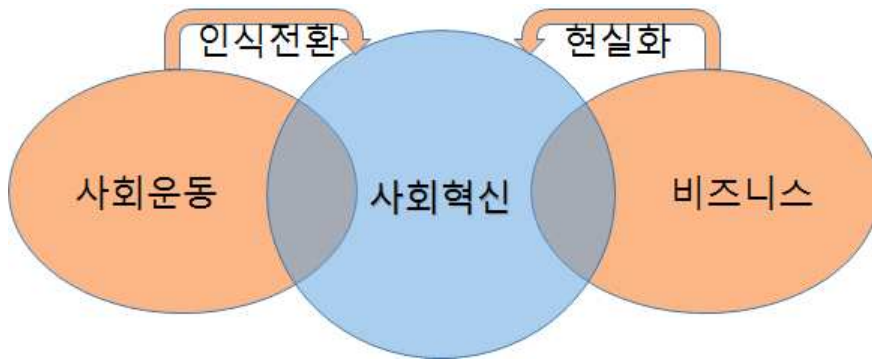


그림 2-9 :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사회혁신

- 전통적 사회운동, 계급기반의 조합운동, 캠페인성 시민운동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는 모든 사회적 행동운동을 운동이라고 부른다면, 사회혁신은 분명히 거대한 부분의 사회혁신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사회혁신의 측면에서 볼 때, 대안적 실험을 포함하는 사회혁신이 기존의 운동영역/ 캠페인 영역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되는 운동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특별히 덧붙여 둔다면, 사회혁신을 말할 때 대단히 많은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거명.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비즈니스가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공익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왔기 때문

에 활동주체와 활동방식 측면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사회혁신을 선점했던 사정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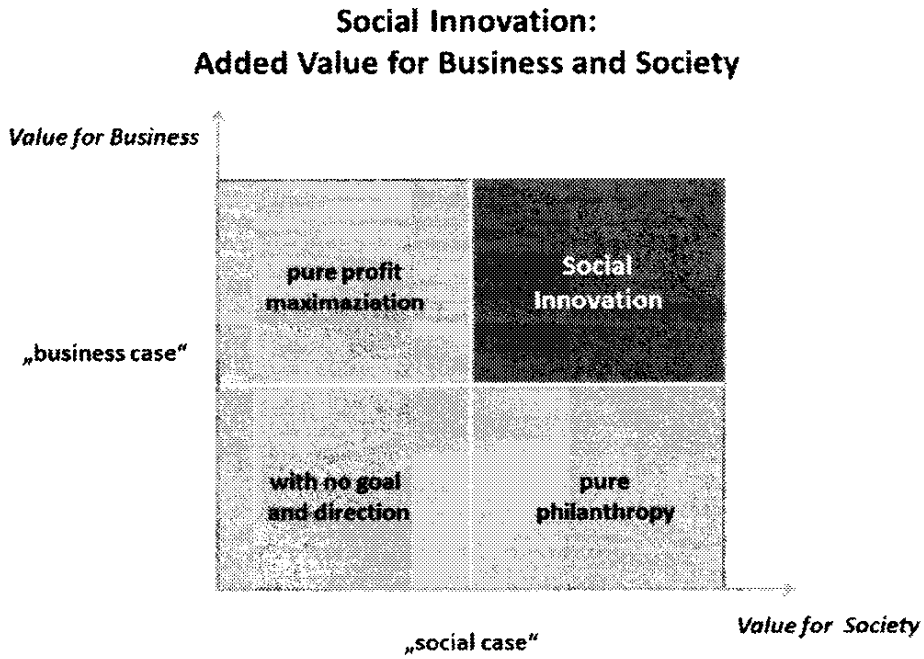


그림 2-10: 사회혁신과 비즈니스의 위상

(출처: 『Social Innovatio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 다만,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혁신 주체들의 목표가 다르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회혁신 주체들의 활동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현실에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아직 없음. 한 가지 짚어둘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혁신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나 자선 등이 아닐 것. 기업 조직은 가장 큰 사회적 조직이다. 따라서 그들의 조직을 보다 사회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근원적 과제일 수 있음.

사회혁신의 모든 성과는 ‘사회적 자본’ 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 사회혁신도 비즈니스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검

증할 객관화된 성과측정지표가 존재하는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는 일부 존재하지만 아직 사회혁신 전반을 포괄하는 표준적인 사회혁신 정량적 성과측정 지표는 없음. 앞으로의 과제일 것인데, 사회혁신이 통상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수량적 측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물론, 1)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복제와 확산 가능성: 뚜렷한 확산 경로를 가지고 있는가? 3) 자원 절약 가능성: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4) 참여와 수혜 대상의 확장성: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가? 등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임.
-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든 성과는 사람들의 신뢰관계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로 귀결되어야 함.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귀착되어야 함.



그림 2-11: 사회혁신 추세 (출처 TEPSIE 2012)

일상이 작은 혁신을 거대한 시스템 변화의 지렛대로 만들자.

- 통상 사회혁신의 출발과 근거는 미시적 차원(개별 기업, 개별 공동체 차원, 개별 사안 차원)에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미시적 사회혁신에 그칠 수 없는 Big Change / System Change가 필요한 시점. 따라서 미시적 혁신이 거시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함.
- 2008년 이전의 사회혁신전략이나 사례들은 시스템 변화를 자극하는 수준의 혁신 보다는 기존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의 소극적 사회혁신전략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 교체를 공략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혁신 전략**’을 필요로 함. 적극적, 능동적, 거시적, 입체적 전략이 필요함.
-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예로 들면서,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업 활동이 어떻게 전체 경제의 거시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첫째, "사회적 경제 그 자체만으로는 심대한 사회변화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분배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협실**’ 역할을 할 수는 있다.
- 둘째, "사회적 경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전체 사회.경제에 **자신의 규모 이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 셋째,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 결국 ‘실험실’로서, 그리고 제도적 ‘충격’ 측면에서, 그리고 이질적 부분에 대한 완충/조정자의 역할로서 거시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어쨌든 시스템 체인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파워(System power)가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면, 미시적 사회혁신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거시적 변화를 전망해야 할 것임.

거시적 사회혁신을 향한 도전, ‘서울 혁신 파크’

우리나라에서 거시적인 사회혁신을 목표로 한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구) 질병관리 본부 3만 5천 평의 부지에서 활동하게 되는 ‘서울 혁신파크’이다. 2015년부터 혁신센터라는 중간조직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고 2017년까지 파크 내부의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약 1200억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수백 개의 혁신활동 조직들이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사회혁신의 아이디어 -> 디자인 -> 실행을 중, 횡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사회혁신 실험실, 거대한 사회적 자본의 인큐베이터로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전략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의 꽃이 될 예정이다. 낙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민이 주목하고, 국민이 주목하고, 세계가 주목할 사회적 실험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2015년 5월 29일, 혁신파크 첫 입주설명회

7. 다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발상과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

- 점점 더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학계나 정책 집단, 또는 활동가 그룹 사이에서 합의된 개념은 없음.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사회혁신의 정의들은 아래의 사례가 있음.
- “사회혁신은, (기존 해법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새롭거나 개선된 역량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한편, 자산과 자원의 더 나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운 해법(상품, 서비스, 모델, 시장, 프로세스 등)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혁신은 사회에 이익이 되면서 사회의 실행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Social innovations are new solutions(products, services, models, markets, processes etc.) that simultaneously meet a social need(more effectively than existing solutions) and lead to new or improved capabilities and relationships and better use of assets and resources. In other words, social innovations are both good for society and 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TEPSIE 2012)
- 또는 사회혁신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상품, 서비스, 모델)”로써,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써 정의되기도 함. (Social innovation are innovations that are social in both their ends and their means. Specifically, we define social innovations as new ideas(products, services and models) that simultaneously meet social needs and create new social relationships or collaborations. They are innovations that are not only good for society but also 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NESTA 2010)

- 조금 더 나가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유형의 조직화, 작동방식을 개발하는 것"(Developing innovative solutions and new forms of organizations and interactions to tackle social issues - BEPA(2010)) 정도가 참조가 될 수 있음.
- 2013년에 출판된 Thomas Osburg, Rene Schmidpeter Editors(2013), 『Social Innovatio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에 실려 있는 수십 편의 논문에는 앞서리마다 사회혁신 정의를 제각각 해놓고 있는데, 대체로 위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음.
- 우리는 사회적 필요 - 사회혁신 - 사회적 자본과 연계해서 사회혁신을 재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때에 사회혁신은, ①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② 새로운(신뢰와 협동)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③ '기존 방식과 다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④ '당사자들의 참여와 행동'임.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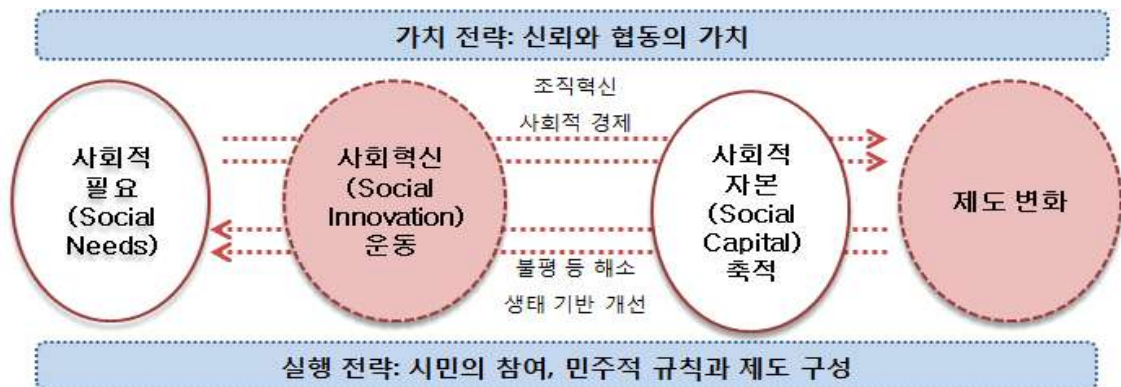


그림 2-13: 사회적 필요,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의 연관 관계

31) 김병권(2013),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서 사회혁신"

-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현학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분야 사람들을 테스트베드로 진행하여 구체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설계함. 질문 구성은 ‘본인 소개(0)’- ‘관심 키워드 또는 기술적인 트렌드 선정(1)’- ‘선정 이유(2)’ - ‘기술에 관한 미래 예측(3)’ - ‘이유(4)’ - ‘기대 사항/우려사항(5)’ 등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구성함.



그림 3-9. O-question 사이트

■ 그룹 인터뷰

○ 소그룹 단위 인터뷰

- 제한된 시간에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질문과 키워드 답변을 요구하는 진행방식을 취함. 대략 4~5개의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들이 자신이 적은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작성한 키

- 워드를 취합·분류한 결과를 본 후 각자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기후변화와 삶터·삶의 방식> <일상과 가족>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등 4개 랩에서 진행함. 2~3시간 동안 10명 내외 참여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스케치북이나 포스트잇을 활용함. 기본적인 질문을 구성하되, 현장에서 분위기에 따라 재구성됨.(표의 질문들은 예시임. 큐레이터들이 사용시간과 참여자 유형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진행)

구분	질문안	소요시간
기후변화와 삶터·삶의 방식	내 삶터의 문제점은? 기후변화&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내 삶터를 위협하는 문제점, 내 주변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1,2,3 자신이 선택한 생활방식의 변화? 삶터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것만큼은 꼭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시스템 체인지. 대안은 무엇인가? 나의 선택은?	120~150분 (식사시간 포함)
일상과 가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족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가족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 자유롭게 정리.	
	자기소개 및 돌봄하면 떠오른 단어 돌봄의 주체에 대해 가정, 시스템, 정부 전달체계 등 다양하게 접근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여성운동이 돌봄이라는 가치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 비가치하게 느껴지거나, 정부 투자비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자기소개와 성장의 키워드 경험담과 생각 나누기	
	현재 한국사회의 OOOO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기를 소개하는 키워드 3가지와 함께 정리 (나는 왜 지금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변화를 위해 나만의 다른 혁신의 방식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마무리 키워드	
--	---------	--

■ 레고시리어스플레이(LSP)

- 20년 뒤의 가족을 레고로 만들어보는 ‘소셜 픽션’(Social Fiction)의 유용한 틀로 레고시리어스플레이(이하 LSP)를 활용함. ‘질문하기 → 만들기 → 공유하기 → 반영하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주제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주제를 심화해감. 개별 작업으로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레고 모형으로 표현한 뒤 각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록들을 하나씩 모아서 공동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을 만들어감. 3시간 넘게 가족을 레고로 만들고 발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감.
-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인원수에 따라 조별로 나누고 사전 설명과 함께 공통 주제를 제시해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집밥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함. 비주얼싱킹 방법론으로 LSP가 활용되는 만큼 레고 모형을 표현 도구로 조립과 제작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지적 자극을 주는 지점이 있음. 보통 발화자가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시작하지만 LSP는 자신이 만든 모델을 주어로 3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두기를 확보할 수 있음.
- 레고 조립이라는 적극적 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는 점, 다양한 층위에 있는 사람들의 열린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가깝게 설계된 모형이라 문제 발견을 위한 용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0 레고시리어스플레이

■ 다주체 PT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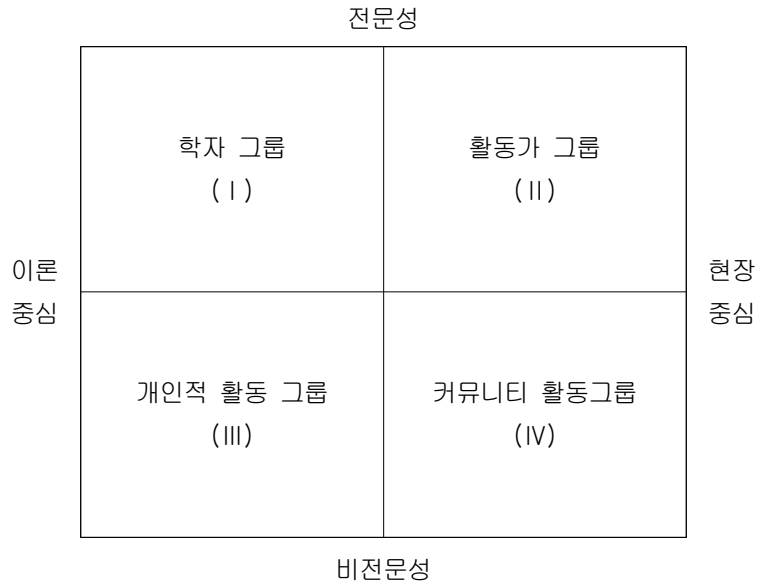
○ 이그나이트 방식 변형

- 공급자 중심의 토지개발과 도시화가 낳은 사회문제, 저성장 양극화 사회에 따른 미래세대가 겪는 문제 등 달라져가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려는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기획함.
- 주거권과 주거협동조합, 젠트리피케이션, 주민-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재생, 주민주도 마을계획, 노동권, 청년공동체, 소셜플랫폼 등 다양한 현장의 흐름과 대안적 실험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그나이트 방식을 변형한 PT Party를 진행함.
-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미래세대> 등 2개 오픈랩에서 새로운 주체 발굴과 참여주체들간 네트워크, 경험의 교류와 확산을 목적으로 발제자당 5~10분만 허용하는 집단발제 방식으로 운영. 발표 자료는 기본 PT이외에 영상, 공연, 그림, 구연동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열어둠.
- 참여자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듣는 방식을 취한 PT Party는 모임이 종료된 뒤에도 참여주체들간 후속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네트워킹의 장으로도 역할함.

2) 참여자

-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주제와 연관되었거나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 범위로 선정함. 주제의 관심 정도와 이해 수준에 따라 주도그룹, 활동그룹, 선도적 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겠음⁴⁷⁾
- 학술연구회, 정책 의제를 생산하거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실천 활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위와 연결하여 오픈랩 모임과 결합함.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아리포럼, 흥대텃밭 다리, 신중년 숲해설사 커뮤니티, 가칭) 공동체주택포럼 준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모임 운영함.
- 집밥, 은평상상허브, 청년허브, 전주 차라리언더바 등 플랫폼 또는 플랫폼 기능을 지향하는 개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심 그룹들을 발굴·선별함. 오픈랩 참여자들의 추천 또는 연결로 후속 참여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오픈랩 네트워크의 기반이 형성됨.
- 도시기획자그룹, 환경단체 활동가그룹, 미디어연구그룹 등 현장에서 쌓은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한 참여자 발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I,II,III.IV그룹(아래 그림 참고)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함.

47) 에버렛 로저스는 저서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이노베이터 innovators 2.5% ,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s 13.5%, 선도적 대중 early majority 34%, 후발 대중 late majority 34%, 느림보 laggards 16%로 분류했다.



- "공사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오픈랩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언권을 주고, 경청과 환대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참여자들간 내러티브의 소통 과정을 통해 공통된 패턴이나 함의를 분석함.

■ 참여자 특성

- 오픈랩 초기 과정에선 주제에 맞게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중간 이후부터는 오픈랩 모임을 통해 축적된 네트워크와 오픈랩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매개로 홍보함. 모임 성격에 맞게 기존 플랫폼과 연계하거나 협조를 구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제 기대보다 저조한 편이었음.
- 큐레이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문헌/인터넷 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연구-저술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을 직접 섭외하는 방식을 병행함. 활동/역할로 참여자를 분류하면,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행정관료, 사회적 기업가, 정치인, 정당 당원, 시민활동가, 교수/연구자, 중간지원

조직, 개발자, 교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직장인, 협동조합, 기획자, 디자이너, 대학(원)생, 뮤지션, 청년혁신활동가, 귀촌/농인, 청년창업자,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

- 종합해서 보면 오픈랩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20~50대로,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청년들의 자기 발언 시간을 염두한 ‘오픈랩: 미래세대’와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의 초기 모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음. 전주에서 진행된 모임 이외에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어 주로 서울에 사는 이들로 집중됨.
- 동일한 주제로 연속된 모임으로 진행될 경우 모임 참여자들에게 추천을 요청한 후 다음번 모임 때 추천받은 이들을 섭외하는 등 참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기도 함.

표 30 오픈랩 모임별 토론방식과 참여자 특성

lab 이름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참여자 특성	참여자수
기술과 사회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술	1. 질문 선정 2. 온라인 통해 질문 3. 전체 키워드 fgi 등의 방식으로 정리	기술 관련 전문가 및 각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개발자, 교사, 기획자, 마케터 등)	약 20명 (인터뷰 20명 + 기자 4명)
가족과 일상	가족의 모습	키워드 기반 FGI/ 소셜픽션 기반 LSP	가족 관련 현장 및 전문가/ 가족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35명
	돌봄	키워드 기반 FGI	다양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시민 이니셔티브 공공성	새로운 세대/ 정당의 미래/ 공적 자아/ 1인 가구/ IT와 정치	키워드 기반 FGI/ 1:2 대면 인터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청년세대, 공적 커뮤니티 관여자, 1인 가구 관련 현장 경험자, 정치 관련 IT 프로젝트 진행	약 25명/ 인터뷰 3명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사회혁신가 성장/ 사회적 금융	키워드 기반 소셜다이닝	30대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금융의 경우	약 20명
청년	일상 문제	의제 지형 파악을 위한 이그나이트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 등 다분야 활동그룹 참여	21명
도시	도시(개발)담론	의제 지형 파악을 위한 이그나이트	주민주도형 도시개발/성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도시기획자들 네트워크	150여명
	도시와 토지	이슈 생산형 전문가토론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등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진단과 분석	10명
시민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	키워드 기반 FGI/ 대면형 델파이기법	정책집행자, 정치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행정, 정치, 미디어 전문가들이 현상 분석과 미래예측을 함.	6명
치유와 복지	치유와 복지	이슈 생산형 FGI/ 소셜다이닝	사회복지사, 관련 중간지원조직, 공공병원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안을 강구함.	11명
기후모임	기후변화와 삶터, 삶의방식	키워드 기반 FGI형 소셜 픽션/소셜다이닝	전문가 커뮤니티부터 기후 관련 관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미래 예측, 대안을 모색함.	35명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한반도 경제	문제 발견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분야 학자들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 상호토론을 통해 현실적 대안 강구	40여명

4. 종합제언

■ 오픈랩의 한계와 기대효과: ‘사회적 의제 플랫폼’

- 오픈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양상과 흐름을 포착하는데 목적을 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 등 오픈랩의 화두를 9개의 카테고리에 연결지어 전문가, 생활인들의 ‘열린 답’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음.
- 구체적인 ‘이슈’나 특정 현상, 문제에 대한 공동의 집단지성을 조직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와 사회변화를 고찰하는 사고의 환기 과정으로 진행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지점들을 끄집어내는데 질문을 어떻게 설계해야하는지가 관건이었음.
- 이념이나 명분, 당위성, ‘어떠한’ 정체성을 요구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열린 질문’에 따라 ‘열린 답’ ‘풍성한 답’ ‘흥미로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촉매제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열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있음. 파일럿으로 진행된 오픈랩은 가능성만 남겨둔 미완성 상태이며, 질문 설계는 다음 과제로 남겨짐.
- 이번 단계에서는 오픈랩은 ‘열린 답’을 듣는 곳, 즉 다양한 의견을 듣는 ‘사회적 의제 플랫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음. 오픈랩의 진행 구조는 주제(또는 카테고리)의 질문에 대한 관심있는 생활인그룹과 전문가들이 공평한 발언권으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관심그룹들의 일상적 생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더해지는 깊은 대화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결과물이 온오프라인으로 공유되면서 ‘참여-개방-공유’가 선순환되는 ‘플랫폼’의 기대 가능성을 시사함.



한국사회 미래를 읽는 사회혁신 키워드

- ▶ 방법론: 변화의 윤곽 포착하기
- ▶ 어디서, 어떻게 변화의 신호를 읽을 것인가?
- ▶ 사회혁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중심 키워드

1. 방법론: 변화의 윤곽 포착하기

정확한 '인과관계' 보다는 '상관성' 과 '패턴' 찾아내기

- 전환기에 변화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번덕스러운 여름에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대규모 지진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여진을 제대로 예측하여 그곳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보다도 더욱 무모할 수 있음. 왜냐하면 사회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은 자연의 변화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무수한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기 때문.
- 특히 사회는 자연과 달리 사람이 행동에 의해 변하게 된다는 결정적 차이

가 있음. 즉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예측이 다시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결국은 당초의 예측을 벗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명절 기간에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도로를 교통방송이 안내해주면, 조금 후에 많은 차들이 그 도로로 몰리고 결국 그 도로는 교통방송의 안내와 달리 다시 혼잡해지는 원리와 같음.

-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전환기의 사회변화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확한 공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소 거칠더라도 큰 흐름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기의 격변기에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케인스는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략 맞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be roughly right than precisely wrong.)”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전환기에는 기존공식에 의한 정확성 추구보다는 틀을 깨면서 현실을 그대로 보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줌.
- 현재 시점에서 일상 속에서 변화의 모티브를 찾거나 사회 변화의 방향을 예상해내는 것이, 기존 과학에서 규범이 되어왔던 객관적 엄밀성이나 정확성 보다는 일종의 ‘근사치’로 접근해보는 방법일 수 있을 말해줌. 여기에서 시도한 오픈랩(Open Lab)방식은 이처럼 생활인의 직관에서 변화와 미래의 암시를 찾아보자는 취지아래 수행된 방법론임.

오픈랩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혁신의 단서를 포착하고 전략화 하려는 시도

- 더욱이 최근에 주목받는 두 개의 학문, 기술 영역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인과 관계 찾기 보다는, 거칠더라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관성과 패턴’을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음을 예시함.
- 우선, 1990년대부터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넘어 사회과학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복잡계 과학은,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효과 등에 의해 초기 값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음. 그 결과 사회에 대한 단순한 균형공식에 따라 사회를 정확하게 재단하려는 시도는, 오직 맑은 날씨만이 계속되는 시기에만 기상예보를 하고 전혀 폭풍우를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 예보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함.

- 물론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고, 복잡계 이론은 ‘패턴’의 발견으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지진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과는 별개로 지진은 놀라운 정도의 통계적 단순성과 질서, 즉 패턴을 따르는데, 그 패턴이란 “더 강력한 지진은 항상 더 약한 지진보다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지진의 수가 지진으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제공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⁴⁸⁾
-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산불과 태양 홍염, 화석 기록이 보여주는 종의 멸종기록, 그리고 새 개체수의 변동에서 비슷하게 불규칙하지만 매우 체계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그 패턴은 대기와 기후의 동역학에도 나타난다.”⁴⁹⁾
- 비슷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체스게임 고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일반적인 패턴들을 모두 꿰고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뛰어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 미리 발생할 확률을 예상하는 것이 아님. 즉, 그들은 경험으로 각 패턴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함.
- 요약하면, 지금처럼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와 사회 변동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장을 나타내는 이론이 절대로 우아한 몇 가지

48) 마크 뷰캐넌(2013) 『내일을 위한 경제』, 사이언스북스

49) 에릭바인하커(2006),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

공식들만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나 날씨를 이해할 때와 같이 근사적 용법을 사용해야 하고, 적당히 갈끔하지만 단점이 있는 모델을 다루어야 하며, 그리고 매우 혼란스럽고 변덕이 가득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⁵⁰⁾

- 둘째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이론은 정교한 ‘샘플링 데이터’ 분석 보다는 거친 ‘전체 데이터 분석’이 훨씬 객관적 현실에 더 부합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즉,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를 가진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다.”는 것임.
-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탄탄한 상관성과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조사 데이터와 확실히 구별됨. 즉 빅데이터는 사회와 사건의 정확한 인과성(causality)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광범한 영역과 이질적인 관계에서의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상관성(correlation)과 일정한 패턴(pattern)을 보여주게 됨.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의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다.

- 결국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수학을 적용하여 확률을 추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비인과적 분석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느린 인과적 사고보다도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틀이 되고 있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숫자들은 스스로 입을 연다. 페타바이트는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한다. 상관성이면 충분하다.”⁵¹⁾
-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패턴이 가진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는 구글이 선보였던 ‘미국 내 독감발생 추이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 질병관리국(CDC) 역학 예방팀은 독감 예측을 위해 통상 3000여

50) 마크 뷰캐넌(2013) 『내일을 위한 경제』, 사이언스북스

51) 빅토어 마이어 외(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 북스

개 진료소, 3000여 명의 외래 진료환자 진단의사, 122개 도시의 인구통계 사무소, 각 주 보건국 관계자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동원하는 거대한 작업을 수반함.

독감 트렌드 - 미국

독감 유행 수준을 파악할 때 검색어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Google 독감 트렌드는 집계된 Google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감 유행 수준을 예측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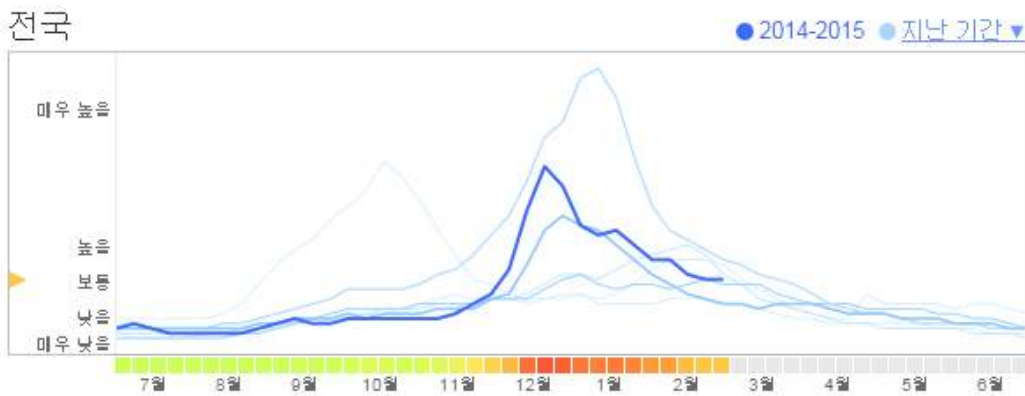


그림 4-1: 구글 독감트렌드로 분석한 계절별 미국 독감발생 추이 예시

- 그런데 구글은 자신들이 보유한 검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사용자들이 평상시 사용한 검색어들 가운데 독감 징후와 관련 있는 검색어를 추출함으로써, 미국 질병관리국이 예측한 독감추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유도해내고 있음.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구글이 온라인 쇼핑거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 물가지수를 공개하는 구글 물가지수(Google Price Index)임. 각 국가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역시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고 있음.)
- 사회혁신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오픈랩(Open Lab)방법은, 가능한 다수의 생활인과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가능한 많은 의견을 끄집어내며, 가능한 다양한 기법의 토론방식을 동원함으로써 거칠더라도 현실에 근접한 변화의 움직임과 동향을 읽어내려는 시도임. 즉, 기존의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포착이 어렵고, 기존의 통계숫자로도 잘 잡히지 않는

현실 생활 속에 잠재된 미세한 변화의 체험과 느낌을 감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게임의 환경이 바뀌면 게임의 규칙도 바뀔 수 있다.

- 21세기에 진입한지 벌써 15년이 지난 지금, 경제, 사회, 자연 환경, 인구라고 하는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기존의 틀과 규칙을 흔들지 않고 관성적으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변화의 계기를 놓치게 될 확률이 매우 큼. 사회혁신의 움직임 포착하기 위한 단서의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틀과 제도, 규칙 역시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임.

THE CURRENT RULES	REWRITING THE RULES
More market power, less competition	Make Markets Competitive
The growth of the financial sector	Fix the financial sector
The ‘shareholder revolution,’ the rise of CEO pay, and the squeezing of workers	Incentivize long-term business growth
Lower taxes for the wealthy	Rebalance the tax and transfer system
The end of full-employment monetary policy	Make full employment the goal
THE stifling of worker voice	Empower workers
The sinking floor of labor standards	Expand access to labor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Racial discrimination	Expand economic security and opportunity

표 4-1: 루스벨트 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의 목차

-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개혁성향의 미국 루스벨트 연구소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앞세워 경제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이름이 경제의 규칙을 다시 구성하자는 뜻에서 “Rewriting the rules on the American Economy”. 바꾸어야 할 지금의 8가지 경제 규칙을 열

거하고 대안으로 바뀌어야 할 새로운 8가지 경제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⁵²⁾

- 규칙을 바꾸려는 발상의 전환은 경제 시스템처럼 비단 거대한 제도개혁에만 국한되지 않음. ‘여건이 바뀌면 규칙도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은 변화를 향한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최초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사회적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답.
- 즉, 죄수의 딜레마나 집단행동에서 무임승차 발생 모델이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고정시킨 제약조건을 마치 실제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죄수의 딜레마 속의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 주어진 제약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연자원의 이용자들은 죄수들과 다르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제약조건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공유자원의 사용자가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가차 없는 비극’이 아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⁵³⁾
- 현재 단계에서 사회혁신은 많은 경우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금처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환경적 전환이 중첩되어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작동해왔던 틀과 규칙들을 의심해보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기존의 틀과 제도, 규칙으로 쉽게 재단하거나 제약하려는 관행에서도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음. 물론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시민과 합의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야 함.

52) <http://www.rewritetherules.org/>

53) 엘리너 오스트롬(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 하우스

2. 어디서, 어떻게 변화의 신호를 읽을 것인가?

비선형적 사고 - 세상은 절대 평형상태로 고요하지 않다.

-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세상은 변덕이 심한 폭풍우 속의 날씨와 같음. 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음.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음. 우리는 이런 환경에 직면해서 사회혁신의 단초들을 발견해야 내야 함.
-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비선형성에 대해서 복잡계 과학은 훌륭한 설명을 제공해줌. 예를 들어, 경사와 용기, 능선 같은 부분들이 널려있는 난코스에서 골퍼가 퍼트를 할 경우, 그 볼의 출발 지점이나 스윙 각도, 힘 등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공이 날아가는 위치는 점점 벌어져서 결국 완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이처럼 “비선형성은 초기 조건상에는 조그만 차이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경우 명확히 나타남.⁵⁴⁾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사회 변화의 수많은 변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변화의 비선형성은 경로 의존성, 즉 과거 역사적 궤적의 차이에 따른 미래 변화의 큰 차이를 잘 설명해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945년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역동적이고 예외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에 관한 화두를 던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1퍼센트의 성장률이 가지는 '상당한 의미' 강조한 바가 있음. 그는 경제가 매년 1퍼센트씩 성장하면 한 세대(30년) 후에는 누적 성장률이 35퍼센트에 이르게 되고, 매년 1.5퍼센트 성장을 하게 되면 50퍼센트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정도의 성장은

54) 에릭바인하커(2006),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

세대 사이에 중대한 생활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나간 것과 같은 경험의 차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런데 매년 평균 1.5퍼센트 이상의 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20세기라는 대단히 예외적인 시기에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지적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퍼센트 전후를 넘나드는 성장률, 1990년대 약 8퍼센트 내외, 그리고 이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에도 대략 5퍼센트 전후 성장률을 경험했음. 그 결과 동아시아의 식민지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규모 15위의 OECD국가가 되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 없는 사례를 만들어 냄.
- 결국, 우리의 지난 수 십 년 역사는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이며, 30년을 주기로 한 한 세대 격차는 고사하고 10년 단위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줌. 이런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세대 차이는 시간대별 경제적 격차의 급변에 따른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런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리고 이에 따라 물질적 삶의 방식이 적어도 10년 단위로 완전히 바뀌어왔음은 물론, 이를 반영하여 가족환경, 교육제도, 복지제도, 사회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는 것을 말해줌.
-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성장률의 빠른 하락, 거대한 인구변화의 시작, 부동산, 주택 등 생활환경의 구조적 변화 조짐 등 미래의 변화 역시 과거에 못지않게 역동적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경로의존성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기도 함.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사회와 우리생활의 미래 변화를 비선형적으로 상상하고 가정해야 함.
- 특히, 세계적으로 특별한 고속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지금까지의 직선적인 발전 패턴과 다르게, 미래의 한국사회는 '순환'적 개념이 중요해 보임. 그리고 많은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순환'의 기능과 프로세스를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귀착될 것. 단지 천연자원이나 에너지의 성공적인 순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일자리, 주택,

교육에까지 그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고 방식과 태도에서도 순환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고민해볼 수도 있음.

시장을 포함한 경제, 경제를 포함한 사회, 사회를 포함한 지구

- 사회혁신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각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공간들은 대체로 시장과 경제, 경제와 사회, 인간사회와 지구자연이 될 수 있음.
-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경제의 일부에 불과한 시장의 원리로 사회전체가 조직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을 가장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유명함. 그는 “경제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조직을 압도해 버릴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다. 이것은 사회가 시장에 딸린 부수물로서 운영되게 된다는 엄청난 사태를 뜻한다. 경제가 여러 사회관계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회관계가 경제체제 안에 묻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⁵⁵⁾
- 지난 30여 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과도하게 신뢰한 나머지, 통상적인 경제영역은 물론 교육, 건강, 공공재 영역까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재조직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실제 목도하기도 했음.
- 또한, 생태경제학의 화두를 열었던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이미 한참 오래전인 196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를 닫힌 우주선으로 비유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경제 시스템을 강조한 바가 있음.⁵⁶⁾
- 그에 의하면 외형적으로 기업은 서로 피의 경쟁을 하며 서로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라

55) 칼 폴라니(1942),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56) Kenneth E. Boulding, (1966),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

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완전히 반대로) 닫힌 시스템이 아닌 오픈 시스템이라는 점을 간파했음. 즉 경제가 정치나 문화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연으로부터 계속 원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고, 이산화탄소와 쓰레기를 자연 속에 배출해야만 함. 즉 경제는 '사회의 일부부분' 이면서, 나아가 인간 사회가 '자연의 일부부분'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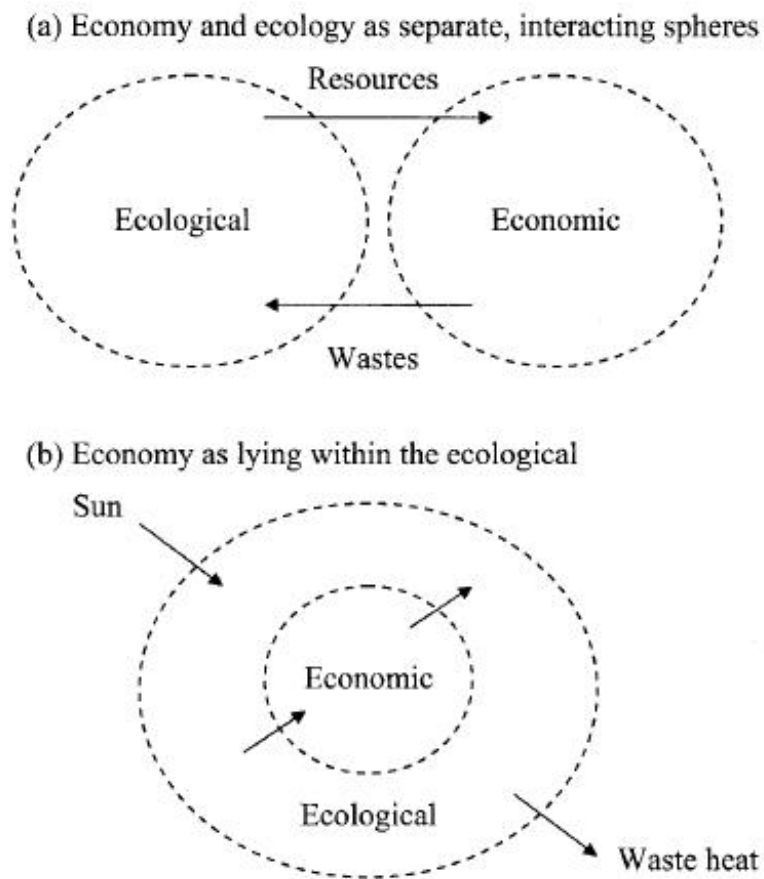


그림 4-2 :경제와 생태의 관계(출처: Richard P.F. Holt edited(2009), 『Post Keynesian and Ecological Economics』)

-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오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자연,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의) 닫힌 시스템이라는 것이 불당의 핵심주장이자, 환경에 대한 고민의 대전제. 이는 지구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공급받

을 수 없고 지구에 필요 없는 것들을 지구 밖으로 버릴 수도 없다는 의미. 그래서 불당은 지구를 우주에 떠 있는, 인구수와 자원사용, 쓰레기처리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주선 지구’로 가정한 것임.

- 닫힌 시스템은 통상 엔트로피 증가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른다고 알려졌음. 이는 지구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가역적 변화가 아니라 혼잡도(엔트로피)가 일관되게 높아가는 쪽으로만 변화가 진행되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같은 유한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나 자동차 운전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100% 화석연료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뜻이고, 배출된 쓰레기는 계속 쌓일 것이고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임.
- 즉, 사용 가능한 자원을 소모하여 쓰레기 상태로 변화한 자연현상이나 물질의 변화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자연의 자신의 잠재력이 소진되는 방향으로만 변화하게 된다는 뜻. 만약에 우리 지구가 닫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실 세상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변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 변화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우선 그렇다.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일까.)

경제의 다원성, 생활의 다원성(Pluralism)을 수용하자.

- 이념과 생각의 다원주의는 그 동안 널리 퍼졌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과 생활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았음.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경제는 전형적인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이거나 극단적인 시장 지상주의적 경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 경험과 경제 시스템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사이의 잔여적 공간(residual space)이 아

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의 통합적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⁵⁷⁾

- 어떤 면에서 다원적 경제(pluralist economy)가 다원적 정치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함. 예전에는 혼합경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흔히 썼지만,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 도식에서 일종의 과도기를 표현한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임. 사실 경제의 다원성은 우리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주제.
- 그 사례의 하나가 '경제학의 다원주의를 위한 국제학생 이니셔티브(the International Student Initiative for Pluralism in Economics (ISIPE))'임. 2014년 30개 국가 65개 학생그룹들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2015년 현재 80여개 학생그룹이 참여한다고 알려짐.⁵⁸⁾ 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육이 지독히 편협한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제한되어왔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에서 경제학이 심각하게 무력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대안을 찾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성찰의 결과임.
-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과 문화, 정치가 지극히 편협하게 쏠려 있는 것 이상으로, 경제 시스템도 재벌 반경 아래 있는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 불안한 금융시스템, 수출의존형 시스템 등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결함이 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어렵게 하고, 위기의 시점에서 완충지대를 찾을 수 없게 하며, 미래를 향한 싹을 발견하기 힘들게 함.

유토피아적 상상력, 긴 호흡으로 미래를 상상하자.

- 사회혁신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다른 방식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관례적 방식을 벗어난 솔루션 찾기를 지향함.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57)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58) <http://www.isipe.net/>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함. 오픈랩(Open Lab)을 개최하면서 슬로건을 “일상, 이상, 상상”으로 정했던 것도 이런 취지였으며 최근 소셜 픽션 방식의 상상테이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며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했던 토머스 모어는, 이미 1516년 시점에서 여섯 시간 노동으로만 살아가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꿈꾸었고 이는 5백년의 역사적 시간이 흘러간 지금에도 대단히 훌륭한 공감을 주고 있음.
- “유토피아에서는 평일의 경우 하루에 총 여섯 시간을 일합니다. 오전에 세 시간 일하고 점심을 먹고 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세 시간 더 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빈둥대거나 방종한 일에 탕진하지 않고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유 시간을 교육을 더 받는데 소비합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익 강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⁵⁹⁾
- 더 나아가 토머스 모어는 여섯 시간 노동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놀지 않고 모두 노동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덧붙여 지금 어법으로 볼 때 소박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는 지금의 시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높은 대목인데, 이처럼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 역시, 1929년 대공황의 급박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에 몰두했다고 하는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달리 - 1백년 후의 인류의 경제를 상상하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한 사례가 있음. 그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다는 가정아래, 나는 1백 년 안에 경제 문제가

59) 토머스 모어(1516), 『유토피아』, 펭귄 클래식 코리아, 124~125쪽.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는 곧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경제 문제가 인간의 영구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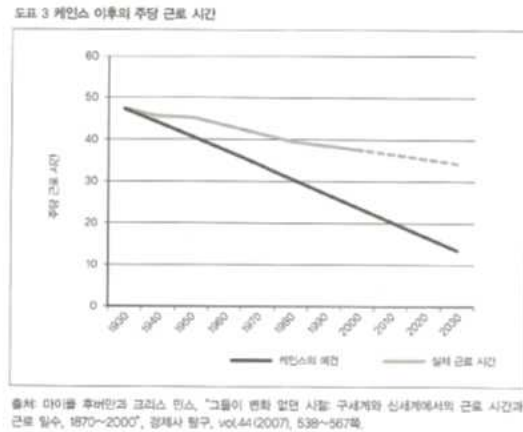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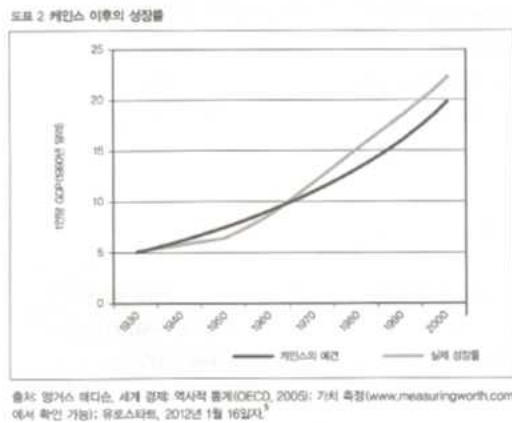


그림 46-3 : 케인스의 경제 예측과 실제(출처: 스킨델스키(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 로버트 스킨델스키가 실제로 케인스의 예측을 검증해본 결과, 1930년대에 비해서 현재는 4~5배 부유해져 대체로 예측이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평균 노동시간은 그 때보다 단지 15퍼센트 정도 줄어들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남. 이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은 일을 즐기기 때문이거나, 그만큼 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나,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현재의 불평등 논쟁은 두 번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
- 또한 세 번째 원인과 관련하여 케인스는 인간의 욕구는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가 있음을 구분하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 낮고 싶어 하는 상대적 욕구는 만족을 모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절대적 욕구는 어떤 시기에 이르면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리고 그 지점에 사람들이 도달하면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돈벌이가 아니라 비경제적인 목

60) 존 메이너드 케인스(1930), 『설득의 경제학』, 부글, 198~218쪽.

적에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상상했음.

- 케인스는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단계에 오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걱정에서 풀려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과학과 복리가 안겨줄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미래를 상상함.
-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의연히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과 실업, 기후변화와 인구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시점에서 온갖 비관적인 미래 전망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려면 케인스와 같은 긴 호흡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임.

3. 사회혁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중심 키워드

- 2014.10~2014.4 기간을 통하여 9개 오픈랩(OpenLab)에서 약 350여명의 생활인,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문제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사회혁신의 단서들을 종합하였음. 즉, 사회혁신이라는 렌즈로 우리사회의 문제, 문제를 푸는 솔루션,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관찰하고 숙고하며 상상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핵심 맥락: 변화의 중심에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관계가 있다.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거대한 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객관적인 기술 혁신이나 경제 사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임. 사물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과거에는 변화를 구상할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구조(개인 - 가족 - 직장 - 지역 - 국가)라는 틀이 의연히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이 관계에 의지해서 객관적인 사회문제(일자리와 교육, 주거, 보건, 기후 변화 등)에 대처했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나와 내 주위의 관계(집단) 자체가 변화의 한복판에 있고, 여기가 문제와 변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기존 혈연가족의 해체나 1인 가구의 주류화 등은 전통적인 가족 의존형 가구적 복지 체제의 해체와 함께 광범하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필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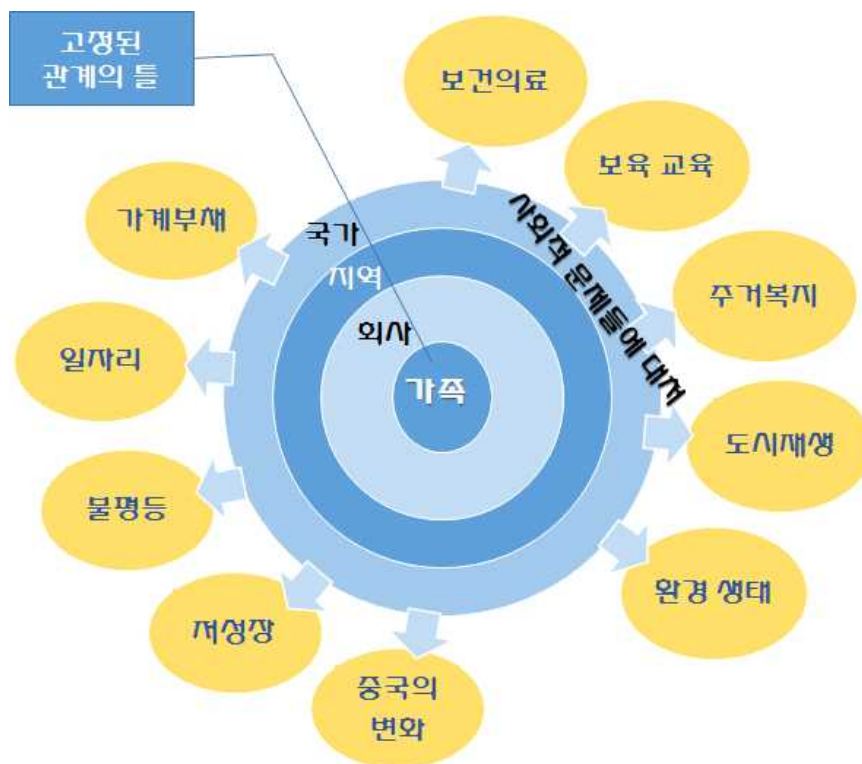


그림 4-4: 과거의 사회 집단 주체들과 그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들

- 더욱이, 기존에 전통적인 문제해결 집단으로 간주된 주체들(예를 들어 노동조합, 학생회, 농민회, 다양한 시민단체)과 같은 단선적인 계급 계층적 집단들의 단위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모아지지도 않고 문제해결이 쉽지도 않다는 것임.(전통적인 4인 혈연가족 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 집단은 누구인가?)
-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각 개인들은, 이전처럼 국가와 같은 ‘주어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또는 국민, 시민, 심지어 ‘우리’라는 주어진 공동체 속에 ‘파묻힌’ 개인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변화도 추구해 나가려 하고 있음.

변화와 혁신의 진원지는 개인 - 관계 - 공동체 - 시민의 맥락 속에 잠재해 있다.

-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사회는 개인 - 관계 - 공동체 - 시민 이니셔티브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 변화와 혁신의 잠재적 요소들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내제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과거의 해체’와 ‘재구성되는 미래’의 다이내믹이 작동하고 있음. 단, 이 과정이 많은 경우 ‘비자발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심각성이 있으며,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자발적’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길목에 사회혁신의 역할이 있다고 할 것임.
- 견고하기만 했던 오래된 기존 관계와 그 속에서 굳어진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한 복판에서 사회혁신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창조’,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긍정적 주체로 재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동력으로 거시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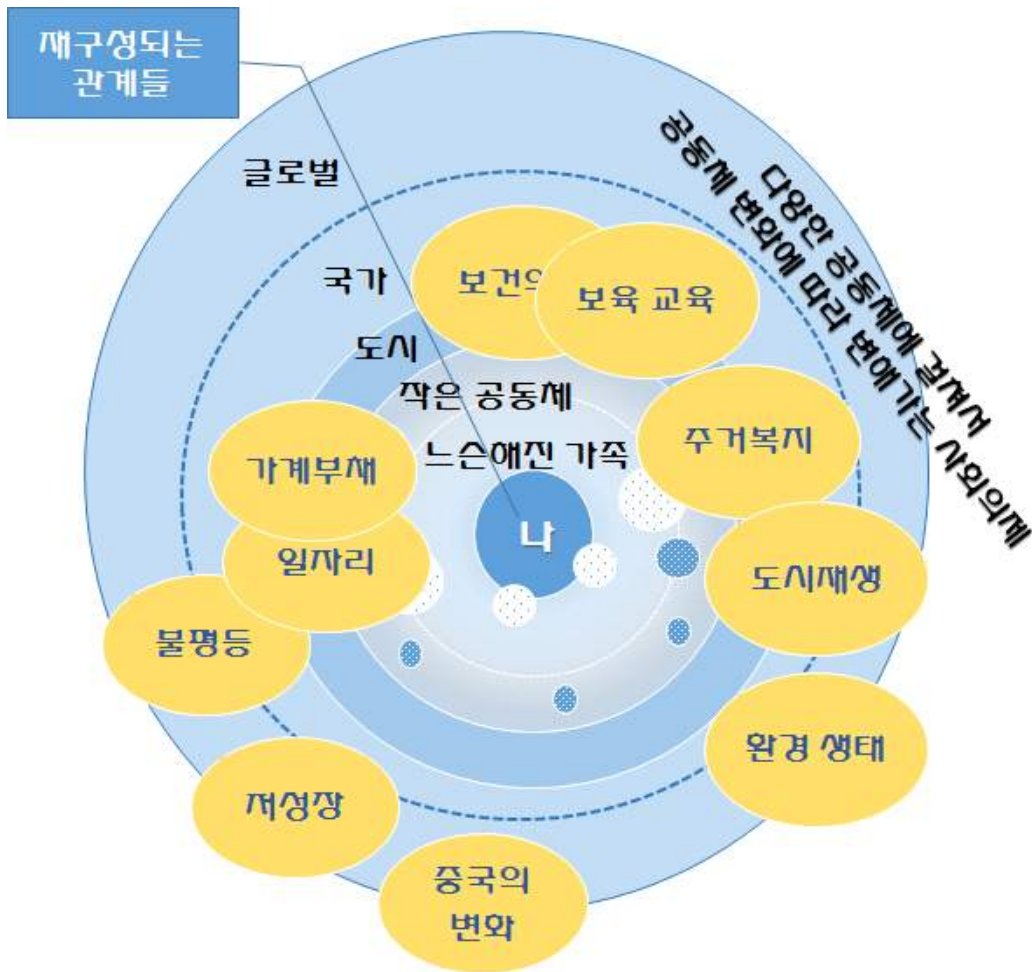


그림 4-5: 현재 시점에서 관계의 이동과 관계 속에 걸쳐있는 사회적 문제들

변화를 이해하고 ‘문법’ 이 달라졌다. 객관사회가 아니라 나와 주위를 먼저 보자.

- 따라서 사회혁신 전략은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과제를 분류하는 식의 도식과 문법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의제와 연결시키면서 변화의 전략을 짜는 식으로 이론적, 정책적 문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공백지대에서 관계의 변화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다양한 활동 방식과 해법을 창안해내면서 동시에, 시장 자체의 혁

신, 국가 자체의 혁신으로 변화의 반경을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 속의 나의 삶이 변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우선 오픈랩의 실행을 종합한 결과, 주체 자신과 주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9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일차적으로 선별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4-6: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사회혁신 중심 키워드

-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사회문제들(가계부채, 일자리, 불평등, 건강과 교육문제 등)을 열거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의 문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대신, ‘나(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과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이 가운데 객관적 사회문제가 어떻게 나와 우리의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는지, 개인과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문법을 사용할 것임.

0 솔루션이자 변화의 드라이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설적이지만 사회혁신 그 자체임. 문자 그대로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의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면 구성원 대부분의 삶과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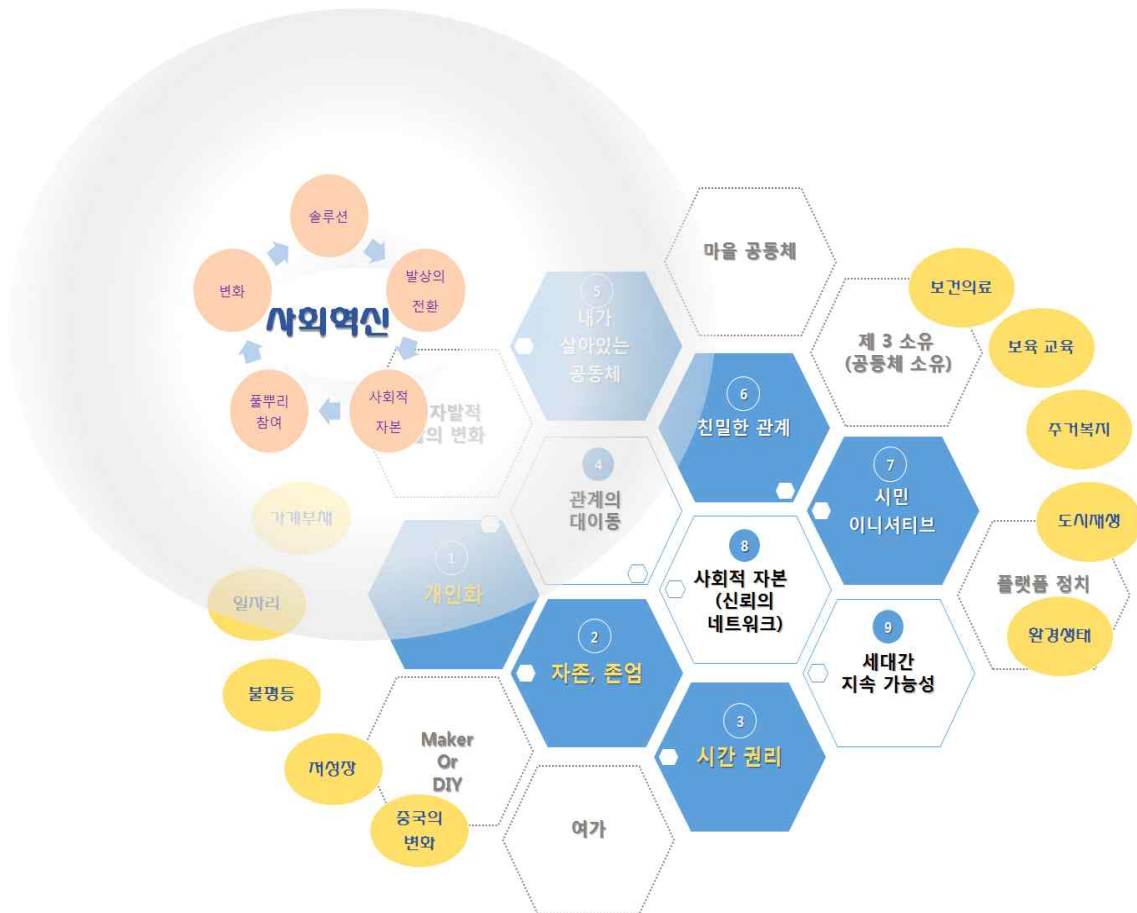


그림 4-7: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사회혁신과 연관개념들

- 그런데 기존 방식의 위로부터의 엘리트주의적 사회개혁으로는 지금 직면한 사회적 난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 또한 (시장과 국가라는 전통적인 해법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다수의 개인들, 주민들, 시민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솔루션을 찾아 실험하지 않으면 과거의 마스터플랜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기 어려움.

- 변화가 절실한 여건에서 다수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를 인지하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미시적 생활현장에서부터), 기존의 마스터플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뛰어들어 ‘실행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어나감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임. 요약하면 사회혁신은 사회개혁의 뉴 버전이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 사회개혁이다.



그림 4-8 :사회혁신의 위치 (출처: BEPA 2010)

- 그러나 아직 사회혁신의 개념은 물론이고 실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유 정도는 매우 낮은 형편임. 참여 예산제나 혁신학교, 혁신파크, 사회적 경제

와 사회적 기업 등 사회혁신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지도는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사회혁신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협력에 여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임.

- 또한 사회혁신 정책은 전통적(traditional) 정책, 관례적(conventional) 정책과 비교되는 새로운 정책적 실험의 도입을 의미함. 즉 전통적 정책, 관례적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에 대한 뉴솔루션 모색**. 어디에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존재하는가? 사회적 난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사회혁신 정책이 필요함.
-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정책담당자는 사회혁신 정책을 보조적 정책이 아니라, 선도적, 주류적 정책으로 인식해야 함. 경제정체와 불평등, 가계부채와 주거불안,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인구변동, 기후변화 등이 전통적, 관례적 해법(시장과 국가에 의한 방식)으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러한 문제의식과 철학이 확고해야 사회혁신 정책이 힘을 갖게 될 것임.

공공정책은 사회혁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 덧붙이면, 공공의 입장에서 사회혁신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 R&D투자가 미래를 위한 기술자본 준비이고, 교육투자가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 준비인 것처럼, 사회혁신 정책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본 투자임. 사회적 자본은 미래의 가장 결정적 자본이 될 것. 따라서 총 재정자원의 일정부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에 투자해나가고 그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며 앞으로는 R&D투자와 교육투자 이상으로 사회혁신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함.

1 **개인화(Individualization): 높아가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

- 21세기는 ‘개인’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힘을 얻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져가는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물론 개인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듯이 사회적 관계가 무시된 ‘완벽한 합리성’을 가진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협동하는 개인을 말함.)
-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이른바 강력한 개인화(individualization)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 여기서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가족, 학교와 직장, 지역, 국가와 같은 공동체들이 개인들에게 규정하는 일방적 특징을 지척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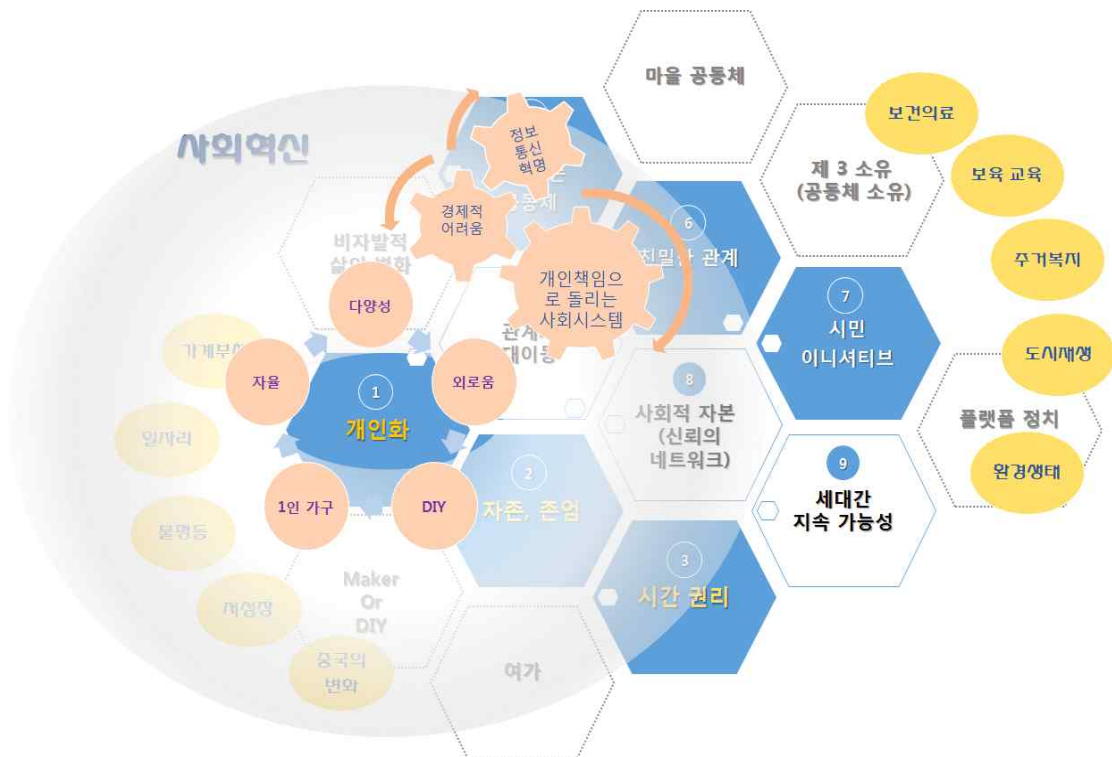


그림 4-9: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개인화’와 연관개념들

- 사회의 변화는 더 많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수동적으로 안주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임. 이 과정엔 기존 공동체와 관계가 재설정 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임. 개인주의가 추세적으로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통신혁명 등에 힘입어 온라인 등에서 공동체에 접속함으로써 고립을 피하는 현상에 대해 클레이 셔키 등이 네트워크화 된 개인화 (networked individualizat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 물론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두어야 할 것은, 개인의 자율과 독립에 대한 추구는 분명히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회생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떠밀려 비자발적으로 개인화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이 경우는 자율로 독립이 아니라 격리와 고립으로 인식되게 됨. 최근 <무연사회>에 대한 우려는 이 차원에서 주장되는 것임. 우리나라의 현재 개인화 현상은 다수가 비자발적 강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다양성의 원천이 늘어나게 되며 개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재생산 단위가 될 수도 있게 됨. 공공의 정책은 개인화의 긍정성을 살려주고 비자발적 성격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복지 정책 등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임.

개인화의 자발적 측면과 비자발적 측면

- 개인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혁신과 발전에 의해 뒷받침 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임. 개인 단위로 생활이 가능한 물질적 수준이 지원 되어야 개인화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를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하게 해줌. 실제 현재 수준의 개인화 역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임.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개인화 추세와 기술적인 발전 방향은 상호 영

향을 받으면서 상호 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는 ‘Maker’, ‘DIY’, ‘누구나 코딩’ 등의 기술적 트렌드는 개인화와 연동하여 변해가고 있음.

- 개인화 추세가 삶의 방식에 던진 가장 파급력 있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할 것임. 1인 가구현상을 자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희구라고 판단할 수 있음.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에서 1인 가구 현상을 주로 ‘자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자연스런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네 가지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했다.”)
- 또한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이 결코 같지 않다”면서,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사교활동을 더 활발히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다는,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대중문화가 발달한다는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주장함.⁶¹⁾ 요점은 개인들이 외롭지 않게 참여할 공동체들이 지역이나 도시, 직장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가의 여부일 수 있음.

‘1인 가구 생활’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

- 하지만 ‘1인 가구’, ‘1인 생활’, ‘싱글턴(singleton)’ 등은 인류가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 방식임. “인류가 집단생활을 해온 지는 20만 년에 달하는데 반해 수많은 사람이 혼자 살기에 도전한 기간은 아직 50년에서 60년밖에 되지 않는다.”⁶²⁾ 우리나라는 길어야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보면 20년도 채 되지 않음.

61)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 퀘스트

62)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가 압도적 대세가 되어버린 북유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경향이 아무리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우리역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이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도록(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사교활동도 활발하게 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는 혁신을 구상해야 할 것임.
- 시장은 이미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공공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시장의 맞춤은 기본적으로 편향과 왜곡을 낳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공정함에 의해 수정되어야 함. **시장은 자금 여유가 있는 1인가구 계층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계층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생활환경이 극단을 오고가는 노인 요양원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혼자 사는 생활은 혼자 사는 공간(주거)의 변화, 혼자 사는 식생활의 변화와 문화생활의 변화, 사회 안전망에 연결되는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특히 필요로 하는 공동체 욕구의 변화(즉 대인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됨.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사회가 가능하게 해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만 온라인 관계만으로 부족함. 이 대목에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면서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방식이 추구되어야 하고 크게 보면 최근의 마을 공동체도 이런 경향을 수렴하려 하고 있음.

2

자존감(self-respect)과 존엄(dignity); 차세대 사회정책의 목표

자존과 존엄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과정이며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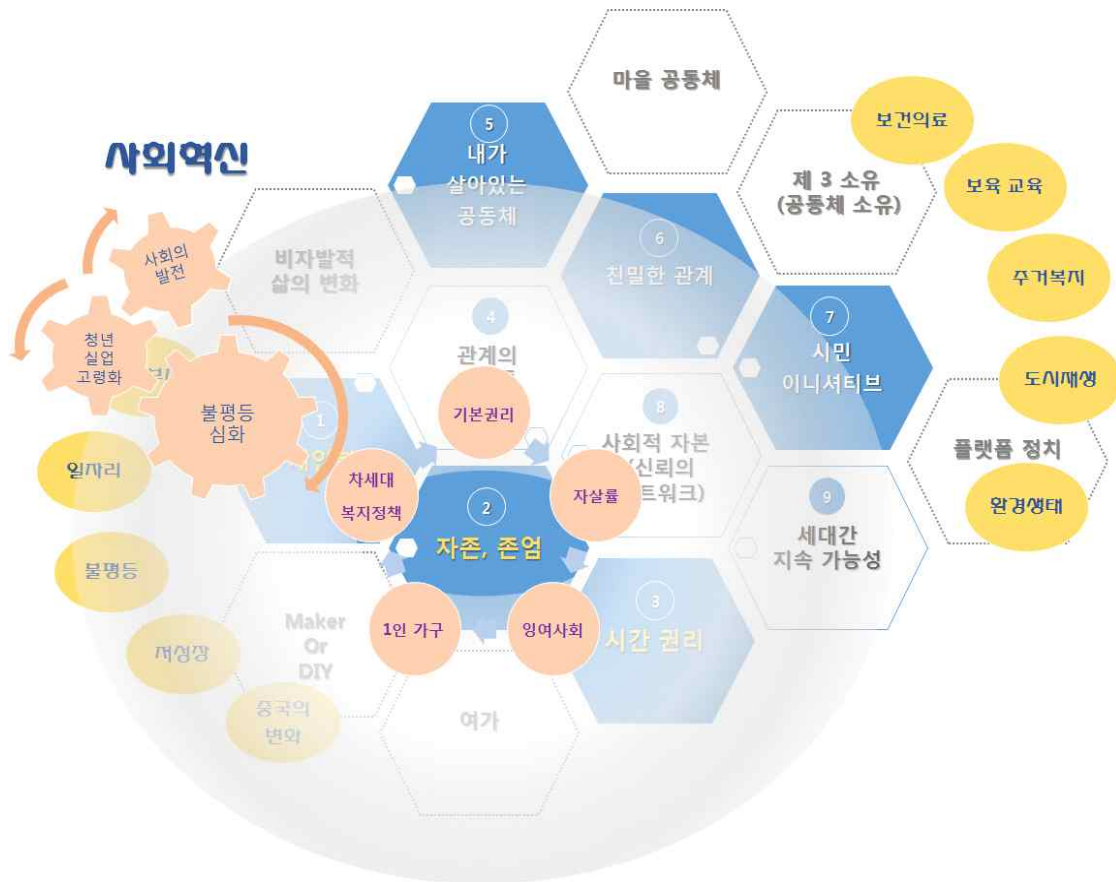


그림 4-10: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자존과 존엄’과 연관개념들

-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개발연대에 몰두했던 기초적인 생존권이나 인권만을 두고 정책적 씨름을 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없음. 시민의 기초적인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권은 물론이고 시민을 존중하고 존재와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품격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임. (이런 취지에서 과거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사람 중심경제’나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차기 비전으로 제안될 수 있음.)

자존(self-respect, self-esteem)과 존엄(dignity)이란?

“우리는 자존감(self-respect or self-esteem)을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인간이 갖는 자기 자신의 가치감, 자신의 선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자신의 인생 계획이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둘째로 자존감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힘에 달하는 것인 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포한다.**”

* 롤스는 수치심(shame)이나 모멸감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자존감에 타격을 받을 경우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568~575)

*출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99 revised edition

* 특히 롤스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기본재(Primary goods)로서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기본재로서 자존감을 강조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본재를 다섯 가지 예시했는데, 1)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들, 2) 다양한 기회들의 배경 아래에서 이전의 자유와 자유로운 직업 선택, 3) 기본구조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 안에서 책임이 있는 지책과 직위의 권한과 특권, 4) 소득과 부, 5)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들

*출처: 존 롤스(1993),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인간성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자유’와 ‘정의’와 ‘연대’와 같은 수많은 인간적 가치들을 위협하는 사회를, 모든 사회 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을 올리자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무시는 사람을, 그 표현과 감정과 기분의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또는 세심하게 보지 않거나 마치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출처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현재 사회활동의 도처에서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음. 입시지옥에서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자존감’이며, 스펙경쟁과 취업경쟁에 몰입한 청년들은 끊임없이 ‘존재감’에 대한 질문을 강요받음. 이른바 ‘잉여사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들이 사회적 잉여로서 취급받는 현실이 이를 입증함. “자신은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존재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은 타인과 다른 나의 삶의 방식이 동등한 가치

를 가진 것으로 존중과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슬픔보다도 더욱 통절한 것”⁶³⁾

사회적 잉여 취급을 받는 청년들의 존재현실은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말해준다.

- 30, 40대 우리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들의 경우,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상 활동에서 각종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은퇴 후의 노년은 불안정한 노후 여건 속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임. 한마디로 전 세대에 걸쳐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심 척도인 존재감, 자존감, 존엄은 일상의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존과 존엄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님. 그것은 <자기 가치의 사회적 확인 과정이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이것은 **자존과 존엄이 우리사회의 노동과 복지, 교육 등 주요 경제 사회정책을 펼 때 매우 강력한 준거 틀이 될 것임을 말해줌.**
-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단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아님.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은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멸시와 모멸감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진정한 좋은 일자리란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과 인격, 사람 자체의 가치가 인정받게 하는 것임.

대학생과 대학 청소 노동자, 서로 다른 장면에서 마주하다.

해마다 5월은 대학가에서 축제의 열기가 뜨거운 달이다. 2015년도 그랬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다.

63)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40쪽

하나는 K대학교 학생회가 축제가 끝난 뒤, 학교 안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50여명을 초대해 따뜻한 감사의 잔치를 연 것이다. “축제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학내 노동자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학생회장은 감사 편지에서, “그동안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두면 축제 다음날 그 자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늦게까지 전기를 봐주시는 선생님과 새벽에 나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한겨레 신문 2015년 5월 29일자)

다른 하나는 S대학교에서 축제를 하기 전에 학생회가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예쁘게 치르고 싶어”서 교정에 걸려 있던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며 노동자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태다. 특히 졸업생들은 비판 성명을 통해서 “청소노동자들의 피 토하는 심정을 단순히 천 조각으로 여긴 총학생회의 무심하고 안일한 태도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되는 교육을 중시하며 지향한다는 학교가 구조적인 문제 책임을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안타깝고, 졸업생으로 가졌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개탄했다. 이후 학생회는 자신들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한겨레 신문 2015년 5월 21일자)

대학 축제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를 전통적인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문제로 사안을 접근할 수도 있다.

- 또한 최근 경제적으로 장기침체, 실업과 고용불안, 불평등이 단지 물질적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삶에서도 박탈과 모멸, 존재감 등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살률도 그 하나의 사례. ‘투명인간’에 대한 논란이나 ‘삼식이’ 얘기 역시 마찬가지임.
- 이는 역으로 복지정책 등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단지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과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함. “우리는 복지를 단순히 물질적 재화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 문제는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존중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문제다.” “물질적 재화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구체적인 방식일 것이다.”⁶⁴⁾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세워주는 복지’ 가 될 것이다.

- 즉, 차기 버전의 복지정책 방향은 ‘자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복지가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음. “복지제도가 복지 대상자들을 어떤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부끄럽고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그것은 모욕적이다.”
- “내 집 앞의 이방인들은 확실히 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관할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그들이 과연 상응한 존경과 배려를 받고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⁶⁵⁾ “품위 있는 사회는 또한 복지사회이어야만 하겠지만, 모든 복지제도들이 그 자체로 한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품위 있는 사회에서 복지는 인간성에 대한 모욕의 회피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 이는 마을 단위의 풀뿌리 복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마을 지향 복지란 주민이 복지 자원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서 마을 속에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 이웃들과 일상적으로 맺는 관계에서 형성된다.”⁶⁶⁾

#1_왜 스페인의 시위는 존엄의 행진(Marches for Dignity)이 되었을까?

-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시위현장에서 ‘존엄’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에서 2014년 3월 '존엄을 위한 행진', 2015년 '빵, 일자리, 주

64)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나남신서

65)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82쪽

66)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6쪽

거, 존엄을 위한 행진'이 대규모 군중의 참여아래 있었다. 경제 불황과 긴축, 복지국가 후퇴에 대한 저항을 '존엄을 위한 행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Published on Saturday, March 22, 2014 by Common Dreams

Spain 'Marches for Dignity': Massive March Against Austerity

"No More Cuts!"

by Common Dreams staff



Massive crowds gather during a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in Madrid, Spain, Saturday, March 22, 2014. Hundreds of thousands from different parts of Spain marched towards the Capital to join a large anti-austerity demonstration,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the Government and to express their anger at government financial cuts, its housing rights policies, and the high unemployment rates. (AP Photo/Andres Kudacki)

- 긴축으로 인해 교육, 보건, 사회적 수당 지급 등이 대거 축소되면서 기대했던 인간다운 삶이 크게 위협받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존과 존엄은 경제위기 속에서 유럽 시민들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2_최근 존엄이 언급된 추가 사례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교수가 칼폴라니 연구소 창립즈음에 한 대담에서도 이런 구절이 발견된다. “살아가면서 많이 듣고 많이 느끼게 되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그렇죠.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감도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도 필요하고 독립적 생활을 통한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무엇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전자책 출판협동조합 롤링다이스의 대표 제현주씨는 서울혁신파크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중요한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혁신파크의 문화로 ‘탈권위’와 ‘개인의 자존’이라는 말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2015년 5월, 서울혁신파크 인터뷰 중) http://s_innopark.blog.me/220370251798

3 시간권리: 시민들에게 '시간에 대한 자유' 를 되돌려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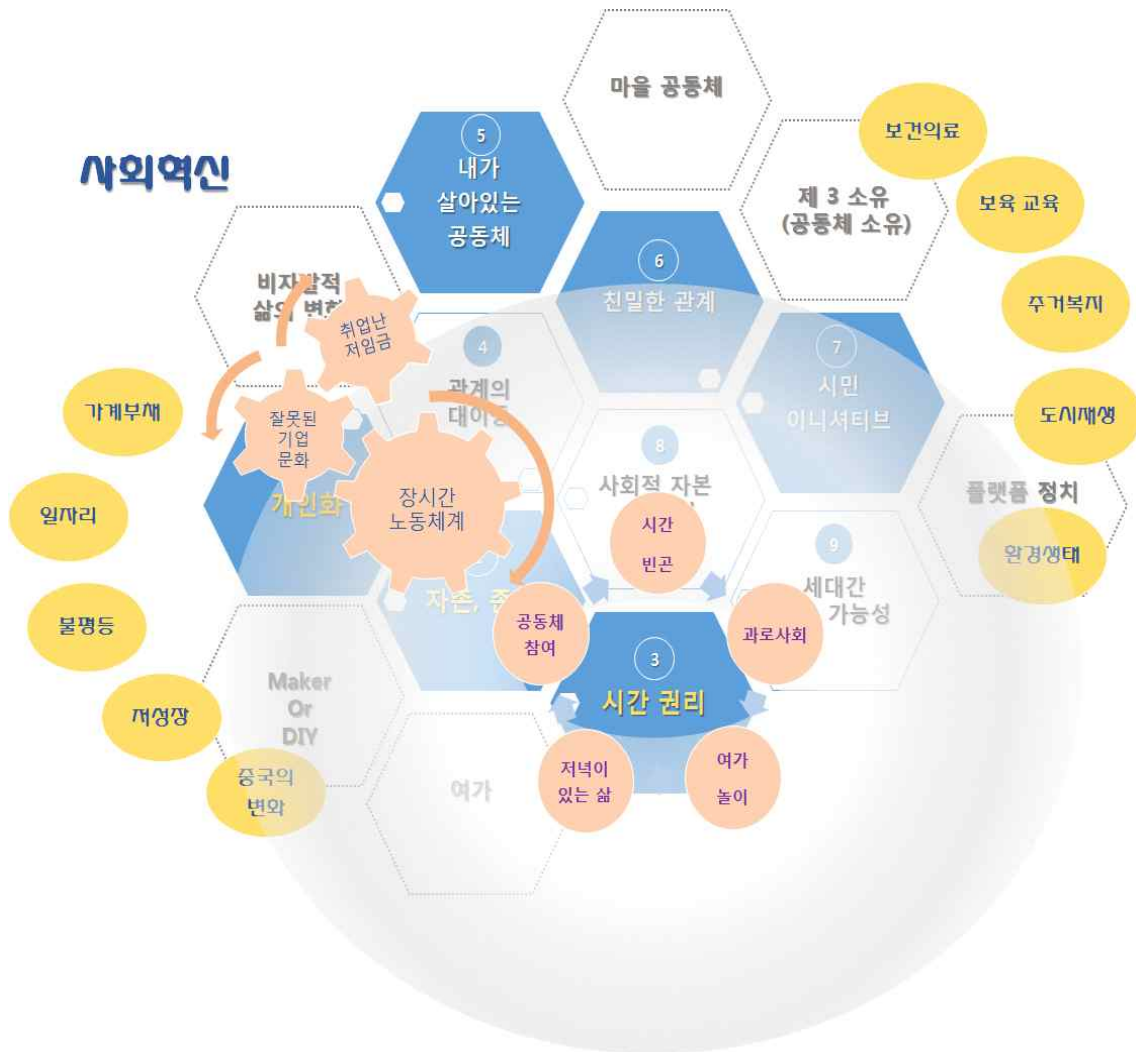


그림 4-11: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시간권리'와 연관개념들

-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시간의 통제와 배치가 됨으로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자유롭게 쓸 권리를 회복할 때 개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임. “모든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자아의 향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⁶⁷⁾

67) 김영선(2013), <과로사회>, 이매진

시간 빈곤(time poverty)사회 대한민국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이었던 사회, 이제는 개인에게 시간을 돌려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SBS에서 취재했던 '시간빈곤 대한민국'의 일부 내용이다. 대략 줄거리는 이렇다.

"먹고 자고 씻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약 90시간. 그러면 78시간이 남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통근, 통학 시간은 가장 길다. 가사일, 육아에 하루 1시간만 써도 이미 시간은 마이너스 상태.

결국, 먹고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아침은 거르기 일쑤고 수면시간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너무 바빠서 생존에 필수적인 시간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시간빈곤'에 빠진 사람이 노동 인구의 42%나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제를 더 나은 인간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더 생각해볼만하다.

- 요즘에는 '주거권'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음.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쉬고 누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 취지로 '시간권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을까? 시민들이 자신의 휴식과 자신만의 생활과 자신만의 계획을 위해서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은 없어도 어찌면 시간이 더 절실 할 수 있음. 수년전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바로 시간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된 얼마나 큰 열망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장시간 노동은 질병, 시간빈곤, Time Poor에서 벗어나는 혁신 필요.

-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⁶⁸⁾ 특히 우리에게서 '장

68) 김영선(2013), <파로사회>, 이매진

시간 노동'이라는 결정적인 벽 때문에 더 절실할지 모름. 2014년 기준 2160시간이라는 OECD 부동의 2위(멕시코 1위). 산업화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지배했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 여기에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회사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우리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시간권리'를 희생한 대가로만 경제적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아닐 것.

- 시간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 문제'나 '노동 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적 의제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 이제는 우리도 '과로사회를 넘어서 여가사회로' 혁신해야 할 시점임. 시간은 유한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임. "시간빈곤, time poor"를 벗어나려는 큰 발걸음을 떼어야 함.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신화

우리 국민이 오랜 동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시간권리를 박탈당하는데 기여(?)한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첫째는 '개미와 베짚이의 신화'다. 오직 노동시간을 늘려 빈곤을 벗어나려 했던 개발연대의 가치였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휴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그것은 철저한 생산성 압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휴가도 경쟁력이다." "꼭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식의 논리였음.)

* 출처: 김영선(2013), <과로사회>, 이매진

또 하나의 신화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에서 시간을 돈과 연결한 것이다. 즉, 시간이 돈과 연관되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걱정하고 저축하거나 보다 수익성 있게 시간을 사용하려 했다. 시간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일은 시간을 더욱 수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

* 출처: The Economist, "Why is everyone so busy?", 2014년 12월 20일자.

* 이제는 개미와 베짚이의 신화, 시간이 돈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 시간에 대한 자유권을 얻지 못하고 일상에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관

계가 대 이동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는 고립과 단절을 초래할 위험을 증폭시키게 되고 자존과 존엄한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시간권리에 관한 화두가 너무 성급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회혁신에 대한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자기 비전을 계속 계발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 노동, 복지, 청년 등의 정책과제를 풀어낼 때 고려해야 할 가치로서 ‘자존과 존엄’과 함께 ‘시간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하늘아래 누워있을 최소한의 공간과 함께 24시간 중에 숨을 쉴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주거권과 시간권, 여가권을 돌려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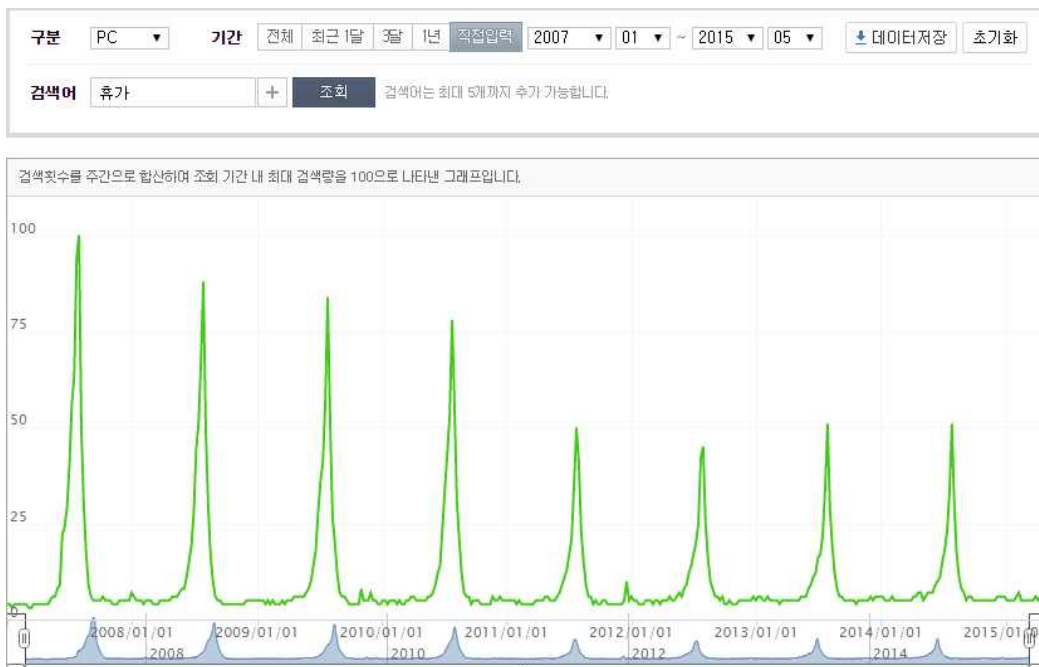


그림 4-12:휴가의 네이버 검색어 빈도 추이(여름 휴가에만 잠시 피크에 이름)

- 앞서 인용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케인스가 희망한 100년 후의 사회에서 모두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회를 말하고 있음. 시간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높은 차원의 가장 중심적인 욕구임을 증명해준

다고 할 것임. 또한 오랜 역사기간 장시간 노동에 찌든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오랜 숙원을 푸는 비전과 혁신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임.

4 **관계의 이동: 개인은 지금 기존 관계에서 빠져 나와 새 관계 모색중**



그림 4-13: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관계의 대이동’과 연관개념들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얼마 전까지 비교적 고정적이고 탄탄하고 단순한 몇 개의 관계에 속했음. 예를 들어 혈연중심의 가족, 지역적 고향, 학교 동문 - 학생회, 평생직장 -노동조합/농민회, 단일 민족과 같은 관계가 있었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점 빠르게 약화되거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친척의 끈이 희미해진 것은 오래되었고 가족의 끈조차 느슨해지고 있음. 더욱이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를 강하게 규정짓던 지

역과 고향도 세대를 타고 내려가면서 묻어지고 있음. 학생회나 노동조합은 과거의 규정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임. 이미 200만에 육박하는 이주민은 단일민족성이라는 오랜 관념을 균열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사회의 기본단위였던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눈에 띈. 과거에 전형으로 불리던 '4인 혈연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1인 가구시대, 솔로 소사어티 시대를 이미 맞고 있음. 그러나 복지와 경제, 공동체와 경제를 위해서 솔로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나 사회혁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형편임. '외롭지 않은, 서로 연결된 솔로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혁신이 더욱 풍부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대유행과 정규직의 장기근속 불안은 매우 탄탄했던 직장의 인간관계를 매우 임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변질시켰음. 노동시장의 이중화 등의 달라진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정된 협력 틀이었던 노동조합의 약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서구에 비해 확실히 오랜 중앙 집권적 국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국가 귀속감과 국민으로서의 연결감, 여기에 오랜 단일 민족 전통이 겹쳐지면서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국가 공동체에 대한 연결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 빠른 속도의 세계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 정치 사회의 분권화와 시장화 등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국가와 자신의 관계 규정력을 약하게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물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정주성의 불안으로 인해 도시 소속감 역시 큰 것은 아님)
- 이처럼 기존 공동체와 관계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 해체되거나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는 중. 어떤 측면에서는 '자

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실 더 강력하게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동 중임.

전통적 관계의 비자발적 해체가 초래한 무연사회의 공포

- 이처럼, 기존 공동체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나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함. 바로 이 같은 '이동의 중간 과정'에서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삶의 불안정성,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관계의 단절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겪고 있음. 즉, 시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특히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무연사회'의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음, 인간관계의 커다란 해체와 전환, 이동 경험하고 있는 중.
- 앞으로 해체되고 있는 관계를 대신해서 개인들이 원하는 인간관계는, 기존의 관계보다는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면서 좀 느슨한, 동시에 몇 가지 확실적인 관계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관계, 대규모적인 수직계통구조를 갖기 보다는 소규모 공동체의 연결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누군가가 위로부터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기 조직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
- 현재는 이들 새로운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세력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음.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조합/학생회 등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이에 기반한 진보 개혁 세력의 힘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공동체나 관계의 형성이 지체되면서 새로운 세력 형성의 기반 역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국가와 시장 사이의 '넓은 지대'에 다양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실험이 다채롭게 시도되어야 할 듯 하고 거기에서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할 것. 서양 사람들이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그 지대의 21세기 한국버전의 형태로.

5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 다양하고 중층적인 열린 공동체가 전망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람관계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 없음.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주목할 만한 것이기도 함.
- 얼마 전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국가나 시민, 심지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파묻힌' 개인**으로 존재했음.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율,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보호되었음. 이는 가족, 지역, 직장, 국가 등 거의 모든 공동체 걸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임.
- 그러나 개인들은 점점 더 기존의 의무적 수동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물론 그것이 공동체나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완전한 개인주의 추구는 아님.
-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율과 독립을 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존"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의 복지 안전망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남. 현실에서 육아나 돌봄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존재해야 개인의 독립과 자율도 보증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좀 더 느슨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즉, 대규모의 일

차원적 획일적 공동체들이 아니라, 분권화 된 다면적/다층적인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이들이 느슨하게 연결되길 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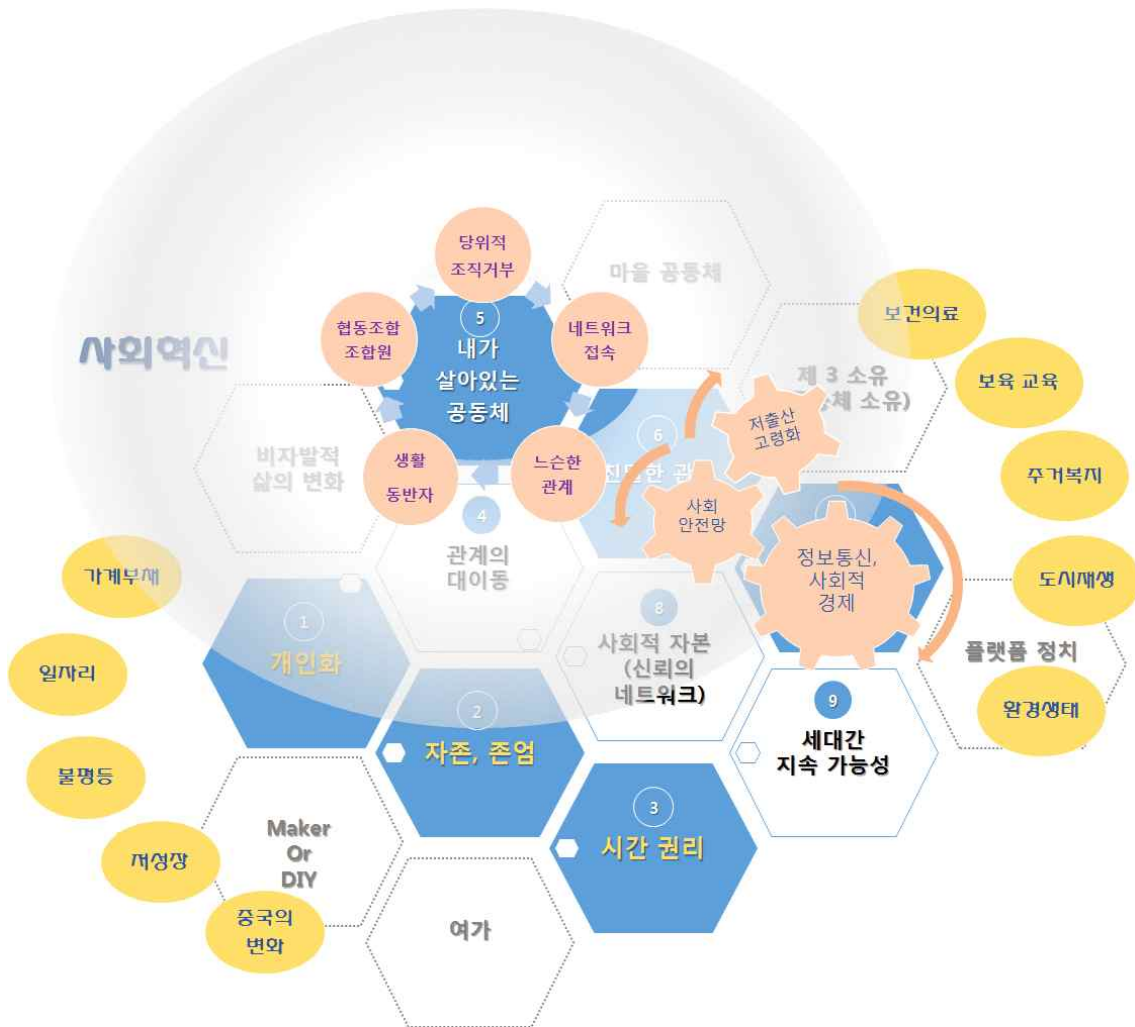


그림 4-14: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내가 살아있는 공동체’와 연관개념들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디며 키워가는 열린 공동체를 원한다.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 -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든다?

혼자되고 있는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새로운 공동체를 스스로 조직하면서 관계 맺기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카오스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에 자기 조직화란 개념이 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에너지 유입 등 시스템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조직화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대략 정의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21세기의 시민사회운동 조직화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시민 사회운동의 조직화는 과거처럼 일부 엘리트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단순히 계급 계층별 조직으로 규합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전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조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요점은 "열려진 계에서 일정한 에너지가 투입되면" 사물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여 질서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갖는 힘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점으므로, 어떻게 스스로 자기조직화 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반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자율과 독립을 원하는 더 많은 개인들이 느슨하게 열린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의 다양한 양상들이 발견될 것은 명확함. 예를 들어 최근 커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역시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디며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도시 속 마을이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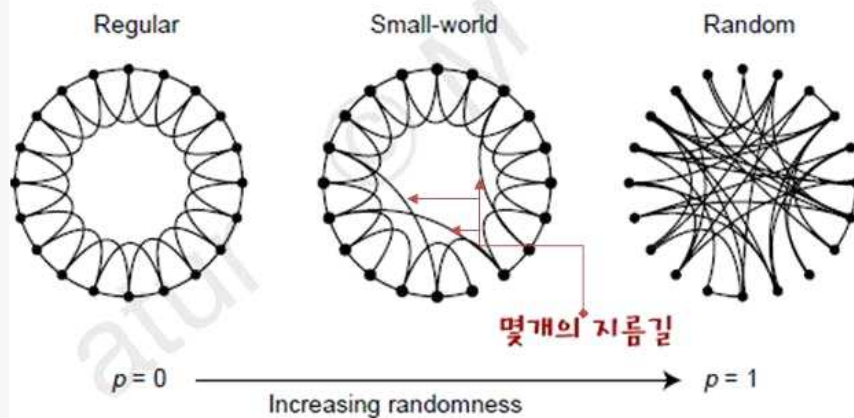
공통 관심 -연결의 확장 - 약간의 연결로도 작아지는 세계

-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보통 현실세계의 사회나 인간관계는 완전히 정형화된 규칙성을 갖는 것도(그림의 왼쪽 regular), 그렇다고 완전히 무작위적인 무질서를 보이는 것도(그림 오른쪽의 random) 아니란다. 그 중간 어디쯤이 현실일 것이란다. (Duncan J. Watts, Steven H. Strogatz(1998), "Collective dynamics of

69)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small-world' networks")

-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발견한 중요한 점은, 왼쪽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 단지 약간의 임의적인 지름길(무작위로?)을 몇 개 엮었을 때에도, 각 점 사이의 접근 거리가 획기적으로 짧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6단계만 거치면 인류는 모두 연결될 수 있다'는 식의 이미 1960년대 나온 '6단계 분리이론'을 연상하게도 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는 암시들이 있다.



- 이를 요약하면,

- 1) 의외로 사회는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단절된 그룹들로 흩어져 있고, 좀처럼 협력이나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
- 2) 그런데 만약 이들 단절된 그룹들 사이에 '약간의' 연결을 맺어준다면(마구잡이식의 해쳐모여나, 조직 기피적인 개인주의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 3) 각 그룹들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유용한 상호 연결, 상호 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저자들이 표현한대로, clustering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계의 거리 path length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결국 연결/조직화/허브 역할이란 과거의 획일적인 조직이나 시장의 무질서와 달리, 다양성을 인정할 수많은 작은 모임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그들 사이를 넘나드는 수평적 끈을 살짝 엮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물리적 공간이든, 조직적 관계이든, 정기적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 특히 공간개념이 아니라 영향권이라는 의미의 장(場, field)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 특히 물리적 공간뿐 아니다. 의식의 공간, 사람들의 생각의 공간도 너무 단절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의 성과를 참조해야만 우리 앞의 난제들을 조금씩 풀 수 있을까 말까한 시기인 듯하다. 생각의 혁신을 위해서도 '약간의 가교'가 필요할 것이다.

6

친밀한 관계: 사적, 공적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요구

- 사회변화라는 태풍의 눈에는 관계의 변화가 있음.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음. 첫째는 기존 혈연가족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적 관계. 개인의 생활과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할 최후의 의지처 같은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음. 반대로 공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공개화 되고 공통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고 맺어지는 관계는 공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시민으로써, 국민으로써 도 시나 국가와의 관계가 대개 그러함.
- 반면 시장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정의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이고 공적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만 사적인 관계. (물론 현실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고,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가 허다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계약이 그러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이 그러함.)
- 그런데 전형적 사적 관계였던 기존의 혈연가족 관계가 최근 변화되면서 다양하고 느슨한 방식으로 폭넓은 분화과정을 겪고 있음. 그 대표적인 결과의 하나가 현재 1/4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비중임. 동시에 기존의 공적 관계는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약화되기도 했고, 일방적인 귀속감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감으로 관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물론 최근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다시 공공과 개인의 공적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자각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은 최근까지 관계에 의해 얻어야 할 필요를 시장에서 계약을 통한 거래관계로 해결(구매)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면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냉정한 시장의 관계는 명백히 전체 인간관계를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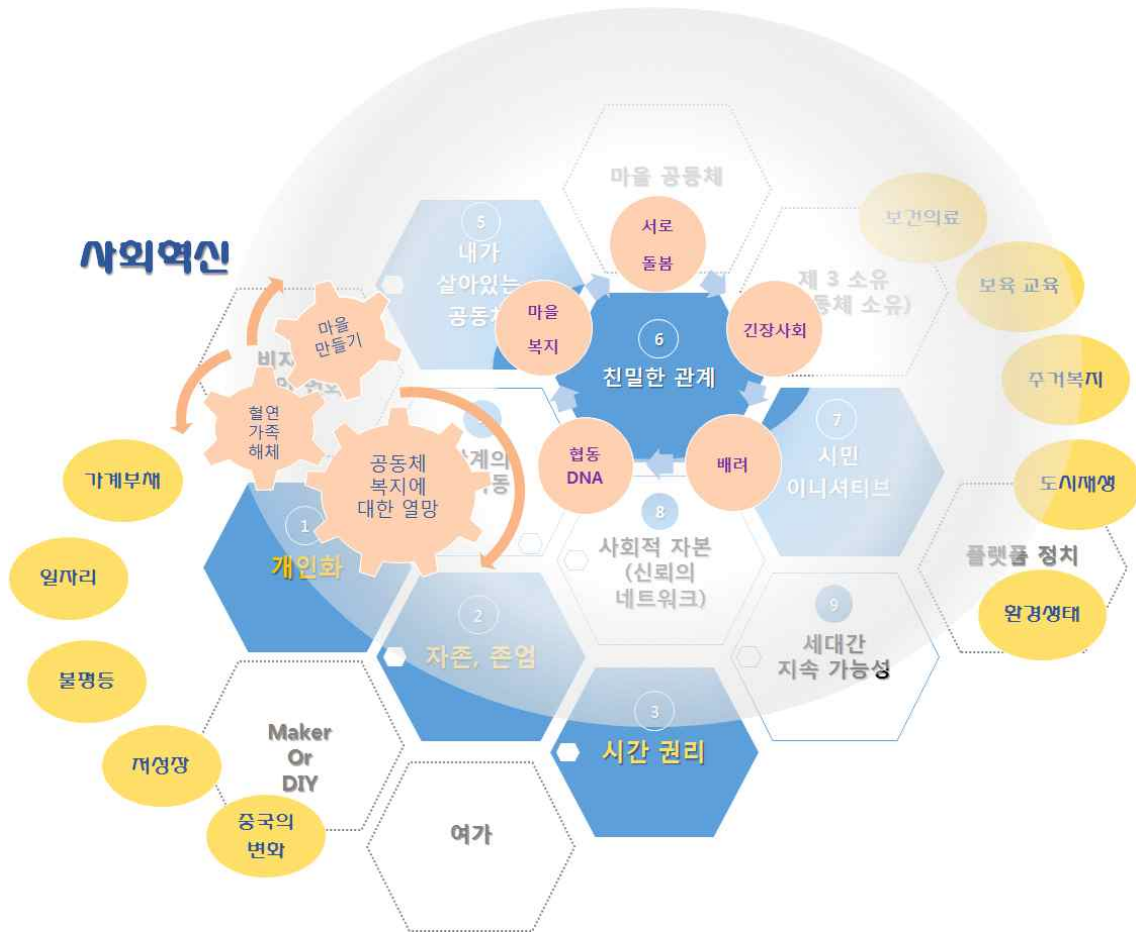


그림 4-15: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친밀한 관계’와 연관개념들

도시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가 대안일 수 있다.

- 이런 조건에서 사적인 관계처럼 배려와 이해의 관계가 작동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친밀권이라고 할 수 있음.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방문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나 의논, 잡담을 즐기기 위한 살롱적 관계도 친밀권에 포함된다. 타자의 구체적인 삶, 생명에 일정한 배려나 관심을 갖는 것이 친밀권의 최소조건이다.”⁷⁰⁾

70) 사이트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108쪽

- 이는 대표적으로 이웃 사이의 따뜻한 배려관계, 또는 ‘호혜적 생활’ 관계망 등에서 구현될 수 있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도시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때,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상의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망(친밀권, intimate sphere)이 생기면 가정 폭력 문제를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공의 공간’으로 드러내기 쉽다. 또 지역 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개입하기도 훨씬 용이해진다.”⁷¹⁾
- 친밀권은 무너지가는 기존 관계를 대신하는 대안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돌봄이나 안전 등 복지정책에서 특히 이 관계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높음. 돌봄이나 안전은 공적 관계에 의해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공공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반해서,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 생명에 대한 배려, 관심에 의해 형성 유지된다는 점”에서 친밀권이 돌봄과 안전에 더욱 적절함.
- 친밀 관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친밀권은 자존과 존엄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됨. “친밀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서, 특히 외부에서 부인 혹은 멸시의 시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자존 혹은 명예의 감정을 회복하고, 저항의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지처일 수 있다.”⁷²⁾
- 앞으로 우리사회는 경제영역은 물론 지역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살아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수많은 사회혁신 활동이 예상된다. 다수의 사회혁신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처럼, 새로운 열린 공동체 역시 ‘거래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계약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의무와 권리로 고정된 공적 관계도 아닐 것임.
-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경계가 무너진 공동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진 개방적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것은 보다 관계 지향적일 것이고, 보다 수평적일 것이며, 호혜적 협력에

71)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71쪽

72)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근거한 상호 연결을 추구할 것임. 친밀한 관계는 다수의 이와 같은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특징이 될 것임.

친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형성의 매개자’가 돋보일 것

-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연결자’, ‘관계 형성의 매개자’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됨.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각 영역의 연결을 도와주는 ‘브릿지 전문가’가 부각될 것임. 사실 최근의 사회운동과 정치, 행정에서 플랫폼(platform)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도 유사한 맥락일 수 있음.

7

시민 이니셔티브: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공공영역을 넓힌다.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임. 예를 들면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지역에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소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안성의료생협과 같

은 시민에 기반한 의료조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음.

관계 국가(Relational State)의 비전?

관계국가 비전은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유럽 중도 좌파의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시장 실패를 대신하여 다시 국가가 거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건, 교육, 환경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 시스템을 말하는데 참조해볼 수 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며 국가는 정부와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적 공간을 형성해주고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분산 시키고 지자체가 지역의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공공서비스를 운용한다.

또한 공공적 의제에 대해 공공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다. 이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4-15: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시민 이니셔티브’와 연관개념들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임⁷³⁾.
- 사실 사회혁신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협력하여 해결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혁신 자체가 주민 이니셔티브, 시민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이니셔티브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과 주민, 시민들의 관계가 여전히 제공자 - 수혜자 관계라는 과거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됨.

석관동 두산 아파트의 진정한 혁신- 고용과 에너지를 연결하다.

2013년 초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한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2년간 절감한 전기료 1억8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해 올초부터 경비원 월급을 평균 20만원 인상하기로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제주 씨(69·사진 왼쪽)는 “주차장 전등을 바꿨을 뿐인데 월급이 오르고 고용이 보장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심재철 입주자대표회장(오른쪽)은 “LED 교체 주기가 5년으로 기존 형광등보다 길어 교체비용도 아낄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참고하여 서울 성북구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에 나선다. 전등을 전력 소모가 적은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해 절감하는 공동전기료를 경비원 급여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3)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유경제

사회혁신의 대명사로 공유경제와 공유도시가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홍보하는 활동도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우버택시 사업모델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처럼, 공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얼핏 시민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자는 소박한 뜻으로 공유경제를 얘기하면 착하고 선의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무수히 다른 의미를 내포한 '공유'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말 많은 공유경제를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공유할지를 가지고 따지면 약 다섯 가지 범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1. 생산수단의 공유 → 전통적인 사회주의 해법이다.

2.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의 '잉여 공유' → 여유가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핵심 의제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다.

3. 지적자산에 대한 공유 → 대표적인 현대의 공유자산이라고 할 지적자산에 대해 특허 등의 방식으로 배타적 울타리를 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운동'이 그것이며, 웹 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원리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닿아있다.

4. 공공자원에 대한 공유 →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자원을 공동체가 공유하거나, 아예 지역공동체등이 공유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최근 켄트리피케이션 등이 이슈가 되면서 지역 공동체나 협동조합에 의한 '공동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향후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버식 공유모델 → 대체로 중산층이 가진 작은 유희(?)자산(빈방, 쉬는 자가용)을 온라인을 통해 임대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자산을 인터넷이라는 관계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여 '(빈방이나 자동차)임대중개'를 해서 엄청난 주가를 자랑하고 있는 우버 택시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미있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서울시나 공공조직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대상은 아니다.

앞으로 공공 쪽에서 공유경제를 말하려면, 공동체에게 공유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방안을 제공하고, 켄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힌다.

-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물적 자본의 부족의 고려되던 시대였음.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적자본 투자가 부쩍 강조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그러나 실제로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있었는지는 회의적임.)



그림 4-16: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사회적 자본'과 연관개념들

-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인적자본투자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투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앞서 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자

본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 활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함.

- 신뢰가 낮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근본인데,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결과 경제적 거래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실제로 줄어들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뢰자본은 21세기 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신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그 경향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세월호 참사는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차원에서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에 대한 시민의 신뢰’ 차원에서 더 심각하게 숙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실제로 세월호 사건 직후, 청소년들에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신속하게 정부가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48%), ‘전혀 그렇지 않다’(21%)고 응답, 전체의 6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매우 그렇다’는 답은 3%로, 극소수. (헤럴드 경제 2014년 5월 7일자) 청소년의 신뢰자본이 낮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면 신뢰의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쌓여 가는가? 대표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소득이다. 수입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남을 믿을 여유도 생긴다. 둘째는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수준이다. 단결이 잘된 사회일수록, 단일 민족에 가깝고 언어도 통일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신뢰구축이 용이하다. 셋째, 소득의 고른 분배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사람이 많을수록, 친밀함이 유지된다. 소득수준의격차가 극심하면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 요인은 제도적 구조다.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국가이고 국민

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편이고,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번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면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진다.”⁷⁴⁾

- 위의 주장에 기반할 때,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의 신뢰자본을 약화시키고 있고, 또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약위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이 공공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사회혁신활동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신뢰의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신뢰 관계를 넓히는 방식의 문제해결 접근법은 경제적으로도 ‘거래 비용’을 줄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음.

감시를 강화하는 대신에 신뢰를 넓혀 문제를 해결한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 설치’와 같은 재래식 솔루션 대신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 지역 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동네 안전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 감시체계 보다는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확대하여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임.

9

세대간 지속가능성: 앞 세대에게 원하는 바램 그대로 뒤 세대에게

- 우리사회는 현재 세대에 걸쳐서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직면한 다수의 과제들을 안고 있음. 우선 심각한 불평등과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음. 예를 들면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현재의 불평등과 인구성장속도가 계속된다면,

74) KBS 사회적자본 제작팀(2013),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50쪽

2100년까지 세계경제는 1퍼센트 중반수준까지 높아지고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함. 이는 당장의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 시니어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도 이상의 장기 시야를 요구함.

- 우리사회의 세금 논쟁과 국민연금 논쟁이 반복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세대에 걸쳐 국가 재정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자원을 어떻게 부담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다는 것임.



그림 4-18: 중심 키워드 지도 속의 '세대간 지속가능성'과 연관개념들

- 또한 세계 최저의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같은 인구구조 변동과 가족의 분화 등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틀이 지속가능

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회의하게 함.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생태의 유지와 보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긴급한 현안으로 우리 앞에 당면해 있음.

세대 간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최근에 갈수록 세대 사이의 갈등이 커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대 사이의 자원 분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세대 사이의 자원분배도 일종의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세대 사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에 있어서와 같이 서로간에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 세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

무지의 장막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정의의 원칙을 세대 사이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선행세대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버이들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에 대해 어느정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주목해봄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자식과 손자 세대들을 위해 어느정도 저축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역시 무지의 베일속에서 "아무도 자기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까닭에 각 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채택된 원칙은 공정한 조정을 나타내게 된다." (민주주의로 풀 수 없는 것을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으로 푼다.)

롤스는 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미래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앞에 오거나 뒤에 온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세대들을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그것이 단지 시간상으로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래의 더 큰 선보다 현재의 더 작은 선을 택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을 만든다.

- 특히 불평등과 세대의 문제에 관해 영국의 석학 앤서니 앳킨슨은 세대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면 ‘기회의 불평등’ 뿐 아니라 ‘결과적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오늘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일 경기의 산전적인 조건이 된다. 오늘 결과적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내일 자녀들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물려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짐에 따라 불평등한 기회와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염려는 더 커졌다. 집안 배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배경과 성장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집안 배경 자체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 세대가 지닌 불평등은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불평등의 원천이다. 우리가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을 걱정한다면 오늘의 결과적 불평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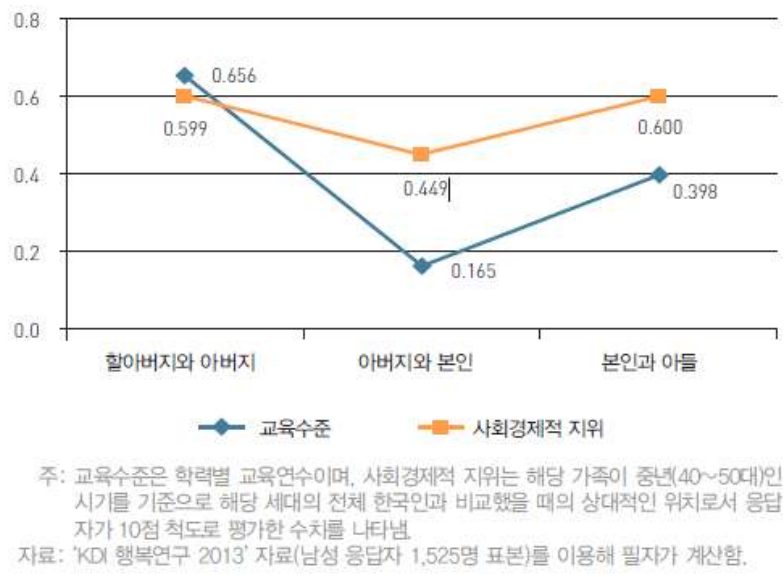


그림 4-19: 부와 교육의 대물림 추이(KDI 2015)

75) 앤서니 앳킨슨(2015), 『불평등을 넘어』, 글항아리, 27쪽

- 이미 우리사회는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면서 사회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부모들 교육과 경제적 지위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낮아졌지만, 자신들의 교육과 경제적 지위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위의 표)⁷⁶⁾
- 우리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과 부, 국가의 재정과 복지자원, 그리고 환경자원에 대해 세대 사이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으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그런 차원에서 진정하게 ‘세대 사이의 협력’을 모색해야 함.

	-2000	-1000	-5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500	1600	1700	1800	1850	1900	1950	1975	2000
인구(백만명)	27	50	100	150	170	190	190	200	220	265	360	350	425	545	610	900	1,200	1,625	2,516	4,079	6,272
GDP/Capita(달러)	112	127	137	113	109	98	97	104	116	133	104	128	138	141	164	195	300	679	1,622	3,714	6,539

표 4-2: 인류역사에서 인구증가와 성장률 증가의 장기 추세(출처: <http://www.bradford-delong.com/2014/05/estimates-of-world-gdp-one-million-bc-present-1998-my-view-as-of-1998-the-honest-broker-for-the-week-of-may-24-201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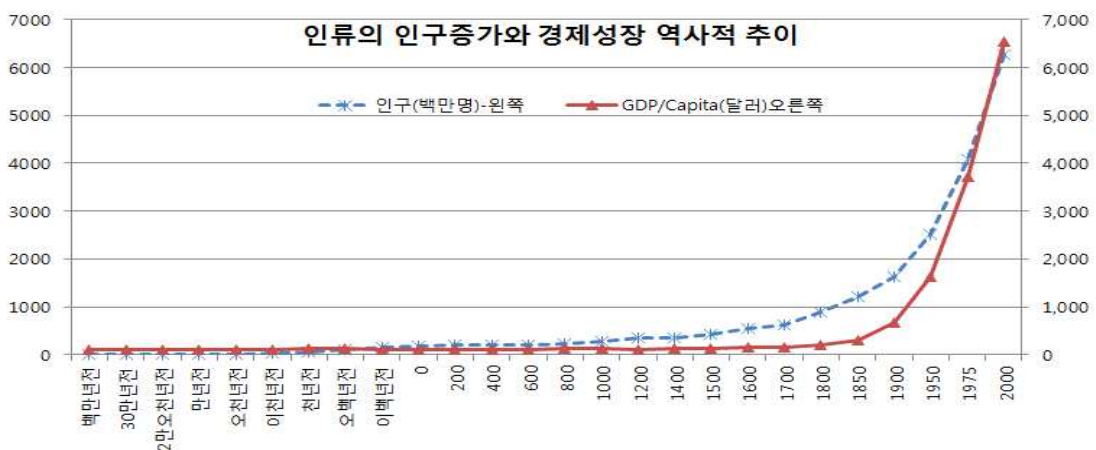


그림 4-20 :인류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역사적 추세

76) 김희삼(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 세대에 걸친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경제침체 속에서 성장인가 생태 환경보호인가 하는 전통적 대립구도의 딜레마에 간혀있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다.(Anyone who believes exponential growth can go on forever in a finite world is either a madman or an economist)”라고 예언한 선구적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경고가 지금도 의연히 중요하는 것임. 이는 인류역사 전체에 걸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역사적 변화를 보아도 명확한 것임.
- 물론 “경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일자리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더해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 또한 절박한 과제다.”⁷⁷⁾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것 역시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탄소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방안은 효과가 매우 크다. 저탄소 세상을 향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투자가 향후 50년간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 이런 부분은 노동집약도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주요 투자 영역으로 “건물 개량, 대량 운송 철도, 지능형 전력망, 풍력과 태양력, 차세대 바이오 연료”등임.
- 특히 “투자의 목표 또한 분명히 변화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점점 더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은 여전히 꼭 필요하겠지만 그 목표를 더욱 신중하게 지속가능성에 맞추어야

77)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32쪽

한다. 특히 투자의 초점이 자원 생산성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기술, 녹색 산업, 기후 적응성 향상과 생태계 강화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⁷⁸⁾

회복력(Resilience)

최근 기후변화나 생태는 물론 도시재생, 경제위기와 연계지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하여 팀 잭슨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언만 확인해 두도록 하자.

“회복력은 사람들의 생활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분배를 확실히 실행하며, 자원 처리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183)

* 출처: 팀 잭슨(2009), 『성장 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183쪽

78) 팀 잭슨(2009), 179쪽

IV

분야별 사회혁신 키워드 해설:

9개 오픈랩 결과 정리⁷⁹⁾

- ▶ [오픈랩1: 미래세대]_권지웅
- ▶ [오픈랩2: 일상과 가족]_권미혁
- ▶ [오픈랩3: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_김성환
- ▶ [오픈랩4: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_정보연
- ▶ [오픈랩5: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_김병수
- ▶ [오픈랩6: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경제]_정상훈
- ▶ [오픈랩7: 기술과 사회]_강현숙
- ▶ [오픈랩8: 기후변화 및 삶터, 삶의 방식]_이강오
- ▶ [오픈랩9: 한반도경제론]_이일영

- 2014년 10월부터 6개월동안 오픈랩에 참여한 350여명에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일상), 예측 가능한 또는 대비해야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이상/상상)을 담은 질문에 대한 답에서 사회혁신 키워드를 포착함.

79) 9개 오픈랩을 끌고간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다. 권지웅(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전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권미혁(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성환(더 넥스트 대표), 정보연(동마을복지지원센터 추진단 부단장), 김병수(사회적기업 이음 대표), 정상훈(서울혁신센터장), 강현숙(CCKorea 국장),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일영(한신대 교수·경제학)

미래세대	일상과 가족	시민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술과 사회	기후변화 및 삶의 방식	한반도경제	
어쩌라고	개인성 기반 다양한 가족	주민권	시민이니셔티브	토지임대부 개발	인간 존엄 중 시 경제	시빅 해킹 Civic Hacking	검은 비(미세 먼지 관리)	사회변화와 개	빛/부동산
심지어 20대마저 스스로를 중요한다	가족이란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도시공유공간	석관동 두산아파트	도심부 재생	사회적 금융	오픈 소스	도시주의와 유엔기버넌스	소득주도성장	금리/연금
존엄을 지키는 삶	새로운 가족들	주민자치플랫폼과 지치코디네이터 전문가 연결	관계국가	경제플랫폼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학교	정보민주화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착장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비정규직/영세지역업
작은 커뮤니티	가족치료사	작은 공룡의 장과 느슨한 연결	관계와 친밀권	리빙랩	중간/치세대 혁신가	누구나 코딩	녹색 삶의 디자인	공유지원으로서의 조세	저출산과 이민/고령화
유니버설 디자인	초국가적 가족	누가버넌스	마을계획	공유도시	경계를 잇는 전문가	메이커문화	POOR&RICH	네트워크/네트워크경제	도시 네트워크
다면적 정체성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	치세대 정치인 육성	건강사회/암	노마드적 삶	공유자산	무장애 세상	시라지가는 산, 그리고 한국형 공유화 운동	벤처 생태계/사회혁신 거버넌스	사회복지세
긍정적 경험의 부재	인격을 존중하는 돌봄	정치협동조합	치유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육아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Robot	모두를 위한 놀이터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중간민주주의/사회적 합의
주민성		플랫폼형 정당	존엄		학교 협동조합: 협동조합 학교	감시사회, 기술을 감시하는 또 다른 기술	도시농업, 먹거리에서 도시 재생까지	작은 학교/거꾸로교실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속하고 싶지 않다		Mindfulness /영적 성장			협동DNA의 재발견	3초 사회	탈원전	지속가능한 재정/조세정의	한중FTA
권리화된 요구					커뮤니티 기반 시장	기회 균등 vs 불평등	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	6차 산업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명확한 입장 말하기					혁신플랫폼		환경거버넌스	강력한 중국 /AIB/한중FTA	한반도

-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다룬 [오픈랩: 한반도경제]를 제외하고 8개 카테고리의 오픈랩에 참여한 2050세대들에서 공통된 맥락들을 발견함. 압축적 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폐단과 개발 논리에 훼손된 사회적 가치들 등 개인의 ‘삶의 질’에서 ‘사회의 질’까지 다뤄짐. 특히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자존’ ‘존엄’이 여러 오픈랩 모임에서 중요하게 등장함.

#1 “...(노숙자들은) 금전적 실패를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때 분노를 느낀다. 금전적 실패가 왜 그렇게 보여야 하나. (중략) (장애를 가진 이들 중)성인이 되면 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욕구가 있고 성인인데 (사람들이) 애로 취급한다’는 답답함이 있다. 자존감을 회복받고 싶어한다...” - [오픈랩: 일상과 가족] 참여자 진무두 (전 빅이슈 본부장)

#2 “도시는 존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 사진은)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의 모습이다.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 짓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에 마음이 무겁다. 공공건축물 등 장애인화장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화장실 설계 기준은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회전할 수 없어) 들어가질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살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오픈랩: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 강미현(예감건축 대표)

#3 “주민들을 지켜보면 관계회복이 중요하다. 자기 자존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처럼 늘 좌절하고 자기책임론으로 귀결되거나 자기학대를 해야 살아남는 분위기에서 힐링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오픈랩: 치유와 복지] - 박인숙(서울복지재단)

#4 “...장학금 신청해 본 이들은 알거다.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내가 얼마나 힘든 지를 증명해야 한다. (중략) 사회적 약자 또는 박탈된 권리로서 인지되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선의, 중간지원관의 선의를 갈구해야 하는 요청이 된다. (중략) 계단 꼭대기에는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을 쟁취하기 위해선 자기 불안을 드러내야만 하는 구조. 개인이 함몰되는 삶이 아닌, 더 이상 과격하지 않아도 되는... 존엄하게 사는 것, 이게 내 권리일 것이다.”

- [오픈랩: 미래세대] -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6기 위원장)

-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재편된 한국 사회에 ‘성인’으로 진입한 세대와 ‘노인’으로 내몰린 세대들은 문화 지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생존에 대한 삶의 불안과 피로감을 일관되게 토로함. 그간의 사회적 경험이나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모색하면서 자기 삶의 경로를 기획하는데 관심이 큼.

#1 “...학력이 중요한가? 대학교육까지 필요할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식이 둘인데, 한 애가 취업을 못했다. 취업을 못했다고 말하기 싫은데(웃음), 직장이나 일을 구할 때 전공 따라 선택하는 게 나올지 고민이 있다...”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1

#2 “50대 말에 (노후를 대비하려고 여러 경로를)찾았을 땐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취업도, 자녀문제도 관계가 있다.”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2

#3 “예전엔 만원으로도 장을 한보따리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야채 몇 가지만 사도 만원이 똑딱.”-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신중년 3

#4 “‘너 혼자 살래’ 아니면 ‘같이 살려면 아주 배고프게 살아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사회 같다.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적인 안정이 먼저냐, 내 사람을 챙기는 게 먼저냐”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홍대 텃밭 다리 모임 참여자 1

#5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중략) 패러다임이 다른 삶이나,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일에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 그게 내 선택이다” (너의 사람의 영역이 뭐니? 이런 질문도 받는데. 나와 ‘단 하나만’ 접촉되더라도)

- [오픈랩: 기후변화와삶터, 삶의방식]- 홍대 텃밭 다리 모임 참여자 1

- 참여자들은 ‘개인화(된 생활)’과 ‘1인가구’ ‘느슨한 관계맺기’ 등 일상 단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의 속도와 “비어있는 구조”에서 오는 힘듦과 격차를 논하기도 함. 그러나 기존 구조에서 ‘비어있음’을 뚫고 대안을 모색하는 혁신적 흐름과 기술의 활용, 삶의 태도 등이 거론됨.

- 예를 들어 주택 공급체계에서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1인가구의 현실에 대한 대응이 아직 부족함. 1인가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거형태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새로운 사례로 등장. 또 대의제 방식보다 ‘(직접)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편임. 각 랩에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것임.

[오픈랩: 미래세대]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⁸⁰⁾

- 우리 사회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전 성북구 의회에서 고려대학교 기숙사 승인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음. 환경 파괴, 교통대란, 우범 지역화 등의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지만, "내 집이 6억인데 10억에 사줄 게 아니면 나는 절대 반대다"라는 게 속내였음. 파행되었던 여러 공청회들 중 주민들이 청년들의 불안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음.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어른이 청년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쟁들을 들었고, 스크럼 밖으로 자식 세대의 보금자리가 내팽개쳐졌고 사회는 무력함.
- 버스를 대절하여 집회를 하고 피피티로 '왜 청년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내는 어른들과 자신의 집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 아니면 절대 반대라고 외치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빙하가 녹으면서 어미 북극곰이 새끼 곰을 잡아먹었다는 뉴스가 떠올랐음.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 우리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을까.
- 지금의 청년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체험한 산업화 세대, 민주화의 과실을 경험한 386세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음. IMF 사태 이후 학창시절을 보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들에게 강요된 것은 살벌한 경쟁이었고, 남은 것은 파편화된 개인과 피폐해진 삶이었음.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패기와 열정이 없다"거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며 쉽게 힐난함. 압축성장의 폐단이 세대 간의 공감 결여로 이어진 결과일 듯.

80) 참여연대 15기 인턴프로그램에서 강의했던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와 줄고 [시민정치시평 283]'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를 재인용했다.

- 우리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년 세대의 붕괴는 단순히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의 등장과는 다름. 생애 주기적 과정에서 특정 단계의 세대가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침.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의 연결 고리로 구성되는 사회에서 청년층의 붕괴는 사회 전체의 붕괴와 연결됨.
- 일본의 '사토리 세대(득도 세대)'의 출현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출현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난 이 사회 전체의 희망과 절망에 관한 것이어야 함.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만 정책 집행의 구체적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기존 '청년'담론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프레임에서 작동한다고 여겨짐. 대체로 언론에서 청년을 다루는 방식은 청년을 객체로 놓거나 피해자화 하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함.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주거빈곤)라든지 청년들이 힘들고 불쌍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내려고 함.
- 청년이 '주체'로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음. 청년인 시민이 자기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발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님. 최근 '달관세대'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느껴짐.
- 실제 청년들이 삶에 만족하고 있고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달관'이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사회적 조건 등을 바꾸는 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다고 판단한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취한 몇 가지 조치들의 결과물일 것임. '어떤 무력감의 마지막 상태'를 '달관'

으로 오역하고 있음.

- 악순환의 시스템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이토록 위기에 몰렸음에도, 이 위기의 원인과 해결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음. 청년들의 “주장은 때론 왜곡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무시되기도” 하며, 언론은 피상적인 현상만 다루는 경향이 있음.
- 기성세대의 시각이나 프레임에 빠진 ‘청년 담론’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언어로, 자기 세대의 눈으로 현실을 점검하고, 미세한 차이와 다름, 균질, 차이가 인정된 공동의 언어, 경험을 함께 하려 함.
- 이데올로기가 아닌,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사적 경험에서 구조적 모순이나 시스템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고민을 응축해보는 경험. 여기에 초점을 둬.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거나 아젠다로 형성해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것, 작은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러한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작은 단위의 공론장을 만들고자 함.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과 가정 요약

- 앞선 세대가 ‘민주화’라는 하나의 가치와 집단적 승리의 경험을 공유한 반면에 우리 세대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고, 집단을 이뤄 무언가를 바꿔본 승리의 경험이 없음. 또한 개인이 개인으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을 위한 것들마저 모두 잃은 청년들은 ‘협동’하지 못하고 ‘힐링’만 찾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음.
- 이 두 가지는 묘하게 섞여 청년들이 ‘집단’에 대한 터부를 갖도록 함. 정치적인 일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수 없는 상황에 처함. 이는 신자유주의가 내면화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라 생각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 분야마저 그런 방향으로 개조됐고, 1등이 된 개인이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을 보며 커운 세대임.

- 집단적 움직임에는 뭔가 거부감부터 들고, 그런 움직임을 보면 ‘왜 너희 이렇게 찌질하게 모여, 네가 잘하면 되는 거 아냐, 뭐가 더 쿨하고 멋진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해오면서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그 해결 주체를 개인에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됨. 오늘 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사회, 그 사회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지도 모름. 슬프게도 이것이 보통의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임.
- 일, 자존, 생활비 등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음. 주거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청년 세대들에게 전승되는 삶의 격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시민이 시민의 권리로 국가 또는 행정이라는 시스템에 개입하고 변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 사회의 작동원리가, 국가의 운영원리가 나를 포함한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믿음의 회복임. 이를 위해 ‘정치 행위’가 필요하며, 집단에 대한 터부를 극복하기 위해 작게라도 집단적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함.
- 그래서 더더욱 ‘공감’의 언어를 만들어가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 현실을 객관화하고 해석해보는 공론의 과정과 생각이 부딪히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사회적 경험들 속에 사회혁신의 실마리가 있을 것임.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1차 모임

- 참석자: 임경지(주거/민달팽이유니온), 문아영(교육/평화교육 모모), 김민수(노동/청년유니온), 우야(소수자.인권/퀴어문화축제), 이태영(지역/신촌민회), 김규원(민달팽이 유니온) 등 총6명
- 주거, 노동, 소수자, 지역정치 등 각자 현장에서 기존과는 다른 솔루션을 모색해가는 청년 주체들의 활동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속 지점들을 끄집어내는 자리로 기획
- 결과 요약
 - 정치적 시민권을 자각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함.
 - 내 삶터와 일터, 사는 지역, 활동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가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빈곤함.
 - 기 386세대와 달리 집단적 경험이 낮은 청년세대들, 즉 동세대들간의 설득과 조정, 협업과 연대의 관계 맺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
 - 사회 경험 차에 따른 세대간 문화 격차
 - 새로운 주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나 시스템

■ 2차 모임- 다주체 PT Party(이그나이트 변형)

- 발표자: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류창동(취업준비생·시각장애인), 정준영(청년유니온), 이재은(청년허브), 우야(퀴어문화축제), 김선민(청년기획자), 양광조(활동가), 오창민(협동조합 성북신나), 박우영(명랑마주꾼), 권지현(인디고서원), 이태영(신촌민회), 박상준(청년허브), 홍정현(퍼블릭그라운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김이민

경(모여라두더지), 강보배(제주주민자치연대), 문승규(블랭크 건축가), 천휘재(아현동 쓰리룸), 정성빈(서울100 프로젝트), 최창민(국회 보좌관), 김선기(고함20), 조아라(NPO지원센터), 행또(뮤지션) 등 총25명

- 이그나이트 방식을 변형하여 개인당 개인당 발표시간을 두고 미래세대가 간직한 ‘경험과 대화’로 사회혁신의 키워드를 말하는 장으로 기획함. 우리 사회의 단면 또는 이야기해야 할 장면/생각/활동을 영상이나 노래, 구연동화,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장으로 진행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일상: 지금 중요한 문제	변화 지점 (개인 또는 사회)	가치적으로 우리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의제
삶터와 생활 환경 (의식주)	도시서민 주거문제 불안경쟁 모멸감: 고단함, 불편함을 증명/호소해야 하는 사회	공동주거, 주거공동체 지역 친밀 커뮤니티 활동	더 나은 삶을 위한 권리 (기본권) 주장 존엄을 지키는 삶
생활 방식 (라이프스타일)	저녁이 있는 삶-친구와 놀 수 있는 삶 자기만족적 삶 소소한 일상의 중요함 “실패를 기다리는, 기대 하는” 소진되지 않는 삶	개별성, 다양성 자립적 삶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 / 기성세대와 다른 정체성 획득 개인의 행복과 만족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삶 복수의 정체성을 허용하 는 사회
일/ 노동	비정규직/계약직/부당해 고/고용불안 시급임금제(시간이 돈이 다) 노동시간 근로계약서	자기 시간 자기만족 가치있는 삶 추구 좋아하는 일 지향 뒷면-이면(산출/성과 중 심 X, 관계중시O)	공공성
참여 공동체 /시민 사회	자기방언 다른 방식의 말걸기(그 림, 유쾌한 소통 등) 넓은 정치구조-정당정치 새로운 지원방식	유대감 풀뿌리 자치 생활정치 - 지역구 주민-입장 나만의 사회 참여 방식	관계와 유대 작은 커뮤니티/친밀권 정치적 시민성 안전한 공간

사회 문제 / 사회 문화	배제와 고립(성소수자, 장애인, 빈곤층 등) 세월호사건 세대담론(7포세대, 사포리세대, 촛불세대) 거부 빈곤이 감춰진/외면된 사회 입장을 ‘숨긴’ 진단이나 평론	공공성 “실패도 성공이다” “20대마저 스스로를 증오한다” 기다림,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성 보편적 설계 - 유니버설 디자인 천개의 공동체 천개의 마을 입장-갈등-조정 과정
--------------------------------------	---	---	--

2.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표백, 도시서민, 정체성 약자임을 증명하는 모멸감, 궁핍한 시간, 포기, 절망,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우리가 아닌 나와 그들, 커뮤니티, 복수의 정체성, 존엄을 지키는 삶 뒤틀면-이면, 나의 속도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성 두더지, 다른방식의 말걸기(그림, 유쾌한 소통 등)

2) 키워드 설명⁸¹⁾

어찌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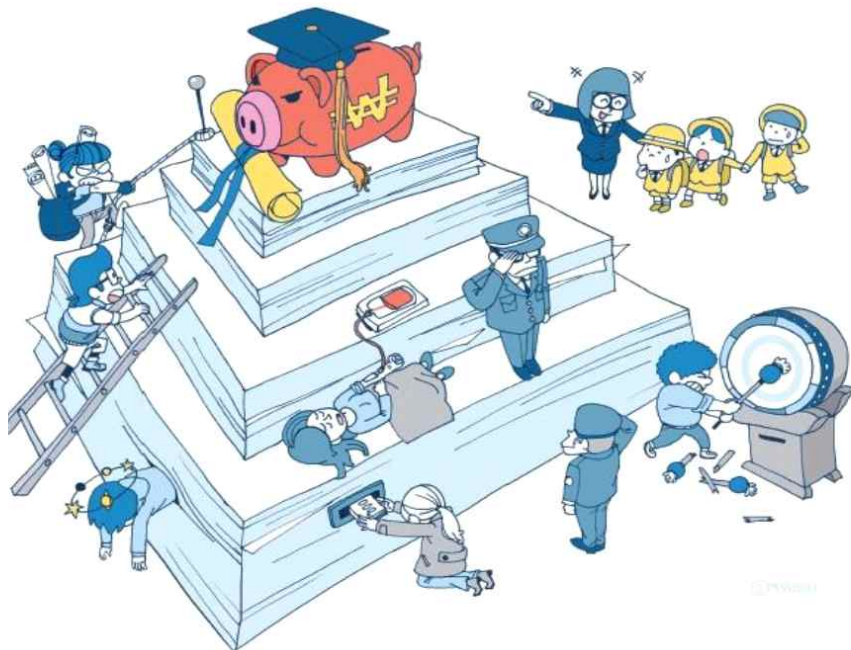
- 개입하지는 못하고 규정당하는 상태. ‘3포세대’ ‘7포세대’ ‘달관세대’ 등 기성세대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현상들에 대해 표피적으로 접근, 전환기에 접어든 사회의 세대들이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됨.

81)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최대한 살려 키워드를 풀었다.

“흔히들 (사회에서) 세대담론을 다루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우리를 ‘춧불세대’라 부르더라. 이제는 ‘7포세대’로 부른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꿈),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미처 하기 전에, 언론에서는 이미 ‘다 포기했다’고 전제한다. 요즘은 ‘사토리세대’라고 한다. 득도, 깨달음을 얻은 세대라는데. 그냥 살아온대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나에게 대한 세대담론이나 평가는 계속 바뀌고 있다. 일면 춧불, 7포세대, 사토리,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쩌라고?” 사토리세대란 말이 처음 나왔을때도, 대충대충 생긴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 공감은 됐지만 “불쾌했다”

권리화된 요구- 존엄을 지키는 삶

- 주거권을 주장할 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 불편함. 청년 주거권의 문제를 말할 때마다 ‘반 지하’ 사진이 나오는데, SH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인가. “더이상 나쁘지 않기 위해 사는’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하다.”.존엄하게 사는 것, 이게 기본권일 것임.



©대학내일

“...장학금 신청해 본 이들은 알거다.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선 내가 얼마나 힘든 지를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다. 사회적 약자 또는 박탈된 권리로서 인지되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선의, 중간지원관의 선의를 갈구해야 하는 요청이 된다. 실제로 지원사업을 받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어려운 삶인지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대학내일 삽화 PT참고). 계단 꼭대기에는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을 쟁취하기 위해선 자기 불안을 드러내야만 하는 구조.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했다

- 미디어 등 사회에서 규정해버린 세대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동세대들이 처한 문제를 마치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른 문제나 성향으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을 경고함.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위험’들을 개인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데도, 문제를 인지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까지 다다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을 말함.

“...많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청년이 청년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요즘 청년들은 창의력이 정말 없는 거 같아요. 수동적으로 일하는 걸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능동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없어요. 요즘 애들은 책도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든지, ‘나는 아닌데, 남들은 삼포세대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나는 달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88만원세대가 아닌데, 남들은...’ 등 이런 류의 말들을 한다. 일관된 패턴이었다.”

작은 커뮤니티 : 같이 싸워줄 친구, 주변의 동료

- ‘심지어 20대 마저 스스로를 증오했다’라는 키워드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키워드. 학자금 대출이나 집세, 저임금, 고용 불안 등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개인들이 조직/단체가 아닌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관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찾아감.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모여라 두더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와 내 친구, 또래 청년들을 ‘두더지’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의 굴에 틀어박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마치 두더지와 같다고 여겼다.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등.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못나서 그러는 걸까”라고 자책한다.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해결하는 건 역부족이었다. 혼자 해결한 게 가능한 건가?라고 되묻게 됐다.그러던 차 이걸 고민하던 이들이 모여 같이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살 집’을 만들게 됐다. 그게 모두들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 누구나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보편적 설계’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담겨 있음.

“...그래서 내가 쓰는 폰으로 얘기를 풀려고 한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신기해 한다. 스마트폰에는 ‘Voice Over’기능이 탑재해 있다. 이 기능을 켜면 전화나 메시지, 카톡, SNS 등 자연스레 앱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걸, 나는 귀로 들을 뿐이다. 차이가 없다. 우리(장애인)을 우리에게 편입시킨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2G폰일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폰이 있었는데, (사기 싫어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없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누구나 다름과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편적 시스템, 유니버설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필드에서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다름으로 인정하는, 유니버설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

다면적 정체성 : 집단과 개인의 관계, 나의 속도.

- 나를 둘러싼 여러 정체성-딸, 마포 구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팬클럽 회원 등등-이 있음. (누구나)복수의 정체성을 합쳐 나가는 과정에서 고정된 역할이나 단일한 정체성만을 부각해 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심리적 저항이 있음.

긍정적 경험의 부재 : 소중한 커뮤니티의 부재

- IMF 이후 생존을 위한 삶, 불안이 잠식한 사회에서 스펙 쌓기 등 생존 경쟁 대열에 들어선 세대들에게 ‘협동’이나 ‘협업’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음.

주민성 : 정치에 소외된 시민

- 고용 불안, 저임금 등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들은 월세 부담으로 잦은 이사를 해야 함. 정주하기 힘든 ‘1인 가구’들이 정주성을 전제하는 지역 사회와 결합하거나 4인가구들과 결속하는데 어려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주민’으로 인정해주는 시선에 장시간 생활하는 일터가 그 지역에 있어도 ‘주민’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구조.

속하고 싶지 않다 : 개인이 살아있는 공동체

“...‘공공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별성이 살아있는 공공성’이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아닌, ‘나와 그들’로 풀어서 얘기해 보려 한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 당’ ‘우리 진보’... 언젠가 ‘중도’라고 얘기했더니, 극 진보쪽 사람들이 보수가 잘못하면 진보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냐는 둥 공격하더라. 나는 사안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한다. 우리라고? ‘우리’가 불편하다. 가족도 ‘우리 가족’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라고 생각한다. ...”

명확한 입장을 말하기

“...김훈이 한 칼럼에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로되, 하나마나한 말이다.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모두 그러한 것인데, 그 명석함에 가려진 폭력성이 세상의 강자로 행세하고 있다. (중략)이 비극적 사태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은 경기부양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가 언론의 중심부로 진출했다. 이 경제논리 역시 맞는 말이로되 하나마나한 말이고, 명석성으로 폭력을 위장하고 있다...사회를 진단하는 건 누구의 곁에 설 것인지를 정하고 활동/변화/혁신이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정해야 갈등이 드러나고, 그래야만 조정이 발생한다. 입장, 갈등, 조정, 변화, 다시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우리’가 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 ...”

[오픈랩: 일상과 가족]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일상은 사회변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특히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 최근 ‘일상’ 개념이 주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진 분야임. ‘일상’은 지루함, 권태, 벗어나고 싶은 속성 등 기존의 불합리, 불평등한 질서가 관통되는 곳이므로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강조하는 경향(르페브르)과 일상이야말로 대중의 현재적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현재의 삶의 건강성을 아무런 이데올로기적 전제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마페졸리)이 맞서 있음.
- 이처럼 대립되는 의견에도 일치하는 부분은 일상은 사회시스템이 농축되어 있는 현장이라는 점, 그럼에도 그 어떤 것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일상의 배신). 따라서 일상의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변화 및 사회혁신의 지점임.
- 가족은 먹고 입고 쉬는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기초 단위로서 가장 일차적이고도 강력한 체계임. 세대와 노동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만, 강력한 의존성과 세대 학습성으로 인해 변화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아 왔음.
- 가족의 기능 중에서도 돌봄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임. 돌봄 노동은 그동안 ‘가사노동’이라는 이름하에 비생산노동으로 간주되며 폄훼되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돌봄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음.

- 돌봄은 독립의 결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또 다른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적인 의존을 경험하므로 의존은 인간의 보편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즉 의존의 실체는 곧 돌봄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돌봄을 구체적인 노동으로 언급하고 있음.⁸²⁾
- 이처럼 돌봄은 가족과의 연관성속에서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유병자 등 모든 시민이 돌봄을 받을 ‘권리’의 차원으로 인식됨. 큐레이터가 특히 돌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현재 경쟁적인 유급노동중심 사회 ‘돌봄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재편해야 한다⁸³⁾는 여성주의 논의를 반영함.
- 유럽위원회 사회혁신보고서의 기준⁸⁴⁾을 따른다면 가족의 변화야말로 시스템 자체의 변화이며 돌봄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야말로 혁신임. 그만큼 가족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이며 따라서 사회혁신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여러 영역 중 가족과 돌봄을 선택함.
- 가족과 돌봄을 사회혁신의 키워드 영역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놀랄 만큼 빠른 변화속도 때문임. 종래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뿌리가 강하여 가족관계나 관혼상제에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속도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할 정도임.
- 돌봄 역시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제라는 제도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 따라서 대중의 의식을 포함한 변화의 모습은 사회혁신에서 반드시 고찰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다루기로 함.

82)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

83) 마경희, 여성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84) 유럽위원회의 사회혁신보고서를 보면, 사회혁신을 ①사회 요구(social demand) 라는 관점에서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과 ②사회변화(social change) 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영역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③시스템의 변화 (systemic change) 라는 세 가지로 분류했다.

- 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4 >(장혜경 외)⁸⁵⁾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압축적 변동에서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가구 구성의 형태변화는 물론 가족의 의미와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봄.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4>를 토대로 변화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①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 주기적인 금융위기 등의 저성장 여파는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의 생계기반마저 급격히 침식하고 사회를 양극화하고 있음. 이는 대다수 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중심의 생애경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듦으로써 과거의 생애주기는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게 만들고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경력관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자리잡음. 이런 조건은 남녀 모두에서 성규범과 연령규범에 따른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표준화된 생애주기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②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가구의 증가

- 초고속으로 하락하는 출산율과 결혼형태와 방식이 갖는 다양성이 나타남. 즉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비혼인구가 급격히 확대.(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48%가 1, 2인 가구)
- 가구의 형태와 크기변화도 변하고 있는데 1980년 4.5명이었던 가구규모가 2010년에는 2.69명으로 축소되었고 핵가족의 비중은 1980년 53.0%에서 2010년 37.0%로 감소.. 대신 부부가족은 6.3%→15.4%로 증가, 1인가구는 1980년 4.8%에서 2010년 23.9%로 4배가량 증가.
- 지구화는 한국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 국경을 넘는 가족 삶의 확장이 그것인데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장기간 해외에서 분거형태로 생활하는가하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역시 크게 증가.

85) <http://www.yes24.com/24/goods/16854600>

③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 약화

- OECD가 기존의 홀벌이 모델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맞벌이 모델이 적합하다는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남성 1인이 생계부양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

④ 가족 돌봄 및 재생산기능의 약화

-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맞벌이, 혹은 2인 생계부양자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녀나 노인 돌봄 기능이 더 이상 가족을 통해 충족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함.
-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남성 1인 생계 부양모델이 무너지면서 종래 여성들이 담당하던 ‘돌봄 노동의 결핍’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관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1) 논의 범위

- 이번 1차 오픈랩을 통해 ‘가족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초점을 뒀. 전문가의 진단이나 통계 등을 통해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가족은 미디어나 정책상 고정관념에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음.
- 가족의 변화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임. 가족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가족이 해온 기능을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도발적 질문도 가능한 주제.

- 가족문화 역시 마찬가지. 특히 가부장문화가 강력한 한국 현실에서 가족 내의 불평등문화에 대한 관심과 캠페인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성운동에서 특히 이 부분에 주력함. 여성만 일하는 명절문화를 바꾸자는 운동, 미망인 등 가족과 관련된 호칭을 평등하게 바꾸는 운동 등이 관련 사례임.
- 관혼상제, 상속 등에서도 이같은 가족 내 불평등은 조금씩 개선되었고 그 정점에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가 있음. 하지만 최근 가족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약하기에 과연 실제 변화상이 어떤지 점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보듯 실제 가족 관련 정책이라기보다 인구조절정책의 성격이 많았고, 복지영역과 겹치는 부분도 많음.
- 이런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픈랩은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주제를 세분화(전문화)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가족의 변화를 넓게 포착하는 기획 방향을 선택함.

(2) 방식

- 오픈랩 방식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격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주제를 세분화/전문화하지 않고 평소에 갖고 있던 가족이나 돌봄과 관련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진행.
-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면 혹은 변화해야 한다면 그것과 가족(혹은 돌봄)을 연관시켜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진행.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던 3차 오픈랩에서도 키워드 부분은 빠뜨리지 않음.
-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되 특히 단어나 표현 속에서 가

족의 변화 포착하는 데 초점. 따라서 가족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제안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으며, 이 부분은 전문가 중심 논의구조에서 가능하리라 예측

- 모임 초/중반에 참가자 각자가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내도록 한 점은 토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범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주최측은 참가자의 의견을 목록화한 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방식 선택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1차 : 가족일반

- 가족과 관련분야의 활동가(여성운동, 이주여성단체 등)/ 일반인(강남 엄마,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역의 문화업무종사자)/연구자 등과 가족관련 총체적 이야기
- 참석자: 김혜영(숙대 정책대학원)/ 박명준(노동연구원)/ 허오영숙(이주여성인권센터)/박봉정숙(여성민우회)/ 배국진(소풍게스트하우스)/ 신은희(벨류가든)/전성환(충남문화진흥원장) 등 총7명
- 방법론: 키워드 기반의 워크숍 진행
- 결과 요약
 - “가족은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로 정리될 수 있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확인함.

-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었음. 한 참여자의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라는 자조섞인 독백에서 포착한 대목. 전환기이기에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이 첫 번째 변화지점임.
- “화장실 문을 열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를 희망한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전통적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이해·공존을 원하고, 전혼가족, 지역자조모임 등 가족을 대신할 공동체의 의미와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함. 강남 엄마의 항변⁸⁶⁾처럼 원인의 근본적 이해,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가족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함.

○ 1차 모임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화목한 4인가족) 판타지의 해체 전혼자녀 혼혈가족/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편견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진심 기반 복지의 최후 보루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합리적 개인주의 좋은 소식은 결혼인가? 가족 모습의 열등과 깨어짐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1인가구 연대 관계의 재구성 먼 희망 가까운 불안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가구 연대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 기반의 복지체계 사회적 학습하는 공동체 다양한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86) 1차 모임에 나온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다. 존중감을 느낄 방법이 없어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는 강남 엄마의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 키워드 설명

-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 가족에 대한 느낌: 세대별로 다르게 다가옴
-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존중감을 느낄 방법이 없어서 아이에 올인하게 되는 강남엄마와 그로 인한 갈등
- 진심 기반: 가족의 정체성/관계는 진심 기반이어야 한다는 의미.
- 복지의 최후 보루: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과 관련된, 예를 들어 결혼, 동거 등의 라이프스타일은 유럽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유럽은 결정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어 가족체계가 개방적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유럽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 그래서 복지와 관련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전혼자녀에 대한 연구 및 관심,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이해, 혼혈가족에 대한 현실과 편견: 새롭게 나타나거나 확대되어가는 관계 및 애착에 대한 이해/관심
- 먼 희망 가까운 불안: 가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음
-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가족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심리적 유대감 및 공동체의 의무는 다하려는 경향
-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연대: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지만 이들도 취향,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대 필요
-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정책의 기조도 자존감 중심으로 함.
- 이웃 기반 복지체계,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이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가족의 삶이 이어지는 경험 하고 있음. (이웃이 가족의 삶을 확장할 가능성 주목)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사회에서 이런 다양성과 도전을 인정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임.
-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

■ 2차 : 돌봄

- 다양한 영역 돌봄 현장에 있는 10여명의 경험 중심 이야기
- 참석자: 김미연(서부장애인증합복지관 팀장)/ 김성환(더넥스트 대표)/ 박봉정숙(여성민우회 대표)/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은(그린피스)/ 조순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진무두 (전 빅이슈 사무국장) / 서채홍(피크15 이사) 등 총8명
- 방법론: 키워드 기반의 워크숍 진행
- 결과 요약
 - “이제 모두가 같이 돌봐야 한다”로 정리될 수 있음.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사회적 돌봄으로, 관계 지향적이며 존엄감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에 대해 논의됨.
 - 관계지향적이고 존엄감을 토대로 한 돌봄을 위해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복지시스템의 재구성을 모색함. 이를 위해 신뢰와 관계성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돌봄을 위한 시간을 포함한 ‘여유’에 대한 중요성이 공유됨.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의 실수가 이해되고 재기 기회가 있는 사회에 대해 모색함. 가족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로 공동육아와 교류의 발전방향이 있음.

▶ 2차 모임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돌봄의 계층화	사회적 돌봄 공동육아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기적 재구성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돌봄의 정규과목화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책 미혼모 등이 이해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

	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의 구축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화	은 사회 주체들의 역할 분담
--	--	--------------------

○ 키워드 설명

- 돌봄의 계층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돌봄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
- 사회적 돌봄: 사회 시스템 내에서, 상호간의 역할 내에서 돌봄 진행
- 공동육아: 힘들지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 가능성 모색
-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기적 재구성, 공생,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단순히 돈이 아닌 존중감에 초점
-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의 구축, 돌봄을 공유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유 필요.
-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화 :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지 않고 돌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과도기적으로 찾을 필요 있음
- 돌봄의 정규과목화 : 돌봄에 대한 인정의 방법
-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책: 돌봄 정책이 단순히 수혜 대상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감하고 관계 맺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미혼모 등이 이해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은 사회: 가족결합제, 육아 및 모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음.
- 주체들의 역할 분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와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필요함.

■ 3차 : 가족의 미래

- 모델을 통해 가족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나누어보기
- 참석자: 일반인 약 25인
- 방법론: 레고시리어스 플레이(LSP).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께 감지한 후, 현상을 넘어 ‘미래의 가족’ 모습에 대해서도 상상
- 결과 요약
 - “개인의 공간이 허용되는 가정을 기반으로 사회적 상상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사람들의 숨겨진 니즈를 찾되, 기존 가족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 고려함.
 - 레고시리어스플레이LSP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족의 미래상으로 조립한 ‘정원과 대문을 공유하는 집’ ‘작은 집들이 연결되는 레고 모형’에서 개인성을 존중받으면서도 관계를 중시하는 점을 발견함. 또 ‘이동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지향한 모형에서 정주성과 이동성의 상호보완과 열려진 가능성을 포착함. 장례 방식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동물권 증대 등 관계의 변화 양상도 알게 됨.

▶ 3차 모임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낮설음 사생활 존중 기반 가족 공동체 가족1인당 자신만의 공간 설계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의 식탁 장례 문화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허례허식의 변화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쇼윈도가족 가족치료사

	동물권 로봇의 등장. 로봇도 가족으로 인정.	
--	-----------------------------	--

○ 키워드 설명

-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낯설음 : 혈연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 또는 커뮤니티, 공동체 등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이 있음.
-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의 식탁: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가구들 간의 결합 및 연결이 중요함
- 장례 문화의 변화: 더 이상 멀리 있는 산소를 찾아가지 않을 것임. 선산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남게 될까?
-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고령화에 대한 준비, 노인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동물들을 통한 관계 및 데이터 수집
- 허례허식의 변화: 비용 절감 및 의미 있는 개인화를 위한 아이디어
- 로봇의 등장: 미래사회에서는 로봇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것임.
-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공동체도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
- 쇼윈도가족과 가족치료사: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족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족치료사/혹은 가족상담사라는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일상(에 가까움)	일상과 이상의 경계	이상과 상상의 경계
원가족 혈연가족의 실제적 단절 (화목한 4인가족) 판타지의 해체 전혼자녀	진심 기반 복지의 최후 보루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및 가족모델에 대한 인정 합리적 개인주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이웃 기반의 복지체계 사회적 학습하는 공동체 다양한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삶의 패턴에 대한 도

<p>혼혈가족/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한 편견 가족을 통한 정체성 확인 돌봄의 계층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낯 설음 사생활 존중 기반 가족 공동체 가족1인당 자신만의 공간 설계</p>	<p>좋은 소식은 결혼인가? 가족 모습의 열등과 깨어 짐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1인가구 연대 관계의 재구성 먼 희망 가까운 불안 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여러 특성에 기반한 1인 가구 연대 자존감을 키우는 가족과 국가의 제도/정책 사회적 돌봄, 공동육아 복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기적 재구성 복지수혜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감정을 터칭하기 4인가구가 아닌 개인의 초점을 둔 돌봄 시간적/상황적인 여유 여가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의 구축 일 중심 사회에 맞는 변화 정원과 대문의 공유 작은 집들의 연결을 통한 느슨한 연대 공동체 공통의 식탁 장례 문화의 변화 실버세대의 공동체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동물들과의 친밀한 공존 및 동물권 증대 허례허식의 변화 로봇도 가족</p>	<p>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부부관계의 갱신 안식년 가족제도 돌봄의 정규과목화 신뢰와 관계성 기반의 정책 미혼모 등이 이해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수(?)가 결정적이지 않은 사회 주체들의 역할 분담 Moveable life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 쇼윈도가족 가족치료사</p>
--	---	---

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오픈랩은 종래 가장 우리 삶과 밀접함에도 막상 터놓고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가족과 돌봄이라는 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에서 매우 유의미하였음.
- 동시에 정책이나 사회운동가들과 일반인 참여자 사이에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이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3회차 랩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혈연가족에 따른 구속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가 실재함. 돌봄 노동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 개인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 대한 욕구, 공동체에 대한 희구를 확인함.
- 첫째 혈연가족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지고 있음. 1차 오픈랩에서 지방에 있는 본가와 오래도록 떨어져 있는 참가자가 “명절에만 만나는 가족” 현상을 이야기하며 ‘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본가’라는 개념과는 다른 어감의 용어인 이 단어를 통해 혈연가족과의 거리감, 실제 생활에서는 원가족보다 더 가족 역할을 하는 관계에 대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음.
- 명절에 할아버지를 친척이라고 칭하는 조카를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과거에 관계에서는 할아버지를 매우 가까운 존재로 여겨 ‘친척’이라고 부르지 않았음. 또한 친부보다 새롭게 맞이한 이주여성 새엄마에게 더 많은 감정적 교류를 느끼는 사례도 이야기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가 실재함. 실제 오픈랩 참가자 중 많은 이가 1인

가구였으며, 1인가구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이나 복지 등 정책적 배려 없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되. 예를 들어 명절에 내려가 겪게 되는 다양한 고초(왜 결혼하지 않는가/취업에 대한 질문/친척끼리 서로 비교 등)를 토로하며 더 이상 명절에 고향을 가기보다 일하는 것을 택하는 경향에 대한 동감을 확인

- 1차 오픈랩 참가자 중 상당수가 새로운 주거형태나 가족형태, 즉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짐.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의 자녀를 의미하는 전혼 자녀나 전혼가족에 대한 논의, 이주가정문제, 패치워크 가족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돌봄 노동에 대한 변화와 자율성과 독립성, 개인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인정과 이해에 대한 욕구를 확인함.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맺음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 및 인정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연결 및 소속감을 희망함.
- 공동체에 대한 회구를 파악함. 그럼에도 전통적 가족에 대해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 많았음. 아울러 개인을 강조하는 참가자들도 공동체에 대한 소망은 공통적이었음. 미래의 가족에 대해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공통의 식탁과 정원이 있는 주거를 선호하는 것이 그 예시임.
- 핵심 키워드를 선정할 때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키워드를 접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함.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및 설명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p>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가까운 가족들</p> <p>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가족</p> <p>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p>	<p>- 원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 기존의 '본가'라는 개념과 매우 다른 의미로서, 예를 들어 명절때만 만나는 가족같은 맥락이 내포되어 있음. 원가족이라는 표현을 통해 혈연가족(4인 가족) 신화와 그 지위에 의문을 표시하며 다른 상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임.</p> <p>-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가족 : 가족의 실제 모습이 변화됨을 제시</p>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p>사회적 돌봄 :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p>	<p>- 공급자 / 사용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개인/국가/공동체가 돌봄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p> <p>- 모두가 모두를 돌봐야 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강조</p>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p>대상화하지 않는 돌봄</p> <p>초국가적 가족</p> <p>1인 가구 관계 플랫폼</p>	<p>- 대상화되지 않는 돌봄 : 돌봄이 복지시스템의 하부로 편재되어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책의 수혜자로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공유되고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이어야 함: 현재의 돌봄정책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 역할</p> <p>- 초국가적 가족 :이주가족을 둘러싼 논점 중 최근 강력히 주목하는 것이 '가족의 연계망'임.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이민자 사회 자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연계망은 전통적으로 송금이나 연쇄이주 등으로 한</p>

		<p>정되었으나 이제 이를 넘어서 정보와 정서, 경제자원, 돌봄 기능 등의 상시적 흐름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구성하고, 사회 구성의 일부로 자리잡게 됨.(다문화 가족의 추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김이선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따라서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인권과 경제권의 획득은 한국 내 이주가족의 생활의 질과도 연계 됨.</p> <p>특히 남편의 직계 방계 가족이 모두 한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이주 여성의 원가족은 가족으로 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p>
<p>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p>	<p>가족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p>	<p>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더이상 전통적인 4인 혈연가족이 떠오르지 않는 현실</p>
<p>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p>	<p>동물/ 로봇과의 공존 가족치료사 새로운 커뮤니티와 관계에 대한 열린 자세 관계와 존엄을 우선시하는 사회제도 노인 자족 공동체</p>	<p>-동물, 로봇과의 공존 : 실제로 동물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권리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p> <p>- 가족치료사 : 가족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제안해주는 시스템. 단순히 과거 가족의 모습으로 지내라는 것이아님. (동상이몽, 유자식 상팔자 등 참조)</p> <p>- 새로운 커뮤니티 ~ : 지금 정의할 수 없을만큼 관계의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음.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만으로도 가족이라고 주장할지 모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큰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와 존엄 기반의 정책 : 가족을 벗어나 전반적인 맥을 잡을 때 활용할 수도 있음 - 노인 가족 공동체 : 단순히 요양병원이 아닌, 고령화된 가족 또는 가족끼리 함께 지내며 죽음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
<p>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p>	<p>죽음 준비학교 돌봄의 정규과목화 생활동반자법 책임과 자유가 있는 공동생활 플랫폼(공동의 식탁) 합리적 개인주의(합리성 기반 개인주의) 귀족육아가 아닌 정성 중심의 공동육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 준비학교 : 고령화 및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면 조금 더 갈등 및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 돌봄의 정규과목화 : 돌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지만 사회적 이해도는 떨어짐. 다양한 돌봄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공식적으로 배울 필요 있음 - 생활동반자법 : 기존의 혈연가족 외에 가족을 꾸리는 것을 법으로 인정,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혁신성 - 공통의 식탁과 생활공간 : 새롭게 탄생할 가족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공통의 식탁과 생활공간임을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주거를 비롯한 관계에 대한 시사점 줄 것으로 보임. 이동성에도 영향 - 합리적 개인주의 : 개인주의인데 합리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체가 이미 사회혁신의 토론거리를 준다고 봄. - 공동육아 : 협력에 좋은 사례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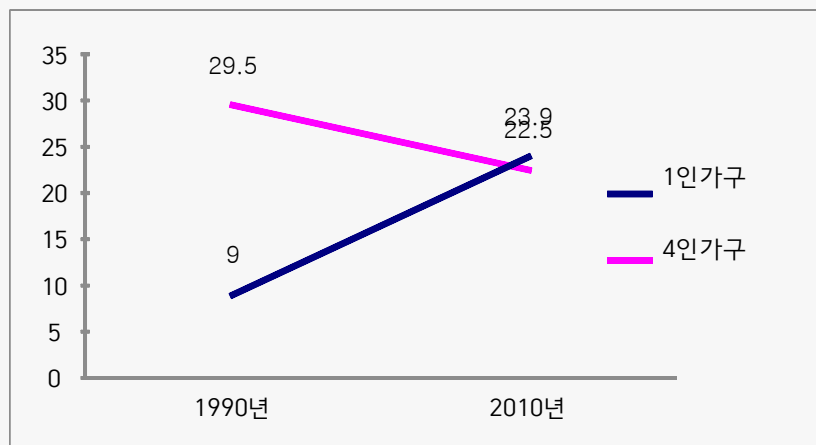
3) 핵심 키워드 설명

개인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가족

- '개인성'은 오픈랩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단어. '개인'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개인은 이제 가족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함. '개인'은 한편 다양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함.
- 아울러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 1인 가구 연대나 공동체에 대한 욕구⁸⁷⁾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성들이 존중되지만 연결에 대한 지향은 있음을 말해주는 키워드

■ 참고사례

- 통계청의 <2009 사회동향보고서>를 살펴보면, 4인가구는 해체되고, 1인가구,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분거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져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인 가구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향후 2025년에는 1인가구 31.3%, 4인가구 13.2%로 예측됨.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 1차 오픈랩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키워드는 “가족은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는 점.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가족을 의미하였지만 이미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나 노령가구가 트렌드처럼 느껴짐.
- 혈연가족 외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데 오픈랩 참가자들 상당수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음.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이 혈연가족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구, 동료, 혹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은 큰 변화일 것임.
-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키워드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키워드와 ‘더 이상 합의되지 않는다’는 조금은 공격적인 키워드 사이에서 타협점임.
-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적 혈연가족을 벗어나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⁸⁸⁾이 “그럼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냐”라는 의견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내면서도 상상력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함. 따라서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거와도 같은 의미가 아니며,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큼.

■ 참고사례

1. [한수진의 SBS 전망대](2015.4.28.)

미혼부의 눈물 "출생 신고도 못해주고 아이에게 미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15&sid2=291&oid=055&aid=0000314245>

- 아이를 낳은 여자와 가족을 이루지 않은 미혼부(未婚父)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

88) 함인회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족의 적응 및 저항」에서 “사회적 통합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될수록 사회적 결속과 통합의 주체는 가족 밖에 없다는 전통 회귀적 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온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러한 정서가 잘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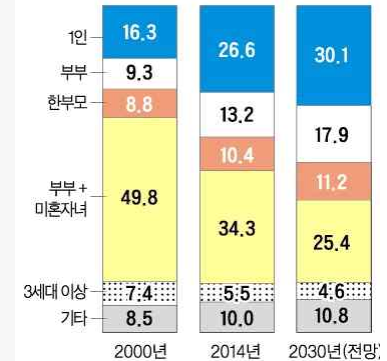
었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가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큼. 한부모 가족에 게 지원되는 지원정책 대상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해당되도록 제도 보완 중.

2. 한국일보(2015.4.26.) “15년 후 서울시민 '나 혼자 산다'가 대세로”

<http://media.daum.net/issue/959/newsview?issueld=959&newsid=20150426195213734>

- 4월 26일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 변화' 자료를 보면 1인 가구(27%), 부부(13.5%), 한부모 (10.5%), 조부모와 손자녀(0.7%) 등이 증가함.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주' 연령도 고령화로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 60세 이상이 44.4%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2000년만해도 가구주 주요 연령층은 30대 26.1%, 40대 27.2%로 30~40대가 전체의 53.3%를 차지함. 2015년에는 60세 이상 가구주가 27.1%였음.

세대구성별 가구형태 추이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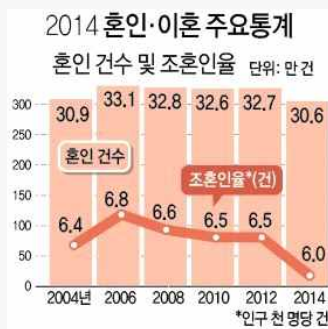


3. 연합뉴스(2015.4.23.) “결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작년 혼인을 역대 최저”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혼인 30년 차 이상 '황혼 이혼'은 10% 급증 평균 초혼연령 男 32.4세, 女 29.8세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423120216107>



혼인지속기간	2006	2008	2010	2012	2014
30년 이상	0.52	0.71	0.75	0.86	1.03
20년 이상	2.38	2.69	2.78	3.02	3.31
15~19년	1.80	1.65	1.69	1.66	1.70
10~14년	2.24	1.83	1.86	1.77	1.63
5~9년	2.73	2.17	2.20	2.15	2.20
2년 이하	3.30	3.31	3.15	2.82	2.72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자료=통계청 '2014년 혼인·이혼통계'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가족 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12)의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서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거쳐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하나의 가족(Family)이 아니라 가족들(Families)이 존재”한다고 밝힘.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등이나 가족원간의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 가족 등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적 관계를 지향하는 탈근대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함.

<출처: 정경희 외,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친밀감 및 관계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족

- 위의 두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면, 관계나 친밀감도 새로운 형태와 방식 요구됨⁸⁹⁾.

가족치료사

-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가족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족치료사/혹은 가족상담사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참고사례

시사저널(1316호, 2015.01.08.),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한 번이면 족하다”

<가족의 발견> 펴낸 최광현 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장

“...최 소장은 이를 ‘관계의 문제’로 봤다. ‘가족이라면 이해하겠지’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50>

초국가적 가족

- 이주가족을 둘러싼 논점 중 최근 강력히 주목하는 것이 ‘가족의 연계망’,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이민자 사회 자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연계망은 전통적으로 송금이나 연쇄이주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이제 이를 넘어서 정보와 정서, 경제자원.

89) 보이스뉴스(2014.12.24.) ‘Easy hello Easy goodbye, 소중한 공동체의 등장’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1위 가족 가치의 약화(28.8%), 2위 개인주의 심화(23.6%)가 나왔다. (중략) 기존의 공동체는 연결, 협동심과 같은 정신적으로 끈끈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인 반면, 새롭게 나타난 공동체는 비교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서 모임과 흠어짐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현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싱글족들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치유하고 혼자 살면서 갖는 불편함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쿨하게 모이고 흠어지기를 반복한다.

<http://voicenews.webtalks.co.kr/2014/12/24/easy-hello-easy-goodbye-%EC%8F%98%EC%BF%A8%ED%95%9C-%EA%B3%B5%EB%8F%99%EC%B2%B4%EC%9D%98-%EB%93%B1%EC%9E%A5/>

돌봄 기능 등의 상시적 흐름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구성하고, 사회 구성의 일부로 자리잡게 됨⁹⁰⁾

-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인권과 경제권의 획득은 한국 내 이주가족의 생활의 질과도 연계함. 특히 남편의 직계 방계 가족이 모두 한 가족으로 인식되는 것에 비해 이주여성의 원가족은 가족으로 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함

■ 참고사례

미디어오늘(2015.4.17.)

[인터뷰]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다문화 가정 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 필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61>

-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불편을 겪나

“...그 다음은 생김새인데, 외모가 다르고 약간 까무잡잡한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아이들은 괜히 더 본인이 의식을 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작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이주민 2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주민 2세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을 대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커서 사회를 알고 난 후에 ‘아 옛날에 그게 차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나도 내 아들에게 물어보면 차별 같은 거 없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느낄지 걱정이다”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

- 2차 오픈랩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키워드. 이 키워드는 청년 참가자가 제시한 것이었는데 소위 3포세대라고 하는 청년층의 노후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이제 모두가 모두를 돌볼 수 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체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음. 모두가 모두를 돌본다는 것은 한 참가자의 표현대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돌봄’을 의미함. 한편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제대로 제도화되어 있는 공적인 돌봄시스템에 대해 ‘공동체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함.

90) 김이선 외, 다문화 가족의 추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수혜자나 낙오자로 여기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돌봄

- 2차 오픈랩에서 '존엄'이라는 단어가 나왔음. 참가자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시설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더라도 관계 지향적이며 존엄감을 바탕으로 하는 돌봄을 희망.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즉 복지 수혜자를 일방적으로 수혜만 받는 사람이나 낙오자로 여기는 문화를 바꾸어 신뢰와 관계성이 오고가는 정책 해이 필요
- 따라서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의 실수가 이해되고 재기의 기회가 있는 사회"여야 하며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한 '여유'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공동육아에 대한 발전방향도 나왔고 특히 상당부분 시장화된 돌봄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임. 즉 참가자들이 느끼는 돌봄은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돌봄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 오픈랩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었던 것은 3차 레고시리어스플레이를 매개로 한 모임이라고 여김. 1·2차 오픈랩은 비교적 가족이나 돌봄에 대한 고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자였다는 점에서 보통의 인식수준보다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이 통용

5. 큐레이터 소감

- 다양한 가족의 변화 양상
 - 가치/생각의 변화 : 일 중심 사회, 개인주의의 심화,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
 - 삶의 모습 변화 : 인구구성 변화(개인화 및 노령화), 돌봄의 필요성 증가,
 - 세계화의 심화 및 이동성의 증가, 주거/교통(도시 집중, 아파트 중심 생활)
 - 생활환경의 변화 :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 변화, 가족 및 복지 정책 변화
- 돌봄 및 노동과 관련된 각종 주제
- 가족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

[오픈랩: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공의 재구성]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전통적 관점에서의 표준적 생활양식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증가함.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2.9명)과 저출산율(1.3명)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 1인가구/비혼/동거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개념의 변화, 도시 집중화 및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청년세대의 취업난 및 주거난으로 인한 졸업/취업/연애/결혼/출산이라는 정형화된 도식에서의 이탈 등 다양한 삶의 조건과 양식이 포착됨.
- 다양한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조직, 예를 들어 전통적 개념의 정부와 정당, NGO 등 공공의 주요 행위자는 개인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표준적 시민⁹¹⁾’으로 규정하여 정책을 설계함. 따라서 달라진 사회적 환경과 일상의 장면들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함.
- 또 IT기술의 혁신과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시민들의 등장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임. 따라서 시민과 정부, 정당 등의 공공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이전과 다른 정치 참여 방식과 문화, 정책설계의 관점을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초기 구상에서는 세대적 차이에 따른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했으나,

91) <88만원 세대> 공저자 박권일이 시사in에 ‘강남 좌파’를 대체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사는 교양 있는 중산층’의 의미로 제안한 ‘표준 시민’과는 다르다. ‘4인가구’ ‘학생’ ‘직장인’ 등 고정화된 시선에서 집단적 개인으로 접근한다는 뜻에서 ‘표준적 시민’이라는 말을 썼다.

오픈랩을 진행하며 세대적 특이성보다는 사회적 변화의 특이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변경함

- 1인 가구, IT, 공적 자아 등 과거와는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워드들 먼저 선정하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토론을 진행함.
- 삶의 방식과 삶의 터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1인 가구'임.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경제적 조건, 주거환경, 소비시장, 정책의 방향까지도 연계하여 달라진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 보는데 초점
- 공적 공간에서는 정당/마을/ 대학 등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공공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들여다본 후, 공공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안들에 초점
- 정보 민주화와 오픈소스, 그리고 정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참여 방식을 바꾸는 시빅해커들과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하여 IT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봄
- 앞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지점이 바로 일반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점임. 사회 서비스와 공공정책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협력적 개인이자 정책 생산자로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반은 이미 이질적/다층적 위치로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 표준적인 정책,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 모든 복잡성을 해결하거나 틈을 메우기 어려움.

- 고립과 단절이 일상 가운데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응도 다양해함.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작은 관계망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음.
- SNS 등 온라인의 연결은 늘었지만, 가족 간 친밀도나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는 약화되어져 감. 무연사회⁹²⁾와 연결사회의 공존, 연결의 과잉이자 관계의 결핍 시대 양상에 주목함.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1) 포커스 그룹 토론 주제 및 방식

■ 모임운영방식

○ 포커스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

구분	대상	연령대(명)
1차	마을, IT, 중간지원조직, 연구원 등 청년활동가그룹	2030세대 (5명)
2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등 정치활동가그룹	2030세대 (5명)
3차	마을, 대학, 평화, 청소년, 중간지원조직 등 영역별 공론의 장 활동가 그룹	2030세대 (5명)
4차	1인가구 관련 서울, 여성, 복지, 마을 단위의 전문가 그룹	다양한 연령대 (5명)

○ 개별 인터뷰

- 개별 인터뷰는 총 4회를 진행했으며 주로 IT와 정치를 주제로 연구자,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터뷰함.

92) 2010년 일본 NHK가 고독사 문제를 다루면서 ‘무연사회(無緣社會) 또는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사회 현상을 분석했다. 무연사회는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 참여자 선정범위

- 각 섹터별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여 공통과 차이를 드러내려고 함.
- 각 분야의 현장성과 연구성의 두가지 관점으로 참여자를 분류하여, 현장에 느끼는 구체적 문제의식과 일상의 언어를 담아내면서도 연구자의 객관적 관점을 담아내려고 함.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 1회차 실마리 키워드 브레인스토밍

- 참석자 : 강윤모(스테이영 대표, 우리동네정치인 앱 개발), 신지만(네이버 사회공헌팀), 안자현(SK행복나눔재단), 우대식(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연구원), 이태영(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회 사무국장), 이현 (성북청소년공유센터장), 박인(소셜다이닝 집밥 대표) /총7명

■ 2회차 정당의 현재와 미래

- 참석자 : 김경미(정치발전소 기획실장),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성치훈(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태영(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회 사무국장), 최유진(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 최재민(새누리당 전국청년위원)/총6명

○ 핵심 내용

- 정당과 당원과의 새로운 관계, 즉 협력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보수-진보의 이념적 논쟁 보다는 정당 시스템과 정당 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요 내용을 이룸.

- 무시 받는 당원에서 존중 받고 싶은 당원으로, 놀고 있는 당원에서 함께 하고 싶은 당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 외부수혈이 아닌 정당 내부의 공정한 경쟁과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기대
- 미래 아젠다를 연구, 예측하는 실험실이며 정치적 도전과 실패를 자산화하고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린스타트업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정당이 미시적 공론의 장을 촉진하는 역할로 전환하여, 일상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코디네이터형 정당으로 가야 함.

○ 키워드 정리

일상의 이슈들	개선-전환이 필요한 이슈들
<p>* 존중받지 못한 당원 시스템 : 정당이 시민을 동원하는 구조, 선거때만 머리수 채우기, 놀고 있는 당원 (할수 있는 게 없는 당원), 지역에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구조, 정당 소개 리플렛이나 이메일 한통 받아본 적 없으며 당비를 어디에 쓰는 지도 모름</p> <p>* 사다리 걸쳐차인 정당시스템 : 외부 수혈로 인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역에서 피켓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당 구조 필요 정치신인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 (정치관계법의 개정)</p> <p>* 모바일투표는 서구정당시스템의 표피적 모방 : 모바일투표 보다 정당 시스템 먼저 제대로 갖춰야 한다. 디지털정당 아직 시기상조</p> <p>*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 :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당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일상적 정치공간의 부재</p> <p>* 아젠다세팅의 무능력, 변화를 두려워하는</p>	<p>* 서로가 연결된 정당시스템</p> <p>* 당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치활동코디네이터 /</p> <p>* 당원 중심의 정당구조 정당과 당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프로세스 필요, 정당과 당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p> <p>* 일상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공간 써클, 작은공론의 장</p> <p>* 당내 인재육성프로그램 : 사람을 키우는 정당</p> <p>*정치적 실패의 자산화</p> <p>*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정당문화 / 사회혁신 정당 / 미래아젠다의 예측하는 정당</p>

<p>정당문화 , 미래사회 아젠다에 대한 연구부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당</p> <p>* 소수의 집단이 비조직화된 다수 대표</p>	
---	--

■ 3회차 시민공론의 장

- 참석자 : 고두현(자유인문캠프 기획단 대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박상현(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청년팀장), 성이름(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 이태영(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촌민회)/ 총5명
- 결과 요약
 - 다양한 층위의 주민 정체성, 거주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 가진 주민의 등장을 확인함.
 - 주민住民이 전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뜻했지만 점차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노는 사람'까지 아우르자는 의견이 제기됨.
 - 단일 지역 주민에서 다층적(Multi Layer) 주민으로의 변화: 나-공동체-지역-도시라는 상이한 레이어
 - 정주성과 유동성을 상호 연결하는 마을네트워크, 마을연결사회 : 도시이웃, 도시공동체, 도시중간지대가 존재함.
 - 개인적이지만 공적인 일들이 공존하는 '관계의 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적 행복감'
 - 미시적 공론의 장으로 서로의 존재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이자 관계망이 발생하는 공간인 공적 공간에 주목함.
 - 거주민 중심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계프로세스 전환이 요구됨.
 - 국가와 개인의 새로운 관계 전환: 개별존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자아로써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인 경험의 관계(* 관계국가론과 연계)

○ 키워드 정리

일상의 장면	일상과 이상의 경계
<p>* 빌려쓰는 자들의 정체성, 정주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지금 세대, 주민의 권리의 상실, 동질적 집단으로 호명할 수 없는 주민의 등장,</p> <p>*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상실,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공간</p> <p>* 개인의 욕구가 제거된 시민, ‘공공성’은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지우는 ‘관공성’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사항들이 삭제된 채 던져지는 국가아젠다, 획일성을 평등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시민교육</p> <p>* 사유화된 대학 공간의 장면들, 대자보다 마음대로 부치지 못하는 대학, 교지와 신문가판대도 없애는 대학, 학교신문사 대학 행정부서로 편입, 독립적 언론기능이 아닌 학교 홍보지, 대학생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의 제거, 경영 컨설팅으로 구조조정 하는 대학, 대학은 돈을 내고 지식을 구매하는 사적공간으로 인식, 공적공간이 제거된 대학, 소비자성으로 치환된 대학생의 권리</p> <p>공적인 경험/교육 사라져 버린 세대</p> <p>*도시난민, 탈지역주의</p>	<p>* 다양한 층위의 주민 정체성, 거주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주민의 등장</p> <p>* 단일지역주민에서 다층적 주민 (Multi Layer) : 나-공동체--지역-도시라는 상이한 레이블</p> <p>* 지역이슈에서 일상이슈로의 전환</p> <p>* 도시이웃, 도시공동체, 마을 연결 사회(마을네트워크)</p> <p>* 다층적 층위 (Multi Layer) 개인의 위치와 목소리 낼 권리, 거주민 중심을 넘어서서 관계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책프로세스 (관계국가에서 전인적_Whole person과 연계)</p> <p>* 대학생이 아니어도 대학교육에 목소리를 낼 권리 , 자기계발이 아닌 자기교육 (공동체속에서의 관계와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p> <p>국가와 개인의 새로운 관계 전환 : 개별 존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자아로써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인 경험의 관계</p> <p>* 공적 행복감,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 공동체적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시민교육, 공동체적 자아, 일상적 공적공간 : 일상과 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는 공적 공간, 관계망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공적 공간</p> <p>*미시적 공론의 장, 작은 공증, 서로의 존재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p>

■ 4회차 시민공론의 장

- 참석자 : 김병권(데어 상임이사),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박선민(스웨덴을 가다 저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유경희(어슬렁정거장이사장), 홍현진(《마을의 귀환》저자, 오마이뉴스 기자)/ 외부참석자 4명
- 결과 요약
 - 1인가구의 등장은 과거에는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1인가구 안에서도 서로 굉장한 이질적 층위 확인 가능(고립과 독립/외로움과 자유로움/빈곤과 풍요)
 -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느슨한 사회적 가족 '소셜팸/소셜패밀리(Social Family)⁹³⁾'이 요구됨
 - 복지 정책,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전통적 가족으로 삼을 경우 배제되는 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함. 하지만 개별적 정책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사회적 가족, 친교의 관계망으로 하는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 관계·친교·돌봄이 안전망이 될 수 있음.
- 키워드 정리

일상의 장면	일상과 이상의 경계
* 1인가구는 이질적이다 럭셔리한 집단,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업, 고령. 독거노인으로 그룹화 *고립, 빈곤, 단절/럭셔리, 섹스앤더시티 자율, 독립적, 자유로움, 느슨한 관계 가족해체, 이혼, 노후에 대한 불안, 고독과 불	* 1인가구는 다른 관계망 속에 놓여짐 * 도시이웃 : 옆집보다 가까움 이웃, 취향 공동체, 사적이고 공적인 커뮤니티 *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느슨한 사회적 가족

93) 중앙일보(2014.9.24.)에서 '사회적 가족'의 현상을 짚으며 "'부모+자녀'같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줄고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사회적 가족'이 늘고 있다. 사회적 가족은 혈연관계 없이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넘어선 가족'이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2014.09.24.) "밥터디·함께주택 ... 핏줄 아닌 사회적 가족이 뜬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901906&cloc=olink|article|default

<p>안정</p> <p>* 혼자 사는 사람은 동네 친구가 없다.</p> <p>혼자 살지만 가족을 제일 신뢰집단으로 인식하며 이웃은 신뢰도 낮음</p> <p>* 가족중심의 마을만들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인가구는 마을공동체에서 소외</p> <p>* 1인가구는 결혼전의 과도기로 인식하는 편견</p> <p>* 고독사와 무연사회 vs 연결의 과잉과 관계의 결핍</p> <p>* 고립과 단절에 놓인 개인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 VS 개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사회 (주거, 의료, 교육, 노후)</p>	<p>* 공적행복감/자존감을 키우는 관계/돌봄의 관계</p> <p>* 관계·친교·돌봄이 안정망</p> <p>* 가족기반 복지정책에서 전통적 가족 단위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환 (사회적 가족, 관계망의 개인의 복지시스템)</p> <p>* 비자발적 1인가구를 위한 복지시스템 : 1인가구에 대한 선별적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 복지 확대 방향으로 접근</p>
--	---

■ 인터뷰 개요

○ 인터뷰 대상

- 1차 이경민(영국 더럼 대학원 박사) : 영국노동당 시민정치플랫폼 연구
- 2차 오영욱 (노븐 게임회사 CTO) : 응답하라 국회의원 청원 프로젝트
- 3차 박은정 (서울대 데이터마이닝 박사과정) :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프로젝트

○ 결과 요약

- 정치 정보의 접근성 확대와 시빅 해커, 정치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 요구
- 시민과 국회, 정부와의 새로운 정치생태계 구축과 정치 데이터(선거, 입법, 정책 등) 전달체계의 변화
- 정치 데이터의 민주화 : 공공의 정보 확산과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대
- 일반 시민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IT기술로 새롭게 해결하는 사람들인 ‘시빅 해커’를 통한 정치 정보의 접근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 생태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당과 당원과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온라인 활용한 시민 참여 정당 플랫폼이나 리워드 피드백 시스템은 협력 도구(캠페인, 정책생산, 공적토론 등의 중요한 도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어려움.

○ 키워드 정리

일상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입법 데이터의 정보격차. 불균형 * 입법,선거 정보가 시민들에게 다가기 너무 어려움 * 폐쇄적 당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정보확산과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대 * 정치데이터 공유는 시민의 권리 정치는 의원과 시민.전문가 등 다층적 협력시스템 / 생태계 구축 / 오픈소스, 정보민주화 / * 시민과 국회,정부와의 관계 전환 : 일방적 수신자와 발신자 관계에서 쌍방향 관계로 변화. * 리워드피드백 시스템 : 정치의 전달체계의 변화 * IT기반의 시민참여정당 플랫폼

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정부, 정당, 시민사회, 심지어 시장도 ‘관계의 복원과 공공성의 회복’을 이야기함. 하지만 정부에서 호명하는 시민은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삭제한 ‘표준적 주민’이기에, 공공성이 아닌 ‘관공성’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여짐. 개인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공통영역으로 확장하는 공공성의 재구성. 그런 관점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주민의 권리를 부여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주민의 유동성 증가를 인지한 주목할 만한 변화
- 서울시의 세부적인 정책 역시 기존에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공적영역의 서비스로 제공. (EX :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스카우트) 반대로 개인들이 정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안정보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는 공적인 일을 사적영역에서 해결한 사례. 공공의 영역을 과거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
- 결과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감정이 삭제된 표준적 시민이 아닌 다양한 층위와 정체성을 담지하는 공적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 그것은 사적이기도 하며 공적이기도 하며, 정주성을 띄는 동시에 유동적이기도 하여서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관계망이 요구된다는 의미
-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가 필요. 관계의 거점과 자원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함. 관계 자원을 토대로 시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수많은 시스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즉 국가주도의 사회에서 시민주도의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의 재구성이 필요
-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진행을 하면서 <시민 이니셔티브와 공적자아의 재구성>으

로 변경. 따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요약하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공공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음.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 뉴거버넌스 : 다층적 거버넌스와 자치의 융합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 주민권 * 차세대 정치인 육성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 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 정치협동조합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 플랫폼형 정당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 도시공유공간

3) 키워드 설명

주민권

- 전통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주민(住民)’의 권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함.
- 2030년이 되면 서울에 1인가구(30.1%)의 비중이 부부와 미혼자녀를 가진 4인가구(25.4%)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⁹⁴. 교통의 편리성, 도시의 집중화,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적 정체성은 약해져 가고 있으며, 유동성, 이동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지금 마을은 4인가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점이 있어서, 1인가구나 유동적인 사람들이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됨. 거주자 중심의 행정, 마을, 커뮤니티 등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담아내지 못함.
- 반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⁹⁵를 보면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을 주민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 이동성이 많은 사회를 감안하여 단순히 주거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일상에서의 관계를 기반으로 주민의 개념을 확장한 시도임.
- 거주지를 넘어서서 나-공동체-지역-도시라는 상이한 층위에 놓인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요구됨

도시공유공간

- 돈을 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 대학 도

94)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 생활 변화. 2015. <http://stat.seoul.go.kr/pdf/e-webzine89.pdf>

95)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8.)

서관도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놀이터도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자본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함께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지켜나간 경험이 없기 때문.

- 돈을 내지 않고 않고도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지역 이슈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치의 공간이 필요함.
- 자치의 혁신적 사례가 공유되고, 교육하고, 또한 새로운 자치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촉진적 공간. 지역 거주자 중심을 벗어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관계망이 만들어지는 도시의 공유공간의 필요성

주민자치플랫폼과 자치코디네이터 전문가

- 현재의 통반장제도는 과거 행정시스템으로 출발하여 지금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 지방자치와 마을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통·반장의 역할이 약해짐.⁹⁶⁾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제도 역시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기능보다는 취미나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이며, 오히려 위원회 제도를 벗어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가 자치의 기능을 담당함.
-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단순 관의 지침을 전달하는 통·반장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자치를 조직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요구됨. 민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이슈를 퍼실리테이터할 수 있는 자치코디네이터전문가, 전통적 개념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자치의 플랫폼이 필요함.

96) 통반장 현황은 1975년 6월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는 1만2445개 통, 9만6807개 반에 각각 1만2065명, 7만9653명의 통·반장이 편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제도는 1998년 읍면동사무소 폐지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 서울시내에만 423개가 조직돼, 총 911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 중이다.

작은 공론의 장과 느슨한 연결

- 새로운 형태의 공적공간이 등장하고 있음. 집단적/대규모의 공공의 장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커뮤니티, 공적 토론이 발생하는 공간인 동시에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는 친밀한 공간이며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복감이 중시되어야 할 필요함.
- 작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치를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한나 아렌트는 공적 행복감을 공적인 정치공간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정의함.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아닌 공적 공간이 사적행복의 수렵의 장이자 친밀한 공간이 되어야 함.

뉴거버넌스

- 표준적 주민이 아닌 다양한 층위와 정체성을 담지한 주민의 등장으로 전통적 개념의 정부운영원리에 변화가 요구.
- 2012년 송파 세 모녀 사건⁹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의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매뉴얼에서 벗어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 표준적 시민을 가정하고 설계된 정책 매뉴얼은 지금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그렇다고 틈이 발생할 때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개별 정책이나 맞춤형 정책으로 그 틈을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수동적 존재의 시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하고,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와 참여를 중시할 필요함.

9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022.html

- 결과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서 시민과 시민간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이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 기능과 역할, 정책 설계 과정의 변화가 필요
- 먼저 거주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관계망이 수렴되고 확산이 반복되는 관계의 거점과 자원이 필요. 정부는 굵직한 공유자산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하며, 그 관계 자원을 토대로 시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수많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함. 국가주도의 사회에서 시민 주도의 사회로 가기 위한 행정혁신이 요구

차세대 정치인 육성

-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청년 당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당 활동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요 결정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
- 영국의 캐머런 총리, 미국의 클린턴 등 주요 정치 리더들은 정당의 청년정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정치 경험과 공부를 통해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정당 내에서 다년간 활동하면서 당의 리더로 성장. 하지만 우리는 정당 내에 청년들을 키우려는 생각보다는 시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정치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져 있음.
- 청년들이 건강한 정치를 꿈꾸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정치 사다리가 필요. 정당과 외곽 조직 등에서 다음 세대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이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그 안에서 선한 경쟁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함.

정치협동조합

- 정당과 시민사회의 중간지대의 성격이 담긴 정치 참여공간. 정당보다는 가볍고, 시민사회 보다는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정치 커뮤니티가 증가할 필요.
- 우리 사회는 정당 이외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커뮤니티가 없으며, 또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들이 많음. 스스로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거나 당원임을 밝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문화가 존재. 이로 인해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참여할 정치적 공간이 없는 상황.
- 정당 이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 조성이 중요. 정치협동조합이 큰 제한 없이 만들어지고, 일상적으로 정책과 이슈를 토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의 회복되어야 할 필요.

플랫폼형 정당

- 정당과 당원, 시민들 간의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동원되는 당원이 아닌 정당과 의원, 당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순위.
- 현재의 정당 상황에서는 서구 정당의 표피적 모방보다는 기본적인 정당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보완적인 중간 정도의 성격이 미래 정당의 한 형태일 수 있음. 해적당의 리퀴드피드백 시스템, 영국 노동당의 온라인 시민정치플랫폼 역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함.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1) 논의 내용의 제약과 한계

- 1인 가구, IT, 청년세대 등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워드들 먼저 선정한 후, 그 키워드를 중심 삼아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설계. 따라서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들까지 이어 지지는 못함. 결과적으로는 논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더욱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주제가 중간에 바뀌면서 기간에 비해서 공적자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2) 논의 주체의 제약과 한계

-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정리해 보면 시민사회영역의 관계망에 한정된 측면이 보임. 향후 관계망을 확장한다면 정부조직 및 행정영역 등을 추가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음. 또한 비즈니스 영역이 이런 변화의 추세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
- 논의 주체의 경우도 초기 주제 방향이 세대의 특이성이다 보니, 2030세대 편중된 측면이 다소 있음. IT영역은 주로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IT의 전문성이 편중되어 정치와 민주주의와의 실제적 관계를 담아내는 부분은 다소 부족함.

5. 다음 단계 심화 운영을 위한 과제

-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다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할만한 준비가 필요함.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만들어내는 방법 고려.

[오픈랩: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1994년 미국 로체스터시는 쇠락한 도시의 활력과 재생을 위한 대안으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 흑인 풀뿌리 운동가 출신인 윌리엄 존슨 시장은 1970년대부터 도시의 핵심산업인 해운업과 철강업이 쇠퇴하면서 도시생활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함.
- 인구 20만명인 도시를 10개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에 시민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섹터별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 이렇게 구성된 미국 로체스터시의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은 “우리동네를 키우는 이웃들”로 자생적 주민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비영리 사회적기업인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고용과 수익을 창출함.
- 2003년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민관 협치) 사례로 선정된 로체스터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정부’의 역량과 힘을 보여줌.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로체스터시의 사례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음.
-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정치 타파에 주력했다면 다음 세대의 과제는 거버넌스가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심의제일 것. 그동안 공공은 국가체계가 담당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사회연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시민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시대정신의 하나일 것임. 시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함께하는 동안 정부의 성격도 재래식conventional 정부에서

비재래식unconventional 정부로 점차 전환되어져야할 것임.

- 30년 전 사회민주주의 시대였지만,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함. 금융위기로 다시 새로운 복지와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굶직한 사회복지에는 정부가 책임지면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망이 촘촘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시민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해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 변화를 모색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사회 측면)와 1951년 경제성장과 분배의 평등화, 정치적 민주주의를 모색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정치 측면)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고려한 케인지언 정책(경제 측면)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균형점이 만들어진 시기임.
- 1980년대 이후 사회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와 경제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과부하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등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할 시기임.
-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Self-Activating. 자기 활성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지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정부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21세기형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함.
- 교육 수준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한국사회는 시민이니셔티브가 가능한 근간을 갖추고 있음. 그렇다면 사회운동에서, 정치와 행정에서, 복지와 사회적 연대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시민 이니셔티브가 실현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번 오픈랩에서 다루게 될 주제임.

- 현대사회, 서구문명 특유의 단절된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시민과 시민 사이의 연대를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시민적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망을 복원하는 공동체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김. 북유럽식 사민주의의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동체 전략과 치유의 관점에서 복지와 사회 정책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관련 분야 전문가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시민이니셔티브와 치유, 복지사회를 논함.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 사회 혁신의 최우선적 방향은 더 많은 공적 영역이 시민의 힘으로 재구성되는 것임. 국가가 나서서 사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정권만 잡으면 실행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지만 그만큼 위험할 것임.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경우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체 시스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기부문화나 자원봉사율이 낮고, 시민운동의 역동성도 적음.
- 시민사회의 활력과 상상력을 키워가는 시민이니셔티브로 나아가야 함.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49:51의 비중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을 뒷받침할 민관거버넌스가 중요함.
- 지금은 세금 논쟁, 연금 논란 등으로 복지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협소하게 다뤄지는 인상을 받음. 과거 베버리지 보고서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표지석이 됐듯, 인간다운 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해 성찰하는 사회 비전으로서의 복지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모임 진행방식

-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토론 모임을 진행함.

■ 1차 모임: 힘센 시민의 시대

○ 형식: 발제-토론 등 세미나

○ 참여: 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유승찬(스토리닷 대표), 김영배(성북구청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4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큰 정부(의 한계), (나와 동떨어진) 정부 세금 저항 재래식 정부/전통적 정부/관행적인 정부 유럽/미국 모델의 표피적 모방 정당 당원 데이터도 없다 I feel your pain? 비동시성의 동시성 전지구적 위기 저성장기 일베식 잉여 에너지의 절망의 정치 강화 위험 미생사회, 삶의 불안 시민교육의 부재 미래연구 부재 조감도정치 신자유주의-총체적 위기, 저신뢰사회 도시재개발 세월호 사건 참여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점 효율-신공공관리론 선출직 과도규제	

	<p>임용직 권한남용</p> <p>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진보</p> <p>담론 소비</p> <p>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차이</p> <p>부자도 현금이 없는 사회(부동자산)</p>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p>마을민주주의</p>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p>직접민주주의</p>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p>시민이니셔티브</p> <p>열린 정부</p> <p>관계국가론</p> <p>시민소비자</p> <p>마을총회</p> <p>생활정치시스템-석관동 두산아파트</p> <p>행정혁신</p> <p>마을정당</p> <p>친밀-친교</p> <p>작은 민주주의</p> <p>마을민주주의</p> <p>개인 주체의 호명 작업</p>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p>다주체 운동</p> <p>청년 임파워먼트</p> <p>생활공공성</p> <p>뉴스룸 “콘텐츠보다 전달이 중요”</p> <p>“페이스북은 새로운 마을”</p> <p>커뮤니티 코디네이터</p> <p>모바일 플랫폼</p> <p>빅데이터</p> <p>세금신뢰</p> <p>비효율-관계국가론</p>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p>일상적 혁신-부단한 실패</p> <p>시민교육</p> <p>주민집회(스위스 란트슈게마인데)</p> <p>NYC 311종합서비스(뉴욕) “숲이 우거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시민 인터뷰</p> <p>학교협동조합</p> <p>플랫폼으로서의 정치</p>	

■ 2차 모임: 개인의 치유와 사회의 치유

○ 형식: 문답 형태로 진행

○ 참여: 김준근(광주트라우마센터), 김홍일(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권용진(서울북부병원장), 안기덕(사회복지학 박사), 김미래(대추씨), 기현주(서울복지재단 공동체협력팀장), 권민희(대추씨 대표), 박인숙(사회복지사)/8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병든 사회 웰빙 니가 문제야! 비정규직, 삶의 불안 공포 긴장의 칼날 - 긴장사회 “계획이 아닌, 실행에서만 참여” 과잉규범사회 세대 차이 공동체 경험이 없는 청년 현 위탁운영과 자원구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한계 성취지향적 사회 시스템과 현장의 불일치- 신공공관리론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WHO의 건강 정의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괜찮아” 자존-존중 자조모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스몰사이즈 작은공동체 작은단위 관계의 복원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세대마다 위로해주는 방식이 다르다” 숲치유프로그램 - 제도화된 힐링 코디네이터 자기 치유 회복력	

■ 3차 모임: 두 번째 베버리지-복지, 그 다음의 복지

- 형식: 문답 형태로 진행
- 참여: 임성규(서울복지재단 대표), 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안병진(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김찬호(하자센터 부소장), 이민형(아주대 건강한 삶을 위한 명상연구센터 연구원), 우민정(명랑마주꾼), 기현정(서울복지재단), 노유진(학생·사회복지학 전공)/8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사회적 양극화 신청제, 잔여적 복지 서비스-클라이언트 현 사회복지체제의 문제점 취약계층 중심 관료적이다 위탁방식구조 도시난민 다양화, 개인화, 고령화, 양극화 중2병 취업난망 누구와 늘어갈 것인가 퇴직 위험 하우스푸어 자녀양육부담 퇴직, 실직, 쉼거루부모 분노, 존재적 불안 정체성 부재, 진퇴양난 표준화된 서비스 “연결방식(관계맺기)을 알지 못한다” 생존불안 폭력적 방식 - 배분과 효율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은 중첩된 영역이다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다양성 공존의 감수성 공유	

	<p>행복 친교, 관계, 정신적인 것, 영성 관계국가 사람 중심의 복지 복지생태계 자존감, 유대감, 성취감</p>	
<p>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p>	<p>사회적 웅알이 미시적 공론장 인간적 관계국가론/ 인간적 네트워크 국가론 전인격, Whole person 회복력 상호작용, 감정자본 해방적 파국 재해 유토피아 동네 단위 거버넌스 - 지역 거버넌스 비효율</p>	
<p>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p>	<p>개방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장소 살(아갈) 이유, 사회적 할 일,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쓰임받는 존재 필요한 존재 삶에 대한 존중/ 경청 자기가 담겨 있는 사회 그라운드링 자립 토지권 신뢰관계, 친밀권 마음챙김, 존엄 사회적 가치 관계적 복지 - 의료생협 영국혈시티 - 회복적 정의, 상호시스템</p>	

3) 모든 키워드 정리

- 3회차 모임에서 전문가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정리한 키워드를 온톨로지 방식에 따라 정리함.

개념	속성	인스턴스(실례)
큰 정부	효율성 추구	관료적이다
		관행적이다
		재래식 정부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한계
		잔여적 복지
	세금 저항	세금
		시스템과 현장의 불일치-신공공관리론
		선출직 과도규제
		임명직 권한 남용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차이
사회불안	삶의 불안	성취지향적 사회
		비동시성의 동시성
		긴장사회-긴장의 칼날
		과잉규범사회
		공포
		고령화
		누구와 늙어갈 것인가
		양극화
		미래연구 부재
		미생사회
		유럽/미국 모델의 표피적 모방
		자녀양육부담
		저성장기
		저신뢰사회
		병든사회
		비정규직
		사회적 양극화
		세월호사건
		총체적 위기
		갱거루부모
	취약계층 중심	
	폭력적 방식	위탁방식구조
		배분과 효율
		일베식 잉여
		생존불안
	긴장사회	암
	진보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 진보
도시	삶의 질	하우스푸어
		도시난민
정치 혁신	당원 데이터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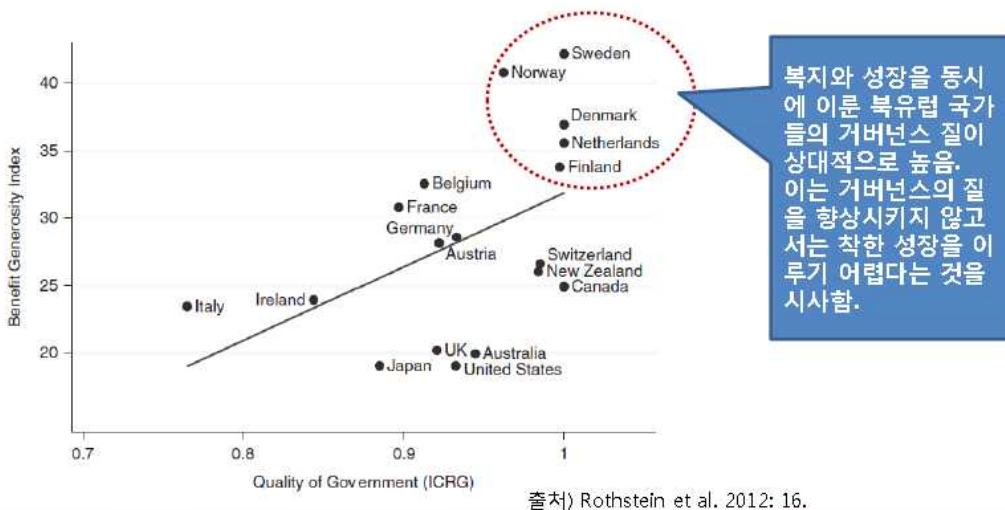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열린 정부	NYC311 종합서비스
whole person	존엄	자존감
		그라운드
		명상
		삶에 대한 존중/경청
		쓰임받는 존재
		자기가 담겨있는 사회
개인화	개인주체의 호명작업	다양성
	공감능력상실	다양화 다주체 운동
공감	공동체 경험이 없는 청년	공존의 감수성
	공감 능력 상실	"괜찮아" - 니가 문제야! "세대마다 위로해주는 방식이 다르다"
관계/관계적	비효율	관계국가론
		관계의 복원
		유대감
	학교협동조합	
사람중심의 복지	의료생협	
페이스북	온라인 마을	페이스북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있는 기분"
		참여와 프라이버시
마을	마을정당	마포파티
	마을총회	스위스 란트슈게마인데
	생활정치시스템	석관동 두산아파트
열린 정부	빅데이터	NYC 311종합서비스
작은	민주주의	작은 단위 내 민주적 질서
	거버넌스	동네 단위/ 지역 단위 거버넌스
	공동체	
친밀권	친교	
시민이니셔티브	민주주의	주민 참여"계획이 아닌, 실행에서만"
		주민집회
		지역사회복지와 마을은 중첩된 영역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장소
웰빙	사회적	사회적 참여
		사회적 할 일
		사회적 가치
		살(아갈) 이유
치유	영적	마음챙김mindfulness
	회복력	영국 헐시티
뉴스룸		

3. 오픈랩 진행 결과 키워드

시민 이니셔티브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혹은 국가보다 더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핵심 행위자가 되는 사회를 뜻함. 그 동안의 공공은 국가가 핵심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공적 선의를 가진 시민이 공공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가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시장화를 통해 공공을 해체해 온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공공을 확장하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지난 50년간 경향적으로 낮아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표현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이란 사실 아름답지도, 활기차지도 못함. 하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은 다를 수 있으며 더 역동적이고 컬러풀할 것임.
- 시민 이니셔티브는 역동적 시민사회와 비재래식 정부, 이 두 가지가 핵심 구성요소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Waiting for the Government”하지 않고 “Solving Problems on Their Own”하려는 시민들의 공공적 에너지와 네트워크, 전체 참여과정을 역동적 시민사회라고 할 것임. 비재래식 정부Unconventional Government는 시민사회가 사회의 Planning 과정을 주도하도록 배려하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 과정을 협조적으로 분점하는 정부, 시민사회가 사회를 이니셔티브하도록 촉진하는 정부 구조를 뜻함.
- 사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인 정부는 입법과 징세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Hard Power로 태생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시민들의 생생함과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강제력에 기반해서 시장을 규율하고, 사회운영의 큰 틀을 결정하고, 대규모 자원을 동원하여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적합함.

- 시민사회는 시민의 공동체적 도덕심, 자발성, 합의에 기초해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됨. 관료적 조직, 입법과 징세의 강제적 권한이 없는 Soft Power인 반면,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임.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규율하기보다는 합의와 자발성을 끌어내고, 시민의 참여로 사회적 연대의 실내용을 채우는데 적합함.
- 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임. 예를 들면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고, 지역에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보건소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안성의료생협과 같은 시민에 기반한 의료조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음.
- 정부재정의 위기, 세계화와 지방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전통적 책임성의 확산 등으로 거버넌스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개혁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 결국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시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임⁹⁸⁾.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이룬 북유럽 국가들의 거버넌스 질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착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

98)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석관동 두산아파트

- 고용문제와 에너지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대 사회문제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으로 얼룩진 고용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한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함.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며 우리도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됨.
- 이미 노후된 핵발전소들이 여러 차례 고장을 일으키고 있음. 하지만 핵발전소의 운영을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지역적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함.
- 국가가 이렇게 무능한 반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자치의 문틈으로 시민들은 자기들만의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석관두산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에너지 소비를 크게 절감하여 경비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놀라운 문제해결력을 선보였음.
- 어디 석관두산아파트뿐일까. 시민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소통의 창구가 열리면 스스로 학습하며 놀라운 혁신을 이뤄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함. 그게 사회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임.

■ 석관 두산아파트 사례

: 경향신문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 아껴서 경비원 임금 올리고 고용 보장”(2014.1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80600045

서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민들은 2010년부터 경비노동자 임금 삭감 대신 전기료 아끼기 등을 통해 난방비·전기요금 절약함. 이렇게 절약한 관리비용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를 19%인상함. 또 2011년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경비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주민 동의를 먼저 거치도록 조치함.

마을계획

- 마을계획은 “공공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 주도의 행정 공간인 동 주민센터가 국가는 가장 약하고 시민은 가장 강한 민간 주도의 행정공간으로 탈바꿈됨.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계획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 시민들을 초대해, 그 안에서 시민들이 주도하여 동네/마을의 공식적인 마을계획을 직접 세우고 직접 실행하게 됨.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한 해동안 14개 동에서 마을계획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과 같이, 관이 제도적 공간을 열고 시민이 주도하여 공공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이니셔티브는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참고사례

1. 동아일보(2015.4.8.) 서울 성북구 ‘마을계획’ 주민들이 수립
<http://news.donga.com/3/all/20150408/70577917/1>
2. 뉴스1(2014.12.28.) 서울시, 새해엔 마을공동체 사업 '洞 단위'로 확대
<http://news1.kr/articles/?2021005>
3. 중부일보(2015.5.13.) 수원시, '마을계획단' 발대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163>

관계국가: 국가의 존재 목적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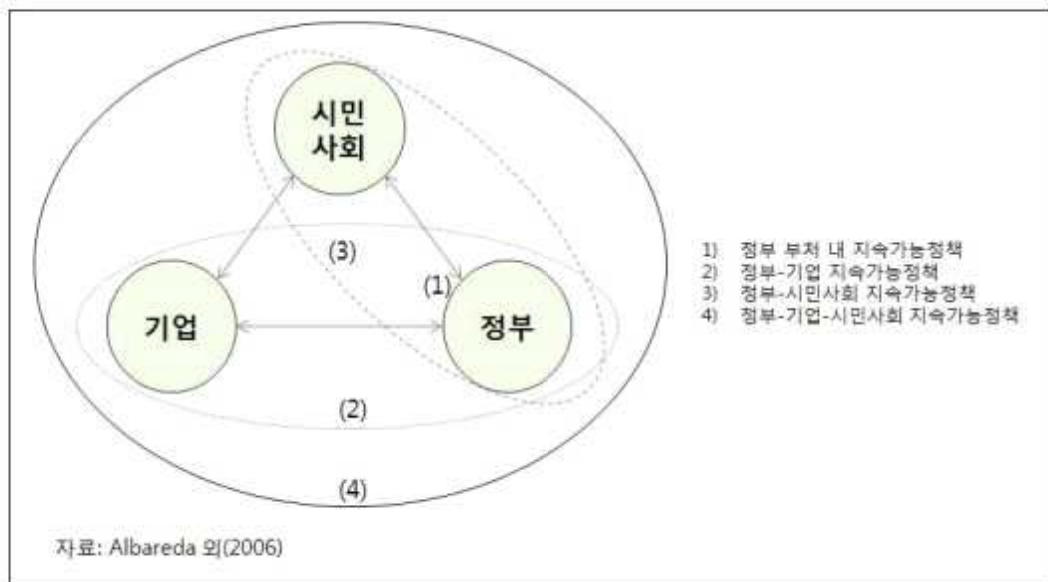
“시민과 시민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 관계국가론

- 유럽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케이즈 경제정책과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결합했던 복지국가 모델에서 “정부는 문제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외치며 공공의 축소와 시장의 확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모델까지 겪었음. 다양한 정부 모델을 거쳤던 유럽은 현재 관계국가라는 새로운 정부 모델을 모색 중임. 관계국가의 핵심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수단이라는 인식에 있음. 그래서 연결된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국가의 핵심적 역할로 삼음.

-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관계국가는 달성될 것임. 정부 내부는 공무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시민간 관계에서는 시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지역화폐, 협동조합 등 공공서비스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적 협력이 증대되는 등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대되고 시민들이 시간적 여유와 문화적 충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함.

<그림> 관계국가 모형 내 정부 정책 영역⁹⁹⁾



99) 임채원 외(2012),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서 “공유가치성장”과 “관계국가모형”,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2012.9. pp314-317. “관계국가모델에서는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현대국가에서 공공,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책임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와 공유된 목적을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실행을 통해 공공가치창조를 실현하는 국가모델이다. 관계국가모형에서 기업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재인식되는데, 이는 복지국가 전통이 있는 유럽국가에서 ‘암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계국가모형에서 기업의 역할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와 친밀권

- 그 동안 한국사회는 관계라는 사회 자본을 소진시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진행해 왔음. 국가 체제 내의 공적 역량은 산업화에 집중하고 시민사회 내의 공적 에너지가 사회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사이, 가족, 마을, 사회공동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깨어나감. 또 산업화와 민주화가 관계라는 사회 자본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 이유에는 산업화가 공동체와 협동의 원리보다는 개인과 경쟁의 원리에 기반해서 이뤄진 점, 민주화가 권위적 국가체제를 공격하는 그 길을 따라 공화와 복지의 가치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점을 들 수도 있음.
- 사실 한국에서 민주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던 1990년대, 2000년대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크게 성행한 시기였고 이런 세계적 조류는 1997년 IMF 체제를 통해 아무런 저항 없이 한국사회를 재구성함.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제압한 시대였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에서 짐작하듯,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져온 행복의 총량보다 관계의 해체가 가져온 불행의 총량이 더욱 큼.
- OECD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당신은 자원봉사를 하는가? 지난달에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성된 공동체 분야에서 한국은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매우 질 낮은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 문제가 깊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능적 노력 또한 강해지는 법. 최근 마을공동체가 여러 지자체의 핵심 사업이 되고, 주요 사회 트렌드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그런 자가 치유의 움직임에 해당할 것임. 지난 2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공동체 소모임의 수가 2700여개임. 이런 마을공동체류의 소모임과 에너지를 통칭해서 친밀권이라 정의하고자 함.

- 친밀권은 주로 자조모임, 공간이나 관심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등을 지칭하며 개인간 관계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 가까우며 배려와 사회적 관심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연결됨. 대개 개인은 친밀권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공공에 개입하게 됨.
- 향후 한국사회는 친밀권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그에 응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될 것임. 친밀권은 시민 성장의 요람. 시민은 그냥 성장하지 않음. 친밀권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적 선의를 갖게 됨. 따라서 시민 이니셔티브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친밀권의 성장과 확대를 그 전제로 함
- 또 하나는 시민들이 친밀권의 확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될 것. 아무리 부자유도, 아무리 똑똑해도 외로우면 살기 힘들기 때문임. 관계는 행복의 핵심적 요소임. 다만 친밀권은 이전의 가족적, 봉건적 공동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름. 친밀권에는 어느 수준의 공식성과 공공성이 개입되어 있음. 공식성은 프라이버시라는 구조 위에 형성되었다는 뜻을, 공공성은 시민이 공공에 진입하는 문이 확장되면서 친밀권이 공공과의 연결구조를 이전보다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함.
- 그 동안은 개인이라는 담론이 주류였고, 그것이 진보였음. 비정상적인 권위주의를 해체하는데 개인이라는 담론만큼 유용한 것이 없었음. 개인이라는 담론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고, 개인의 힘은 더 강화됨. 우리는 개인 미디어를 갖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혼자 살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음. 이제는 자유롭고 힘이 세진 개인들을 기반으로 이전의 권위적인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를 건설할 시기가 됨. 그럴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으며, 친밀권은 그런 시기의 출발점임.

■ 참조사례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비롯, 호주, 캐나다, 부탄, 일본, 영국 등 '삶의 질'지표에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거버넌스 등 사회 참여를 항목에 넣음.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에 사회적관계망, 가까운 친구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치효능감, 시민적 권리인식 등 사회적관계와 시민 참여를 지표화함.

긴장사회/암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100만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집계됨. 세계적으로는 3000만명이 투병 중이고 해마다 증가해서 2030년에는 7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임. 3명 중 1명 꼴로 암에 걸린다는 것. 성별로는 남자(평균수명 77세)는 5명 중 2명(38.1%), 여자(평균수명 84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수	신규 암 환자수
2000년	21만명	10만명
2005년	49만명	14만명
2010년	80만명	2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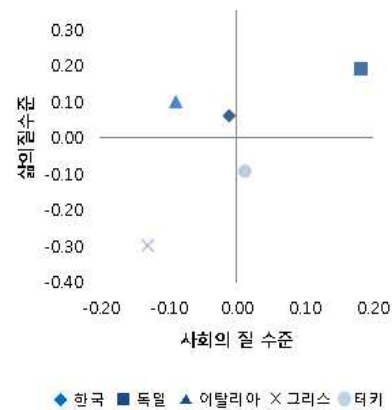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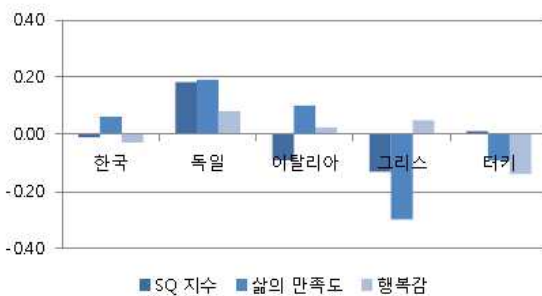
- 암 발병은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음. 평균수명이 길어진 요인도 있고, 진단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을 암까지 알아내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암의 증가추이를 다 설명할 수 없음. 분명한 건, 현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점임.
- 암은 행복하면 걸리지 않는 병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긴장이 일상화되었을 때 걸리기 쉬운 병임. 삶의 속도, 사람들 사이의 고립도, 경쟁의 수준, 마음속에 간직한 아픔, 페르소나가 주는 삶의 긴장 수준이 바로 암 발생과 명백하게 비례함. 많은 연구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음. 암 발병이 늘어난 건 우리사회가 매우 높은 긴장 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뜻함. 우리는 지금 매우 높은 긴장 속에서 살고 있음.

※ 2013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조사결과 스트레스 체감도는 평균 6.44점, 연령별 스트레스 체감도 역시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이라고 응답함.

치유

- 한국사회는 UN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187개국 중 15위(2011년)에 위치할 정도로 삶의 질은 평균보다 높지만, 사회의 질은 5개국 평균 또는 평균 이하임. 끊임없는 사회 갈등, 비정규직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 복지분야 취약성, 양극화 심화, 사회적 폐쇄성 등을 경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확대의 필요성 제기됨¹⁰⁰⁾.

■ 사회의 질과 삶의 질



그래픽 출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관심을 두면서 힐링은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하지만 아직 가치담론 영역에서 치유는 본격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치유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픈 사회인지, 그리고 치유에 미숙한 사회인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치유보다 여전히 돌격을 우선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 삶은 움직임과 멈춤의 교차임. 그리고 멈춰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있는 것들이 이뤄짐. 그렇게 의미있는 움직임과 의미있는 멈춤이 교차하며 삶의 균형을 이뤄감.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동안 들숨만 해왔음. 오로지 움직임만, 오로지

10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2쪽.

돌격만 해왔음. 오로지 개발만, 오로지 성장만, 오로지 경쟁만, 오로지 주장만 해왔음. 이렇게 삶의 균형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은 치유를 말하기 시작함.

- 세월호가 그렇듯 우리 사회는 과적사회임. 치유란 지나치게 얹은 무게를 더는 것임.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좀 들어보는 것이고, 경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세월호를 충분히 슬퍼하기 전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월호를 성찰하기 전에 조급하게 정치화하지 않는 것임.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임. 나 자신을 지나친 긴장에서 지켜내는 것, 우리 사회를 저강도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임.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기 때문.

존엄

- 존엄한 삶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바람이었지만 최근에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음. 우리 사회가 존엄이라는 화두를 받아 안을 물적, 심리적 토대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높은 사회적, 심리적 압력 속에서 지리멸렬하기 때문임.
- 우리는 산업화의 물적 토대와 민주화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개인다움이 꽃피고 그 개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사회를 꿈꿨음.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왜곡되었고 다음 단계 사회로의 진입은 지체되고 있음.
- 이 지체 속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물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많은 민주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화되는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개인들은 자기다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 그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존엄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 스스로 존엄함을 뽐낼 수 있는 역량과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 존엄을 위한 삶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날 것임. 귀농공동체와 같이 주류적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광야에서 자기만의 존엄을 시도하는 흐름이 하나일 것임. 또 다른 흐름은 지리멸렬한 현대인의 삶 그 안에서 다 주장하지도 않고, 다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한발 한발 존엄을 찾으려는 노력일 것임.

※ OECD국가들 중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 1위

2013년 한해 한국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43명으로 이는 하루에 약 30분 간격으로 한명씩 자살했음을 의미함. 아래 그림은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에 실린 자살률 변화에 대한 그래프로 빨간색 선은 OECD 평균 자살률을 나타내고, 1997부터 OECD 평균 자살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갈색 선은 한국의 자살률을 나타냄. <출처 :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아래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OECD 국가들의 자살률 변화의 평균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함. <출처: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Mindfulness/영적 성장

- Mindfulness는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는 명상의 한 방법임. 불교에서는 이 명상법을 위빠사나라고 부르는데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깊이 관찰하여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국 통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 부처도 이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수행자와 심리학자들이 Mindfulness를 영적 성장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함.
- 영적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에 가는가? 왜 지난 10~20년 새 서양에서 명상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는가? 현대 심리학은 왜 불교로부터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음.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있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이 알게 될 때 더 깊이 행복할 수 있음. 영적성장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의 다른 표현임.

- 혹자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사회적 행동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란 우려를 하지만 우려에 불과함.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아는 정치인은 더 깊은 정치를 하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아는 가수는 더 깊은 노래를 부를 것임.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아는 학자는 더 깊은 학문을 함. 그것은 사회적 행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깊은 사회적 행동의 길을 열어줌.
- 차축의 시대라는 말이 있음. 야스퍼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기원전 800년~기원전 200년까지의 시대를 지칭하는데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주요한 사상가들이 출현한 인류사에 한 획을 긋는 독특한 시대라는 뜻임. 아마 그 시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잉여생산물의 확대, 사회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지적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의 확보, 도시생활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임. 현대를 통해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적 성취와 삶의 여력을 획득함. 그 여력이 인간의 깊은 이해와 행복으로 전화되는 과정이기를 바램.

■ 참고사례

1. 현대불교(2003.10.13) 서구 명상 열풍-무엇이 통했나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941>

“명상의 의학적 치유 효과와 더불어 많은 서양인들이 정신적 충족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명상을 찾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9·11 테러 후 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명상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중략) 명상은 교육적 효과와 범죄율 감소 등에서도 그 입증돼 서구사회에서 법률적, 물리적 제재의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2. 주간경향(2015.6.2/1128호) [표지이야기] 명상에 빠진 실리콘밸리

“...한국에선 명상을 여전히 ‘힐링’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실리콘밸리가 폭 빠진 명상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2111537301&code=115>

3. [Weekly Biz] 글로벌 기업 ‘명상 열풍’ 이끄는 차드멧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1/2012092101202.html?Dep0=twitter

4. 한겨레(2014.10.15) 구글 명상지도자 차드멧탄 <http://well.hani.co.kr/534095>

[오픈랩: 삶의 기획과 도시의 재구성]

1. 오픈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현대 도시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명백하고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와 과거 사이의 확고한 연결성을 갖고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음¹⁰¹⁾. 지금 우리 도시는 정주성의 위기, 유품적 삶, 도시 인프라의 만성적 공급주의,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욕구, 자본 본위의 투자위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교란 등 특징을 갖고 있음.
- 과거 공급자 위주, 성장 위주의 과정을 극복하고 공유와 자율,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됨.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는 경제의 압축성장도구로 개발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으로 구조화되었음¹⁰²⁾.
- 이러한 개발 논리와 달리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도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된 도시 사례¹⁰³⁾를 보며 도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모색하려 함.
- 기존 관념에 둘러싸인 도시와 도시의 삶에 대한 경직되고 지배적인 이미

101) 벤자민 R.바버는 《뜨는도시 지는국가》(21세기북스, 2014)에서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78% 이상이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도시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 된 것 같다...도시성은 우리의 본성에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우리의 역사이고, 좋은 삶든 우연이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현재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고, 연합하는 방식을 정의한다”며 도시와 도시성이 삶의 집합체임을 역설했다.

102) 삶의 질의 관점에서 도시정책을 조망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를 주제로 한 부산발전포럼에서 박현주 교수(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는 <‘균등한 삶의 질’ 누리게 하는 도시공간적 정의 실현해야> 라는 글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간적 민주화를 간과한 기존 도시계획을 자본축적의 공간이라고 지적했으며, 사회도시학자 테오로드 폴 김 역시 경향신문 칼럼을 비롯, 저서 《도시클리닉》에서 택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03) 포르투갈 포르투시는 신홍상가나 대형마트가 우선시되는 개발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인 불하우시장이 여전히 건재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같이 협동경제의 무대가 되는 공유도시들이 건재하다.

지를 흔들고, 자율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씨앗들과 모빌리티에 기초한 새로운 활동 형태¹⁰⁴)와 공간의 출현¹⁰⁵)에서 이전과는 다른 도시와 도시의 삶을 기획하는데 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현실에 관한 물음은 지식, 진리,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물음들을 유발하며, 그 물음들은 가치의 물음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지식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놓인 모든 것의 인식을 추구하도록 한다.”

- 런던대학교 철학교수 A.C. 그레일링 ‘존재의이유(The reason of things)’

- 도시의 시간성과 장소성, 정주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도시개발이 낳은 폐해들과 대안적 현상들을 짚어보고 구조적 이면에 대해 살펴봄. 사유재산과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윤 추구적 개발논리가 잠식해버린 사회적 형평성과 공간적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한 동인動因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둠.
- 개발추구형 도시계획이 야기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질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 등 도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삶의 기본권마저 훼손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응하는 시도들-주민주도 마을계획, 주거 복지, 공동체주택 등-에서 전환의 지점을 포착함.
- [오픈랩: 도시의 재구성]에서는 공급과 공급주체, 소유의 관점에서 도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들을 파헤치면 결국

104) 최근 자율적 삶을 선택하기 위한 이주, 유목적 삶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의와 중앙집권, 분단국가의 폐쇄성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계층 이동이나 공간 이동은 도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

105)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류와 확장, 융합과 조응능력을 향상시킬 대인적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공간 안에 깃든 특성이 아니라 공간에 개입되고 움직이는 문화적 모델로부터 현실적 필요를 담보한 형식과 내용이 장소화된 건 유의미하다.

누가, 어떻게 땅을 소유하는지와 관련됨. 누가 공급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공급하느냐 등 공급의 규칙이나 절차 그리고 기존 공급 규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자 함.

- 총3회차 오픈랩 모임을 진행함. 1차 이그나이트로 진행된 오픈랩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시기획자들-사회적 기업가, 건축가, 연구원, 사회복지사, 예술가, 문화기획자, 공무원 등-의 현장성에 주목했고, 2차·3차 세미나에서는 주거권을 쟁점으로 도시 개발에서의 토지 공급 규칙과 절차에 대해 논의함.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게임의 룰에 복종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룰 자체를 변경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 백남준

-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 과정은 공급주체의 제한과 토지시장에서 반칙이 있었음.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되자 토지 및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불로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
- 토지시장의 과열로 침해받은 삶의 주거권을 회복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고, 공동체를 일궈갈 수 있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지 정책과 규칙을 재구성해야할 시점임.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모임 진행방식

- 전문가 커뮤니티를 활용한 의제 지형 분석

○ 모임 결과

■ 1차 모임: 삶의 전환과 도시의 재구성

○ 형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문화기획 등 도시기획자 활동 발표

- 참여: 천호균(쌈지농부), 김혜준(무한상상플러스), 전충훈(대구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한승욱(부산발전연구원), 전성환(충남문화산업연구원 원장), 전은호(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이주원(전 두꺼비하우징), 황서연(민달팽이유니온), 이채관(와우북페스티벌), 유다희(공공미술 프리즘), 송추향(보리출판사), 오관영(지리산 이음), 정기석(마을연구소), 온수진(고가산책단), 조반장(고가산책단), 노경우((주)케이스디자인), 김현동(전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이민형(아주대 명상치유연구소), 최철(내포초림), 박활민(노머니연구소), 황풍년(전라도닷컴), 정문성(주관적 문화생산), 고은설(별의별프로젝트), 강미현(예감건축), 성기석(인문공간 파사주), 조혜준(미술가), 박세상(불가능공장), 오민정(딴짓), 신재연(우주계란), 임유란(미스터리상회), 전철홍, 이현진(감이당), 이화수, 조광숙, 김석균 등 총35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연관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땅-부동산	주거문제(반지하, 옥탑방 등) 아파트가격 재산 증식 토건독재, 재벌독재 투기 열풍 조장 토지재벌
	전시행정/성과 중시	경관사업 성과 중심 행정프로세스

	업자*	도시개발사업 - 선수 - 업자 사명감/무책임
	열악한 주거인프라*	도시가스, 정화조문제 주거복지
	도시 존엄	도시공간에서의 존엄권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 장애인 화장실
	관료화	엘리트적인 싱크탱크 관료적인 중간지원조직 관료사회의 지속성
	무력한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비지속성
	삶과 유리된 지식	인문공간 파사주 감이당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주거 빈민*	도시빈민, 청년빈곤
	거버넌스*	시민이니셔티브 공무원 카운터파트너
	집*	복지문제로 접근
	도시재생*	주체의 다변화(사회적기업 등)
	인문공간-제3의공간*	실천, 실험의 공간
	도시콘텐츠*	지역축제와 다름 / 한복데이 소생자
	마을시민*	도시난민
	이주*	생업이주/ 청년
	농사일*	그라운드링, grow-it-yourself 농업활동
	회복력	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
	몸쓰기	몸을 쓰는 활동/현대인들을 위한...
	DIY의 삶*	개인화에서 다룬 DIY와 다름 (자립적 삶, 실천하는 삶)
	시대경험*	세대차에 따른 역사인식, 개 인의 내재화된 기억이 상이

		함
	로컬*	중앙VS지방(역)의 관점에서 삶의 단위로 로컬을.
	주차장*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이주민 공동체문화	다문화
	통합적 접근	다학제간 접근, 융합적 접근
	로컬	로컬정당-마포파티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컬' 지역경제 지역개발계획
	지위보다 마을짬밥*	마을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발언권을 가짐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시민력 주민주도 마을계획	시민이니셔티브
	도시인프라의 사회적자본화	
	직접민주주의	리퀴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해적당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공동체 자산 노머니경제*	
	제3의소유권*	사회적 소유 커뮤니티 소유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생활협동조합기반 문화운동
	제3의 소유권 공동체자산	공동체토지신탁 주택협동조합 토지은행협동조합CLB 사회투자기금
	광역교통체계*	둘레길 순환버스 지리산 자치구 지리산 3도권역 네트워크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업자

도심재생,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사업에서 정주민/주거민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교류 없이 개발에 임하거나, 일명 치고 빠지는 사업자들을 비판함. 정주민,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와 개발 사업만 기획·실행하는 개발주체들을 지칭함..

열악한 도시인프라

오래된 주택지역의 경우 상하수도문제나 정화조, 도시가스 등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임. 예산 배분에서도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됨. 실적이나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정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음.

주거빈민

60-70년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가족단위로 이동했던 도시빈민가구와 달리, 최근에는 청년빈곤, 노숙자 등 1인가구 중심의 빈곤가구들이 주거권을 요구함.

민관거버넌스

적극적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뜻함. 현재 민관협력관계에서 시민이니셔티브의 거버넌스를 주장함.

집문제

자산가치, 재산권에서의 집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 주거복지, 살 권리 차원에서 집문제가 재조명됨.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변화됨. 대구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와 같은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인문공간-제3의 공간

90년대 대학가 서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스터디, 세미나, 토론, 강연 중심의 인문학 공간에서 사회적 실험과 문화향유, 스터디 등이 복합된 인문공간으로 진화함. 커뮤니티 카페나 복합문화공간의 성향을 띠고 있음.

시민이 만드는 도시콘텐츠

90년대 장소마케팅적 관점에서 지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역축제 기획·운영, 관광단지 조성 등이 붐을 일으켰음. 지자체 주도의 도시 콘텐츠가 아니라, 한복데이처럼 민간 기획·민간 주도의 콘텐츠의 경쟁력과 파급력이 높음. 소생자.

마을시민

도시생활의 구조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지역, 읍내 소도시로 귀촌할 것을 제안하면서 귀농생활이 아닌 귀촌생활을 제안함.

이주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취업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라이프스타일이 다변화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삶을 결정함. 제주도 이민자,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기획자 등

농사일

전문적인 농업보다는 도시텃밭, 커뮤니티가든, 그라운드와 같은 땅과 생명을 길러내는 일을 말함.

DIY의 삶

긍정적 의미의 자립적 삶을 뜻함.

시대경험

세대간 역사인식이나 시대 경험의 간극이 커지는 것을 말함.

주차장

북촌처럼 명소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문제가 불거짐. 정주민을 위한 도시와 관광객을 위한 도시에서 주거 환경, 도시 안전에 대한 고민이 발생함.

지위보다 마을짬밥

귀촌한 이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원주민들과 회의를 할 때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음. 원주민들은 (귀촌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경계심을 갖고 있었음. 그러다 마을짬밥이 늘어나니(정주기간이 길어지니) 이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게 됨.

노머니경제

닝마스터, 닝마주이. 자본주의 경제생활과 노머니경제라는 레이어를 두고, 생활함. 화폐 교환이 아닌 물물교환, 증여 방식으로 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임금노동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함. 집-회사로 짜여진 임금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라이프를 기획하다 다거점 생활방식 거주자를 위한 임대업, 이런 류의 직업도 구상함. 자본주의 레이어 위에 노머니경제라는 레이어를, 새로운 경제 레이어를 상상함.

제3의소유권

사회적경제가 실물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함. 소유는 국유와 사유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사회적소유/커뮤니티소유를 고민해볼 수 있음.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공동체토지신탁, 주택협동조합, 토지은행협동조합CLB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광역교통체계

지리산 3도권역을 연결한 광역교통체계를 실험할 계획

■ 오픈랩 2차 모임

- 모임주제: 주거문제
- 참여: 김병수, 김성달(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하나(서울 소셜스탠다드 대표), 박종숙(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 하승창, 김병권, 정현주/외부참석자 3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논리-부동산불패신화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대란 주택가격은 토지가격? 건설가격?
	토지가	서울-지방의 토지가 차이가 주택값을 결정함. 자산
	부동산 거품*	주택공급비율 110%-자가소유 50% 보증자리주택-인근 아파트값 다운↓
	빚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방식*	기존 택지개발방식-대량공급 한계 선분양제도 입찰장벽 커미션구조 건축비 책정 시스템의 폐해 지분 분할방식 부동산법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전세*	사라져가는 전세 1인가구의 월세 부담 - 전세 선호 광의의 임대
	거주자 중심*	주택 소비자로서의 입주자 X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고려
	아파트	기업형 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1인가구	1인가구에 따른 주거전환 소유, 관계, 거주 의 가벼움
	신탁제도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주택협동조합	은평하우징쿱, 경기하우징쿱 민달팽이유니온, 집쿱
	거주자 중심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고려
	공동체신탁	
	펀드*	청약제도 저축상품 부동산펀드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부동산 거품

MB정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자 그 일대(주택가격이) 정체상태가 되었다.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하면서 허수가 드러남.

기존 방식

예전처럼 대규모의 택지개발, 대량공급방식은 힘들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다.(박종숙/함께주택협동조합) 선분양제도, 입찰장벽, 커미션, 건축비 책정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의 폐해가 심함.

전세

전세시장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김병권)도 있지만, 1인가구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높은 건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전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임. 1인가구들은 개인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전세를 선호함.

거주자 중심의 접근

선분양제도를 통한 아파트 입주자와 같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정주하고 싶은 공간과 이웃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거주자를 말함. 거주자 중심의 주거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방식이 검토되어야 함.

대안주거를 위한 주거펀드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함. 대안적인 주거 형태를 고려할 때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펀드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 3차 모임

○ 주제: 토지정책과 주거권

○ 참여: 김성균(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김란수(협동조합연구소), 김성달(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현동(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이제원(두꺼비하우스), 김하나 외 2명(서울소셜스탠다드), 서울시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 김병수, 하승창, 김병권, 손호석, 정현주/외부 참석자 9명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연체율
	땅값-땅의 가치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격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권한이 많다 vs 중앙정부 지침에 걸린다(주택법 저촉)
	기존 주택유형*	고시원-준주거 쉐어하우스-> 다세대/다가구, 준주거, 기본모델
	4인가구 기준 주거*	
	주택공급규칙	선분양제도 건설사만 땅을 받을 수 있음. 협동조합이 토지 자산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규제가 있음.
	분양가상한제	임대료상한제
	택지개발방식	구룡마을
	현 도시재생법*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공유주택 협동조합 빈집 재활용 - 민달팽이유니온
	신탁*	공동체토지신탁 토지신탁 내셔널트러스트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토지임대부*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컨비비얼리티를 위한 도구 tools for conviviality*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프랑스-미국 주택정책	주택4만호를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연결(프랑스 중산층 부양대책) 미국 NSP 지역안정화프로그램* 지역안정화프로그램
	공동체토지신탁	주택기금 토지은행 지역개발기금 사회투자펀드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쉐어하우스 / 1인가구
	태평동락 커뮤니티	
	토지임대부	시민이니셔티브
	믹싱*	저소득-중간층 혼합해서 같이 살아감
	co-work를 통한 주거환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음. 막상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주택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 주택유형

다양한 주택형태들-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할하는 제도나 규칙이 갖춰져 있지 못함. 고시원은 준주거로 분류되지만, 쉐어하우스는 상황에 따라 다세대/다가구나 준주거로 분류됨. 준주거로 자리 잡기 전 주거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향후 주택 품질이나 환경이 염려됨.

4인가구 기준 주거

기존 주택 또는 아파트는 4인가구를 표준모델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또는 2인가구의 생활패턴과 잘 맞지 않음. 기존 주거공간의 성격 역시 가족구성원 4인에 맞춰져 있어서, 1인가구 4명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측면이 발생함. 셰어하우스에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이들과의 관계형성, 커뮤니티가 화두임.

현 도시재생법

현 제도는 엔지니어링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신생주체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

공동체주택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이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

컨비비얼리티를 위한 도구tools for conviviality*

스페인어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온 역사적 결속, 자신들의 공유지(communs)를 지켜올 수 있게 했던 마을사람들의 결속’을 뜻함. 집은 풍성한 삶을 위한 접속으로 접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결속시키는 도구로서 땅을 사고하자는 뜻.

공동체토지신탁

지역기반 비영리조직인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는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영구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체가 창출한 가치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 현재 미국 250여개, 영국 80여개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인도, 호주, 케냐 등지에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미국NSP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는 주택담보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NSP프로그램(지역안정화프로그램)을 만들. NSP펀드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에 자금을 투여함. CLT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

믹싱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소득층만 살도록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믹스(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등을 검토해야 함¹⁰⁶).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NO	현재의 문제/다른분야 경계선	영향범위/기존개념-문맥	미래 비전/혁신아이디어/NEW개념
1	부동산	주거빈민	시민력, 시민이니셔티브
2	빛, 하우스푸어	거버넌스	제3의 소유권
3	열악한 주거인프라	도시재생	공동체 자산
4	존엄이 사라진 도시계획	집	직접민주주의
5	관료화	인문공간	협동조합
6	무력해진 시민운동	마을시민	네트워크-광역교통체계
7	기존 주택공급방식 및 제도	이주-생업이주, 청년이주	1인 가구 주거 전환
8	전세	농사일	신탁제도
9	아파트	회복력	주택협동조합
10	중앙정부-지자체	로컬	펀드(부동산펀드)
11	4인가구 기준 주거	주차장	토지임대부
12	분양가 상한제	다문화	태평동락 커뮤니티
13	현 도시재생법	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14	토지임대부	신탁	믹싱(계층혼합형 주거 조성)
15	마을만들기사업- 전시행정, 업자	통합적 접근	co-work를 통한 새로운 주거 환경

106) 찰스 몽고메리는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미디어월, 2014)에서 캐나다 밴쿠버시 사례를 소개했다. 밴쿠버시는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부동산의 20%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건설에 배정하도록 하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총3회차 진행된 모임에서 사업성 위주의 철거식 재개발,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난개발 등 각종 도시정비관련사업이 낳은 폐해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의식과 활동주체들에 집중함.
-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사업자 중심의 정비사업, 공급자 중심의 개발과정, 전면철거 후 재개발,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정비, 지역 커뮤니티의 파괴, 지나친 개발이익의 추구로 인한 공공성 결여 등을 논의함.
- 공급자(행정, 개발사업자 등) 중심의 도시개발계획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이나 사회적기업가, 주택협동조합 등 대안적 도시개발방식과 새로운 활동주체에 대해 소개함.
- 지속가능한 개발, 주민 권리와 삶의 터전에 대한 존중, 사회형평성과 공동 이익의 달성 등 이전에 간과했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남.(big plan의 글에서 발췌)
- 도시 문제는 삶의 터전의 문제에서 접근, 인간답게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함.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개념	인스턴스	연관키워드					빈도수
1인가구		준주거	4인가구 기준 주거	다문화	월세부담	소유, 관계, 주거의 가벼움	7
청년		청년빈곤	시대경험				
DIY의 삶	소호점포	리빙랩(메이커스)	농업활동, 그라운드링	인문공간 파사주	생활협동조합 기반 문화운동	시민이 만드는 도시콘텐츠	9
민주적 거버넌스		중앙정부-지자체	시민사회의 비지속성	엘리트적인 씽크탱크	지자체 권한이 많다 VS 중앙정부 지침에 걸린다	관료화	9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컬		로컬정당	광역-지리산 3도권역 네트워크	광역교통체계-둘레길 순환버스	도시간 네트워크		7
도심부 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개발방식-구룡마을	건설사, 공급자 중심	대량공급 한계	젠트리피케이션		15
열악한 주거인프라		도시가스	정화조문제				3
시민이 니셔티브		공무원 카운터파트너	도시개발사업 주체의 다양화	도시개발사업 주체 - 업자	마을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발언권을 가짐	마을시민	13
리퀴드 민주주의		무력한 시민운동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해적당		5
사회적 소유	신탁제도	광의의 임대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신탁제도	토지은행협동조합CLB		6

공동체 자산		사회적 소유	커뮤니티 소유	미국NSP지역안정화프로그램			8
도시인프라의 사회적 자본화		국가가 만들어내는 가격	컨비비얼리티를 위한 도구	도시콘텐츠			3
땅-부동산	뺏다방	부동산 시장논리-불패신화-토지재벌-투기열풍	부동산법-가격하락	부동산 거품-담보대출	개발방식-토지임대부	부동산펀드-재산 증식	19
주택 공급	살 집과 팔 집	기업형 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방식	소득별 믹싱 전략(저소득층-중간층)	토지임대부-보금자리주택	선분양제도	10
집		주거복지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주택기금		9
하우징 쿵	하우징 쿵	협동조합	공동체 주택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체문화	사회주택	19
펀드		대안주거펀드	사회투자기금	청약제도	자산		5
빛		하우스푸어	전세대란	저축상품	아파트값		6
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	다학제간 접근				4
노마드 적 삶		이주민	생업이주				3
존엄	요양병원 옆 장례식장	도시공간-요양병원 옆 장례식장	주거권/주거복지	장애인 화장실			6
회복력	소셜 디즈니랜드 (구례자연드림파크)	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				4

3) 키워드 설명

토지임대부 개발

-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토지 공급과 관리, 토지정책임. 토지 시장이 과열된 건 불과 40여년 만에 90% 이상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가 주된 원인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토지와 주택 가격을 급상승시켰음. 불로소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가 안정’이 해결과제였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규제와 개발 허용을 극단적으로 실행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됨.¹⁰⁷⁾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지만, 고비용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고임금, 고금리, 고규제 등과 더불어 고지가(高地價)도 중요함. 1960년대 집을 지을 때 땅값과 건축비가 반반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80% 이상이 땅값에 들어감. 고지가(高地價)는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음¹⁰⁸⁾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유지 소유라는 기초 위에서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음.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은 지속적인 토지매입으로 각각 전체의 74%, 81%를 국유화하는 방식을 취함.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시정부가 전체 면적의 약 70%를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양도하고 택지를 민간에 거의 분양하지 않음. 시정부 소유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비축하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양도하고 토지임대료를 받으며 지가 안정화를 도모함.
- 토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음. 일명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107)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정책이 혼동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 시각에서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 자원을 용도별 배분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려 토지정책에 종속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봤다. 출처: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우리나라 개발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동산연구, 2002, 12.2:129-142.

108)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01, 8-10쪽.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임. 공공이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임대’ 또는 ‘토지공공임대 제도’는 10여년 전부터 제안된 제도임. 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첫 등장¹⁰⁹⁾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음. 2006년 2월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도 토지 임대에 기인함. 2007년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 때 새로운 분양제도로 환매조건부와 함께 토지 임대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에 그 근거를 마련¹¹⁰⁾함. 2010년 정부는 세종시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공급가를 시세보다 1/6 수준으로 낮추고, 개발권을 부여¹¹¹⁾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제안함¹¹²⁾. 토지임대 개발방식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로소득을 위한 막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¹¹³⁾.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건 토지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를 할인 매각하는 방식은 미래세대가 활용해야할 중요한 부동산정책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가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장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도 시장친화적 방식의 정책을 펼 수 있지만 국공유지를 매각해버리면 향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가격을 규제하는 등의 다소 부작용이 있는

109) 당시 김윤상 경북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권영준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60~70명의 경제학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서 ‘행정도시’(현 행정복합도시) 개발을 토지공공임대제 방식으로 하자고 밝혔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의 소유권만 입주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고질병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110) 한겨레(2007.10.25.), 제682호, 경제 ‘그게 되나 보자’는 시범사업? /김영배 기자

111) 세종시 토지 공급가격을 원래 예정가인 227만원(3.3㎡ 기준)의 1/6수준인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대규모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했다.

112) 대기업 재벌들에게 개발권과 재산세 면제를 허용하는 건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을 재벌들에게 헐값에 넘겨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113)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10년1월6일 발표한 “정부는 세종시 토지 ‘헐값 매각 특혜’를 중단하고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하라”는 논평 일부를 발췌했다.

직접적인 규제정책만 남게 됨.¹¹⁴⁾

- 현행 재정비사업에서 드러나듯 토지 소유가 대부분 민간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자와 건설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이익만 추구하는 개발사업이 횡행하면서 세입자와 임차인의 기본권이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토지 임대부 개발 방식은 과열된 불로소득으로 인한 공간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공간적 민주화와 공간적 정의로 복원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일 것임.

도심부 재생

- 무분별한 도시 확대와 택지개발로 몸살을 앓던 도시가 이제 내부 공동화나 쇠퇴한 도시기능의 전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전면개발 방식의 토목공사와 달리 적정한 입지 전략을 통해 비용 효율을 추구한다는 점, 기존 경제사회적 생태계에 접목한 문화 경제적 활동으로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토목공사 위주의 사업과 달리 창조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재해석하고 결합시켜 공동체 문화와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창업이나 사회적경제와 문화 활동의 융합을 통해 협동경제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교외화를 불러일으켰던 비싼 땅값과 부당임대소득 등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도시를 재정비할 때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임. 지자체는 인구성장을 가정하고,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사업성에 기반하여 추진됨에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¹¹⁵⁾. 여러 지방정부들이 대단히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경험 미숙에 있음.¹¹⁶⁾

114) 이성영(토지+ 자유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15)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2015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116) 이영성(2002)의 논문을 보면,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은 대단히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다함. 예컨대 1990년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 허가 역시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상당수 지방정부는 건축허가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각종 토지개발로 인한 편익과 토지개발이 환경이나 해당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비교해가면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발허가업무를 담당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우리나라의 지방조세체계는 지방정부들의 개발지향적 정책을 부채질하는

- 중심시가지 쇠퇴가 지역 전체의 주요 이슈가 된 건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통적인 지역의 기능들이 쇠퇴하면서 지역의 얼굴 성격을 띠는 중심시가지 쇠퇴를 지역 전체의 쇠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임¹¹⁷⁾. 2000년대 들어 도심공동화 및 도심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그 대응책으로서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함. 현재 한국의 지역재생 관련 제도는 각 부처별 기능에 따라 주거, 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상권 등의 재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법으로 규정됨. 개별 부처들의 기능에 따라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재생법 또는 지역재생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전주 한옥마을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구도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활성화된 민간의 활동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심부 재생성공 사례임. 한옥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전동, 풍남동, 다가동, 경원동 일대는 2004년 도청 이전, 서부신시가지개발, 대형 유통몰 오픈 등으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음. 신시가지 이전 과정에서 유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도심공동화 위협에 노출되어 왔음. 최근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과 그 인근 도심부가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도시의 편중된 난개발도 큰 위협적 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¹¹⁸⁾.
-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복합적 재생전략이 필요함. 신개발 위주의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은 지양하고 자연환경과 대상 지역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감안한 물리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함. 공급자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 재생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단계별 제한적 공적 개입을 지향함¹¹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해야할 대목임.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세수입의 무려 70% 이상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임. 이들 부동산관련 조세를 제외하면 별다른 세원이 없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연히 개발허가를 남발할 수 밖에 없음. 또 동일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개의 조세를 중복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부과시에 지켜야할 기본 원칙에도 어긋남. 더불어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계획 그리고 환경계획 등에서 지방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출처: 이영성, 우리나라 개발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동산연구, 2002, 17쪽)

117) 이소영 외,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11쪽.

118) 김병수, 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로컬리티 인문학, 현장비평, 2013, 274-275쪽

- 변창흠(2013)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이 신규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개발, 전면 철거형 재개발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생활권 단위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계획하고 개발하며 관리하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개발사업의 주체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여러 주체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트러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개발상품 역시 분양과 임대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토지신탁,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화해야 함¹²⁰⁾.

경제플랫폼¹²¹⁾

- 프랑스 마르세유의 벨 드 메 지역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항구도시였지만, 폐공장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재생의 성공적 사례가 됨.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로 이름 붙인 폐공장 에서 예술가들이 힙합, 재즈, 록, 퍼포먼스, 서커스, 오페라 등 다장르 공연 부터 탁아소, 스케이트보드 강습, 요리 프로그램, 매주 장터 등 지역 주민 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 성격의 문화 플랫폼을 만 들어가면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게 됨.
-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시가지의 확장으로 버려진 공간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뿌리내려 삶과 밀착된 호흡으로 새로운 문화를 더해 가며 삶의 양식을 변화케 하는 플랫폼. 이러한 플랫폼에서 교차되는 실험 과 사유, 실천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살고 싶게 하는 도시이자 마을 로 만드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함.
- 원래 플랫폼이란 고정된 기능 중심이 아닌 융합을 뜻함. 업무와 판매, 주 거를 비롯한 일상 활동과 문화 활동이 교차하는 플랫폼이 새로운 도시 재 생 콘텐츠가 되고 있음. 흔히 도시 기반(infrastructure)을 사전적 의미로만

119) 정영환 외,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4호 통권22호, 175쪽.

120) 변창흠(2013), 3쪽

121) 줄고 「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와 『도시기획자들』(소란, 2013)에 실린 내용 일부를 인용했다.

접근함.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인 댐,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 시설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복지, 환경시설이 해당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문화를 입히는 실험 역시 새로운 도시 기반일 것임.

-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임. 지역을 삶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문화공간을 전시시설이나 물리적 거점 위주가 아닌 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생활문화 중심의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유기적 관계망이 구축해 가고 있음.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경우처럼 청년실업 문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새로운 공동체협력개발의 비전을 통해 풀어나가는 등 플랫폼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음.

리빙랩

- MIT는 2004년 아파트를 지정해서 거주자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PlaceLab을 설치하여 신기술과 디자인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실험하고 평가하는 연구공간으로 활용함. MIT의 W. Mitchell 교수가 이를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함¹²²⁾.
- 유럽연합은 Mitchell 교수의 리빙랩 개념을 이어받아 사용자들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생태계로서 리빙랩을 파악함. 리빙랩(living lab)을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가 혁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접근함¹²³⁾.
- 리빙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용자를 혁신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접근한다는 점임. 사용자는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함께 창조하고, 생활공간에 구성되어 있는 물리적·사회적 맥

122) 송위진 STEPI 창조융합산업 선임연구위원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사용자 주도형 혁신의 도래>를 인용함. 출처: <http://news.koita.or.kr/rb/?c=4/14&where=+display%3D1+&uid=419>

123) 성지은 외,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농촌 리빙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4.15. 제 140호, 5쪽.

락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임. 핀란드의 HumanTech Living Lab, 덴마크의 Egmont Living Lab이 있음.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생활환경·재난안전·격차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리빙랩’을 진행함. 문화체육관광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역시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전 리빙랩을 운영할 예정.

공유도시

- 2012년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는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¹²⁴)함. 공유도시(Sharing City)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함.¹²⁵)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정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품앗이·두레 등 오래된 우리의 공유문화를 도시 차원에서 되살리면, 자원 활용 극대화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종된 공동체 문화도 회복하고 산적한 도시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유도시의 의미를 설명함.¹²⁶)
- 서울시의 활동이 공유경제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소규모적인 공동협력체의 경제활동이나 협력적 소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음. 공유운동가들이 제시한 ‘공유할 수 있는 도시(shareable cities)’의 비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의 보고타는 페날로사 시장 시절에 사람들의 웰빙을 우선시하여 학교, 공원, 대중교통과 같은 공유(물)(commons)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공유할 수 있는 도시’ 개념에는 사유재로 환원되지 않는 대중교통, 보행자거리, 시민참여공간 등 도시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

124)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함.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와 공유허브 사이트(<http://sharehub.kr/>)를 개설하는 등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25) 서울혁신기획관. 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126) 한겨레신문, 서울시도 ‘공유도시’ 선언, 2012.9.20.

는 공유이며, 자동차나 집처럼 사유재산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가 속함.¹²⁷⁾

노마드적 삶¹²⁸⁾

- 2014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13집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청년층의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주 올렛길과 더불어 활성화된 문화이주에 주목함¹²⁹⁾. 제주도 인구가 감소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 2,340명, 2012년 4,873명이 증가함. 201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귀농자는 19%(447명)이며, 81%는 농사와는 다른 이유로 제주도로 이주하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로 해고나 명퇴(명예퇴직)를 당한 50~60대가 도피성, 생계형 귀농촌을 선택했다면, 최근 귀농촌을 선택한 이들은 또 하나의 대안적인 생활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¹³⁰⁾.

[표] 연도별 귀농촌 증가 추이(농식품부)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구수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누계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57,090

- 이처럼 귀농촌이 주류적·도시적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식되어지듯, 2008년 이후 청년귀농, 문화귀촌, 문화이주 등을 실천하는 2030세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음.

127) 박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제3호(2013년 가을호), 146-171쪽에서 일부 발췌함.

128) 웹진 예술경영 224(2013.8.8)의 '[특집] 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문화이주자들이 말하는 '문화이주'의 내용을 참고했다.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대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참고했다.

129) 제민일보(2014.11.3), 20~40대 낭만·생태 문화이주 늘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121>

130) 프레시안(2014.1.14), 정기석(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의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09:16:00<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644>

- 이광준 바람부는연구소장은 귀농이 아니라 자연 가까이에서 생태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청년과 중년들이 택하는 대안적 장소로 '지역'이 등장한다고 해석함. 대도시에서 '지역'을 선택한 이들이 대도시의 석유기반, 금융기반, 소비주의 기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이주를 대안적 삶의 기획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임.
- 이소장은 2000년대 후반 대학로 문화지구와 홍대 상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밀려난 젊은 작가들이 문래동, 이태원 남산 아랫마을, 우이동, 성북동으로 이주한 것과 달리, 최근의 충북 제천과 괴산, 제주, 전남 담양·강진·해남, 전북 진안·남원·완주, 충남 서천·서산·홍성 이주는 기존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이렇듯 도시에서 지역으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삶의 터를 이전한 문화귀촌자들, 예술가, 기획자들의 활동에서 지역이 지속가능한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함.

[오픈랩: 사람과 협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사회혁신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가의 혁신적 아이디어,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행동, 새로운 연결을 통한 과정의 혁신, 구체적인 사례나 모델 존재,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일련의 활동 혹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함.
- 즉 사회혁신은 융합적이고 혁신적이고, 사람을 중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근본적 혁신을 지향함.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대표적인 사회혁신의 영역임. 지역 재생/사회서비스의 질적 혁신/풀리지 않는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 등의 사회혁신을 사명으로 삼는 사회적기업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연결에 기반하여 결과 이전 비즈니스 실행과 배분 과정을 혁신하고, 실제 현실에서 경제와 사회문제의 통합적 해결 사례나 모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 협동조합의 아버지 로버트 오언, 아라빈드 안과병원의 닥터 V등의 사회적기업가, 키스타트의 적정기술과 밸류체인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트리플래닛의 모든 섹터가 윈윈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 성미산마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태동기를 넘어서 전환기에 서 있음. 서울에만 2,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12,0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서울에만 100만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제주 등 진보 보수를 막

론하고 중앙정부를 넘어 광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고, 보수정부에서도 10여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기본법 제정이 목전에 있음. 태동기를 넘는 전환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은 시민이니셔티브의 강화, 사회혁신가 성장, 양적 확대를 넘은 질적 혁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규모 있는 사회적 임팩트 창출, 공유자산화, 지역화, 한국적 사회적금융 모델 발굴, 거버넌스 혁신임.

- 이 가운데 한국 사회적경제 성공의 핵심은 사람 즉 사회혁신가와 사회적금융일 것임. 급격히 사회적경제가 관여하는 영역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적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사회혁신가 인재 풀은 늘 제한적이고 부족함.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서 자문회의 등에 참여해보면 늘 그 나물에 그밥임.
- 새로운 사람 없이 새로운 혁신 없음. 그러나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현실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소외받거나, 양적 확산이나 단순 교육에 그치고 있고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혁신가의 발견이나 새로운 연결, 성장을 돕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시민사회에서도 혁신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개별 조직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조직단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혁신가들은 자기 성장, 필요 네트워크, 장기 비전 등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지쳐서 번아웃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주제는 사회적금융임.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지만, 일종의 경계에 있는 영역임.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태동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논의는 영리 비영리를 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전문가 풀도 극히 소수에 머무르고 있음. 금융의 양극화가 커지고, 사회적자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의 한계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사회적금융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2007-2010 세계 사회적이은행 협력기구 회원기관들과 29개 대형 영리 금융기관과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은행이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임팩트 투자 등 일반 금융영역에서 사회적금융적 접근에 대한 모색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셜뱅크, 공동체 금융 등 장기적 비전을 가진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금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혁신의 과제임.

2. 키워드 선정 프로세스

-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키워드를 찾아보고, 사회적경제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인 사회혁신가와 사회적금융을 별도의 주제로 삼아 키워드를 찾아보고자 함.
- 기존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만드는 방식이 아닌 30대 차세대 혁신가들을 중심으로 새 50대 선배가 조연자와 촉진자로 참여하는 소셜다이닝 방식을 선택했고, 새로운 연결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민간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를 일부 보완함. 최종 키워드 선정은 기존 소셜다이닝 과정에서 나온 키워드의 핵심을 고려해 수정 보완함.

3. 모임을 통해 도출된 사회혁신 키워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커뮤니티 기반 시장, 함께 먹는 밥, 공동육아, 따로또함께, 사회혁신플랫폼, 마을경제, 공유자산, 소셜 코디네이터, 사회적부동산신탁, 거버넌스, 사회기술,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유경제, 적정경제, 사라진 협동 DNA,

사회혁신가 :

공동체의 성장 지원 시스템, 새로운 연결, 몰입, 차세대 혁신가, 통찰력, 브릿지전문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린 마음.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활기, 공통의 경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극, 기다림, 좋은 공간, 좋은질문, 좋은 사람, 결핍, 겸손, 지지, 자기실현과 사회실현의 균형,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 경험

사회적금융 :

대안 금융, 대상자 중심의 금융, 공동체금융, 지역개발 금융, 균형잡힌 기금, 실천의 경험, 신뢰를 받기, 전문중간지원기관, 언어와 시간의 공유,

4. 핵심 키워드

1. 인간 존엄 중시 경제
2. 사회적 금융
3. 통찰력이 담긴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 학교
4. 차세대/중간 혁신가
5. 벽을 이어주는 브릿지 전문가
6. 공유자산 (사회적부동산신탁)
7.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 육아
8. 학교협동조합
9. 협동 DNA의 구축
10.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시장
11. 혁신 플랫폼 (전문 중간지원기관과 중간지원기관 연대)

5. 키워드별 주요 내용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경제

- 사회적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과정과 결과에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한다는 것임. 시민혁명 이후 일정하게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갖춰진 유럽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의 혁신을 사회혁신의 화두로 삼고 있다면, 한국의 사회혁신은 인간의 존엄을 새로운 연결과 방법을 통해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함
- 최소한의 시민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임. 사회적 경제는 과정과 사람을 중시하는 경제. 사회약자의 안정적 고용,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 활동에서 인간 중시 미션과 사람에 기반한 의사결정, 민주적 조직운영 등 인간의 존엄을 기반에 두고 있음.

* 마을 경제가 커뮤니티 재생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추후 검토

사회적 금융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 혁신이라는 과제가 도출되고, 한편으로는 사회혁신 활동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도입, 즉 사회적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담보와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시스템 구축이 사회혁신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시장친화형 사회목적투자,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연대형 협동금융이 사회적 금융 형태로 자리잡았다면 한국은 신탁이나 마을금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의 활동이 존재함. 최근 임팩트 투자에 대한 영리쪽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 사회투자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태동기에 있다고 봐야 함.

- 최근 마을재단 설립 등의 움직임이 지역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공동체 금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한계가 있음. 한국적 사회적 금융 모델이 무엇인가, 태동기 수준을 넘는 질적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1> 사회적 금융의 대두배경 및 대응과 사회적 금융

대두 배경	금융소외		금융의 반사회성	
필요 성	한계집단에 대한 금융포용정책	낙후지역의 금융 활성화	혁신적 사회투자	재분배로서의 사회투자
사 회 적 금 융	금융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포용적 금융, 지역밀착형 금융, 그리고 금융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임팩트 금융 내지는 혁신적 금융			
분 석 수준	<개인 수준> 자활과 탈빈곤을 지원하는 금융 (예)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 수준> 낙후지역의 개발과 탈빈곤을 모색하는 금융 (예)지역개발금융	<국가 수준> 투자를 통한 사회적 복지 및 자활 지원 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하는 금융 (예) 사회목적 투자	

©문진수 2013

좋은 질문을 찾는 질문 학교

- 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함. 좋은 결과는 과거의 생각과 똑같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과 기회에 과정의 혁신을 통해 나옴. 한편으로 사회혁신가의 성장은 자기 성찰과 고민의 숙성이 필요한데, 이 출발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함.

중간/차세대 혁신가

- 자신 삶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함께 만드는 사회혁신가의 출현

- 사회혁신 활동의 허리가 약하고 아픔. 사회변화 리더십의 재편이나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오히려 중간 혁신가들의 연결과 성장을 돕는 것이 더 핵심일지도 모름.
- 대개의 사회혁신가는 워커홀릭이고, 자기문제는 돌보지 못하고 사회변화에 모든 것을 거는 경우가 많으나, 지금은 자기 삶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혁신가 상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혁신가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도, 사회혁신과 자기혁신이 하나인,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리더십이 처한 대외적 환경이나, 내적 성장경로를 살펴보면 쉽지 않음.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간 혁신가임.
- 사회혁신 영역에서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팀장 혹은 국장 역할을 하는 중간 혁신가는 현재 한국 사회변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음. 가장 현실에 밀착해 있는 역할이어서 새로운 언어나 기회, 관점, 연결은 차세대 혁신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가장 취약하고 부족함.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싸울 수 없음. 과도한 업무 활동에 번 아웃되고, 한번 리더가 영원한 리더가 되는 비영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자기 조직의 장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새로운 전망과 재충전이 요구되고 있음.

경계를 잇는 전문가, 브릿지 전문가 :

- 최근 무수한 공익전문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음. 과거의 공익 변호사 그룹이나 노무사 그룹을 넘어 공익 건축가 그룹, 공익 변리사 그룹, 사회기

술 과학자 그룹,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그룹 등 공익 혹은 사회라는 이름 밑에 수많은 전문가 군들이 생겨나고 있음.

- 실제 이들의 역할은 변방과 주류를 연결하는 연결자임. 이 브릿지 전문가들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빠르게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편으로 주류의 자원을 직접 연계하기도 함.
- 변방의 언어와 주류의 언어가 다르고, 변방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을 질적으로 혁신하는데 브릿지 전문가들의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함. 사회적 경제의 경영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주류의 사회적 금융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을 가지고 두 영역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브릿지 전문가의 부족 때문임.

공유 자산 (사회적부동산 신탁)

- 현재 사회혁신 영역의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임. 지역 사회적 경제나 사회혁신의 모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 로컬리티 등 유럽 사회혁신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함.
- 시민 공유자산의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서 사회적부동산 신탁이 제시되고 있음. 부동산을 사회적으로 소유·개발·관리·처분하여,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가치를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공간을 조성하는 시민참여 기반의 법인체를 말함. 이를 통해 사회적 소유 영역의 확보, 사회적 공간 이용 및 개발 실현, 개발가치의 공유 등을 실현해 나갈 것임.

새로운 연결을 돕고 지역을 재생하는 공동육아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 아이는 관계의 소중함, 생태 친화, 협동,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정치적 견해나, 지연 학연 등 낯은 관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 작은 관계망이 느슨하게 다른 공동육아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결되면서 커뮤니티 형성.
- 육아라는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는 이슈를 매개로 협동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못하는 조직 운영 경험을 공동으로 하면서, 기존의 가치와 철학이 바뀌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가장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잘 실현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함.

학교 협동조합 : 협동조합 학교

-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사회화 과정에서 협동과 우정, 환대보다 경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육아와 함께 협동의 가치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만들어가는데 학교 동조합이 주목 받고 있음.
- 지역사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 활동과 소통, 나눔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에만 3개 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임.

협동 DNA의 재발견

- 식민지시대와 전쟁,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협동 DNA가 사라지고 경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은 시민참여를 기반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는 협동을 기반으로 함.
-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협동에 대한 승리적 경험과 사회화 부족임. 새롭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사회적기업이

나 공유경제 등에서도 협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임.

커뮤니티 기반 시장

- 시장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간이 아님. 지역사회의 문화의 상징이고, 교류의 상징이고 커뮤니티의 중심 플랫폼임. 한편으로 무너져가는 자영업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과제 중 하나임.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 활성화 정책도 실패했고, 문화 조성 중심의 접근도 한계가 명백함.
- 한편으로 상인들의 이익집단화가 점점 더 높아져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시장 규모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풀뿌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커뮤니티에 기반해야 가능함. 커뮤니티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커뮤니티를 만듦. 상설장뿐만 아니라 마르쉐나 계단장 등 벼룩시장도 주목할 만한 대상임.

혁신 플랫폼

- 지역마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중간지원조직 설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과의 협상력 제고 노력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개별 조직 중심이나 단순 네트워크 관점을 넘어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 새로운 사회혁신의 토대와 기반이 되고 있음.
- 플랫폼은 단순히 모아놓는 공간이 아님. 핵심기능과 운영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함. 중간지원조직이 섹터간 장벽을 넘고 공공의 재원을 민간 역량을 통해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 행정의 하위 전달체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거버넌

스 조직이 대표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공공과의 협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자유로운 공론장, 관계망의 지속적 확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오픈랩: 기술과 사회]

1. 오픈랩 주제설명과 제약요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었으며, 특정 기술로 인해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는 파괴적 혁신이 초래되기도 함.
-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사회적 필요, 혹은 이 두 가지 이유 모두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 전체에 영향을 끼침.

■ 참고사례

#예시1

- 방직기술로 가능해진 대량 생산은 도시와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산업 혁명을 일으켰으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성직자와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지는 계기가 됨으로서 르네상스의 계기가 됨.

#예시2

- 세탁기의 발명으로 인해 여성들이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서 여성의 권리 증진에 기여¹³¹⁾

○ 기술에 보다 밀접해진 사회

- 도시화 및 세계화, 여가의 발달,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과의 관련성 증대로 인하여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술의 변화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력 증대

131)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위치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10년경 모바일 서비스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 가능
- 이처럼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사람들간의 관계나 사회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파괴적인 기술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것이 사회 혁신의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

기술에 대한 이해차가 만들어내는 벽¹³²⁾

최근 10년 사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미디어 환경과 소통 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인터넷이 이 변화를 이끌었고, 모바일이 가속화시켰다. 미디어 환경과 소통 방식의 변화는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경로와 방식, 대화하는 방식, 만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의 경계도 없고 공간의 경계도 없다. 집에서 진행되고 지하철 안에서도 진행된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곧 활동이다. 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만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는 선입견, 오프라인 공간에서 돈을 들여 사람을 만나는 것만 조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야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논의 범위

■ 논의 범위

○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 방법론적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기술과 사회’ 주제는 온라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132) <http://nowplanb.kr/1418>

- 완전히 오픈식으로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제한 아래서 동일한 질문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던짐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임. 관련된 답변들을 정리함으로서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입체적으로 모색
- 인터뷰이에게 던진 다섯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음

* 당신은 누구십니까?
*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기술 분야의 트렌드를 꼽는다면?
*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기술이나 기술 트렌드를 꼽는다면?
* 미래를 상상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 기술로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 질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기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반대의 방향으로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질문.
- CCK 사무국장인 큐레이터의 특징을 살려 개발자, IT 기술을 본업과 맞춰서 활용하는 사람, 공유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섭외함

3) 주제와 관련해 발견하려고 했던, 사회혁신과 연계된 핵심 문제의식

- 기술에 관한 모임의 경우 다수가 토론을 할 경우 특정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기에 참석자들의 실제 생각과 달리 편향성 높은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음. 큐레이터가 개별 인터뷰가 개개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함
- 기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보다 가까워지며 사람들도 친밀하게 느껴짐. 사회혁신은 단순히 시민사회나 정부만의 아젠다 이상이라는 점 생각한다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의미부여가 중요함.

- 단순히 기술 자체의 혁신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맞춤.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1) 형식 : 인터뷰 중심

■ 1단계 : 오퀘스천 인터뷰

- 약 20명에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과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질문 5개를 던져서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이가 강조한 내용과 큐레이터가 전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결과 약 46개의 키워드를 도출함.
- 인터뷰이 선정은 큐레이터가 생각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담당 코디네이터의 추천으로 결정함. 사이트명은 오퀘스천O-question이라고 함. 오픈랩Open Lab의 O(5)를 살리되 다섯 가지 질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림 5-1. 오퀘스천 사이트

- 사이트¹³³⁾를 보면 구성을 알 수 있음. 사전에 사이트를 만든 후 5명 정도의 인터뷰는 먼저 올리고, 후에 인터뷰이들은 사전에 사이트를 알려줌으로써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리 알게 해 줌.

■ 2단계 : 심화 세미나

- 참석자: 구본권(한겨레), 이희욱(블로터), 이성규(블로터), 이정환(미디어오늘) 등 언론인 4명
- 기술과 사회혁신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5명과의 심층 세미나를 통해서 키워드 초안 그루핑 및 최종 키워드 선택에 참조함. 중립성 및 관찰자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자들과 논의해서 키워드를 선택함.
- 5개의 질문이라는 통일된 포맷으로 인하여 응답자들에 키워드 정리 및 관통하는 시사점 발견에 상대적으로 용이함. 질문 확정 전 큐레이터가 주변의 3~5인 정도 인터뷰를 진행, 더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 진행

(2) 인터뷰이 선정 기준

- 인터뷰이를 선정할 때 기술 및 사회에 어느 정도 지식과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망라해서 진행함. 기술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분류함.
-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들(개발자, 디지털 기획자, 적정기술 코디네이터 등), 기술을 자신의 삶이나 전문영역에 활용하는 사람들(교사, 교수, 미디어 연구자 등),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사람들(마케터, 스타트업 기획자 등)로 분류한 후 섭외함.

133) <http://question.openlab123.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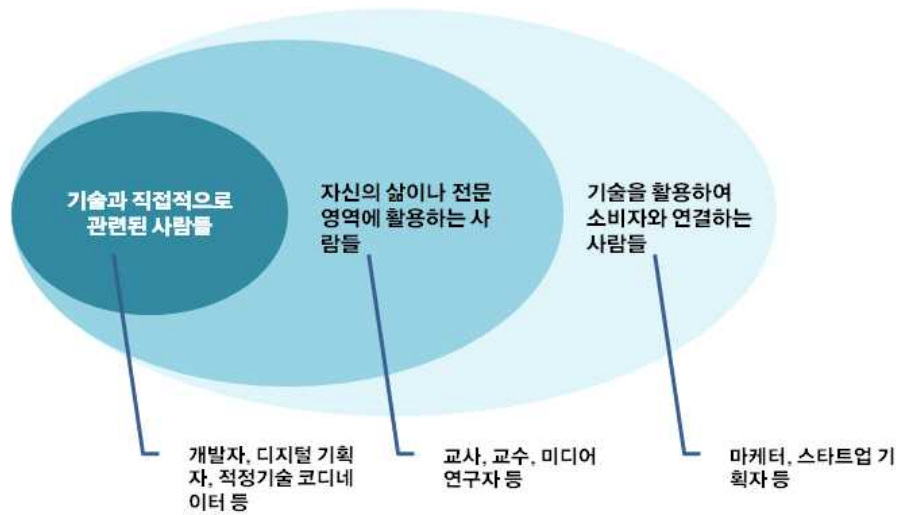


그림 5-2. 인터뷰이 유형별 구분

- 인터뷰이 명단 (총16명)

기술과 직접적 관련된 사람들	자신의 삶이나 전문영역에 활용하는 사람들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사람들
김정태(적정기술 전문가)이 성은(그린피스 디지털미디어) 고영혁(고백터 대표) 오원석(CCK 활동가) 다이앤(CCK 자원봉사자) 최장현(디지털 기획자) 이종은(인디 개발자) 장승훈(코드포서울 활동가) Lynn fine(코드 포 어메리카)	이성근(초등학교 교사) 김주현(대안학교 교사) 황지은(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경화(미디어연구가)	이준형(스타트업 기획자)박 준철(대기업 커뮤니케이션 팀) 신철민(서울사회복지웹기획 모임 대표) 양석원(디캠프 사업운영팀장)

※ 오케스천 홈페이지¹³⁴⁾에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으며, 인터뷰이별 정리 뿐 아니라 질문별 대답, 주요 태깅별 정리 확인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함.

134) <http://question.openlab123.kr/>

2) 논의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 인터뷰를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된 키워드를 도출해 태그 형식으로 정리함. 인터뷰어가 태그를 직접 뽑거나 인터뷰어가 내용을 요약하며 핵심 단어를 선정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함.
- 오케스천 웹페이지 태그 형식으로 정리. (글자의 사이즈는 가중치).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큐레이터가 정리하며 하단부의 키워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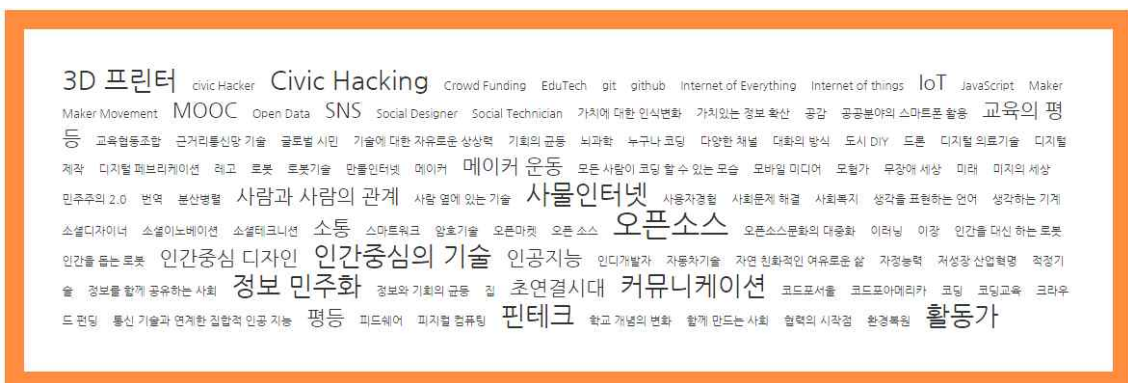


그림 5-3. 오케스천 웹페이지에 태그형식으로 정리한 키워드

Civic Hacking	공감	로봇	메이커	모험가	무장애 세상
크라우드펀딩	교육의 평등	민주주의 2.0	인간의 친구, 로봇	생각하는 기계	스마트워크
EduTech	교육협동조합	오픈소스	이러닝	인공지능	자연친화적 인 삶
Git	글로벌 시민	저성장, 정보 산업혁명	공유사회	정보민주화	기회의 균등
IOT	상상력의 실현	초연결시대	초협력사회	초효율성사회	피드웨어
JavaScript	기회의 균등	핀테크	학교 역할의 변화	집합적 인공지능	감시 사회
MOOC	뇌과학	투명사회	실용래터티99	디지털제작	드론
누구나 코딩	도시 DIY	대화의 방식	디지털 의료기술		

그림 5-4. 키워드 정리

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인터뷰를 통해 1차적으로 추린 약 50여개의 단어들을 i)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단어, ii)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 iii)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지가 담긴 단어들 등으로 1차 구분
- 1차 구분 후 다양한 단어들을 비슷한 의미나 연결어가 있는 단어로 정리하여서 분류. 하지만 그 가운데 개별 단어가 가진 날카로움이나 본래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함.
- 다른 주제들과는 다르게 핵심 키워드에 관련 키워드도 함께 배치, 향후 작업에 감안할 예정임.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관련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 삼초사회 * 무장애세상	- 초협력/초효율/초연결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 메이커	- 3D 프린터, 해커 - 휴머놀로지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로봇	- 딥러닝, 빅데이터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 기회의 균형 VS 불평등	- 정보민주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 정보 민주화 * 기술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기술	- Civic Hacking, 오픈 소스 - 감시사회,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 Civic Hacking * 오픈 소스	- 열린 정부, 오픈 데이터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 누구나 코딩	- 사물인터넷, 에듀테크

3) 주요 키워드 설명

시빅 해킹 Civic Hacking

-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용함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만들거나 최상의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함.
-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서울버스. 스마트폰이 처음 국내에 유통이 되었을 때 당시 고등학생인 유주완군이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직접 개발함. 서울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의 실시간 버스 정보를 기반으로 정류장에 내가 타는 버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함. 공공기관에서 제공했어야 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시빅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임.
- 보스턴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며, 소화전이 눈에 파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개발자들이 ‘소화전 입양 캠페인’을 펼치는 웹사이트를 제작함. 내 집 앞 소화전을 입양해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소화전을 돌보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 이 웹사이트는 하와이에 있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됨. 하와이 지역에 태풍이 오면 울리는 경보기를 시민들이 입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렇듯 각 도시들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시빅 해킹의 결과물과 해결책은 다른 도시에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음. 약간의 소스만 수정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재이용할 수 있음.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전세계의 시빅 해커라는 신종 그룹이 만들어짐. 시빅해커란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공공 데이터, 코드, 기술을 사용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음. 시빅해커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유, 협력하고 있음

■ 참조사례

1. 중앙일보(2015.3.25) 한국은 촛불 들었고, 외국은 SW로 혁신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30422&cloc=olink|article|default

이중식 교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는 "디지털로 무장한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이들은 '시빅 해커(Civic Hacker)'나 '소프트웨어 활동가'로 불린다"면서 "시빅 해커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공공 데이터를 짜깁기하며 기술의 발전을 사회적 어젠다와 연결시킨다"며 한국을 '시빅해커가 태동하는 단계'라 소개함.

2. 블로터닷넷(2014.09.11) <http://www.bloter.net/archives/205988>

할 세키 코드포재팬 대표 “시빅해커여, 세상을 바꾸자”

“...도쿄에서 일하는 위치정보 분야 전문가 할 세키는 큰 지진이 발생하자 평소 활동하던 오픈소스 위치정보 개발 공동체 ‘오픈스트리트’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누군가 ‘우샤히디’-아프리카에서 재난 정보를 공유하는 위치정보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을 언급하자, 1개월 동안 프로젝트 관리자로 나서 개발자 공동체 ‘핵포재팬’과 함께 꾸린 지진 피해 재건 정보 공유 웹사이트 ‘신사이닷컴포’를 개발했다. ‘신사이’는 일본어로 지진이라는 뜻이다. 신사이닷컴포는 3년이 넘도록 재해 복구 포털사이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내 시빅해킹 커뮤니티: 코드포서울 <http://codeforseoul.org/>

- '코드포-' 커뮤니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약 11개국의 80여 도시들이 Code for All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킹과 협력을 함께 함. 주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활동가로 있으며 오픈 데이터,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며, 국내에는 코드나무가 협력하여 코드포서울 프로젝트를 운영함.

- 코드포서울은 IT기술을 통해 서울을 위해, 서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커뮤니티임. 2014년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소개한 앱 ‘알뜰 서울의 발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룬 ‘의원님을 부탁해’ 등을 진행함.

3. 전자신문(2014.07.28), <http://www.etnews.com/20140727000020>

“혁신적 사고, 빠른 행동력 가진 창업가들 재난안전·도시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철도·지하철 등 각종 시설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과 도시문제, 재난 대책에 대한 솔루션을 스타트업과 예비창업가들이 모색한 장이 열림. ‘도시문제 해결 및 구호·안전 관련 1박 2일 해커톤 ‘디.캠프파이어-시빅테크 해커톤(Civic Tech Hackathon)’을 개최함.

정보민주화

- 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지기에 지식이 진정한 공공재가 되어가고 있음. 지식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진 정보 및 경험도 인터넷 등을 통해 연결되어 흐르기에 공공재가 되어 감. 이처럼 정보 기술은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시켰으며,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이었던 정보를 이제는 누구나 사용 가능.
- 하지만 인터넷에서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정보가 독점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 또한 개인정보나 개인의 취향정보, 생활 정보와의 거래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정보민주화는 정보의 공공재를 실현하고자 우리의 염원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음. 실현가능성 및 투명사회에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참조사례

1. 한겨레21(제951호/2013.03.08) 공공정보 구슬 깨어 보배 만들어보아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43.html

"...하지만 우리 정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조다. 애초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정보는 내부 열람용이지 공개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또한 시민들의 요청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PDF 파일이나 종이 형태가 많다. 이런 정보를 시각화하려면 정보를 하나하나 가져와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애초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공유를 염두에 두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까닭이다.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현미환 외, KISTI 지식리포트, 개방형 데이터 평가를 위한 오픈데이터 측정지표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12(NO42)

-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용어는 '개방형 데이터(Open Data)'로 열린 정부 선언, 운동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음. 열린 정부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공적인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모든 정보의 의사결정 절차 및 문서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함.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열린 정부"를 선언, 연방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data.gov 운영. 영국 역시 개방형 데이터 프로젝트 진행.

오픈소스

- 오픈 소스에 대한 설명은 시빅 해킹에서 나온 원리와 비슷. 오픈 소스 기술 자체의 혁신보다는 기술로 파생되는 태도의 변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오리라 보임.
- 내 것을 공유하며 존중받기 바라는 만큼 남의 것도 존중하는 윤리가 현재의 기술과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짐.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고, 서로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오픈소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누구나 코딩

- 이제 코딩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이자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다양한 가능성의 실현을 돕는 도구임.
- 기술의 발달 및 다양한 코딩언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됨. 영국, 미국 등의 국가 등에서는 코딩을 정규 교과목으로 넣기도 하며,¹³⁵⁾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오바마 등이 적극적으로 코딩 배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한정된 기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코딩을 배우게 되었을 때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 물론 오픈 소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코딩 기능만을 배운다기보다 그에 놓여 있는 원리 및 사고방식을 함께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135) 블로터닷넷(2014.10.21) "BBC, '닥터후' 이용한 어린이 코딩 교육 게임 개발"
<http://www.bloter.net/archives/210300>

메이커 문화

-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고 싶은 Geek(기)들의 문화. 3D프린터가 등장하며 손쉽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아두이노¹³⁶⁾와 같은 보드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코딩으로 사람들은 센서 등 단순한 로봇들을 직접 만들 수 있음. 이런 만들기 열풍은 단순히 취미로 그치지 않고, 킥스타터와 같은 소셜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받아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기도 함¹³⁷⁾.
- 메이커 문화는 취미를 넘어 제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져오며 해커 문화와도 연관됨. 물론 돈을 벌 의도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쓸 물건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음. 하지만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1세기 제조업에서는 블록버스터 상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버스터 상품의 독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차별적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상품을 수천 개 씩 생산하는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생산자들의 혁신이 모여 산업경제를 재창조 가능. 근로자 수십만 명을 고용해 대량생산 제품을 파는 대기업 하나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작은 유연한 조직 수천 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리라는 기대.

■ 참조사례

1. 조선일보(2015.01.24), [Weekly BIZ] 준비는 끝났다 '1인 제조기업' 세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4/2015012401791.html
2. 프라임경제(2014.12.19), [칼럼] 디지털 공방, 메이커스페이스
http://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95053&sec_no=1

136)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아두이노가 인기를 끌면서 장난감 회사 레고는 자사의 로봇 장난감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동차회사 포드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차량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XC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출처=위키백과)

137) 슬로우뉴스 2015.03.25일자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이다-메이커 운동"기사에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소개했다. 출처: <http://slownews.kr/39006>

무장애세상

-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으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발레리나를 위해서 MIT media Lab에서 최첨단의 의족을 개발, TED에서 그녀의 발레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줌.¹³⁸⁾ 의족 뿐만 아니라 향후 3D 프린터의 발달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손상된 인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루게릭 환자가 소통하는 첨단 기계 등은 장애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고 있음.

■ 참고사례

슬로우뉴스(2015.1.27) "의수 제작 가능할까요?" - 3D 프린팅 전자 의수 제작기

<http://slownews.kr/39006>

- 국내에서 두 손을 잃은 전직 프레스 엔지니어를 위해 3D프린팅 전자 의수 프로젝트 실험함.

인공지능, 인간의 친구 Robot



<이미지출처=구글 검색>

- 2013년 개봉한 영화 “Her”에서 OS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판단, 주인공 남자가 원하는 답변과 정보를 제공함.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낸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수준으로 발달. 또한 단순히 객관적 정보를 넘어 주인공의 현재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주인공의 상황

138) http://www.ted.com/talks/hugh_herr_the_new_bionics_that_let_us_run_climb_and_dance#t-11898

< Hugh Herr: The new bionics that let us run, climb and dance >

에 따라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함.

- 발전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상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진전은 없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의 변화는 괄목할 만함.
- 이처럼 기계가 가진 판단력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는 앞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던지기도 함.
- 매일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누적되면서 기계가 습득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고 있음. 통신 기술과 연계한 집합적 인공 지능으로 로봇의 능력은 진화 중. 컴퓨터는 이제 사람처럼 배울 수 있고 사람이 판단 기준을 정해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 가능
- 최근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쿰139’이 대학입시 모의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음. 도로보쿰은 일본 인공지능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로봇으로 도쿄대 합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임. 시험 점수는 비록 도쿄대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의 정답을 맞춰 인공지능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이처럼 앞으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의 진화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감시사회, 기술을 감시하는 또 다른 기술

- 기술의 진보는 관성과 같아서 멈추기가 쉽지 않음. 기술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마치 어려운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희열에 우선순위를 두기에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나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39) 매일경제(2014.11.04), 日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쿰`, 도쿄대 입시 합격이 목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7674>

- 이런 태도가 기술의 발전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거나 논의하지 못하였을 때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특별히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공인 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활동 역시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감시되는 상황이기도 함.
-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숙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가 필요. 특별히 그 기술이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집단의 압력을 통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함.

3초 사회

- 초효율·초연결·초협력 세 가지가 중요한 사회.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냄.
초효율 : 공유경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유희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정된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의 심각성 등을 피부로 느끼면서 가용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와 같은 경제 시스템이 점차 중요해짐.
- 초연결 : 인터넷의 등장으로 혈연/지연 등 기존의 정형화된 사회관계를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공통 관심사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발한 교류 가능.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의 발달은 이런 경향을 더욱 촉진함.
- 초협력 : 지식을 함께 모으는 집단지성, 온라인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몸으로 습득한 협력의 경험은 오프라인에서도 실현. 인터넷을 통해서 위계적인 구조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직화가 가능함을 배웠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연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음을 깨달음. 향후 동료생산과 네트워크 및 협업의 경험은 꾸준히 발전하리라 예상.

기회의 균등 vs 불평등

- 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회가 균등해질 것을 예상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리라 우려하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 우려하는 이유로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따라서 정보의 활용도가 비례하고 있기 때문. 즉 양적 차이보다, 정보 활용에서의 질적 격차 즉 정보의 이용능력과 접하는 정보의 레벨 등 질적 차이가 중요해질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히 교육정보와 학술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공유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 MOOC 등 이런 교육정보의 공개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OER운동: Open Education Resource운동) 이제는 어디서나 MIT, 스탠포드 등의 수업과 온라인을 위해 따로 만든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의 활용 능력이 누구에게나 자유롭지는 않음. 우선 언어적 장벽이 있고 지적 호기심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재의 접근성이 의미가 크지 않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포르노 등의 정보에 중독될 가능성 등도 있음. 이런 이유로 정보의 공유가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음

■ 참고사례 : 슬로우뉴스 VS 슬로우뉴스

"무크(MOOC)와 공짜 대학: 기술이 교육을 구원하리라"(2015-03-04)

<http://slownews.kr/38191>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무크가 기존 대학 체제에 미칠 영향을 '대학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무크(MOOC)와 거꾸로 교실: 기술은 교육을 구원할 수 없다(2015-04-13)

<http://slownews.kr/39610>

"웹 기반 교육은 새로운 교육기회를 창출했지만,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와 함께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야기했다...."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1) 논의 내용의 제약과 한계

■ 플랫폼이 가진 한계

- 초기 계획은 해외에 6 questions 이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인터뷰이들이 동영상에 부담을 가지거나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텍스트 질문으로 대체. 이로 인해 동영상에서 기대했던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다른 오픈랩 모임과 달리 그룹 토의보다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 다른 모임들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해, 기술과 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조금 더 풍성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음.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키워드를 뽑되, 참여자+@로 같이 논의해서 발전시키는 모임은 한 번만 개최. 참여자들이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함.

2) 논의 주체의 제약과 한계

- 큐레이터와 코디네이터의 추천 중심으로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의 분야 인터뷰이의 비중이 적었음.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비록 그룹이 모였을 때 편향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기술이 만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

3) 오픈랩 형식의 제약과 한계

- 인터뷰 진행까지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족. 내용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후에 반응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부분이 부족

5. 다음 단계 심화 운영을 위한 과제

- 위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개별 키워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 및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 위에서 핵심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를 적었으니 관련해서 진행 가능
- 관련자들간의 사전 토론 및 합의를 통해,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필요함.

[오픈랩: 기후변화 및 삶터, 삶의 방식]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현실의 위기로 다가오기 전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현실문제로 닥쳤을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과국 혹은 과국에 준하는 상황을 지역, 국가, 전지구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환경문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얽히면서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환경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공급자(정부, 지자체, NGO 등) 위주의 의제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어 더욱더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와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함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위로부터 나와 가족, 지역과 국가의 '삶터'를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함.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 오픈랩의 주제

- 기후·환경 문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원전, 전염병, 전력사고 등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되며, 이는 사회 시스템과 도시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임. 여러 보고서¹⁴⁰⁾에서 알 수 있듯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는 행정주체(지자체, 중앙정부 등)나 입법주체, 더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음.

140) 국립방재연구원(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한국행정연구원(2012) 등

- 한편 1992년 리우회의이후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왔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해결에 국가와 국제간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내부화와 같은 시도도 성과를 만들지 못해,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식되고 있음.
-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위기감은 커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의 기후·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과 삶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임. 화석연료와 원전 대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화학비료와 살충제와 동물학대로 만들어진 음식 대신 친환경적인 유기농 먹거리의 선택과 같이 [오픈랩]에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겪는 문제와 대안적 선택, 해결방안을 듣는데 초점을 둬.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 각각의 대화는 나와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BOTTOM-UP방식의 사회혁신 의제를 찾고자 함
- 기후와 환경문제는 곧 세대간의 윤리의식과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에 있음. 나아가 삶의 주체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태도와 공동체와 공공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에 달려있기도 함. 이를 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자치 민주주의’. 자신의 삶터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민주주의의 완성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환경문제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출구일 것임.
- 나와 우리의 삶터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일과 사고.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나 NGO가 주도해온 top-down방식의 의제설정(공급자 중심)에서 삶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서 bottom-up방식(수요자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키워드를 찾고자 함.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모임 운영 방식

○ 포커스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 대상별 구분

1차- 정당, 환경단체, 연구소 등 전문가그룹(5명)

2차- 환경단체 청년활동가, 귀농(또는 귀농 실패) 청년, 지역 활동가/2030, 8명

3차 -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신중년그룹/ 5060, 12명

4차 - 도시 텃밭 커뮤니티/ 3040 대상, 5명

○ 참여자 선정 범위

- 삶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는 bottom-up방식(수요자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키워드를 찾기 위해,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도와 적극성(현장 활동 등), 연령대를 고려하여 섭외함.

-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5가지 분류를 참고함¹⁴¹⁾.

■ 1회차-4회차 모임 요약

○ 1회차 모임 결과

- 참석: 이유진(녹색당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이보은(마르쉐 기획자, 전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5명

○ 결과 요약

1_ 첫 번째 질문_ 우리 사회 혹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부딪히는 문제

141) 에버렛 로저스는 저서 <혁신의 확산>에서 혁신의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이노베이터 innovators 2.5% , 얼리어댑터 early adopters 13.5%, 선도적 대중 early majority 34%, 후발 대중 late majority 34%, 느림보 laggards 16%로 분류했다.

일상적 삶의 문제/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p>자존감이 없어진 사회- 모멸감의 사회(대한항공, 4대강 공무원 등)</p> <p>자유로운 개인들의 등장</p>	<p>불안사회</p> <p>경제적 양극화</p> <p>가치 실종의 시대*</p> <p>정보 과잉 사회-잔인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p> <p>속도에 대한 압박</p> <p>굴욕감을 주는 사회</p> <p>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p> <p>뉴노멀이 된 환경문제</p> <p>환경문제와 정치적 의지*</p>	<p>아이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질병사회*</p> <p>곳곳에 실재하는 위험*</p>
<p>새로운 형태의 소외- 단절의 구조화*</p> <p>시스템과 새로운 개인의 출현*</p>		

2_ 두번째 질문_ 10-20년 내 우리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문제들

예측되는 변화 또는 문제	개선-전환이 필요한 문제	새로운 흐름
<p>농사와 에너지 기술</p> <p>차이나쇼크</p> <p>저성장사회</p> <p>고령화</p> <p>사회적 폭력성의 증가</p> <p>구조적 양극화 심화</p> <p>도시간 격차 심화</p> <p>극단적 상황*</p> <p>국가 정체성의 혼란*</p> <p>(선진국? 개발도상국? 분단 국가?)</p>	<p>복지제도</p> <p>지금까지의 성장 담론</p> <p>국가 역할과 개념의 재구성*</p> <p>기업의 사회적 역할</p>	<p>도시가 대안이다</p> <p>도시간 협력 - UN 거버넌스*</p> <p>자급적 삶의 방식과 삶의 기술*</p> <p>(노마드 농가 등)</p>

○ 2회차 모임 결과

- 참여: 이우향(서울그린트러스트), 한만형(녹색연합 활동가), 이정기-장희숙, 폐달-하얼/귀농부부, 여길욱(전 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그린씨(그린

디자이너), 김민주(전 희망제작소 연구원/귀촌 경험)/9명

- 1차 모임과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와 우리 사회의 문제에 집중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개인 문제/삶의 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생수 소비 - 물 낭비 일회용되어지는 삶 타성에 젖은 생활민감성과 유대감의 복원* 먹거리 문제	수도사업 - 수도세 물 공급-소비의 생활방식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 지역경제와 개발담론*	물 부족 이상기후 - 수목한계선, 사 계절 동물권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그라 운딩 등)
삶의 선택지를 단순화시키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 폭력적 방식의 시위-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 3회차 모임 결과

- 참여: 숲생태지도자 프로그램 수강생 14명 대상(50대 이상 신중년그룹)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와 우리 사회의 문제에 집중함.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일상적 삶의 문제/변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아파트 층간소음-남에게 피 해주는것삶터-이기심-무관 심-편리성 이사 - 아파트 중심의 근린 환경 대화가 없는 가족 밥상문제 음식물쓰레기 - 분리수거 절약- 과소비 흡연, 세제	에너지-에너지 절약 자동차 매연 황사(중국발 황사) 매연(자동차) 원전 물가상승 친환경 기술수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라돈 물 일회용 사용 쓰레기와 에너지

- 개인의 선택과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부문은?

(개인) 생활방식의 변화	(사회) 시스템 체인지가 필요한 부분
도시텃밭 명상-참선-숲해설가 취미계발 나눔과 봉사 생태적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 소박한 생활 도시와 농촌생활의 조화	투명한 정부와 개인 정보 보안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 확고한 법 집행 사회지도층의 의식 변화, 국회개혁, 공동체 교육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배려 사회가 추구해야할 철학 또는 가치관 생활용수 문제 전기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 교통시스템

○ 4회차 모임 결과

- 참여: 홍대 텃밭 다리 6명 참석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 우리사회의 문제는?

개인적 상황	개인적 상황+사회 관련	경제적 이슈	공간
엄마라는 존재(역할) 바쁜 일정 인간적이지 않은 인 간관계 내 사람!(커뮤니티)	노후 꿈이 없는 청년 불안 사회 기준을 지키는 것 같이 밥먹을 사람이 없다	일의 지속여부 혼자살거나 배고프 거나	이동시간 아파트(주거) 별을 볼 수 없다

-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 삶터를 위협하는 문제들과 대안은?

문제	대안
미세먼지 방사능오염 - 원전 불안 GMO 유전자 변형식품 등 먹거리 안전 4대강 사업 도심 속 녹색환경 화학섬유 기후변화 - 사라진 사계절 - 예측불가능한	5도 2촌 - 분산과 집중 소비자들의 사회적 소비(윤리적 소비, 공정 소비 등) 각자만의 커미트먼트 작은 커뮤니티들 - 개인이 플랫폼 사회적 선택을 지원하는 삶 귀농/귀촌

기후 불안사회 질병과 면역력 약화	꾸러미상품의 커뮤니티 홍보 - 네트워크 공감포인트를 찾는 것 좋은 먹거리 유통을 위한 사회적 장치(시스 템 설계 등)
--------------------------	--

※ 환경문제 16강전 : 최종 우승자 ①먹거리. ②미세먼지, ③재난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개념	키워드	인스턴스_연관키워드				빈도수
검은 비	예측불가능한 기후	대기오염	라돈	매연 (자동차)	미세먼지	16
	이상기후-수목한계선, 사계절	별을 볼 수 없다	방사능오염	사라진 사계절	세제	
	일회용 사용	지구온난화	화학섬유	흡연	기후변화	
도시	도시가 대안이다	도시간 네트워크	도시간 격차 심화	도시간 협력	도시와 농촌생활의 조화	14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그라운딩 등)	도시축소와 분산	도시텃밭	도심 속 녹색환경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금까지의 성장 담론	이동시간	지역경제와 개발담론	도시 네트워크	UN 거버넌스	
사회불안	가치 실종의 시대	극단적 상황/극단주의	굴욕감을 주는 사회	근본주의	불안 사회	12
	일회용되어지는 삶	사회가 추구해야할 철학 또는 가치관	정보과잉사회	삶의 선택지를 단순화시키는 사회	일의 지속여부	
사회문제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사회	곳곳에 실재하는 위험	구조적 양극화 심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	11
	저성장사회	물가상승	사회적 폭력성의	시스템과 새로운	양극화	

			증가	개인의 출현		
국가	국가 역할과 개념의 재구성	국회개혁	국가 정체성의 혼란	환경문제와 정치적 의지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	11
	투명한 정부와 개인 정보 보안	복지제도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회지도층의 의식 변화	확고한 법 집행	
관계	같이 밥먹을 사람이 없다	나눔과 봉사	내 사람!	남에게 피해	단절의 구조화	11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관계	대화가 없는 가족_밥상문제	작은 커뮤니티들 공동체	샴터-이기심-무관심-편리성	새로운 형태의 소외	
에너지	고비용 저효율	쓰레기와 에너지	에너지-에너지 절약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절약-과소비	8
물	물낭비 수도세	물공급-소비의 생활방식	물부족	생수 소비	생활용수 문제/수도 사업	8
자존감	모멸감의 사회	대한항공	자존감이 없어진 사회	자유로운 개인들의 등장	잔인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	6
명상	명상-참선-숲해설가	바쁜 일정	생태적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	소박한 생활	속도에 대한 압박	5
먹거리	먹거리 불안	GMO 유전자 변형식품	먹거리 문제	아이들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	좋은 먹거리 유통을 위한 사회적 장치(시스템 설계 등)	5
자동차	교통시스템	전기자동차	자동차 매연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		5
POOR& RICH	대안기술과 로봇	로봇	솔루션의 양극화	토종과 식물공장		5
플랫폼	개인이 플랫폼	꾸러미상품의 커뮤니티 홍보	사회적 선택을	오픈 플랫폼의		4

			지원하는 삶	확대		
공감	공감 포인트를 찾는 것	타성에 젖은 생활민감성과 유대감의 복원				3
공정소 비	공정소비	소비자들의 사회적 소비	윤리적 소비			3
노마드 농가	5도2촌-분산 과 집중	귀농/귀촌	농사와 에너지 기술	적정규모	자급적 삶의 방식과 삶의 기술	3
노후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배려	사회적 할 일				3
원전	원전 불안					2
질병	질병과 면역력 약화	질병사회				2
중국	차이나쇼크	황사(중국발 황사)				2
4대강	4대강					2
교육	교육					1
기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					1
동물권	동물권					1

4.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종합의견 및 선정기준

- 전문가 그룹을 제외한 3회차 모임에서는 4회차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은, ▲ 삶의 질과 행복한 삶 ▲ 사회적 위기와 안전한 삶으로, 사회 변화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겪는 불안과 고립/단절 그리고 대처방안 등이 논의됨.
- 참여자들은 개인 문제 또는 삶의 터의 문제를 삶의 질¹⁴²⁾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먹거리나 환경성 질환 등에 대한 민감한 대응을 제하고는 환경 문제를 주관적 웰빙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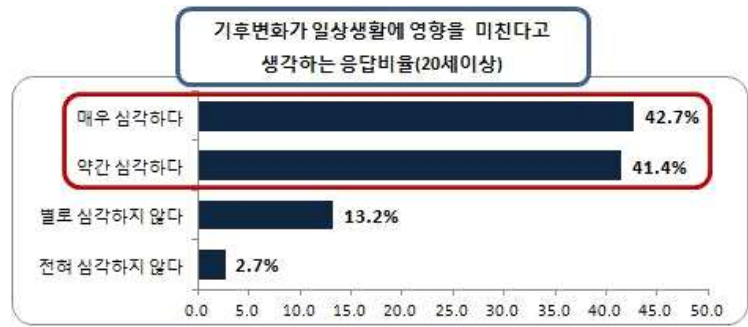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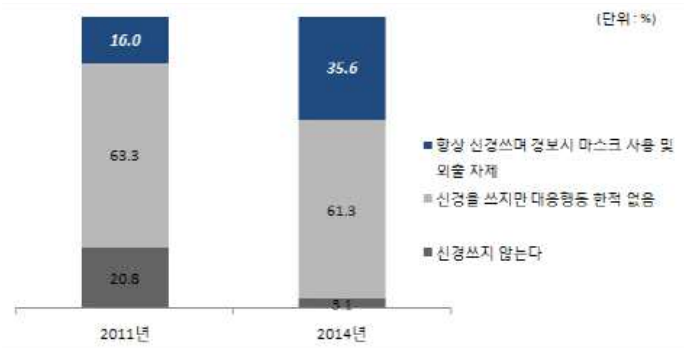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비고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삶의 기술 대안기술과 식물공장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한국형 트러스트 운동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생태적 여가 식량안전전략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삶의 기술 생태적 삶과 경계를 연결하는 그린커넥터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한국형 트러스트 운동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142) OECD의 '삶의 질' 지표를 참고함. OECD의 '삶의 질'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건강상태, 일-생활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 안전, 주관적 웰빙을 다루고 있다.

3) 10가지 키워드 설명

검은 비(미세먼지 관리)

- 최근 중국발 뉴스에서 북경에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함. 서울의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영향 받고 있어, 서울시장이 북경시장을 만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을 이웃하는 우리에게 차이나쇼크는 경제사회 문제를 넘어 기후환경문제까지 치명적임. 모든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으며 영향력이 높음.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경 이슈는 기후변화¹⁴³⁾, 대기오염, 날씨, 계절 변화 등을 통해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¹⁴⁴⁾. 미세먼지는 현대인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키워드임.



출처: 웹진 <서울시민 녹색생활>

도시주의와 유엔거버넌스

143)제공=서울시, http://stat.seoul.go.kr/jsp3/html1/html/webzine.view.jsp?wj_id=53&page=4&link=2
 144)서울시민의 대기오염 예·경보제에 대한 민감도. 서울연구원 제공. 2011년 설문조사는 김운수, 201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연구' 참조. 2014년 설문조사는 서울시민 1131명 대상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오래된 컨셉이면서도 유효한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를 재해석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과 자국 이기주의로 문제해결이 요원한 상황에 진정한 UN 거버넌스를 만들지 못하면 파국을 면할 수 없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등 대부분의 문제는 도시에서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발생¹⁴⁵⁾하고 있기에 국가단위의 문제해결보다는 도시, 자치단체, 마을, 커뮤니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앤서니 기든스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기후변화 등-을 해결하는데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대안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인정함. 유엔은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리우정상회의 등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환경의제를 제안하면서 여전히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¹⁴⁶⁾. 또 기든스는 기후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주체로서 도시의 움직임에 주목함. 전세계 도시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우도 중요한 흐름이라고 진단함.
- 1995년 미국 시애틀시가 추진한 기후변화협정에 세계 49개국 368명의 시장들이 참여했고, 그와 비슷한 수의 도시들이 현재 기후보호도시협약에 참여하는 등 지방정부들의 문제해결방식을 소개함¹⁴⁷⁾. 1990년에 세워진 이클레이(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현재 84개국, 12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함.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됨.

145) OECD의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Cities and Green Growth”을 요약정리한 자료에서 도시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인구 및 경제활동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됐다고 봤다. 현재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OECD 회원국: 53%), 2050년경에는 2/3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UN HABITAT 2009), 인구 1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에 사는 인구 비중은 현재 9%에서 2025년에는 12%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UN 2008년 자료). 도시 인구 비중은 약 50%이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80%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봤다.

146) 앤서니기든스, 홍욱희 옮김,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2014, 300-305쪽을 참고했다.

147) 위의 책, 186쪽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로서 귀농귀촌 정거장

- 모든 그룹에서 논의된 귀농귀촌에 대한 키워드의 해법으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재구성함. 전체 인구의 25%가 0.6% 면적에 거주하고, 50%이상이 3% 면적에 거주하는 기형적 사회, 한국. 과밀한 도시와 과소한 농촌은 양쪽 다 심각한 삶의문제를 야기함. 도시는 자연계를 벗어나 인간계만의 세계로 진입하였고, 농촌은 넘치는 자연계를 돌볼 사람이 없이 무차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위기임.
- 귀농귀촌은 개인의 선택으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음. 누구나 손쉽게 자연계로의 이주를 도전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함.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소셜카페 등이 농산촌으로 진입하기 적절한 읍면소재지에 정거장은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임.
- 귀농·귀촌가구수는 해마다 증가¹⁴⁸⁾하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젊고, 고학력으로 타 직업분야의 경험을 가진 이들로 도시생활을 벗어나 농촌생활을 향유하고자 주로 비연고지 위주로 귀농·귀촌을 선택함¹⁴⁹⁾. 우리 사회의 귀농촌 현상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자 대안적인 생활방식으로 소개한 정기석 마을연구소장¹⁵⁰⁾은 귀농촌 교육 등 사전준비가 미비하고 부실하며, 소득원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귀농촌에 실패하고 도시나 타 농어촌지역으로 재이동한 경우'는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이 가장 큰 원인임.

148)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4

149)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42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에서 낸 세미나자료집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참고했다.

150) <프레스리안>은 최근 농업과 농촌, 생태의 가치를 느낀 귀농촌 가구들이 기본적인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역귀농 현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하고 있다. <프레스리안>에 '마을주의자'를 연재 중인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위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농부의 나라》《사람 사는 대안 마을》의 저자 정기석 마을연구소장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기획을 연재하고 있다. 출처=<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644>

- 현장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방향이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과의료, 교육 등 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회 제공을 강조함¹⁵¹⁾.

녹색 삶의 디자이너

- 환경운동가와 실천가, 도시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그룹에서 나온 대표 키워드로 선정함. 우리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한편 개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섬세하게 네트워크 되어 있음.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 삶과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산품은 투박하기 그지 없고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소비자들 마저 쉽게 지침. 그린디자인에서 소셜마케터까지 생태적 생산자와 윤리적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매개하는 다양한 그린커넥터들이 등장함.
- 2014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올해의 핫 외식트렌드”로 ‘1인메뉴, 매스티지, 로컬푸드’를 선정함. 건강과 식재의 안정성까지 챙기는 합리적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중 하나로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¹⁵²⁾을 내걸. 나주, 원주, 서천, 제주 등 여러 지자체, 전국 다양한 생산자조직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로컬푸드가 생산자/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로컬푸드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함. 로컬푸드가 여전히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면 서수요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우선 충족시켜야 비즈니스 모델이 선순환을 시작¹⁵³⁾한다고 지적함. 로컬푸드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윤리

151) 2012년 한국농촌연구원이 기획한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농촌으로 가는 길의 성여경 대표는 귀농귀촌가구의 금전적 지원은 자칫 기존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낸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관점에서 농촌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용범 대표는 귀농귀촌인들의 능력이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상호호혜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152) http://www.mafra.go.kr/2015plan/01/01_01_01.html

153) <http://heri.kr/145902>. 박상유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착한경제] 로컬푸드, 소비자 입

성 부여에 대한 경고, 로컬푸드의 중요한 작동요소인 시장성과 도구성도 고려¹⁵⁴)해야 한다고 지적함. 한편 생산자가 소규모로 직접 판매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터라 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와 유통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함¹⁵⁵).

■ 참고사례

1. 해외 창직 사례: 농산물꾸러미식단플래너(Local Food Menu Planner)

<http://www.foodtechconnect.com/>

<http://euntae.com/archives/488459>

2. 이웃농부는 울산 북구 달곡의 마을 기업

http://home.unist.ac.kr/uwebzin/bbs/board.php?bo_table=br13&wr_id=110

3.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을 꿈꾸는 광명텃밭보급소협동조합

http://gmsocial.or.kr/cat_press/838/

4. 로컬푸드요리사

http://www.jbreturn.com/sub.html?id=admin&code=20140421_180434_13617&o_search=&o_searchstr=&o_mode=view&page=2&o_seq=36&o_list_no=33

장에서 다시 써라에서 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절한 맛과 신선도, 가격,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뢰가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민간 혹은 공공부문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합리적 정보 공개,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154) 김철규,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115-119쪽.

155)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53>. 시사in 312gh(2013.9.14.)도시와 농촌의 공존 모색하는 ‘로컬푸드 대장정’

POOR&RICH(부제: 대안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 모든 그룹의 논의 맥락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기술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빠르게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경제적 처지에 따라 대응방법과 기술이 다름. 이는 개인적 선택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이기도 함.
- 2004년 쓰나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드러나듯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유층보다 빈곤층이 더 많은 피해를 짐. 2005년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할 때 부유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른 주로 대피했지만 차가 없거나 호텔비를 마련하기 힘든 이들은 도시에 남을 수 밖에 없었음. 재난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뉴올리언스 동부는 수몰됐으며, 재건사업이 시작된 부촌과 달리 빈촌에서는 16만채가 철거됨¹⁵⁶⁾.
- 가난한 자들은 소규모태양광, 빗물수확, 도시농업 등 대안기술을 고민하고 부자들은 외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식물공장에서 순수를 표방한 채소를 생산·소비함.
- 환경관련 R&D와 기술혁신은 부분적으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정책 과정에서 대표성(참여)의 불평등, 과학기술변화의 이득과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 즉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함¹⁵⁷⁾. 환경정의운동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UN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국제노동총연맹(ITUC)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사회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¹⁵⁸⁾하였음.
- 의료에서도 의료협동조합, 대안적 의료방안과 로봇, 원격의료 시스템 등이

156) 필리프 스키타르조니,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든 것》, 다룬, 2015, 408-418쪽.

157) 장영배,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158) 2010년 11월23일 COP16 한국 노동조합 공동대응단이 민주노동당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노동조합의 COP16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전략 모색>토론회 자료를 참고했다.

대립되고 있음. 반면 Design for 99%의 사례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안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함.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의 사회적 필요를 해소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해진 시점임.

사라져가는 산, 그리고 한국형 공유화운동

- 공원과 녹지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필자가 선정한 키워드임.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래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줄 키워드임. 2020년이면 서울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산의 절반이 도시공원에서 해지될 전망(미집행 시설 일몰제). 이는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임. 시민들은 숲과 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대형 빌딩개발로 숲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애써 조성한 둘레길과 나만의 산책길을 잃을지도 모름.
-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공공재이자 녹색인프라인 도시의 산과 녹지공간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역시 토지정의의 위기에서 출발함. 이미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동네뒷산의 훼손은 치명적인 삶의 질 저하를 맞게 될 것임. 도시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중앙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 사회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공유화운동의 개발이 요청됨.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시민들의 공유화운동을 주목함. 투기의 대상인 토지가 공유화의 상징이 될 것임. 4대강도 궁극적으로 공유화운동으로 회복, 보전될 수 있을 것임.

국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국민신탁) 운동 사례¹⁵⁹⁾

■ 광주무등산공유화운동 사례

- 무등산의 79% 정도가 사유지로 도로와 관광단지 건설 등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1994년 57개 시민단체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한 계좌 1000원 모금’ ‘무등산 땅 한평사기 시민운동’을 통해 공유화기금 모금을 시작함. 98년 시의회는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광주시는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신탁방법, 토지매수권청구권제, 토지대토(교환)제도, 자치단체의 기금에 의한 사유지 매입방법, 사유지 기증운동을 통해 2021년까지 무등산권 사유지를 공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용인 대지산살리기운동

- 대지산은 용인과 분당을 경계하는 야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녹지공원과 같은 곳.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대지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토지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에 대한 공탁을 실시함.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시민모금으로 구입된 정상부 100평을 포함한 많은 산림지를 그대로 보전하기로 함.

■ 청주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 살리기 운동

-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였지만, 토지공사는 2002년 택지개발 지구로 승인 받음. 2년여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전운동을 한 끝에 결국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함.
- 이후 흥덕구 산남동 205번지,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의 핵심지역 1,008㎡를 매입하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소유로 영구보전함.

159) 환경부(2002),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신연숙(2001),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지자체의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너울 ‘내셔널vol.106. 2001년 7월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활동가가 쓴 ‘한국에서의 대표적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그 시사점’을 참고했다. (출처: <http://blog.daum.net/ntsk/66>)

모두를 위한 놀이터

- 시니어와 청년들의 키워드를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한 키워드임. 현대인은 평균 90%가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음. 다양한 현대 질병과 면역력의 문제가 발생. 2025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듦. 아이들 일일 평균 7시간을 온라인에 노출된 하루 7분만 외기에 노출됨.
-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음. 놀이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전국에 수백개의 놀이터가 폐쇄되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음.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놀이는 사치로 여겨지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노년층에게는 적절한 여가 공간과 소프트웨어가 없음. 이로 인해 노년층이 놀이터를 점령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많음.
- 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 여가, 학습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일생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유년기에 과도한 학습, 청장년기에 무한경쟁적인 일, 노년기의 할 일없는 시간때우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음. 아이들의 놀이터 문제로 모든 세대를 위한 건강한 여가와 놀이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됨.
- 특히, 모든 세대에게 생태적 여가가 매우 중요함. 시니어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구에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활동이 필요함.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자연속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학습과 육체 정신 건강에 중요함. 텃밭, 정원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 자전거, 둘레길 등이 생태적 여가의 사례임.
- 2011년 BMW구겐하임랩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콜린 엘라드 연구팀은 도시공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가장 행복도가 높았고 흥분도가 낮았음.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Biophilia:자연사랑》에서 인간이 특정한 자연 풍경들을 보면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고 주장함. 환경심리학자 프란시스 밉귀Frances Ming Kuo 역시 녹지접근성과 주민행복, 행동, 사교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자연은 시민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늘 자연을 마주치고 지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도시농업. 먹거리에서 도시재생까지

- 모든 그룹에서 관련 키워드가 나왔음. 국가를 벗어나 도시 단위의 식량안전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먹거리의 질적 문제도 중요하면서도 양적 문제도 위기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임. 2009년 광우병과동으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배추과동으로 확산되어 2012년 서울시가 도시농업의 원년 선포함. 뉴욕시는 911 사태 이후 도시의 식량안전에 대해 검토. 시애틀, 밴쿠버 등에서는 지역식량안전플랜 작성.
- 환경자원의 문제는 식량문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의 노력들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점차 집 근처에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증가함.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다룬 브린틀랜드 보고서(1987년)에서 도시농업의 효과에 대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녹지공간을 늘리며,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도 재활용한다”고 제시함.
- 최근 오래된 도심의 빈집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산업의 몰락으로 도시시스템이 붕괴되고 도시 전체가 슬럼화됨. 몇 년 전부터 디트로이트에 불기 시작한 도시농업 운동은 쇠락하는 도시를 재생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농업은 먹거리 운동에서, 공동체운동으로,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함.

탈원전

- 모든 그룹에서 반복되어 나왔음. 개인과 지역사회의 선택은 어렵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적 선택을 통해서 변화가 불가피한 의제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수요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 삼척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전건설에 반대하였으며, 수백킬로 떨어진 서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반면 밀양에서는 고압송전선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음.
- 초기에 조성된 원전은 끊임없이 사고와 가동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유지하기 급급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음. 값싼 전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원전은 아직 폐기해본 경험이 없어 실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정하기도 어려워,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받고 있음.
- 독일은 윤리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녹색에너지를 전환할 것을 발표함.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쓰는 에너지의 원천을 국민들 스스로 결정한 사례임. 영국에서 시작된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운동은 전 세계 43개국 1,107개의 마을로 확산되고 있음.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11개로 확산.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들을 위해 공공시설과 학교 옥상을 빌려주고 있음. 노원구 등에서는 자치구의 에너지자립 시스템에 대한 전략 수립 등 국가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가 도시와 마을단위의 전략과 선택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작되고 있음.

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

-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키워드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관심을 받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임. 몸을 쓰는 문화, 삶의 다양한 기술이 새로운 문화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의 돌입. 목공, 요리, 효소만들기, 바느질, 도시농업과 음식물퇴비화, 마켓 등이 대표적 삶의 기술로 등장. 전통적 삶의 기술과 현대의 디자인이 만나 새로운 삶의 기술로 등장하고 독특한 마니아층과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음. 마르쉐의 경우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관심 받고 있음.
- 나아가 이러한 삶의 기술은 재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를 넘어 대자본에 속박당한 경제시스템을 극복하는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기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로도 여겨지고 있음.

■ 참고사례

1. 키포크 라이프

동아일보 [MAN]삶을 여유있게...‘키포크 라이프’가 뜬다/ 2014.7.21.

2. 청개구리제작소

[언메이크 랩] 라운드 테이블 : 누가 D.I.Y 시민을 만들까?

<http://www.fabcoop.org/archives/1666>

한겨레 연재글 참고.

3. [369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제품, DIY

성장세에 맞는 제도 갖춰져야2014. 9. 15.

<http://news.knue.ac.kr/news/articleView.html?idxno=265>

환경거버넌스,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공공의 재구성)

- 여러 키워드의 맥락속에서 필자가 발굴한 키워드임. 기후변화와 삶의 모든 의제를 관통하고 있음. 더불어 타 분야의 키워드와 연관성도 매우 높음. 대의 민주주의와 자치 민주주의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전통적인 왕권과 일부 귀족에 의한 통치 혹은 관료에 의한 통치사회에서 자치사회로 이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함. 완전한 자치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전단계로 거버넌스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와 같이 도시에서 자치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삶터에 대한 의사결정 역량이 커가고 있고, 공동체에 기반한 공공성이 성장하고 있음. 동북지센터, 에너지자립마을 등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시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통치자로서의 행정에서 자치의 조력자와 감독자로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자치는 자신의 삶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오늘날 거대한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자치를 기반으로 만드는 합리적 통치는 기후환경문제의 복잡성과 전지구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유효함. 비록 환경을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이 규모도 크고 복잡하여 자치의 한계가 있지만, 통치와 자치의 절묘한 조화를 통한 (환경)거버넌스가 발전하고 있음.
- 최근 서울역고가와 세운상가 뿐만 아니라 뉴타운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도시 삶의 개선(개발)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유효한 기제임. 대규모 개발과 효율성 보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계획 흐름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터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임.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요소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발전할 때 삶의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임. 또한 그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시장이나 정부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

제도 재설정되어야 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및 기술 역량의 수준이 지방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주도 계획에 내재된 위험인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¹⁶⁰⁾.

■ 참고사례 <서울숲 사례>

- 2002년 당시 서울숲 부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지역이었지만, 생활복지 1000만평 확보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됨. 서울숲 공원은 민관협치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160) 국토연구원, OECD 보고서, 23-25쪽.

[오픈랩: 한반도경제론]

1. 오픈 랩 주제 설명과 제약조건

1) 사회혁신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 동아시아-한반도연구회와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전략 연구모임이 결합된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새로운 진보개혁담론의 연장선에서 접근함.
- 《한반도경제론》(창비, 2007),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백산서당, 2012)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난 2012년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 비전: 네트워크 국가·네트워크 경제로의 길〉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지역·국제관계 내 조직원리로서의 네트워크를 중심개념으로 함.
- 미국중심주의, 시장중심주의, 성장주의, 경제주의, 기업주의, 갈등없는 통합, 엘리트주의의 담론이 지배하는 보수주의적 담론 구조에 대항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고령화-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 진단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사회조직원리를 논의함.
-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 중에는 전통적 좌파 담론에 기대거나 완화된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임.
-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유럽식 모델의 일방적인 수용에 대한 비판, 합의주의적 모델을 강구해야 함. 87년 민주주의체제가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고 사회 주체들이 사익추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을 반성하여 공공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가치를 재구축하는 것도 진보개혁 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2) 오픈랩을 통해 토론된 주제의 특징과 범위

-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지구화와 개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재벌체제를 대체할 대안적인 생산체제와 경제생태계는 무엇인가,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생활문제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이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지속적 화두임.
- 지난 2012년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공존, 기회, 혁신, 분권, 안전 등 5대 가치 중에서 저성장 성장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성장/혁신 관련 정책, 공존/기회의 사회정책 중심으로 논의함.
-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고리가 단절되고 생산-고용-교육-복지간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됨. 현재 진행되는 양극화가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함.
-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단절과 배제 현상의 배후에는 성장-고용-분배간 선순환구조의 해체라는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의 사회정책은 경제 부문간 사회계층간 분절화 경향을 치유하고, 개방화·시장화 및 혁신 활동의 증가가 개인에게 초래하는 위험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
-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확충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투자적

기능을 할 여지가 더욱 높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보편적 적용은 상당한 공적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임. 사회정책에 대해 비용에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을 제공.

- 1차 모임에서는 저성장-양극화 하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 네트워크-연대에 기반한 한국형 소득주도성장전략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생태계를 다룸.
- 2차 모임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브레인스토밍을, 3차 모임 때는 2차모임의 연장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제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을, 4차 모임에서는 정치·경제·세대·가족 관련 개인화 현상을 분석함. 5차 모임에서는 세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장을 기획함.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현실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물적·사회적 토대의 한계를 인식하며 시장과 개념에 대한 이념적 차원의 판단이 아닌, 현실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

3) 주제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공성’ -> 연대+혁신+개방 / 공공성+역동성
-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 성장모델의 성격이 크게 변하면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관계의 확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정보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증가 등은 모두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임.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시대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낳을 위험에 보호하는데 있음.
- 개방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열린 가치를 지칭함. 혁신이란 현

실에 매몰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하는 가치를 일컬음. 연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가치를 뜻함.

- ‘숙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중우적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공화주의’
 -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직하는 정치의 긍정적 기능을 부정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치를 엘리트들간의 합리주의적 타협으로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관 비판.
 -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간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활동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회경제 발전의 비전과 숙의민주주의의 방향을 모색

2. 오픈랩 진행 결과 요약

1) 진행된 모임의 내용과 형식 요약

- 모임 진행방식
 - 이슈를 중심으로 10명 내외 소그룹 자유토론 + 다학제간 논의
 - 전문가 + 활동가(대학원 소속) 참여 자유토론
- 모임 결과
 - 1차 모임: 저성장-양극화 하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의 모색
- 형식: 발제-토론 등 심포지엄
- 참여: 이일영, 정준호, 박규호/ 토론: 김창욱, 조성재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연관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고령화사회	연금 은퇴 후 생활수준 - 존엄
	저성장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부동산	부동산 80% 자산가치의 하락 지속성 자산가치의 불확실성
	재벌생태계	대기업 약탈모델 혁신형 중견·중소기업 부재 ↳조립형 산업화 ↳하드웨어 중심의 생태계
	빚	엄청난 가계부채 부채주도성장의 파산가능성
	에너지·식량 역외의존	식량자급 수준 하락
	중간민주주의*	경험 미흡(독일, 일본 비교)
	관피아	
	구조적 공백*	혁신형 중견·중소기업 부재 동북아 지역 제도적 네트워크 부진 -북한 중앙정부 중심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북한 - (동)아시아	동아시아네트워크의 다리 내수기반의 확장 동북에너지경제권- 북중러 접경(UNDP 두만강개발계획)
	성장전략	대외전략·지역전략 연계
	농업 성장	1.5차 산업 촉진(농업,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협동조합+친환경 성장
	소득주도성장론*	
	네트워크	도시네트워크 아시아네트워크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구조적 공백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생산)네트워크 글로벌 리전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글로벌 리전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광역경제권 집합적 효율성* 경쟁의 구획화* 1.5차산업 촉진*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중간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조합 활동이 활발하여 이를 배경으로 한 중간 민주주의가 발달함. 학연, 지연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선을 논의할 중간 조직/조합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한계.
- 구조적 공백: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서 보면 연결되지 않은 빈 공간들이 있음. 산업 부문의 경우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맺는 혁신형 중견·중소기업이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임. 또 광역권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데 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구조적 공백이 될 수 있음. 동북아 지중해경제권에서 북한이 구조적 공백일 것임.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채워가는 전략이 필요함.
- 소득주도성장론: 소득불평등의 위기 진단과 경제 전반의 효율·형평 추구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중범위나 미시 수준의 논의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함. 기능적 소득분배-개인(가구)의 소득분배-재분배 등을 포함하는 논의로 진전되지 못함.
- 경쟁의 구획화: 경제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개발국가는 대기업에게 연성제약을 허용하면서 공정과 형평이 어긋났고, 강제저축(인플레이션 등)과 금융억압(금융기관 국유화, 관치금융 등)을 통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발생함.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공정거래기반의 강화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소기업영역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보호 등과 같이 기존의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대책, 단견제 내의 보호, 경쟁의 구획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5차 산업: 최근 1차, 2차, 3차 산업을 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는 6차 산업 논의가 활발함. 그러나 농업의 경우 친환경적 방향과 다양한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반한 생산구조를 발전시켜 농업과 제조업·서비스업이 연계된 1.5차 산업으로 발전해가야 함.

■ 2차 모임: 사회정책 관련 연구모임

-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 참여: 이일영, 양재진, 전승훈, 이민경, 김양희, 김성환, 삼성경제연구소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연금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성 - 건전성 키워드
	삼성생명 VS 국가*	사적연금의 활성화 작은 공적연금+큰 사적연금 정부 불신
	하향평준화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디스카운트되는 미래*	양대 노조의 보험료 인상 거부 세금공제 - 강제저축
	단발성 교육정책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교육 자치	시민이니셔티브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지역 단위 행정	교육-행정의 기능 분리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작은 학교*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삼성생명 vs 국가-디스카운트되는 미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회보험을 늘리는 건 사실상 증세다. 그래서 노조(민노총, 한노총)가 반대함. 실업수당,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득세 등 올리는 것에 반대함. 세금공제(당장의 이익)를 받는 게 크기 때문임. 사람들은 당장 소비를 중시하나 미래를 디스카운트하는 결과를 낳음. 관료적인 관리공단보다 삼성생명이 더 잘할 거라는 인식은 있지만,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 높은 수수료

(민간-1.4%, 공단-1%)와 높은 관리운영비가 문제임.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세분화하고,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함. **월드뱅크 권고안 참고

- **작은학교:** 공교육이 삶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중간레벨의 아이들에 맞춰 진행함. 수업에 소외된 아이들 중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외부 환경을 통해 보완받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은 도태될 수 있음. 계속 소외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여야 함. 전남에 (작은학교) 사례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지역 단위로 묶어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학교와 행정 기능이 분리·운영됨.

■ 3차 모임: 개인화

-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 참여: 이일영, 김정훈, 오유석, 유철규, 김성환,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생들, 삼성경제연구소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파편화된 개인	비정상적 시장화된 개인 복지없는 개인화 삶의 공식에서 이탈된 개인 고통의 개인화 신자유주의적 주체
	일베*	근본주의 뉴라이트 일베 IS 재특회(일본)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자기의 삶을 산다”*	DIY의 삶 삶의 공식에서 이탈한 개인 불완전한 삶, 불안한 삶
	신중년	

	정보화*	정체성의 다원화 개인을 네트워킹 조직없는 조직화 ↳ 새로운 협업 혹은 집단지성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저출산*	경제력 경력단절 양질의 저임금 서비스시장 개인주의없는 개인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정체성의 다원화	정체성의 개인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네트워크된 개인주의*	정체성의 다원화 다양성의 존중 자기표현적 가치 플뿌리운동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참여, 공유, 개방 새로운 사회서비스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일베: 개인화는 개별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적 경향과 반현대적 경향간 다양한 접합으로 드러남. 반현대적 경향의 불행한 형태가 전통을 전통적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개인들로 등장함. 일베, 뉴라이트, IS, 재특회(일본).
- 자기의 삶을 산다: “알아서 해야 하는”생애는 “능동적”이고 “스스로 감독하는” 생활방식을 요구하지만 매우 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살펴봄. 한국사회의 경우 아직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 개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선우현, 김동춘, 강준만 참고), 지식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시대진단이 아닌지란 질문을 던짐.
- 정보화: 세계화와 정보화는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발전함. 정보화가 촛불시위나 ‘점령하라, 월스트리트’와 같은 조직없는 조직화를 가

능케 한 수단이라고 봄. 1960년대 정체성 혁명을 거친 세대들이 개발한 웹 2.0(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이 토대가 된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트워크화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해석함.

- 저출산: 여성의 저출산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가족 내 불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함.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2-3세대까지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공적/사적 영역이 해체되면서 다원화된 정체성을 갖게 된 여성의 선택이라고 말함. 단순히 경제 또는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의 변동과 관련된 사실이라고 해석함.
-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소셜 네트워크, 퍼스널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혁명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영체계를 뜻함. 삶의 중심이 가족, 집단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봄. 대면적 접촉이 아닌, 온라인 접촉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풀뿌리 조직이 형성된다고 전망함. 셔키의 조직화없는 조직 참고.

■ 4차 모임: 세금

- 형식: 동향 및 이슈 분석과 자유토론
- 참여: 이일영, 전승훈, 정준호, 오건호, 김태일,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생들
- 1차 선정 키워드

키워드 유형	핵심/상위 키워드	연관/하위 키워드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형평성	부자감세-서민증세
	국가불신-무능력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국가
	과세구간	과세 사각지대 견적서*

기존 개념이지만 문맥이 다른 키워드	증세	부자감세-서민증세→세금·복지
	거버넌스*	소규모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에 있는 키워드	대중적 증세운동*	중간계층의 참여를 설계한다 세금행위-참여 시민이니셔티브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세대간 정의 복지경험/ 세금경험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복지국가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희소한 자원 vs public goods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세금교육	

○ 1차 선정 키워드 풀이

- 견적서: 세금 저항은 곧 지출에 대한 신뢰와 연관됨. 10년 전과 비교하면 과세정책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견적서를 내는 게 필요함. 세금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
- 거버넌스: 조세를 공유자원으로 접근할 때 오스트롬이 제안한 공유재 원칙을 참고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동체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한계임. 작은 공간을 넘어선 스케일을 고려해야 함. 사회적 환경과 갈등 구조에 대비할 거버넌스가 필요함.
-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가 코몬스임. 복지국가는 모든 개인들에게 베니핏을 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몬스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세대간 정의 차원에서 보면 세대가 코몬스를 즐기지 못함. 조세를 희소자원으로 접근하는 걸 제안함.

- 대중적 증세운동: 기존 증세 정치 프레임은 실패함. 일본에서 소비세를 5% 인상해서 복지에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기획. 세금을 적극적 참여 행위로 접근할 필요 있음. 당사자운동으로 서민들한테도 세금을 매기면서 상위계층에게도 세금을 부담케 하는 구조로 가야 함.
-
-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세금을 낼 수 없는, 빈곤청년들을 위한 자조 모임. 복지 경험 또는 세금 혜택(소득공제 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논의 되었던 모든 키워드 정리

NO	현재의 문제/다른분야 경계선	영향범위/기존개념-문맥	미래 비전/혁신아이디어 /NEW개념
1	고령화사회	소득주도성장론	(생산)네트워크
2	연금	정보화	복지국가
3	저성장 양극화	북한	글로벌리전
4	부동산	(동)아시아	공유자산으로서의 조세
5	재벌생태계	성장전략	광역경제권
6	빛	농업	집합적 효율성
7	중간민주주의	네트워크	경쟁의 구획화
8	관피아	구조적 공백	1.5차 산업 - 농업
9	구조적 공백	자기 삶을 산다(DIY)	교육 자치
10	삼성생명VS 국가	저출산	작은 학교
11	디스카운트 되는 미래	증세	네트워크된 개인주의
12	단발성 교육정책	거버넌스	증세운동(사회복지세)
13	개인화	세금	세금교육
14	일베	대중적 증세운동	복지경험
15	국가 불신	세대간 정의	청년금융협동조합 토닥

3. 각 오픈랩 별 10대 키워드 선정과 선정 키워드 설명

1) 토론된 키워드들에 대한 종합의견과 핵심키워드 선정 기준

■ 종합의견

- 개발국가에서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로 진전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 신뢰 ▲네트워크-연대 ▲거버넌스 ▲참여-자치 ▲적정한 규모 ▲공공성 등을 핵심 근간으로 다룸.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개인화 등 사회 변화를 진단하면서 연금, 세금-복지, 교육, 성장전략 등에 대해 논의함.

2) 유형별 핵심 키워드 배치(중복 허용)

키워드 유형	핵심 키워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 네트워크 경제 도시네트워크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중국 /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한반도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빚 / 부동산 금리 / 연금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개인화의 정치 /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 없는 개인화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작은 학교(거꾸로 교실) 사회복지세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도시농업 / 6차산업

■ 핵심키워드 선정 근거

○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는 키워드

- **소득주도성장**: 개념의 유용성은 대체로 인정, 그러나 미래 비전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유용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분적 의의를 가진다는 의견이 많음
- **자치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기존의 복지국가 개념이 다소 당위적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복지국가 개념에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 **사회통합형 대외전략**: 대중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외정책의 의미에 대한 실감이 부족하나 정책운영의 환경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문제의식에 기초

○ 현재의 문제를 표현하는 키워드

- **빚 / 부동산**: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표현, 구호나 원론적 입장을 넘어서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필요성이 높은 분야
- **금리 / 연금**: 다소 전문적인 분야지만 저성장과 복지 악화 추세 속에서 대중적 관심이 계속 증대
-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민생경제에서 아주 비중이 높은 문제로 쉽게 해결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임,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야
-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성장 분배 복지 문제 등 전통적인 이슈의 전개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환경

- **개인화의 정치 /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 없는 개인화:** 기존의 사회과학 프레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개인화라는 문제가 있음, 특히 새정치, 저출산 등 사회현상을 개인화 추세와 관련하여 인식

○ 새로운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 **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 증세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서 사회 전반의 자치 능력의 확보, 국가 능력의 강화로 논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 **네트워크 경제:** 시장이나 국가냐 하는 이분법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
- **도시네트워크:** 국가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국내/국외로 이분하는 사고하는 접근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 혁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키워드

-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 혁신 주체
-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핵심 정책으로 제안
- **작은 학교(거꾸로 교실):** 입시제도에서 교육문제의 해법을 쉽게 찾기 어려움, 교육문제로 격차 해소는 어려움, 작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제안
- **사회복지세:** 현실적인 대중적 증세운동으로 제안
-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 증세에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이 기반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 **도시농업 / 6차산업:** 농촌과 농업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안 제시

○ 영향 범위가 넓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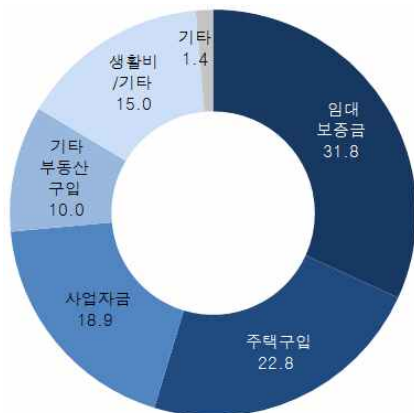
- 중국 /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국제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관련 키워드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
- 한반도: 대중적으로 북한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남북 통합을 국가 단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문제의 식으로 접근.

3. 키워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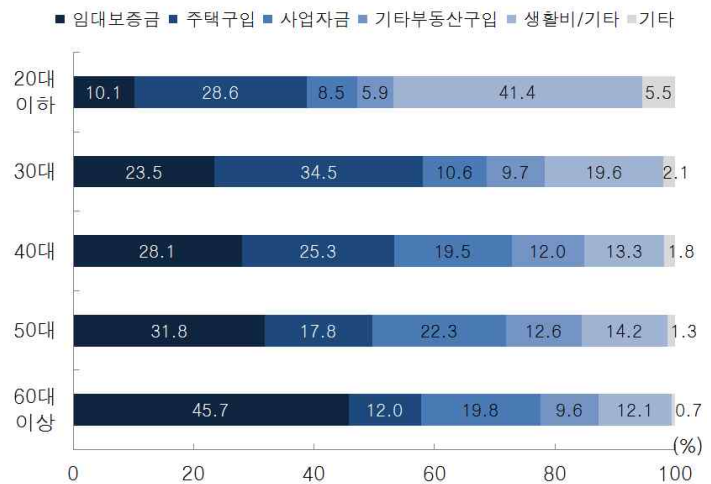
빚/부동산

- 《한국의 사회동향 2014》(통계청, 2014)를 보면, 부채보유 가구 비율이 2010년 59.8%에서 2013년 66.9%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증가함. 가계부채는 주로 임대보증금, 주택구입, 사업자금 마련에 사용됨¹⁶¹⁾.
- 담보 및 신용대출을 용도별로 ‘거주주택 마련 36.0%’, ‘사업자금 마련 25.7%’,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16.1%’, ‘생활비 마련 6.2%’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2013년에 비하여 주택관련 대출 용도는 증가하였음¹⁶²⁾.

<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 2013년 >



< 가구주 연령별 부채용도, 2010~2013년 평균 >



주: 기타에는 외상할부,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년도.

- 과거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선호¹⁶³⁾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가구당 평균 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그중 부동산 비중이 2014년을 기준으로 67.8%를 차지함. 특히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의 82.4%가 실물자산임¹⁶⁴⁾.

161) 통계청(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13쪽

162) 통계청(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쪽.

1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형 복지모형구축, 375-377쪽.

-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은 ‘노후 대책’ 53.3%로 가장 많았고, ‘주택관련 (주택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17.6% 순으로 나타남.¹⁶⁵⁾

<표 2-1>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 만원, %, %p)

구 분	자 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적립식	예치식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거주 주택	거주주택 이 외 ¹⁾	기타 실물 자산			
평 균	2013년	32,688	8,827	6,464	3,455	2,455	2,363	23,861	22,055	11,770	10,285	1,806
	2014년	33,364	8,931	6,596	3,652	2,441	2,335	24,433	22,627	12,351	10,275	1,806
	증감률	2.1	1.2	2.0	5.7	-0.6	-1.2	2.4	2.6	4.9	-0.1	0.0
구성비	2013년	100.0	27.0	19.8	10.6	7.5	7.2	73.0	67.5	36.0	31.5	5.5
	2014년	100.0	26.8	19.8	10.9	7.3	7.0	73.2	67.8	37.0	30.8	5.4
	전년차	-	-0.2	0.0	0.4	-0.2	-0.2	0.2	0.3	1.0	-0.7	-0.1

주 : 1) '거주주택 이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 2009년부터 내수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내수경제에 있어서는 150%가 넘는 높은 가계부채가 큰 문제임. 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은 민간소비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계 부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총부채는 2009년 4%증가하여 GDP의 34%에 달함¹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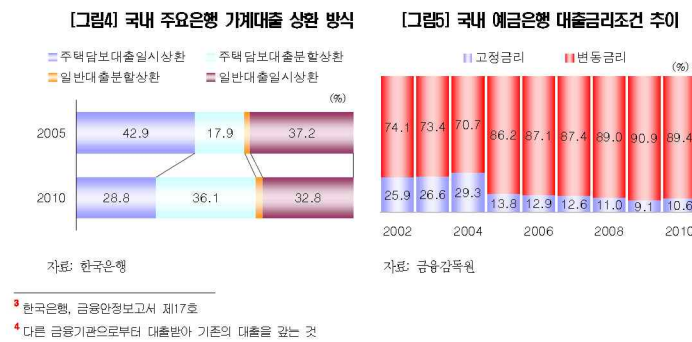
164) 통계청(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쪽.

165) 통계청(2014), 10쪽.

166) 국토연구원(2013),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33쪽.

금리/연금167)

- 2005년 이후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됨.168)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p6.

- 우리나라 가계대출 특성상-짧은 만기구조, 높은 일시상환방식 비중, 거치기간 존재,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금리 상승기나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채무상환능력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음. 또 신용대출 비중이 30-40% 정도로 상당히 높아 경기부진 장기화, 소득불균형 악화 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등급 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가능성이 있음169).

<그림 14>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특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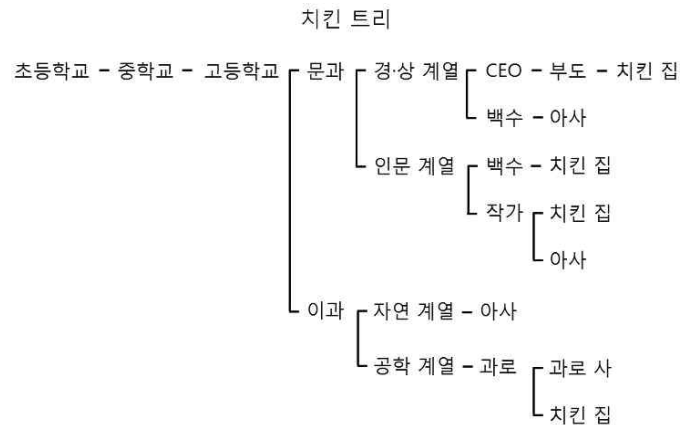


출처=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집제3호, 2010, p85.

167)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설명글을 토대로 작성함.
 16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위험수준 평가, 6쪽.
 169)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집제3호, 2010, 84-85쪽.

- 최근 한국은행은 기본 금리를 1.75%로 인하하고,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환조건으로 전환해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함. 금리 인하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일반적인 정책이지만, 부채와 자산가격 거품을 막는 미시적인 규제를 함께하지 않으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민간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사적연금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수익극대화, 주주들에게 대한 이익배당 등으로 공적연금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저금리 상황에서는 관리운영비와 수수료 절약이 매우 중요하며, 수수료 부담은 가입자의 연금액 감소와 맞물려 있음.
- 현재 87조원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51개 민간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격관리 등 운용관리수수료로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의 0.3~0.7%, 그리고 투자 관련 자산관리수수료로 적립금의 0.2~0.7%를 떼어감. 퇴직연금의 수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최대 14배가 비쌈.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떨어짐. 투자손실의 위험을 가입자가 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에 연동도 안 되며,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지도 못함. 현재 퇴직연금의 90%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개혁한 후 17.3%의 보험료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면 기금 고갈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음. 사적연금은 튼실한 공적연금의 기반 위에 부가적으로 발전해야지, 공적연금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됨. 공적연금의 개혁과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



2014년 <공부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원석씨가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 '공부란 무엇인가' 168쪽.¹⁷⁰⁾

-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고용의 28%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자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¹⁷¹⁾. 종사상지위나 고용형태,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은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근대적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축소된 규모, 저숙련 시스템, 착취형 기업간 네트워크, 기업별 노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복지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 계약의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¹⁷²⁾.
- 폐쇄적인 재벌 대기업 구조에서 87년 이후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숙련절약적인 자동화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생산체제는 비정규직의 활용과 장시간 노동, 현장노동의 저숙련을 고착화하며, 현장기능직과 엔지

170) 머니투데이(2014.3.13)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하거나 餓死?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317154037294>
 머니투데이(2014.7.11) 당신의 치킨인생, 시킬것이나 튀길것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295463&sid1=001>
 171) 국토연구원(2013),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39쪽.
 1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149쪽.

니어의 간극이 존재함. 한국 생산노동자의 현실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독일, 일본, 덴마크와 같은 노사정 조합주의와 차이가 큼.(정준호)

-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한 자영업자군과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가 형성됨. 저임금고용, 비공식고용, 영세자영업, 그리고 근로빈곤이 문제로 나타남. 비공식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에 달함.
-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4에 달하고,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서 저임금일자리와 영세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규모축소)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저출산과 이민 / 고령화

-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노인인구의 급증과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것임. 2000-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1.2명으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인구 고령화 현상은 국내외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보건,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지출에 압력을 가하는 중심 요인이 될 것임¹⁷³⁾. 한국의 고령화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2005년 68개 도시 중 39곳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도시는 5곳에 불과함.
-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일부 도시들은 기회의 부족이나 다른 도시로의 노동력 회귀 등으로 인한 인구유

173) OECD보고서, 77쪽.

출로 노인만 남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

사회변화와 개인화

- 개인화와 정치/ 여성의 개인화와 저출산 / 복지없는 개인화

- 올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변동에 대해 “인류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단위가 되었”다고 밝힘. 서구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개인화와 이념적 개인화,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지표의 다양한영역에서 개인화가 나타나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의식이 온존해있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특성을 갖고 있음.
- 제도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 사회권의 확립, 교육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삶의 중심이 가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동되고 위험과 갈등의 담지자 역시 개인단위로 재편됨. 개인주의 시대에 가족은 필요의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선택적 친밀성의 영역으로 변화해감¹⁷⁴).

소득주도성장

- 한국경제는 수출의존적인 소득주도 성장체제의 특징을 나타냄. 한국 경제의 수출부문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따른 글로벌 승수효과가 국내 승수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소득주도 경제체제에서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성장동인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경제구조는 부채주도 또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고착화될 것임¹⁷⁵).

174) 여유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2쪽.

1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366쪽.

공유자원으로서의 조세¹⁷⁶⁾

- 개발국가에서는 강제저축과 금융억압을 통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발생함. 구성원들간의 기회주의를 증폭시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약한 사회-국가주도 모형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유산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되기가 어려움. 환언하면, 조세를 복지국가의 공유자산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며, 조세를 단순한 징벌이나 필요악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함의.
- 코몬스의 문제설정은 희소자원의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국가의 재원으로서 조세 자원(fiscal resource)이 무제한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는 암묵적 가정에 문제를 제기함.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는 조세에 의해 조달될 수 밖에 없음. 조세는 일종의 공적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동원하고 관리하는 국가능력과 구성원들간 신뢰를 담보하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모두 요구됨.
- 코몬스의 문제설정에서 주요 원리는 공평성, 상호의존성,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생산, 책임성, 소속감, 거버넌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복지국가의 유지에 드는 조세비용의 증대가 단지 고령화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과 지식문제를 제기하며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즉 CPR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인 요건으로 ① 지속가능한 전체 사용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② 코몬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합의, ③ 기존의 사용수준이

176) 오픈랩 모임에 참여한 정준호 교수(강원대학교)의 발제글을 토대로 작성했다.

지나칠 경우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④ 기존 사용수준의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함.

-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조세를 CPR 코몬스로 이해할 경우, access(범위)와 contribution(부담)의 경계에 대한 제도적 배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임. 저성장과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적 코몬스는 무제한적 사용이 불가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대두.
- 복지국가가 조건부 이타성에 기반하고 이를 코몬스의 구축으로 이해한다면 사회 전반의 자치능력 확보와 국가 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네트워크¹⁷⁷⁾

- 87년 체제와 동아시아모델을 대체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경제를 제안함. 네트워크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제이자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패키지를 일컫음.
- 네트워크는 고립되었던 다양한 개인(또는 조직)을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주체로 부각시킴. 참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반복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행동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함.
- 또 네트워크는 조직·제도의 형태로 위계(기업 혹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조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 기업과 비기업, 시장과 공공영역, 개인과 조직 사이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함. 그리고 기존 국민국가의 해체·재구성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지역과 영토를 의미함.

네트워크 경제-하이브리드 경제¹⁷⁸⁾

177) 한반도경제론, 창비, 42쪽.

178) 한반도경제론, 41-46쪽.

-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대기업 같은 위계제 조직과 시장조직 형태의 이분법에 기초해 있음. 시장실패가 큰 경우 경쟁시장은 효율적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클 경우 지대추구 현상이 만연하게 됨. 글로벌화와 생산의 탈집중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포디즘 체제 하에서는 중앙집권적 산업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지 않음.
- 수직적 통합이 쇠퇴하는 생산조직의 분산화 현상이 나타나면 수평적 차원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급격한 수요 변동, 공급 측면의 복잡한 상호의존성, 급속한 기술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위계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혼합적인 형태의 조직·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음.
-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네트워크 경제의 확대를 통해 과거의 발전모델을 혁신하는데 있음. 정부(정치권)·기업의 유착관계, 재벌 중심의 위계적 기업간관계, 중앙정부로의 권한집중 등 성장과 분배를 제약한 집권적·위계적 관계를 분권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함. 기업생태계의 조성, 지역 광역경제권의 형성, 녹색경제의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간·산업 간·지역 간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재벌계 생태계 밖에서도 신생 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계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재벌대기업으로의 집중이라는 불균형적 구조는 편중적인 산업·지역구조와도 맞물려있음. 신생·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위계적 산업정책이 아닌, 수평적 경제구조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지역이라는 열린 공간이 필요함.

도시 네트워크

- 국가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국가간·초국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다. 분단체제의 해소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남북한 간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 이전에 네트워크에 의한 연계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함.¹⁷⁹⁾

중간민주주의- 사회적 합의¹⁸⁰⁾

- 지역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해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내는 방식인 '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합의 모델이란 노사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잘 조직된 상태에서 국가와 협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말함. 사회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모델이 성공하리라고 낙관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표 143 <지역 거버넌스의 주요 현황>

	주요 행위자	평가
지방정부	보수정당, 관료	기획능력 부족
민간기업	토착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	제조기술중심, 연고주의
지방의회	토호 중심의 보수정당(다수파)	낮은 대표성, 정책개입 부족
시민사회	관변단체 중심	자생력 부족, 낮은 시민참여
지방대학	누리, BK 등의 수혜 대학	보조금 배분에만 주로 관심

- 사회적 합의 모델은 노사단체의 대표자 뿐 아니라 공익적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집단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지역발전을 지향함.

벤처 생태계 / 사회혁신 거버넌스¹⁸¹⁾

혁신 주체

179)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39쪽.

180) 조형제, 한반도경제론, 창비, 387-397쪽.

181)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129-131쪽.

- 기존의 기업지원정책은 시혜적이거나 단기적이고 거시경제적인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한 경우가 많은데, 기업지원 정책은 기업생태계의 강화와 풍부화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어야 함. 생태계 각 기업군의 활성화 및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 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비금융영역에서의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 대기업의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기업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채널에 대한 투자로 의미를 가짐. 설비투자 세액 공제 등 대기업에게 편중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 대기업의 자율적인 펀드기여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그 방식으로는 기존의 동반성장 방식인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와의 1대 1의 방식이 아니라 多 대 多의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사회혁신 거버넌스¹⁸²⁾

- 20세기형 보수가 추구해 온 추격형 발전국가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동원체제는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공감과 동행의 결합,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있는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함.
- 현재 국가와 정치에 대한 담론에서는 시민적 정치와 사회적 보호 운동의 중요 동력인 청년세대들의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며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집되어 있다. 시민의 행동주의를 대담하게 반영하는 정당,

182) 같은책, 176-179쪽.

의회, 정부 등 정치체제와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저임금 노동시장은 생산성이 낮고, 사회복지 의존도 역시 높아 사회에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가 곧 복지정책”이라고 말함.
-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통합해 더 포괄적인 소득 정보를 분석한 김낙년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2000년 35.4%(높은 불평등), 2012년 44.9%(매우 높은 불평등 상태 육박)에 이룸¹⁸³).
- 미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럼 당신이 해 보라”며 임금 인상을 공언함.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 10센트(약 1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12년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201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여전히 전체 1천773만4천명 가운데 169만9천명이나 됨¹⁸⁴).

거꾸로 교실/작은 학교

- 기존의 학교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교육적 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함. 1개면1개교 원칙이 깨진 농촌학교도 무조건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농촌을

183) 출처:<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184)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19120209417>

살리면서 어떻게 통합하고 특성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고, 읍내에 본교를 두고 면에 분교를 두는 형태 등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함. 교통 중심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이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음.

거꾸로교실

- 지난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최근 수 년 사이 ‘거꾸로 교실(역진행수업 flip teaching / flip learning / flipped classroom)’이라는 교육방법은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주목받고 있음. 혼합형 학습의 한 형태로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함.
- 교실에서 하던 교사의 강의를 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대체, 학생들에게 수업 전 미리 보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친구들과끼리 토론을 통해 복습하도록 하는 방법. 교사는 질문이 있는 학생에게 개별 보충 설명을 함.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도 높아지고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냄. 이 단순한 발상은 교실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옴¹⁸⁵).

작은학교

- 작은학교는 적정규모의 학생 수로 인한 인성교육을 비롯해 집단 내 학력차를 줄이는 개별화 교육,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인간적인 소통과 나눔, 지역사회 문화와의 만남에 의한 고유문화 계승, 학생활동 중심 체험학습이 강화된 시스템을 말함.
-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작한 1982년 이후 수많은 학교가 사라짐. 정부가 약속했던 1개면 1개교 원칙도 깨진지 오래됨. 탈농현상이 가속화되

185) 참고자료: KBS 1TV <KBS 파노라마-21세기 교육혁명:미래교실을 찾아서>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혁명, ‘거꾸로 교실’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12>

면서 농산어촌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거나 폐교됨.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지역과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의 경쟁력을 만들어감.

■ 참고사례

1. 작은학교연대 활동 사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90864.html?_fr=mt2

2. PD 수첩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 1/4

https://www.youtube.com/watch?v=UjaRuJneq_I

지속가능한 재정 / 조세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 이윤주도 성장전략으로 한국의 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됨.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 재벌 기업의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 부과,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그 사례는 재정체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
- 그 결과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세수기반은 확충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 이러한 개발연대의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특징으로 함. 무엇보다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과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함께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

6차산업186)

- 농촌산업의 융·복합에서 최대의 문제는 농업인이 주변화되고 기업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임. 농촌지역이 각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독자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
-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결국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많은 지역 주체들이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협동조합이 경영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서 농촌산업의 융·복합이 전개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음. 일례로 아이쿱 생협은 협동조합형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농촌지역을 만들고 있음. 목장·농장·생태마을·병원 등 문화복지시설과 식품 생산·가공·물류기능 이외에 유통·주거와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아이쿱생협밸리를 조성했고,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친환경식품 가공업체 26개 업종을 입주시켜 가공·유통기능을 통합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

(강력한) 중국/ AIIB / 일대일로 / 한중 FTA

강력한 중국187)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충돌하고 있음.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함. 일본·한국·필리핀·호주와 맺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국에 고공권역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문제도 그러한 일환임.

186)같은책, 97, 152-153쪽.

187)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J 제195호, 2015.4.7.

- 중국은 아시아지역 일대를 아우른 공간 재편 구상 전략으로 아시아인프라 개발은행(AIIB) 계획을 가동함.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추세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AIIB-일대일로-一帶一路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글로벌 불황과 과잉 설비에 대응하는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임. 일대一帶는 중국의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말하며,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을 연계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함.
- 종래의 국내 거점 차원의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인근 국가·지역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함.
- 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아시아의 철강, 시멘트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의 과잉생산 설비를 흡수하고, 글로벌 불황 속에서 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성장의 '고속열차'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소극적일 경우 아시아 지역 공간은 중국·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새전 전략에 따라 아시아 차원에서 지역 공간이 형성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함.

한중FTA

- 한중FTA는 1990년대 이후 각국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구성요소로 접근해야 함. 그간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를 추동한 것은 중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었음. 제도적 차원으로 진행된 생산·무역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을 교정·보완해야 할 것

입.

샌프란시스코체제 이후 Post-San Francisco System¹⁸⁸⁾

-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에게는 관대하게 체결된 조약임.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2차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미소대결, 중국의 공산화 등의 상황을 반영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형성됨.
-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패전국 일본은 자국 영토·영해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음. 일본 입장에서 조약 체결은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기지가 되는 대가로 전범국에서 국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준 면죄부인 셈.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이날을 '주권회복의 날'로 정함.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은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중시하는 '일본 회귀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부활하여 재강화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지금까지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큰 전선이 있었음. 하나는 G2로 성장한 중국과 아시아로 회귀하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전선임. 다른 하나는 일본과 일본의 지배와 침략을 당한 나라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있음. 두 개의 전선을 이용하려는 미중의 대립은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고 있음.

188)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전 국가안보회의 행정관)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5월호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에 쓴 글을 요약했다.

한반도

- 실용보다는 이념에 앞세운 정책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한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강경한 대북정책은 한미동행 강화론과 맞물리면서 북중 간 밀착을 가속화시켰으며,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남북관계 교정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을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공간’ ‘지역’으로 접근. 한중일 FTA와 연계한 글로벌 경제특구나 동북아 에너지·식량 협력주체로 북한을 접근함.
- 최근 북중 경협 확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나아가 북러간 대외 채무문제 해결로 인한 북러간 경협 확대 가능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여건에 대한 참여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동북아가 안고 있는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 불안정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중 일간의 스왑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세¹⁸⁹⁾

- 사회복지세, 사회보험료는 사용처가 복지로 정해져 있는 복지증세에 해당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단체들이 2013년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핵심 직접세목의 인상분은 모두 복지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세금임.
- 사회복지세는 세목별 세율 인상을 추진하되 이 인상분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세(surtax)임. 한국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가 있을 때마다 목적세를 도입해 왔음. 과거 방위세, 지금 교육세가 그렇다. 사회복지세는 재정지출 불신을 우회하며, 증세 경로를 하나의 세목으

189) 오건호의 발제글을 요약했다.

로 단일화하고,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설명할 수 있어 증세 동의를 이끌기 유리함.

-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 개혁을 추진하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내세우자는 증세정책의 취지가 담겨 있음. 전체 세금체계에서 조세정의를 세우고, 지출 불신을 넘어서는 증세가 필요함.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종합개혁 활동을 벌여야 함.
- 2015년 연말정산 사태로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경기 부양,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 등을 둘러싼 선택 논란이 전개됨. 증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금정책이 요청되는 시점임. 시민들의 세금 저항에는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음.
- 기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종합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임대소득과세, 종교인과세, 고소득자영자과세 등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틈새를 메우는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함. 소득세, 법인세의 공제, 감면을 축소하여 세목별 내부 누진성을 확보함. 세액공제조차 복지로 전환하면 더 바람직할 것임(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신 의료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대학등록금 지원 등).
- 복지를 위한 증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함.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surtax)로 연 2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음. 앞의 공제/감면 정비, 소득세 사각지대 해소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그만큼 사회복지세 세수도 함께 늘어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 재정지출 분야를 사회정책 중심으로 구조개혁한다. 이제는 정부 예산 배정에서 토목 R&D 등 경제분야를 줄이고 이를 복지, 교육 등 사회분야로 전환해야 함. 복지지출도 비용을 국가가 담당하는 수준(무상복

지)을 넘어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로 나아가야 할 것임.

사회통합형 대외전략¹⁹⁰⁾

- 87년 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체제·분단체제는 변동 속에 있으며, 그 간의 발전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2000년대 후반 이후 안보·저성장 불안에 따른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적 비전으로 '성장-협력-평화 모델'을 제안함.
- 최근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가 이완되고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한미동맹체제는 중국의 경제력이 급팽창한 조건에서 그 성격과 의미가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됨.
- 중국의 경제력·정치력은 급증했으며 북한은 경제적 실패와 더불어 군사화의 경향이 강화됨.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조건은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발전을 어렵게 함. 당장의 고용 부진이나 소득 불균형도 골칫거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대안적 RTA(Regional Trade Agreements), 과정으로서의 남북 경제통합, 다자안보협력에 입각한 평화체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실익체감형·사회통합형·공공성추구형·공존추구형·평화추구형의 RTA를 추구함으로써 상호공존의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
- '과정으로서의 남북경제통합'은 개성공업지구를 '한반도 글로벌 경제특구'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하여 남북경제통합협정(CEPA)을 체결하는 것으로 진전되도록 함. 다자안보협력과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한 외

190) 이일영 외(2013), 새로운 '성장-협력-평화' 발전모델의 모색, 동향과 전망 91호. 참고.

교·안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성장-협력-평화의 모델’의 조직 원리는 위계와 시장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로, 세계체제·분단체제의 변동에 대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안전과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성장-협력-평화의 모델’은 개인·조직·지역·국가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수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들로 구성될 수 있음. 대안적RTA, 남북경제통합, 다자안보협력에서도 국가는 물론 비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4. 오픈랩 운영의 한계와 제한성

- 전문가 그룹의 경우 각 전문영역별로 중시하는 키워드가 다르게 나타남.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의 경우 사회과학 여러 분과학문에 걸쳐 있지만, 이 연구그룹 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다른 분야별 연구그룹의 경우 보편성과 대중성에 기초한 키워드를 색출하는 데에는 바이어스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오픈랩의 경우 큐레이터 선정과정에서 키워드 선정 범위가 일정하게 구획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형식을 거쳐 의견을 수렴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이어스의 폭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음. 향후 ‘오픈랩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영역 선정 과정에서 기획과 관련된 바텀업 토론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 속에서 표현된 사회혁신 키워드 분석

- ▶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
- ▶ 분석에 사용한 빅데이터 소스와 분석방법
- ▶ 주요 혁신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1. 빅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

- 지금까지 오픈랩(Open Lab)과정에서 탐색하고 발견해왔던 사회혁신 키워드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다른 방식으로 탐구했을 때와 달리 어떤 특징과 장점들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기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혁신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온라인 SNS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나타나는지를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확인해보려고 함.
- 정보기술의 발전, 초고속 네트워크의 글로벌 연결망 확대, 스마트 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 증가와 인터넷 접속 등은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 이러한 현상을 ‘빅데이터’로 부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도 생기고 있음.

- 2010년 구글 전 CEO 에릭 슈미츠 회장은, 현재 인류는 과거 인류역사 전체가 생성한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단 하루 만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함.(인류 문명이 시작된 후 2003년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합치면 약 50억 기가 바이트가 된다고 추정함. 그런데 최근에는 한 해에 약 3조 기가 바이트의 데이터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⁹¹⁾)
- 빅데이터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 데이터에 더하여,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모든 활동들이 문자와 음성,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통해 디지털로 거대하게 축적되면서 만들어지고 있음.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정보, SNS를 통한 대화와 관계망 정보, 스마트 폰 위치 서비스를 통한 동선 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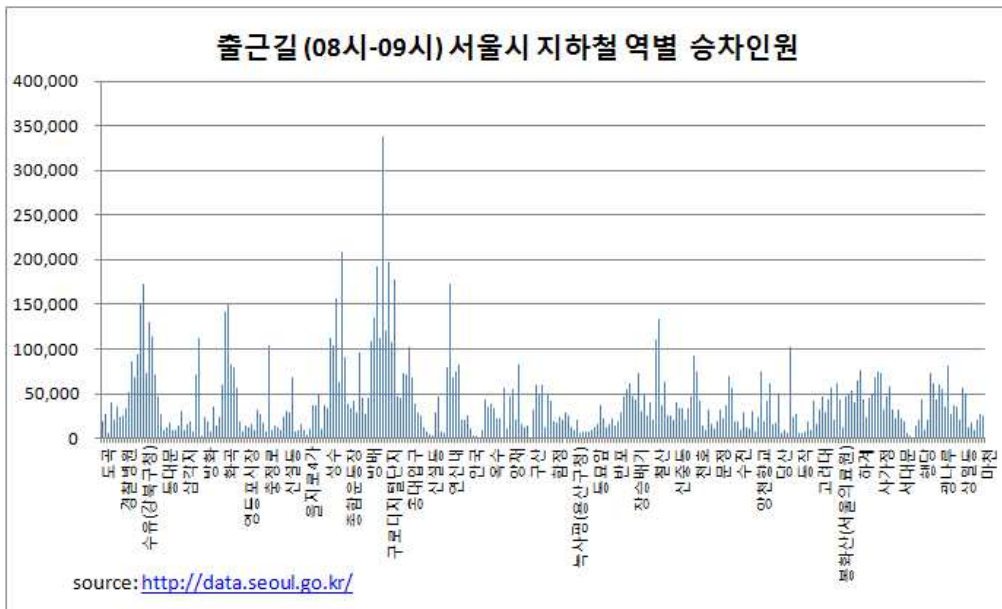


그림 6-1: 예시 -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

191) 빅토어 마이어 외(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 북스

- 서울시에서도 이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을 개설하여 공공 빅데이터 정보서비스를 초보적으로 시작함.(예를 들어, 교통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서울시 모든 전철역의 모든 승객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축적하여 공개하고 있음. 위의 표는 서울시가 공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2015년 1월 간단한 데이터 평균을 구해본 간단한 사례임.)
- 지난 몇 번의 선거 국면에서 온라인 여론 동향을 민첩하게 포착할 때,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 여론의 향방을 모니터하려고 할 때 등, 다소 짧은 시간대의 여론 변화의 민감성을 포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음. 그러나 일정한 기간 대중의 인식이나 관심분야의 안정적 흐름이나 시계열적 변화 방향을 추적하려는 노력은 적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다수 시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거나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대한 탐구의 중요한 방편’으로서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의미를 지니게 됨
- 결국 빅데이터 속에 표현된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수집은, 시민들의 지향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표본 여론조사 등 전통적인 샘플링 조사 방법이 가진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어 더욱 섬세하게 다차원적/복합적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알게 됨.



그림 6-2: 사회혁신 영역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보는 이유

- 따라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거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사회분석과 시민인식조사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분

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혁신 활동과 혁신 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기왕에 오픈랩(Open Lab)에서도 출된 사회혁신 키워드의 몇몇 중요 문맥에 대해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해봄으로써, 두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평가해보려고 함.

2.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

“일단 세상이 데이터화되고 나면 정보의 잠재적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창의력뿐이다.”

1) 빅데이터와 상관성

- 빅데이터에서 ‘빅’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특히 무작위 ‘샘플링’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의 해당 영역 데이터 전부를 포괄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이론 인해, 각종 여론조사나 표본 추출을 통한 사회조사 방법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조사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많은 데이터를 가진 간단한 모델이 적은 데이터를 가진 정교한 모델보다 뛰어나다.”
- 또한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탄탄한 상관성과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조사 데이터와 확실히 구별됨. 즉 빅데이터는 사회와 사건의 정확한 인과성(causality)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광범한 영역과 이질적인 관계에서의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상관성(correlation)과 일정한 패턴(pattern)을 보여주게 됨. 결국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수학을 적용하여 확률을 추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비인과적 분석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느린 인과적 사고보다도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틀이 되고 있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숫자

들은 스스로 입을 연다. 페타바이트는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한다. 상관성이면 충분하다.”¹⁹²⁾

2) 빅데이터 기반 분석의 정확성

- 빅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는 구글이 선보였던 ‘미국내 독감발생 추이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 질병관리국(CDC) 역학 예방팀은 독감 예측을 위해 통상 3000여개 진료소, 3000여 명의 외래 진료환자 진단의사, 122개 도시의 인구통계 사무소, 각 주 보건국 관계자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동원하는 거대한 작업을 수반함.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보유한 검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사용자들이 평상시 사용한 검색어들 가운데 독감 징후와 관련 있는 검색어를 추출함으로써, 미국 질병관리국이 예측한 독감추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유도해내고 있음.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구글이 온라인 쇼핑거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 물가지수를 공개하는 구글 물가지수(Google Price Index)임. 각 국가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역시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고 있음.)

3) 다양한 빅데이터 소스

- 우리나라의 포털 업체들 역시, 구글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점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음. 예를 들어,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는 광고주 등을 위해 검색어와 연관된 트렌드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이라는 키워드의 사용빈도를 뽑아보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전후하여 안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높아졌고, 이 추세는 그해 10월까지도 이어졌음을 볼 수 있음. (아래 그림 참조)

192) 빅토어 마이어 외(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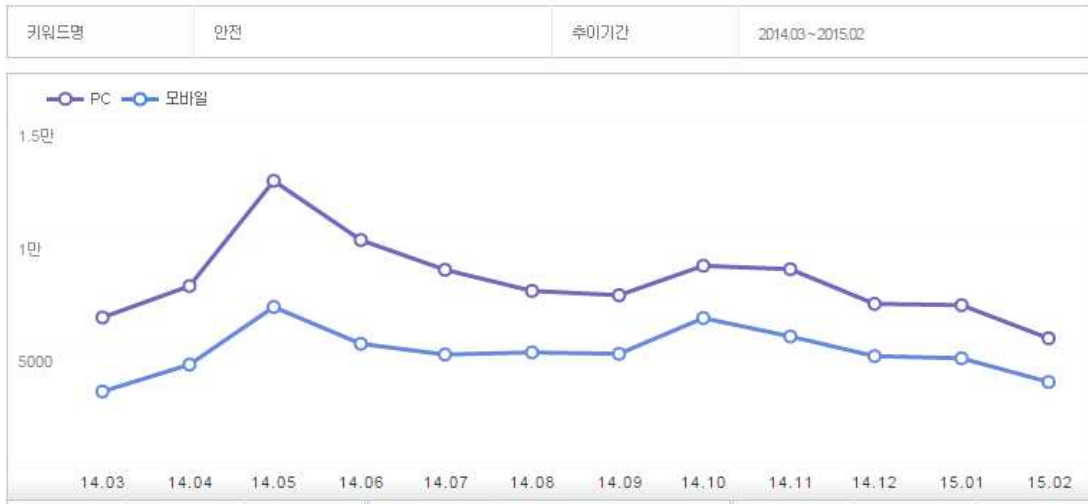


그림 6-3: 예시- 네이버에서 분석한 ‘안전’ 키워드 사용 추이(2014.3~2015.2)

- 물론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 및 여론 분석이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 앞에서 예시한 시간대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는 교통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임. 또한 구글에서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엔그램뷰어’(ngrams.googlelabs.com)는, 세계에서 출간된 모든 책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임. 구글이 지난 2010년 당시 이 프로젝트를 공개할 때에, 1500~2008년 출간된 520만 권 책을 스캔하여 단어 사용 빈도를 따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음.(전세계 책의 4% 정도). 이는 약 5000억 개의 단어가 망라된 것인데, 책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도 변경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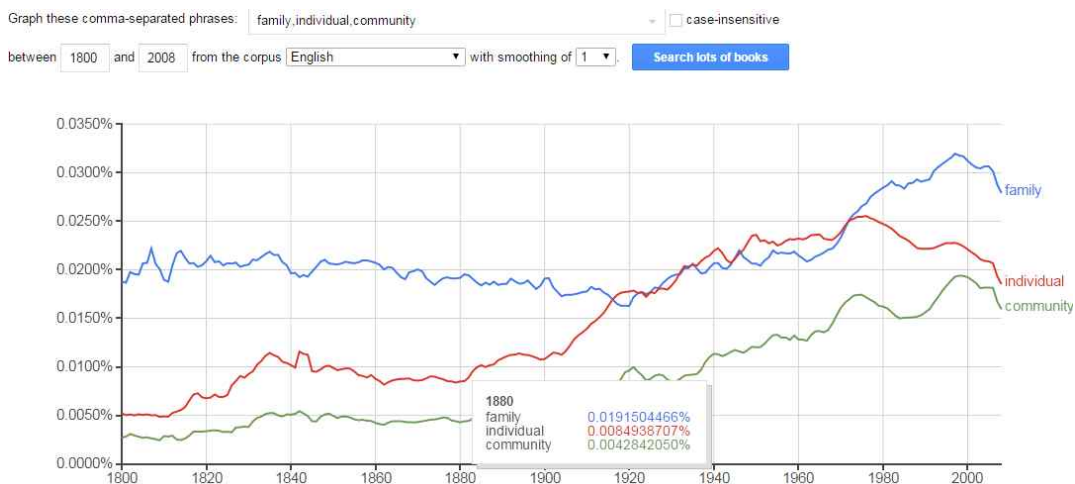


그림 6-4: 구글 엔그램뷰어로 분석해본 가족/개인/공동체 키워드 빈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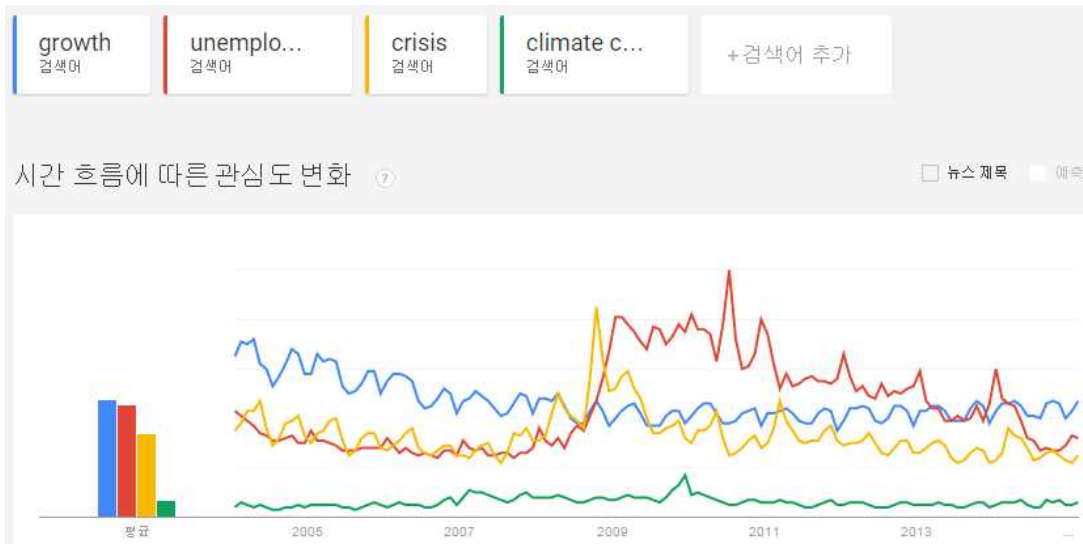


그림 6-5: 2008년 경제위기 전후로 성장/실업/위기 키워드의 사용빈도 변화

- 특히, 단기적인 여론동향을 벗어나서, 다소 긴 호흡의 차원에서 시민인식 구조 변화의 추세와 방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빅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음. 앞서 예시한 구글 독감 트렌드와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년 동안의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국내 포털 업체들은 최대 7년 정도의 시계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음)

4)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의식 분석방법과 사례

- 빅 데이터를 기업이나 상업적인 분야 이외에 정치, 사회 분야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제고한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으나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미국 대선에서의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바마 캠프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CTO와 대규모 테크놀로지팀을 두고 목적의식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함. (심지어 오바마 캠프는,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거 데이터와 기부 패턴을 검토하여 후원금을 얼마나 요청할지를 도출해내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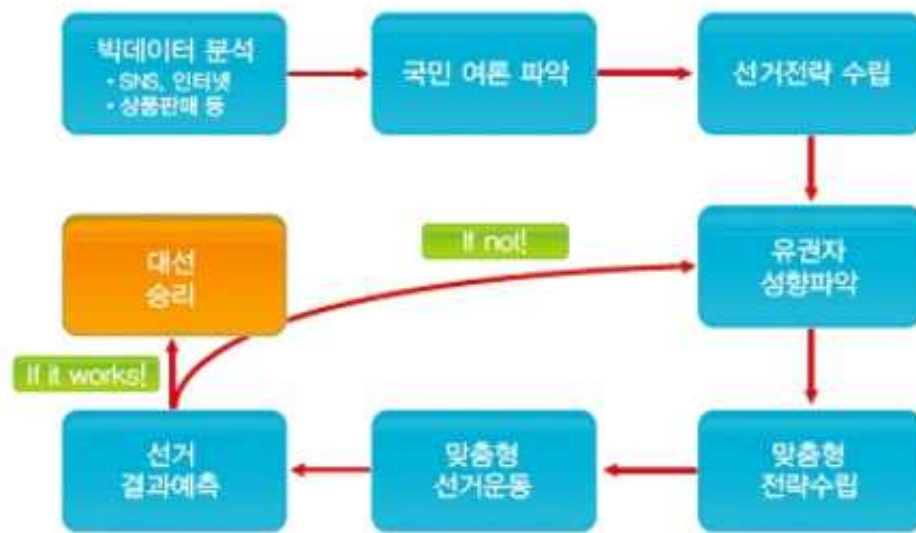


그림 6-6: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 (출처: 정보화진흥원)

- 즉, 과거 기부자들의 후원금 중 최고금액을 알아본 후, 과거의 최고 후원 금액에 약간씩 변동을 준 금액을 요청하는 실험을 하였음. 예를 들어 이전에 35달러를 후원금으로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33, 34, 35, 36, 37, 38달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각각 보냈음. 그 결과 그런 방식의 후원금 요청 메일을 단순히 10달러, 30달러, 50달러 식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함.)¹⁹³⁾
- 공공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시민생각이나 여론이 담겨 있는 빅데이터로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SNS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인터넷과 SNS 활용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SNS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인식구조나 변화 추이를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한 빅데이터 전문 업체의 프로그램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하나인 ‘도시 재생’을 분석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아래 예시는 기간이 짧아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

193) 고태석(2013),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 이지스퍼블리싱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도시 재생이 ‘다양하다.’, ‘도움이 되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과 같은 극단적인 부정적 맥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로서 ‘마을’을 검색해보면, 전통적인 과거 지향 개념인 마을의 의미인 ‘조용하다’, ‘아름다운’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개념인 ‘부활’, ‘꿈꾸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됨.)



그림 6-7: www.daumsoft.com에서 제공하는 social metrics 이용한 분석

- 위의 사례는 과거의 전통적인 샘플링 분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거나, 더 나아가 시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혁신의 단초와 소망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

3. 분석에 사용한 빅데이터 소스와 분석 방법

- 이번 분석에 사용한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음 소프트가 제공하는 ‘Social Metrics’라는 데이터와 틀을 기본으로 했고, 부수적으로 네이버 트렌드(trend.naver.com)나 구글 트렌드 등을 활용했음.
- ‘Social Metrics’는 트위터, 블로그, 뉴스를 주요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007년부터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지만 완전한 데이터는 2013~2015사이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또한 엑셀형태로 분석한 범위의 원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있음. 여기에 더해 연관어 분석, 탐색어 추이, 여론 동향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게 해주는 다양한 그래픽 틀을 제공해준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경험이 오래되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활용대상으로 선정했음.

	주요 내용
분석 소스	국내 온라인 사용자들의 SNS(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과 포털 서비스의 검색어
분석 기간	2012년 12월 이후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되, 필요하면 2007년 이후 데이터 조회
분석 지역	한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법 검토.
분석 영역	오픈랩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사회혁신 키워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로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연관 키워드관의 구체적인 관계성을 찾고 확장.
분석 내용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시계열 자료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추세분석, 예측분석 부가.

표 6-1: 분석 대상과 범위 개요

-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덧붙여 둔다면, 우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빅데이터는 근본적으로 데이터양이 많다는 뜻이 아님. 빅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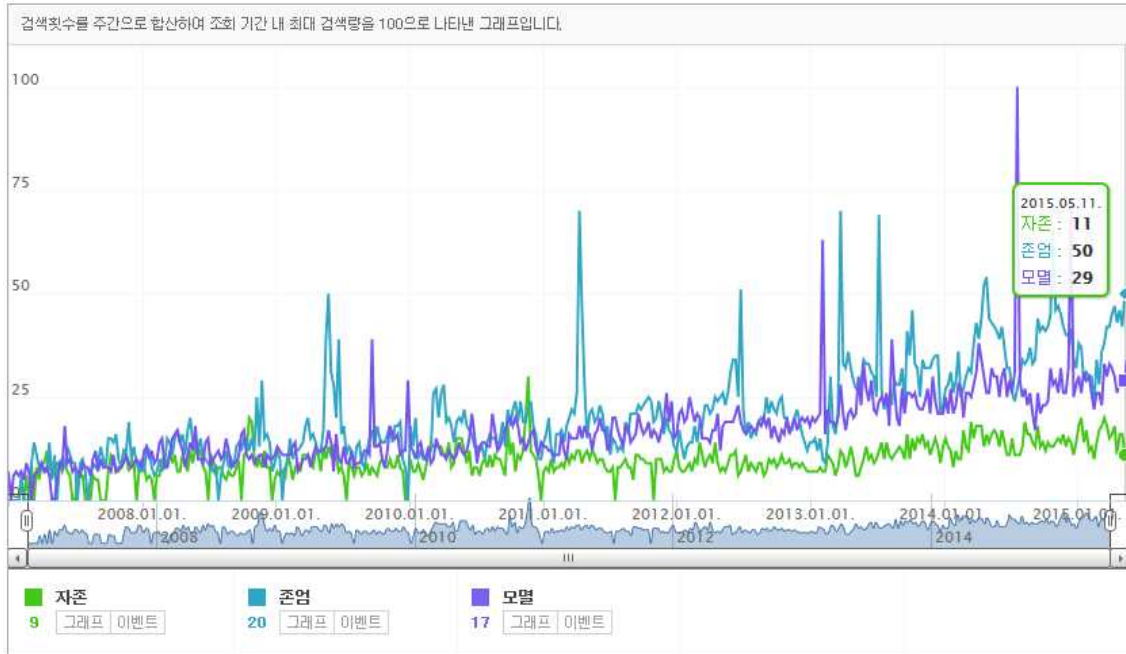
이터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원래의 의미는 추출(extraction), 또는 요약(Aggregation)되는 데이터가 아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의 전체 데이터’를 직접 대상으로 하함. 또한 매우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처럼 실시간으로 쌓여가는 원 데이터를 그대로 거칠게(?) 수집한 것에서 분석함.

- 따라서 필연적으로 추출된 데이터의 정확성 보다는 거의 전부를 포함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임. (앞으로 분석과정에서 의뢰로 조회결과가 많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실제로 전체 데이터가 그 정도에 그치기 때문임.)
- 또한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제되어 있지도 않고 의미(semantic)에 따라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음. 따라서 일정한 맥락에 따라 분석가가 분석(analyzing)하고 마이닝(mining)해야 함. 그 과정에서 잡음(noise)을 제거하면서 기대하는 맥락(context)을 추적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임.(예를 들어, 빅데이터에서 ‘개인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전혀 의미와 맥락이 다른 다양한 문장들이 통째로 뒤섞여 검색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나 시사점을 파악하기 어려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은 공동체와 비교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써 사회혁신 키워드에서 다루려고 하는 개념임. 그러나 우리말로 동일하게 번역되는 개인화(personalization)은 통상 마케팅이나 IT에서 사용되는 맞춤형 서비스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개인화라고 하는 키워드만으로는 의미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단순히 낱개 어휘를 사용한 분석은 명백히 제한성을 갖게 되며 단어와의 연관되어 포함하거나 배제해야 할 단어를 추가로 조합해야 함. 나아가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추적해야 함.(이른바 드릴링 다운 기법의 사용)

- 또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기 위해서 대조적인 개념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 현상이 도드라지는 영역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래 데이터의 문장 자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함.(다행스럽게 아래에 사용한 Social Metrix)는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의 기본은 대개 ‘시계열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변해 가는가’하는 점을 추적하는 것임. 따라서 최대한 긴 시계열에 걸쳐 동일한 밀도로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추세(Trend)를 분석할 수 있음. 하지만 너무 시계열이 길어지면 데이터 폭발(Data Explosion)이 일어나 조회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trade-off관계를 따져서 사용할 필요가 있음.(국내 온라인 빅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한 시계열은 불행이 길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0년대 이후의 짧은 시계열, 길다고 해도 2007년 이후 정도에 만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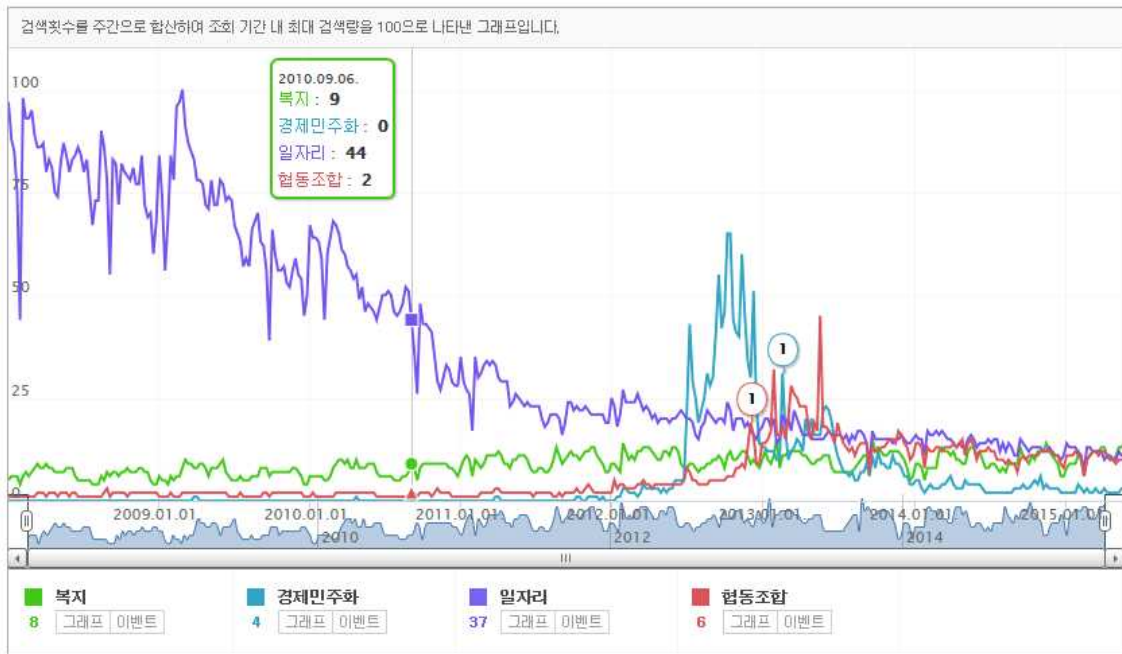
4. 주요 혁신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주요 키워드에 대한 장기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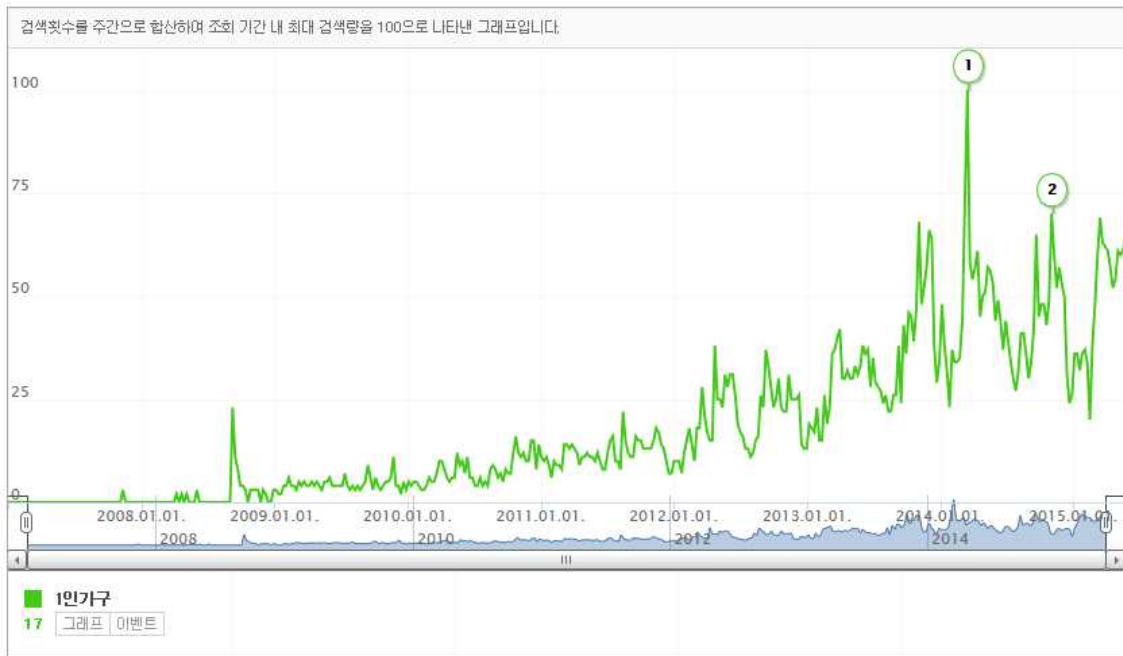
[주제어: 자존/ 존엄/ 모멸,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개인의 자존과 존엄을 표현하는 키워드에 대한 장기 시계열을 보면, 의외로 이들 어휘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개념의 사용(특히 모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점 더 '일상용어'에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한 의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추측을 해보게 함.(다른 방식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임.)
- 또한 모멸과 같이 부정적인 용법으로 자존이나 존엄(예를 들어 자존감의 상처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처가 필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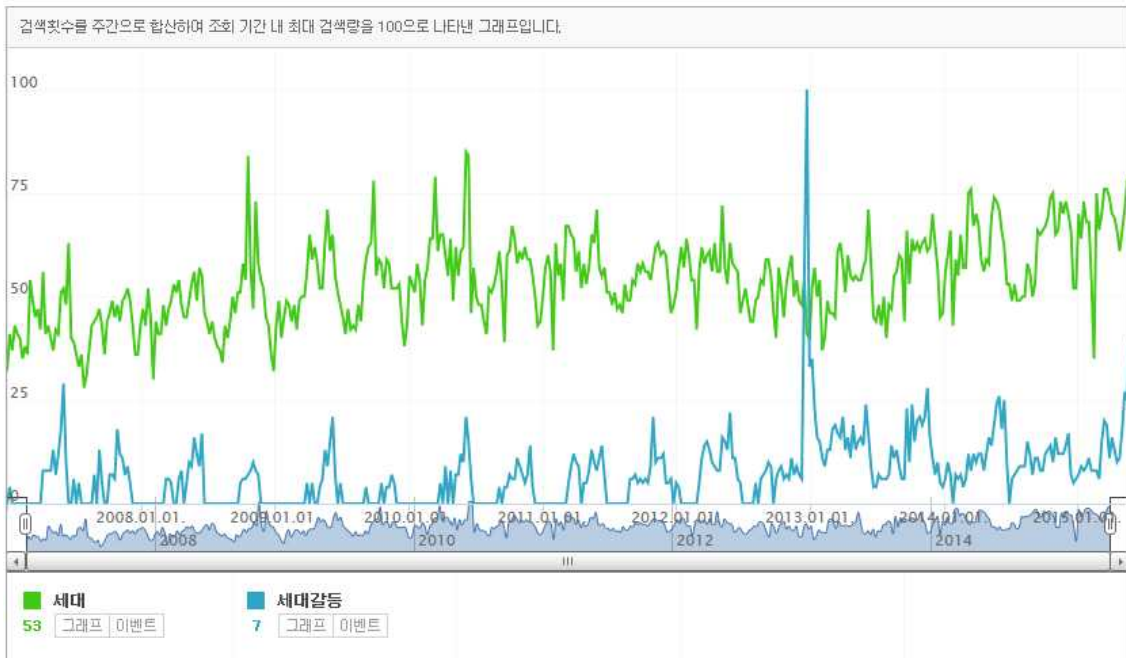
[주제어: 복지,경제 민주화,일자리,협동조합 기간: 2008.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우리사회의 정책 어젠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일자리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로 대비되는 뚜렷한 징후를 볼 수 있음. 일자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초반기(2008~2010)에 집중적으로 의제화 되었다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임.
- 경제민주화 키워드가 가장 극적인데, 2012년까지는 거의 등장조차 미미하던 경제 민주화는 대선기간인 2012년에 최대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2013년까지 근근이 이어져오던 경제 민주화 이슈는 2014년부터 주요 의제의 무대 뒤로 퇴장하는 분위기임.
- 경제 민주화 대신에 온라인에 강력하게 등장한 키워드는 바로 ‘협동조합’임. 이제 협동조합은 복지나 일자리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화 되었음.
- 복지라는 짧은 두 단어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에서 거명되는 개념임.(복지가 어떤 표현과 결합하여 맥락이 바뀌는지는 여기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좀 더 분석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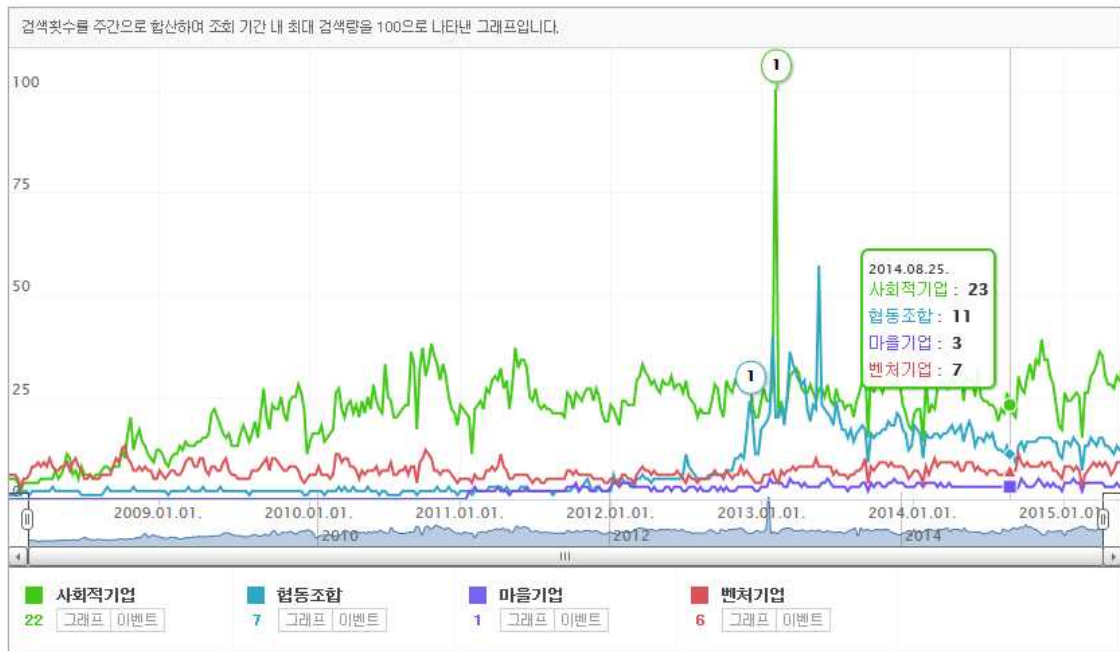
[주제어:1인 가구,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개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대체 변수로서 '1인가구'의 장기 추이를 검색해 본 결과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2년 이후 검색어에서 1인가구 키워드가 나타나는 빈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정도 추이면 1인가구라는 키워드는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로서 굳어져가고 있다고 판단됨.



[주제어: 세대, 세대 갈등,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세대라는 키워드는 적어도 주어진 검색기간 안에서는 큰 편차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음.
- 그러나 세대갈등은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013년 이후부터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더욱이 여전히 변동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지속성이 높아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음.
- 반면에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세대정의’나 ‘세대연대’, ‘세대협력’등은 아예 온라인 데이터에서 등장조차 하지 않음.
- 세대의제를 부정적 갈등 요인에서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데 사회혁신의 미션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음.



[주제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벤처기업,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적어도 온라인에서 사회적 기업은 2009년부터, 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벤처기업이라는 키워드를 앞질렀고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육성된 점 등이 감안되어 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고, 2013년에 잠깐 협동조합이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빈도와는 비교가 안 됨.
- 2012년부터 처음으로 온라인상에 등장한 마을기업은, 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비해서 빈도수가 턱 없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언급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물론, 의제를 한 단계 더 확산할 계기가 필요해 보임.)
- 여기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벤처기업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거명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는 없음.



[주제어: 도시개발, 도시재생,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 오랜 동안 개발신화에 익숙해졌고, 선거철만 되면 개발의제가 언제나 뜨거운 의제의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조건에서, 2013년 이후부터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도시개발 키워드를 압도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검색되고 있음. (물론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사회혁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바뀐 도시개발이 되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임)
- 그러나 도시개발이라는 키워드 역시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퇴행적 계기가 작동하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주제어: 재개발, 마을공동체, 기간: 2007.1~2015.5, 데이터: 네이버 검색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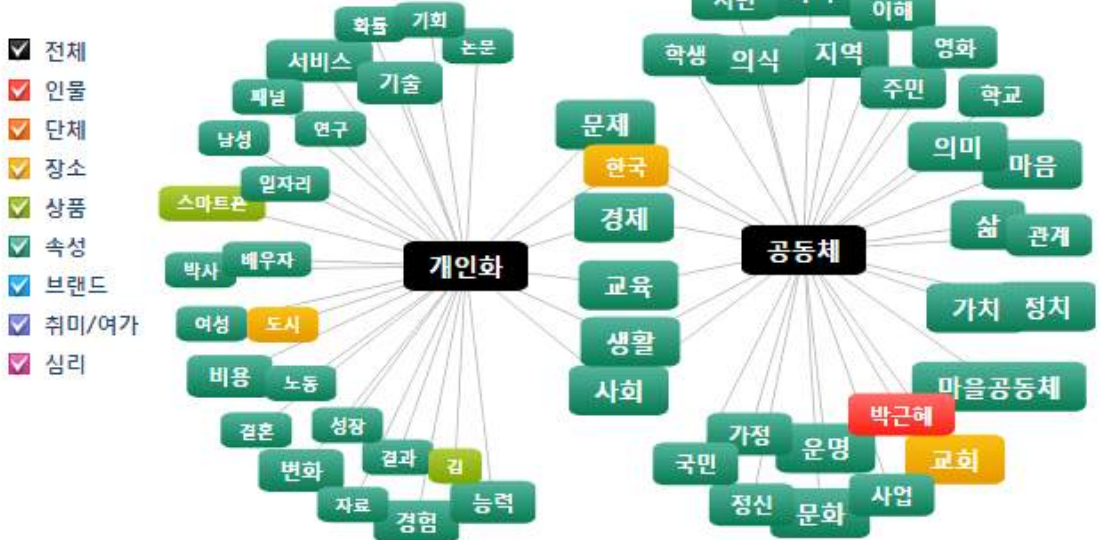
- 2012년부터 갑작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마을공동체’라는 키워드는 대단히 안정적인 지속성을 가지면서 온라인에서 거명되고 있어서 주목됨. (어떤 동기와 용도로 거명되고 있는지는 뒤에 다른 방식의 분석으로 보충하겠음.)
- 반대로 우리사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던 재개발은, 뉴타운 광풍이 있었던 2008~2009년에는 대단히 높은 비중으로 언급되더니, 2012년 이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찾아들었음. 그러나 적어도 마을공동체라는 키워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의제과위의 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거품 등이 재연되는 식으로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의미 분석과 비교분석

탐색어 : 개인화, 공동체 기간 : 2014-12-01 ~ 2015-05-31 구버전

연관어 X

매체선택 전체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연관어 수 30



No.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서비스	속성	250
2	사회	속성	239
3	기술	속성	173
4	생활	속성	157
5	경험	속성	132

No.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사회	속성	16331
2	지역	속성	13108
3	의식	속성	10003
4	삶	속성	8876
5	마을공동체	속성	7951

[주제어: 개인화와 공동체, 기간: 2014.12~2015.5, 데이터: 다음소프트]

- 그 자체로는 매우 독립적인 어휘인 ‘개인화’와 ‘공동체’를 단순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탐색건수가 컸음. (더욱이 개인화의 경우 서비스나 기술과 연관어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 individualization의 의미가 아니라, personalization의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잡음이 크다는 사실까지 감안해야 함.)
-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연히 온라인상에서조차 각종 공동체(가족, 교회, 학교, 지역, 국가 등)라는 개념이 일상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함.
- 다만 공동체 가운데 ‘마을 공동체’가 상당한 순위(5위)로 올라왔던 점이 눈에 띈다고 할 수있음.



[주제어: 1인가구, 기간: 2014.12~2015.5, 데이터: 다음소프트]

- 개인화를 상징할 대체 키워드로서 1인가구를 살펴보면, 연관어 측면에서 (그림의 좌측) 우선 ‘증가’, ‘식사’와 같이 예상 가능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와 생활, 주택 등 매우 현실적인 물질적 조건과 양식에 대한 연관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는 1인 가구 현상이 정착되었다기보다 생활양식이 만들어져가는 단계라고 파악됨. (이는 앞서의 시계열 분석과도 일치함.)
- 1인 가구를 긍정, 부정의 의미 측면에서(그림의 오른쪽) 살펴보면, ‘외롭다’, ‘좌절하다’, ‘어렵다’, ‘이혼’ 등 상당정도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음. 이는 1인가구가 꼭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함.
- 그러나 다른 편에서 ‘대세’, ‘예쁜’, ‘기대’와 같은 긍정어도 적지 않은 걸 보았을 때, 1인 가구를 온통 부정적인 경향이자 비자발적으로 떠밀려서 선택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임을 말해줌.



[주제어: 모멸, 잉여, 기간: 2012.12~2013.5(좌측)와 2014.12~2015.5(우측), 데이터: 다 음소프트]

- 자존과 존엄은 잡음이 매우 많은 키워드여서 대체 키워드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모멸’과 ‘잉여’를 선택해 보았음.
- 두 가지 키워드 모두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관어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을 보아서 무게 있는 의미를 가지고 소통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특히 주목할 것은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년 후인 2015년에 두 키워드 모두 탐색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임. (틀림없이 모멸이나 잉여 등의 의제들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데이터 값으로 더 이상의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탐색어 : 여가 | 기간 : 2012-12-01 ~ 2013-05-31 | 기간 : 2014-12-01 ~ 2015-05-31

금/부정 분석 현황

매체선택 전체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 연관어 수 30 | 확인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 연관어 수 30 |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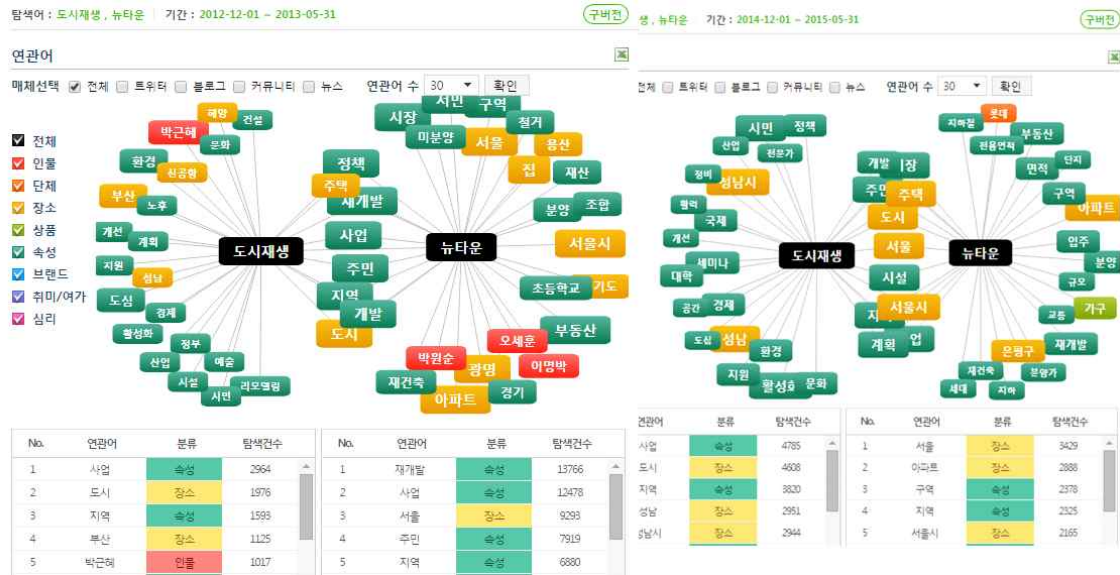
- 전체
- 긍정
- 부정
- 중립
- 기타



No.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즐거워	긍정	5628	즐거워	긍정	8495
2	다양한	중립	2955	다양한	중립	4624
3	스트레스	부정	1437	스트레스	부정	2231

[주제어: 여가, 기간: 2012.12~2013.5(좌측)와 2014.12~2015.5(우측), 데이터: 다음소프트]

- 시간권리의 대체 키워드로서 '여가'를 검색해 본 것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들로 이뤄져 있음.(부정적 언어로 표시된 '스트레스'도 실제 문맥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여가'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 다만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여가라는 키워드의 사용빈도가 다소 올라갔다는 정도가 발견됨.



[주제어: 도시재생, 뉴타운 기간: 2012.12~2013.5(좌측)와 2014.12~2015.5(우측), 데이터: 다음소프트]

- 도시재생과 뉴타운이라는 비교변수를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를 비교하여 분석해봄.
- 예상된 일이지만, 두 기간 사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뉴타운이라는 키워드 보다 더 언급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났음.
- 2015년에 이르면 도시재생을 포함하여 대단히 많은 지자체 혁신의제들이 서울시-박원순과 연관되기보다 성남시-이재명과 연관되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임.



[주제어: 마을 복지 기간: 2012.12~2013.5(좌측)와 2014.12~2015.5(우측), 데이터: 다음 소프트웨어]

- 마을 복지는 마을공동체라는 키워드가 온라인상에 등장하던 초기 2013년에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만 온라인상에서 언급됨(좌측)
- 하지만 2015년 이르면, (비록 언급 빈도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와 문맥을 가지고 신중하게 언급되기 시작함. 마을복지가 제대로 온라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음.

탐색어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기간 : 2014-12-01 ~ 2015-05-31

구버전

연관어



No.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기업	속성	8356
2	이재명	인물	5228
3	지역	속성	4819
4	지원	속성	4740
5	이명박	인물	4593

No.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기업	속성	1649
2	조합	속성	1085
3	지역	속성	1080
4	협동조합	속성	997
5	사회적기업	속성	911

[주제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기간: 2014.12~2015.5, 데이터: 다음소프트]

- 유사하면서도 경쟁적인 키워드인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분석해봄. 두 개의 키워드 모두 공통적으로 일자리, 사회, 주민 등의 연관어를 공유하고 있고 전체 연관어의 절반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하나의 부류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됨.
- 차이점은 사회적 기업이 주로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을기업은 지자체 연관보다는 자율적 기업의 연관어들과 상당히 어울리고 있다는 점임. 이는 마을기업이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을기업이 독립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검색어: 젠트리피케이션 기간: 2015-01-01 - 2015-05-31

연관어

매제선택 전체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연관어 수 30

- 전체
- 인물
- 단체
- 장소
- 상품
- 속성
- 브랜드
- 취미/여가
- 심리



No.	연관어	분류	참석건수
1	지역	속성	5
2	도시	장소	4

[주제어: 젠트리피케이션 기간: 2014.12~2015.5, 데이터: 다음소프트]

- 2013년 상반기에는 전혀 온라인상에서 발견할 수 없던 키워드 ‘젠트리피케이션’이 2015년에는 비록 적은 빈도수지만 발견되고 있음.
- 특히 연관어들이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될 조짐이 확인 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5.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 이상으로 다분히 실험적인 수준에서 사회혁신 키워드와 관련된 어휘들에 대해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해봄. 이 결과에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임. 때문에 그래픽으로 보여줄 것도 없었음. (매년 9월 서울시에서

사회혁신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에만 잠깐 나타나는 키워드) 이는 사회혁신 자체를 온라인에서 담론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족에 대한 온라인 분석이 절실했는데, 가족은 워낙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다양한 수준의 잡음이 개입됨. -여기서는 하지 못했음. 대신 1인 가족이나 고립, 잉여와 같은 대체 변수를 찾아서 분석해본 결과 사회혁신 키워드에서 발견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이는 자존과 존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있음.)
- 가족 이상으로 ‘공동체’나 ‘관계’에 대한 분석역시 대단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쉽게 마이닝 하기가 만만치 않음. 여기서는 주로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했음. 마을 공동체는 온라인상에서 ‘대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논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음.
- 이는 도시와 관련된 혁신의제들인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임. 추세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도시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추월해가고 있음. 다만 그 어휘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혁신적인 의미를 담아내는지는 미지수임. 확실한 것은 최근 등장한 이슈인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온라인상에 등장하면서 도시재생이 풍부해질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다만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데이터 활용대상이나 적용된 방법론이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뜻임. 이후에 더 활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더 개선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Jeff Mulgan(2015), "Inequality and innovation: the end of another trickle down theory?",

Carmen Ruiz Vinals and Carmen Parra Rodriguez(2014), 『Social Innovation; New forms of organization in knowledge-based societies』

Thomas Osburg, Rene Schmidpeter Editors(2013), 『Social Innovatio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Richard P.F. Holt edited(2009), 『Post Keynesian and Ecological Economics』

Joseph Stiglitz(2015),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Roosevelt Institute.

Rick Muir and Imogen Parker(2014), 『Many to Many:How the Relational State will Transform Public Services』,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Hans-Werner Franz edited(2012), 『Challenge Social Innovation』

Kenneth E. Boulding,(1966), "The Economics of the Coming Spaceship Earth"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Ezio Manzini(2012), 『Design, When Everybody Design』

R Murray, J Caulier-Grice, G Mulgan(2010), 『The open book of social innovation』, NESTA

Stephen Goldsmith(2010), 『The Power of Social Innovation』

Thomas Piketty(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슈페터(194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슈페터(1934), 『경제 발전의 이론』

토머스 매크로(2007), 『혁신의 예언자』

- 제프 멀건(2007),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 박원순(2010),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 엘리너 오스트롬(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 마이클 에드워드(2010), 『왜 기업은 세상을 구할 수 없는가 (원제: Small Change)』
- 이승은(2013), 『되살린 미래』
- 장은주(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비판이론의 민주주의적 전개와 우리의 현실』, 나남신서
- 장은주(2012), 『정치적 이동』, 상상너머
- 사이토 준이치(2000), 『민주적 공공성』, 이음
- 프랜시스 쿤로이더 외(2008),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슬로비
- 에릭 클라이넨버그(2012),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 퀘스트
- 유창복(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 송화준, 한솔(2014), 『우리에게는 또다른 영토가 있다』, 알렘
- 하승창(2015),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 휴머니스트
- 존 롤스(1999), 『정의론』, 이학사
- 존 롤스(1993),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 아마티아 센(1999),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박종훈(2013),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 전쟁』, 21세기 북스
- 김영선(2013), 『과로사회』, 이매진
- 울리히 벡(2007), 『위험사회』, 새물결
-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제임스 파울러(2009), 『행복은 전염된다』, 김영사
- 앤서니 앳킨슨(2015), 『불평등을 넘어』, 글항아리
- 최태섭(2013), 『잉여사회』, 웅진 지식하우스
- 엘리 러셀 혹실드(2003), 『감정노동』, 이매진
- 마크 뷰캐넌(2013) 『내일을 위한 경제』, 사이언스북스
- 시오자와 요시노리(1997) 『왜 복잡계 경제학인가』, 푸른길
- 슈테판 그레시크(1998) 『카오스와 카오스의 질서』, 자음과 모음
- 에릭바인하커(2006),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알에이치코리아
- 데이비드 켈렌더 외(2011) 『경제학, 최전방의 동향』, 지식을 만드는 지식

스티븐 로젠바움, 『큐레이션』, 2010. 9
사사키 도시나오, 『큐레이션의 시대』, 2012.3,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벤자민 R.바버, 『뜨는도시 지는국가』, 21세기북스, 2014
찰스 몽고메리,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미디어월, 2014
에버렛 로저스, 『혁신의 확산』,
앤서니기든스,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2014
필리프 스콰르조니,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
든 것』, 다룬, 2015
이원석, 『공부란 무엇인가』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반도경제론』, 창비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Jim Phills(2009),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BEPA(2010),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Eduardo Pol,Simon Ville(2009), "Social innovation: buzz word or enduring
term?"
OECD(2011), "Fostering Innovation to Address Social Challenges"
tepsie(2012), "Defining Social Innovation", FP7-project:TEPSIE
Ezio Manzini(2011), 『Design, When Everybody Design』, The MIT Press
Marc Lavoie edited(2013), 『Wage-Led Growth』, ILO

희망제작소(2013), 「한국 사회혁신의 동향과 전망」
최항섭, 「미래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 제13집 1호, 2012
서울연구원(2014),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김문조, 「스마트사회, 새로운 문명사적 도전」, 지식의 지평 2013년제14호
한국사회학회,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2011
- LGERI, 「소셜 마케팅 변화 예고」, 2012.5
- 이상우(2013), 「협동형 지식콘텐츠 생성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설계와 구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13
- 삼성경제연구소(2013),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 박성민 외,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2013.4.10.
- 정상훈 외(2013), 「시민참여형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서울연구원
- 이희길 외,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201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4권
손희연(서울교육대), 「내러티브의 철학과 현장」,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 임채원 외(2012),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서 “공유가치성장”과 “관계국가모형”」, 행정논총 제50권제3호, 2012.9.
-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01
-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 「2015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 이소영 외,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김병수, 「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로컬리티 인문학, 현장비평, 2013
- 정영환 외,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4호 통권22호
- 김병수, 「도시생활구조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도시기획자들』(소란, 2013)
- 송위진(STEPI 창조융합산업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사용자 주도형 혁신의 도래」

- 성지은 외,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농촌 리빙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4.15. 제140호
- 서울혁신기획관. 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제3호(2013년 가을호)
- 권지웅,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
- 권지웅, 「시민정치시평283-‘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2012
- 마경희, 「여성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 김이선 외, 「다문화 가족의 추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 생활 변화. 2015.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4
-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 김철규,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 장영배,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토론회 자료집 <노동조합의 COP16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전략 모색>
- 환경부(2002),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신연숙(2001),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지자체의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웹진 너울 '내셔널vol.106. 2001년 7월호
- 국토연구원(2013),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 통계청(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 통계청(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형 복지모형구축」

통계청(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김현정,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3집 제3호, 2010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J 제195호, 2015.4.7.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5월호

이일영 외(2013), 「새로운 '성장-협력-평화' 발전모델의 모색」, 동향과 전망 91호.

헬싱키코리아비즈니스센터, 「핀란드 도시 개발 모델 아라비안란타: U-City에서 리빙랩으로」

3.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Keynote speech Geff Mulgan(2013), "Setting a future research agenda for social innovation", Social Frontiers: The next edge of Social Innovation research 2013/11 , <https://www.youtube.com/watch?v=dER0EFOVQ5o>

Keynote Speech Frances Westley(2013), "The History of Social Innovation", Social Frontiers: The next edge of Social Innovation research 2013/11 ,https://www.youtube.com/watch?v=h-xLIC_-jMQ

<http://news.koita.or.kr/rb/?c=4/14&where=+display%3D1+&uid=419>

http://fin.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611&seqno=668138&c=&t=&pagenum=1&tableName=TYP E_LEGATION&pc=&dc=&wc=&lu=&vu=&iu=&du=

<http://www.yes24.com/24/goods/16854600>

<http://health.donga.com/List/3/100100/20150508/71137361/2>

<http://stat.seoul.go.kr/pdf/e-webzine89.pdf>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022.html

채민일보(2014.11.3), 20~40대 낭만·생태 문화이주 늘어”

프레시안(2014.1.14),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http://nowplanb.kr/1418>

블로터닷넷(2014.10.21) "BBC, '닥터후' 이용한 어린이 코딩 교육 게임 개발"

<http://www.bloter.net/archives/210300>

슬로우뉴스 2015.03.25.일자

http://www.ted.com/talks/hugh_herr_the_new_bionics_that_let_us_run_climb_and_dance#t-11898

매일경제(2014.11.04), 日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쿰', 도쿄대 입시 합격이 목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7674>

http://stat.seoul.go.kr/jsp3/html1/html/webzine.view.jsp?wj_id=53&page=4&link=2

http://www.mafra.go.kr/2015plan/01/01_01_01.html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53>.

시사인 312호(2013.9.14.)도시와 농촌의 공존 모색하는 '로컬푸드 대장정'

머니투데이(2014.3.13)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하거나 餓死?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2317154037294>

머니투데이(2014.7.11) 당신의 치킨인생, 시킬것이나 튀길것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295463&sid1=001>

<http://interview.hankookilbo.com/v/ad198673cbd34caa8f4ab930007d8153/>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219120209417>

KBS 1TV <KBS 파노라마-21세기 교육혁명:미래교실을 찾아서>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혁명, '거꾸로 교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12>

한겨레(2007.10.25.), 제682호, 경제 '그게 되나 보자'는 시범사업?

한겨레신문, 서울시도 '공유도시' 선언, 2012.9.20.

웹진 예술경영 224(2013.8.8)